2026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 금 운 용 계 획 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우 주 항 공 청 소관】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목 차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1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1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1

4. 우주항공청 소관 ····· 1

Ⅱ. 심사경과 ····· 2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 3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3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3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4

4. 우주항공청 소관 ····· 4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 5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5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461

3.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556

4. 우주항공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606

Ⅴ. 대체토론의 요지 ····· 660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66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660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664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666

4. 우주항공청 소관 ····· 667

Ⅶ. 심사결과 ····· 669

Ⅷ. 소수의견 ····· 670

Ⅸ. 부대의견 ····· 670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670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673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675

4. 우주항공청 소관 ····· 676

<참고자료> ····· 677

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 678

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 680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기금운용계획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과학기술진흥기금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 정보통신진흥기금
○ 기후대응기금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방송통신발전기금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4. 우주항공청 소관

○ 과학기술진흥기금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9월 3일

2.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4차 위원회(2025. 1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11.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제15차 위원회(2025. 11. 12.)

소위원회 심사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의결

○ 제16차 위원회(2025. 11. 1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의결

Ⅲ.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수입 및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입	회 계	8,173,620	8,007,167	△166,453	△2.0
	기 금	1,475,825	2,042,083	566,258	38.4
	총 수 입	**9,649,445**	**10,049,250**	**399,805**	**4.1**
지출	회 계	16,918,000	21,863,957	4,945,957	29.2
	기 금	1,960,604	1,760,434	△200,170	△10.2
	총 지 출	**18,878,604**	**23,624,391**	**4,745,787**	**25.1**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552억원), 지식재산처(32억원)로 이관된 584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지출 계(A+B)	242,266	237,262	△5,004	△2.1
예산(일반회계)(A)	48,738	52,178	3,440	7.1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B)	193,528	185,084	△8,444	△4.4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회 계	1,488	1,044	△443	△29.8
기 금	1,281	1,882	601	46.9
총 지 출	**2,769**	**2,926**	**157**	**5.7**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4. 우주항공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회 계	9,614	11,131	1,517	15.8
기 금	35	-	△35	순감
총 지 출	**9,649**	**11,131**	**1,482**	**15.4**

자료: 우주항공청, 2025. 10.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 총 괄

가. 개 요

○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5개 기금[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1],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계 기준 세입 및 기금수입은 14조 9,746억 3,700만원으로

1)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임.

2025년도 대비 1,146억 7,100만원(0.8%)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 및 기금 지출은 29조 9,752억 6,3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7,559억 5,400만원(18.9%)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입	세 입	12,756,116	12,462,057	△294,059	△2.3
	기금수입	2,333,192	2,512,580	179,388	7.7
	총 계	**15,089,308**	**14,974,637**	**△114,671**	**△0.8**
지출	세 출	22,809,140	27,334,586	4,525,446	19.8
	기금지출	2,410,169	2,640,677	230,508	9.6
	총 계	**25,219,309**	**29,975,263**	**4,755,954**	**18.9**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552억원), 지식재산처(32억원)로 이관된 584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총수입[2] 기준 세입예산안 및 기금수입계획안의 규모는 10조 492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998억 500만원(4.1%)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지출 기준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의 규모는 23조 6,243억 9,1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7,457억 8,700만원(25.1%)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총수입·총지출 규모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전출금)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 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규모임.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수입 및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입	회 계	8,173,620	8,007,167	△166,453	△2.0
	기 금	1,475,825	2,042,083	566,258	38.4
	총 수 입	**9,649,445**	**10,049,250**	**399,805**	**4.1**
지출	회 계	16,918,000	21,863,957	4,945,957	29.2
	기 금	1,960,604	1,760,434	△200,170	△10.2
	총 지 출	**18,878,604**	**23,624,391**	**4,745,787**	**25.1**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552억원), 지식재산처(32억원)로 이관된 584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나. 회계·기금별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계 기준

○ 총계 기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2조 4,620억 5,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940억 5,900만원(2.3%)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2,756,116**	**12,462,057**	**△294,059**	**△2.3**
일 반 회 계	392,267	395,157	2,890	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29	12,698	669	5.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40,696	43,034	2,338	5.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40,089	44,394	4,305	10.7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351	5,410,731	32,380	0.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760	5,556,659	△230,101	△4.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	999,384	△106,540	△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회계별로 2026년도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3,951억 5,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8억 9,000만원(0.7%)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126억 9,8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6억 6,900만원(5.6%)이 증액 편성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입은 430억 3,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억 3,800만원(5.7%)이 증액 편성되었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세입은 443억 9,400만원

으로 2025년도 대비 43억 500만원(10.7%)이 증액 편성되었음.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은 5조 4,107억 3,1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23억 8,000만원(0.6%)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은 5조 5,566억 5,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01억 100만원(4.0%)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은 9,993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65억 4,000만원(9.6%)이 감액 편성되었음.

○ 총계 기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7조 3,345억 8,6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5,254억 4,600만원(19.8%)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22,809,140**	**27,334,586**	**4,525,446**	**19.8**
일반회계	8,581,301	12,900,762	4,319,461	50.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425,764	469,497	43,733	10.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0,694	464,762	44,068	1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20,355	1,186,154	265,799	28.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09,206	259,209	150,003	137.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40,696	43,034	2,338	5.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40,089	44,394	4,305	10.7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351	5,410,731	32,380	0.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760	5,556,659	△230,101	△4.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	999,384	△106,540	△9.6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296억원), 지식재산처(32억원)로 이관된 328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회계별로 2026년도 세출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12조 9,007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3,194억 6,100만원이 증액(50.3%) 편성되었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출은 4,694억 9,700만원으로 2026년도 대비 437억 3,300만원이 증액(10.3%) 편성되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은 4,647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40억 6,800만원(10.5%) 증액 편성 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1조 1,861억 5,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657억 9,900만원(28.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은 2,592억 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500억 300만원(137.4%)이 증액 편성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출은 430억 3,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3억 3,800만원(5.7%)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세출은 443억 9,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3억 500만원(10.7%)이 증액 편성되었음.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출은 5조 4,107억 3,1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323억 8,000만원(0.6%)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은 5조 5,566억 5,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01억 100만원(4.0%)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출은 9,993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65억 4,000만원(9.6%)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총수입・총지출 기준[3)]

○ 총수입 기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8조 71억 6,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664억 5,300만원(2.0%)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8,173,620**	**8,007,167**	**△166,453**	**△2.0**
일반회계	392,267	395,157	2,890	0.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29	12,698	669	5.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중앙과학관)	2,505	1,471	△1,034	△41.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과천과학관)	5,136	5,136	-	-
우편사업특별회계	3,233,631	3,168,545	△65,086	△2.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422,128	3,424,776	2,648	0.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24	999,384	△106,540	△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3) 총수입・총지출 규모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전출금) 및 보전지출(여유자금, 차입금원금 상환),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규모임.

회계별로 2026년도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3,951억 5,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8억 9,000만원(0.7%)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126억 9,8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6억 6,900만원(5.6%)이 증액 편성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세입은 14억 7,1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억 3,400만원(41.3%)이 감액 편성되었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세입은 51억 3,6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은 3조 1,685억 4,5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650억 8,600만원(2.0%)이 감액 편성되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은 3조 4,247억 7,6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6억 4,800만원(0.1%)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은 9,993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65억 4,000만원(9.6%)이 감액 편성되었음.

○ 총지출 기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1조 8,639억 5,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9,459억 5,700만원(29.2%)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6,918,000**	**21,863,957**	**4,945,957**	**29.2**
일반회계	8,497,362	12,809,129	4,311,767	50.7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425,764	469,497	43,733	10.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0,694	464,762	44,068	10.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20,355	1,186,154	265,799	28.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09,206	259,209	150,003	137.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38,508	40,986	2,478	6.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37,443	41,778	4,335	11.6
우편사업특별회계	4,053,217	4,111,340	58,123	1.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136,152	2,175,696	39,544	1.9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79,299	305,406	26,107	9.3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296억원), 지식재산처(32억원)로 이관된 328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회계별로 2026년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12조 8,091억 2,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3,117억 6,700만원(50.7%)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4,694억 9,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37억 3,300만원(10.3%)이 증액 편성되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4,647억 6,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40억 6,800만원(10.5%)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조 1,861억 5,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657억 9,900만원(28.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2,592억 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500억 300만원(137.4%)이 증액 편성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지출 규모는 409억 8,6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4억 7,800만원(6.4%)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지출 규모는 417억 7,8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3억 3,500만원(11.6%)이 증액 편성되었음.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4조 1,113억 4,0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581억 2,300만원(1.4%)이 증액 편성되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2조 1,756억 9,6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95억 4,400만원(1.9%)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3,054억 6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61억 700만원(9.3%)이 증액 편성되었음.

2) 기금운용계획안

가) 총계 기준

○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계 기준 2조 6,406억 7,700만원으로 2026년도 대비 2,272억 1,500만원(9.1%)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총계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2,390,772	2,489,065	2,640,677	227,215	9.1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63,053	263,053	287,893	24,840	9.4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46	198,646	123,043	△75,603	△38.1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43	1,089,336	1,103,020	13,684	1.3
방송통신발전기금	844,787	854,787	980,232	125,445	14.7
기후대응기금	83,243	83,243	146,489	63,246	76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이관된 257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각 기금별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규모는 2,630억 5,3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48억 4,000만원(9.4%)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학기술진흥기금 규모는 1,230억 4,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56억 300만원(38.1%)이 감액 편성되었음.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는 1조 1,030억 2,0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36억 8,400만원(1.3%)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규모는 9,802억 3,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254억 4,500만원(14.7%)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1,464억 8,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632억 4,600만원(76%) 증액 편성되었음.

나) 총수입·총지출 기준

○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 기금의 총수입은 2조 420억 8,3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5,662억 5,800만원(38.4%)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별 총수입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475,825**	**1,475,825**	**2,042,083**	**566,258**	**38.4**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21,075	221,075	229,267	8,192	3.7
과학기술진흥기금	5,687	5,687	5,539	△148	△2.6
정보통신진흥기금	610,285	610,285	933,974	323,689	53.0
방송통신발전기금	638,778	638,778	873,303	234,525	36.7

주: 기후대응기금의 수입계획안 기획재정부에 편성되어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총수입 기준 각 기금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2,292억 6,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81억 9,200만원(3.7%)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은 55억 3,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4,800만원(2.6%)이 감액 편성되었음.

정보통신진흥기금은 9,339억 7,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236억 8,900만원(53.0%)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8,733억 3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45억 2,500만원(36.7%)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개 기금의 총지출은 1조 7,604억 3,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796억 5,600만원(13.7%)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별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941,207**	**2,040,090**	**1,760,434**	**△279,656**	**△13.7**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192,198	192,198	231,639	39,441	20.5
과학기술진흥기금	100,264	100,264	89,075	△11,189	△11.2
정보통신진흥기금	859,226	947,519	718,802	△228,717	△24.1
방송통신발전기금	706,276	716,866	574,429	△142,437	△19.9
기후대응기금	83,243	83,243	146,489	63,246	76.0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이관된 257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각 기금별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2,316억 3,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94억 4,100만원(20.5%)이 증액 편성되었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은 890억 7,5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11억 8,900만원(11.2%)이 감액 편성되었음.

정보통신진흥기금은 7,188억 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287억 1,700만원(24.1%)이 감액 편성되었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5,744억 2,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424억 3,700만원(19.9%)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후대응기금은 1,464억 8,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32억 4,600만원(76.0%)이 증액 편성되었음.

3)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9개의 특별회계와 5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기금간 전출 등의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립중앙·과천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756억원을 전출하고, 우편사업특별회계에 160억원을

전출할 예정이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0억원을 전출할 예정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5,212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944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18억원을 전출할 예정이며,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874억원 전출하고 68억원을 전입할 예정인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070억원을 원금예탁하고, 4,300억의 예수원금 회수 및 194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 받을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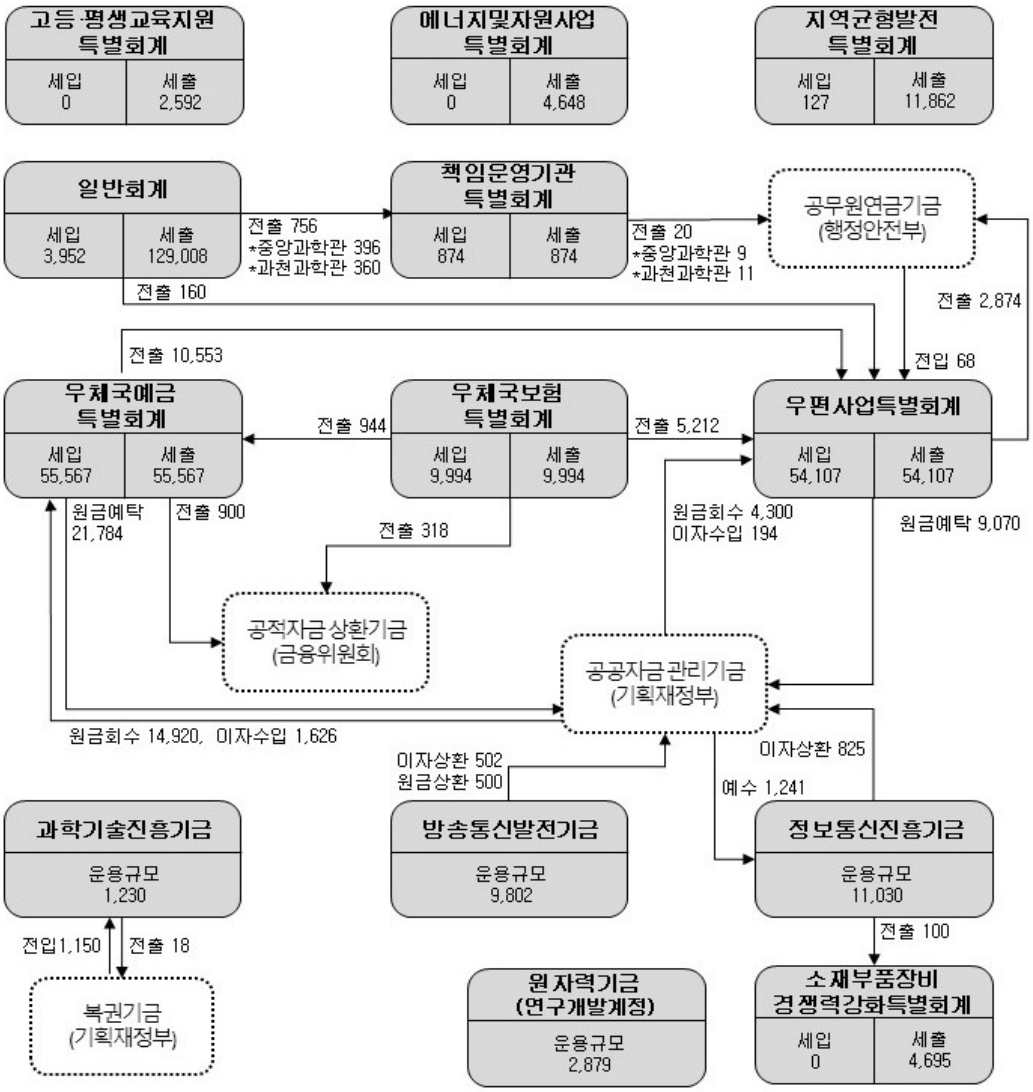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 1조 553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900억원을 전출할 예정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조 1,784억원을 원금예탁하고 1조 4,920억원의 예수원금 회수 및 1,626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 받을 예정임.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복권기금으로 18억원을 전출하고 1,150억원을 전입받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02억원의 예수이자 및 500억원의 원금을 상환할 예정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100억원을 전출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241억원을 예수하고 825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할 예정임.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회계·기금간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다. 기타 주요사항

1) 신규 및 종료사업

가) 2025년도 종료사업

○ 2025년도 종료사업은 우편물류지능화기술연구개발(R&D) 등 총 129개 사업이며, 총 7,046억 3,700만원 규모임.

나) 2026년도 신규사업

○ 2026년도 신규사업은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등 총 110개 사업이며, 총 9,182억 3,100만원 규모임.

<2025년 종료사업 대비 2026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종 료 사 업	2025 예산	신 규 사 업	2026 예산안
합 계	**704,637**	**합 계**	**918,231**
【일반회계】	**453,636**	**【일반회계】**	**522,222**
차세대화합물반도체핵심 기술개발(R&D)	8,820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지원(R&D)	1,000
국가반도체연구실(NSL) 핵심기술 개발사업(R&D)	9,720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사업	1,400
반도체설계검증인프라활성화 (R&D)	13,000	차세대 광기반 연산 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4,632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개발(R&D)	7,544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4,700
차세대 반도체 대응 미세기판 기술개발(R&D)	7,309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 혁신기술개발(R&D)	3,200

종 료 사 업	2025 예산	신 규 사 업	2026 예산안
미래 디스플레이 전략연구실 지원(R&D)	3,690	AI+S&T 혁신 기술 개발(R&D)	4,500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개발(R&D)	4,590	차세대 AI+S&T 기반기술개발(R&D)	2,000
차세대 반도체 장비 원천기술개발(R&D)	6,125	민관협력기반AI휴머노이드원천 기술고도화(R&D)	6,400
반도체 글로벌 첨단 펩 연계 활용 사업(R&D)	5,493	자원순환형 초고에너지 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R&D)	4,000
차세대광패키징기술개발사업(R&D)	3,000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R&D)	5,000
초고집적반도체용vdW소재및공정기술개발(R&D)	4,000	양자공정선도기술개발(R&D)	2,000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R&D)	2,000	국방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기술 개발(R&D)	2,280
초고성능컴퓨팅 SW 생태계 조성(R&D)	2,160	국가양자팹혁신생태계조성 (R&D)	16,850
양자인터넷 핵심원천기술개발(R&D)	8,640	디지털 AI세포 구축(R&D)	3,750
양자센서상용화기술개발(R&D)	13,812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R&D)	13,500
양자암호통신 산업 확산 및 차세대 기술개발(R&D)	9,926	생체노화리프로그래밍원천기술 개발(R&D)	7,500
퀀텀ICT엔지니어링기술개발(통신)(R&D)	2,500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19,980
양자정보계측 방법론 및 원천기술개발(퀀텀 메트롤로지)(R&D)	3,510	공공기관임무중심감염병연구다부처협력(R&D)	1,300
양자정보과학연구개발생태계조성(R&D)	3,500	첨단신약 타겟 발굴 검증 및 기반기술 개발(R&D)	3,675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R&D)	6,500	치매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	1,650
양자컴퓨팅기반양자이득도전연구(R&D)	9,625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10,200
양자기술연구개발선도(양자컴퓨팅)(R&D)	12,561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R&D)	820
양자공통기반기술개발(R&D)	4,884	해양기초생산량 기반 탄소감축 연구(R&D)	1,762
양자컴퓨팅서비스및활용체계구축(R&D)	5,850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R&D)	1,400
퀀텀(양자)플랫폼지원(R&D)	6,800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R&D)	2,625
차세대양자과학기술핵심기초원천연구(R&D)	676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1,872

종 료 사 업	2025 예산	신 규 사 업	2026 예산안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R&D)	29,144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6,000
감염병 차세대 백신 기초원천핵심기술개발사업(R&D)	1,638	비파괴검사 기술역량 강화(R&D)	1,500
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R&D)	4,500	국가전략기술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중성자 활용 기술 고도화(R&D)	3,000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고도화기술개발(R&D)	2,400	양성자가속기 성능향상 선행 R&D 사업(R&D)	2,274
해양-육상-대기탄소순환 시스템연구(R&D)	4,290	EIC개발협력연구(R&D)	2,846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R&D)	1,280	핵융합플러그인프로그램(R&D)	2,10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R&D)	3,100	AI기반디지털가상핵융합로플랫폼개발사업(R&D)	4,500
경호(보안검색)대응기술개발(R&D)	1,500	CCU인증제도운영기반구축	1,000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R&D)	1,373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R&D)	3,000
지능형유무인복합경비안전기술개발(R&D)	1,500	혁신연구장비핵심기술개발및상용화(R&D)	4,500
재범징후선제적감지및대응력강화(R&D)	2,000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R&D)	12,750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R&D) (과기정통부)	915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R&D)	2,50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3.0)(R&D) (과기정통부)	936	AI기반 개방형 자율 디지털트윈 핵심기술 개발(R&D)	6,600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소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R&D)	1,250	AI·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R&D)	2,000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R&D)	500	AI기반 안전 관리분야 디지털 트윈 선도	6,000
실시간해저재해감시기술개발사업(R&D)	1,600	디지털포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1,200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사업(R&D)	1,500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	3,000
국민생활안전긴급대응연구(R&D)(2단계)(R&D)	2,225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5,978
민관합작 차세대원자로 개발 프로젝트(R&D)	7,500	AI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	5,000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R&D)	700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12,000

종 료 사 업	2025 예산	신 규 사 업	2026 예산안
데이터과학기반 차세대 비파괴검사기술개발(R&D)	300	AI클라우드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000
방사선 이용 희귀난치질환 대응 핵심기술개발(R&D)	2,200	경량·저전력 AI 한계극복기술개발(R&D)	9,000
미래방사선 강점기술 고도화사업(R&D)	3,000	실세계능동형에이전틱AI기술개발(R&D)	6,000
내방사선 국가전략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2,000	인간인지기반 AI 핵심원천기술개발(R&D)	10,000
방사선혁신이용기반기술개발(R&D)	1,000	컴퓨팅자원집중형인공지능응용 기술개발(R&D)	4,500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R&D)	1,000	AI 분야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11,000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통합 데이터 플랫폼(정보화)	220	가상융합기반피지컬AI핵심기술개발(R&D)	5,063
H2GATHER(R&D)	4,025	가상융합지능화핵심기술개발(R&D)	10,000
글로벌 C.L.E.A.N(R&D)	4,025	ICT 전략융합 R&D 바우처 지원(R&D)	6,900
동북아-지역연계초미세먼지대응기술개발(R&D)	350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R&D)	3,000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R&D)	1,217	ICT기반 디지털서비스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R&D)	5,625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R&D)	12,253	AX 혁신기업 창의 기술개발(R&D)	7,500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R&D)	8,850	자율행동체 온디바이스 응용 지원 핵심기술개발(R&D)	6,000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지원(R&D)	7,500	고성능 AI(Hyper-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	8,300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지원(R&D)	3,110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R&D)	9,000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R&D)	12,787	차세대 네트워크 AI파운데이션 모델(NFM) 개발(R&D)	4,000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정보화)	5,691	데이터센터네트워크인프라기술 선도사업(R&D)	7,000
인터넷 경로보안 고도화 사업	3,011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R&D)	2,000
DB산업 육성(정보화)	2,211	AI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기술개발(R&D)	3,600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R&D)	480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핵심기술개발(R&D)	3,600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R&D)	480	디지털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기술개발(R&D)	3,000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R&D)	10,000	AI 기반 민군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 기술개발(R&D)	2,800

종 료 사 업	2025 예산	신 규 사 업	2026 예산안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42,600	차세대 특화망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000
스마트서비스창출기반확충	500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R&D)	17,007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R&D)	3,000	광대역고출력무선전력전송전자파억제원천기술개발(R&D)	1,300
DNA기반국방디지털혁신기술개발(R&D)	4,700	AI활용 미인증 기자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6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	7,500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지원	1,207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R&D)	4,000	초거대산업AI연구지원(R&D)	4,500
개인정보보호기반지능형홈핵심기술개발(R&D)	3,000	국산NPU기반 AI CCTV 전환	10,00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R&D)	16,932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60,000
6G 핵심기술개발(R&D)	23,590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 지원	13,000
온디바이스AI기반 자율협업IoT핵심기술개발(R&D)	5,669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15,000
국방무인이동체사이버보안기술개발(R&D)	1,855	AGI 준비 프로젝트	20,000
비대면서비스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 개발(R&D)	560	AI 공간 컴퓨팅 창업 생태계 활성화	1,500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5,000	AI AGENT 선도 국가 사업	20,000
기술변화 선도형 방송 미디어 장비 기술개발(R&D)	6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R&D)	8,000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8,00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6,300
인터넷동영상서비스글로벌경쟁력강화기술개발(R&D)	1,280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2,250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1,000	첨단소재원천기술성장지원(R&D)	4,050
신기술 적용 안테나 고속측정 기술개발 고도화 사업(R&D)	2,0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6,115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7,940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	500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2,800	AX실증밸리조성(R&D)	16,967
미래선도연구장비핵심기술개발(R&D)	5,140	소프트웨어인재키움	1,22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004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센터 구축	3,500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R&D)	7,140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1,000

종 료 사 업	2025 예산	신 규 사 업	2026 예산안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LAB 실증단지 조성(R&D)	864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3,000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8,000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7,920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1,000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40,000
【우편사업특별회계】	435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40,000
우편물류지능화기술연구개발(R&D)	435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AX실증사업	2,000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35,36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17,960
고준위폐기물 관리 차세대 혁신 기술개발사업(R&D)	6,000	AI·SW 중심대학	117,960
고리1호기 기기/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 실증사업(R&D)	1,320	**【우편사업특별회계】**	7,834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R&D)	4,733	우정사업정보보호(정보화)	7,009
원자력기초연구지원사업(R&D)	4,400	우편물류기술연구개발(R&D)	825
미래원자력기술시설장비구축활용사업(R&D)	2,000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4,000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고도화 연구개발사업(R&D)	6,816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개발(R&D)	3,000
소형모듈원자로사용후핵연료발생량저감핵연료기반기술개발(R&D)	3,500	사용후핵연료 통합관리 혁신기술개발사업(R&D)	1,000
미래 글로벌 원자력 전문인력양성사업(R&D)	2,000	**【정보통신진흥기금】**	111,275
소형모듈원자로 디지털 혁신 검증·운영 기술개발(R&D)	2,100	블록체인-AI·데이터 국가 혁신선도	9,000
해외수요기반 연구로 핵심기술 통합플랫폼 구축(R&D)	1,000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환경 조성	12,500
차세대원자력혁신생태계기반조성사업(R&D)	1,500	AI통합바우처	89,775
【정보통신진흥기금】	144,439	**【방송통신발전기금】**	4,500
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 개발(R&D)	3,600	AI기반가상융합산업육성	4,500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6,188	**【기후대응기금】**	28,025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7,076	탄소 네거티브 DAC 기술 고도화 사업(R&D)	5,000
AI 혁신펀드	100,000	수소융합혁신기술개발(R&D)	4,000
정보통신방송기술국제공동연구(R&D)	3,385	Net-zero 구현 초격차 태양전지 개발(R&D)	5,000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620	청정수소원천기술밸류업(R&D)	4,500

종 료 사 업	2025 예산	신 규 사 업	2026 예산안
기술개발(R&D)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R&D)	1,900	AI기반무탄소에너지활용화학기술개발(R&D)	3,400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19,300	토양기반기후회복력진단및강화기술개발(R&D)	1,625
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개발(R&D)	1,444	CO2동시포집-전환(RCC)융합기술개발사업(R&D)	4,500
전파산업핵심기술개발R&D(R&D)	445		
테라헤르츠 대역 전파자원 기반 구축(R&D)	481		
【방송통신발전기금】	1,560		
양자암호통신 집적화 및 전송기술 고도화(R&D)	1,200		
ICT첨단유망기술육성(R&D)	360		
【기후대응기금】	44,254		
바이오매스기반탄소중립형바이오플라스틱제품기술개발(R&D)	1,703		
(혁신도전형)플라즈마활용폐유기물고부가가치기초원료화기술개발(과기부)(R&D)	1,000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R&D)	4,300		
차세대CCU기술고도화사업(R&D)	4,275		
AI기반미래기후기술개발원천연구사업(R&D)	3,100		
DACU원천기술개발(R&D)	6,776		
그린수소 기술자립 프로젝트(R&D)	10,300		
H2 NEXT ROUND(R&D)	6,800		
C1가스리파이너리밸류업기술개발(R&D)	6,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

○ 2025년도 대비 50% 이상 증감된 사업 및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음.

<주요 감액 및 증액사업(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5,017	9,676	4,659	93	지능형특화업무 혁신(21.3억), 문서중앙화(10.4억), 고충민원시스템 고도화(11.4억), 인터넷VDI 서버 증설(4.2억) 반영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정보화, ODA)	일반회계	3,360	1,322	△2,038	△61	외부지적,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R&D)	일반회계	3,177	5,747	2,570	81	미납금 정산, 자연증가분 반영 등
개도국 과학기술지원 부담금(ODA,R&D)	일반회계	1,357	430	△927	△68	사업 효율성 및 시급성 반영
한국연구재단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370	744	374	101	노후된 한국연구재단 청사 건물의 (단계적) 보수, 내진보강 등 시급한 안전 이슈 해소를 위한 증액
기초과학연구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5,785	9,367	3,582	62	신규 착수 연구단 특성을 고려한 본원 2차 연구기반 시설 구축
기초연구기반 구축(R&D)	일반회계	13,565	76,063	62,498	461	신규 내역사업 추진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	일반회계	11,194	68,431	57,237	511	슈퍼컴 6호기 시스템 계약 체결('25.5.12)에 따른 구축비 분납금 반영
리튬메탈 음극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모듈형 LEA 핵심기술개발 사업(R&D)	일반회계	3,000	11,240	8,240	275	신규과제 개월 수 조정(6개월 → 12개월) 및 신규 내역사업 반영에 따른 증액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 핵심 원천기술개발(R&D)	기후대응기금	6,200	9,500	3,300	53	신규과제 개월 수(6개월 → 12개월) 및 과제 단가 조정에 따른 증액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양자통신·센서)(R&D)	일반회계	15,400	30,182	14,782	96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양자산업 수요연계형 실증	정보통신진흥기금	5,000	2,500	△2,500	△50	정보통신진흥기금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일반회계	9,800	50,030	40,230	411	예타면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 반영
양자과학기술 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사업(R&D)	일반회계	4,760	10,000	5,240	110	2개 연구단 2차년도 착수 지원 (1차년도 6개월 -> 2차년도 12개월)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9,750	18,950	9,200	94	'26년도 과목구조개편으로 '25년도 세부사업 2개(바이오파운드리 기반기술개발,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고도화 기술개발)가 해당사업의 내역으로 이관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R&D)	일반회계	6,169	22,016	15,847	257	예타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반영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R&D)	일반회계	2,000	32,526	30,526	1,526	건설사업으로 연도별 공정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미래국방가교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4,248	7,018	2,770	65	25년 신규과제 지원 개월 수 확대및 26년 신규과제 지원 등
민군기술협력 (R&D)	일반회계	1,962	981	△981	△50	일부 계속과제 종료 등에 따른 자연 감소
극한부품시험 입증지원사업 (R&D)	일반회계	595	1,210	615	103	25년 신규과제 지원 개월 수 확대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R&D)	일반회계	1,000	5,000	4,000	400	당초 연구계획('25~'28, 180억원)에 따라 증액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 조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9,090	18,858	△40,232	△68	건설사업으로 연도별 공정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9,700	118,800	49,100	70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11,643억원, '21~'29)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26년 기반시설 공사 추진과 가속장치 • 빔라인 제작에 필요한 실소요액 반영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837	19,315	14,478	299	중입자가속기 장치 제작, 설치 및 기장중입자치료센터 공사 일정에 따른 대금납부 일정 등 사업 추진현황 반영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R&D)	원자력기금	36,590	87,350	50,760	139	'국제공동핵융합실험로(ITER) 기구 '26년도 예산(안)에 따른 회원국 할당 현금분담금 등 소요분 반영
무탄소에너지 핵심기술개발사업(R&D)	기후대응기금	5,700	68,827	63,127	1,107	과목 구조개편으로 인한 예산(안) 증가 (기존8개세부사업을8개 내역으로하는1개의세부 사업으로통합하여구조개편)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기후대응기금	700	7,000	6,300	900	발전용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확보를 위한 노심·계통·BOP 및 종합설계, 안전성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증액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9,925	4,400	△5,525	△56	종료사업(연구1동 증축사업) 반영 등
한국한의학연구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8,500	1,174	△7,326	△86	종료사업(침구경락ICT 융합연구동 건립사업) 반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2,437	4,537	2,100	86	계속사업 연차소요 반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9,688	3,168	△6,520	△67	종료사업(연구동환경개선사업) 반영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500	1,500	1,000	200	계속사업 연차소요 반영
한국화학연구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2,516	9,716	7,200	286	계속사업 연차소요 및 신규사업(수변전 인프라 구축 사업) 반영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지원(R&D)	일반회계	1,039	1,884	845	81	계속사업 연차소요 및 신규사업(첨단 스마트 지하도로 K-Initiative Center 구축사업) 반영
한국화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15,264	24,007	8,743	57	전략연구사업 반영 등
산학연협력활성화 지원(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20	56,925	36,705	182	내역사업 신설 및 지원대상 확대 등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R&D)	일반회계	23,375	93,052	69,677	298	기존 사업 통합 및 신규사업 추가 반영
K-HERO 육성·지원 (R&D)	일반회계	2,882	8,922	6,040	210	신규 내역사업 반영, 신규 및 계속 과제 지원예산 증액분 반영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400	89,016	71,616	412	신규 내역사업(4극3특별 과학기술혁신 지원) 반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R&D)	일반회계	85,078	30,145	△54,933	△65	IBS 건립공사 등 진행 상황에 따른 공사비 감액
연구개발특구육성(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6,104	160,843	54,739	52	과제 규모확대 및 연구소기업 지원 사업 신설 등
복권기금 전출	과학기술진흥기금	4,863	1,832	△3,031	△62	기금사업비 실집행률 제고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률 감소 등 반영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비통화금융기관예치	과학기술진흥기금	93,519	32,136	△61,383	△66	기금수입규모 감소 등에 따른 여유자금운용 가능규모 감소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930	6,321	5,391	580	허준이 기념관 건립공사 착공 예정에 따른 공사비 소요
인재활용확산지원(R&D)	일반회계	54,449	84,519	30,070	55	인재활용확산지원 계속사업 지속 지원 및 신규사업 확대
국립과천과학관(자본계정) 전출	일반회계	5,293	9,926	4,633	88	전시관 및 노후시설 개선 예산 반영에 따른 증액
지역과학관 건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682	10,500	△12,182	△54	2026년 과목개편(4개로 분리)으로 실제 △14.9% (5개 사업중 1개 완료)
한국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일반회계	48,540	17,365	△31,175	△64	○ 내역사업 2건 공사종료로 순감(△37,592) - KAIST 메타융합관 2관 건립 ('25)19,874 → ('26) 0 -KAIST첨단의과학동물실험동구축('25)17,718→ ('26)0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정보화)	일반회계	1,534	3,300	1,766	115	신규 내역사업 추진
건전정보문화 조성(정보화)	일반회계	4,194	10,157	5,963	142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신규 내역사업 반영 등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085	14,102	△17,983	△56	디지털배움터 운영' 사업 내내역 회계(계정) 조정 등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정보화)	방송통신발전기금	3,649	1,700	△1,949	△53	사업 효율성 제고 및 시급성 고려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일반회계	5,757	26,993	21,236	369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6.1)에 따른 생성형 AI 안전성 평가기반 마련과 글로벌 AI 지표관리 등 AI 글로벌 협력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	2,615	1,277	△1,338	△51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규모 축소 및 데이터거래사 교육 규모 축소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방송통신발전기금	39,797	10,399	△29,398	△74	내내역 사업 중 데이터바우처 사업('25년 280억원, '26년 93억원)의 타 사업(AI통합바우처)으로 이관
국방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R&D)	일반회계	1,000	2,926	1,926	193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현 가능한 국방 AI 핵심기술 확보 필요로 신규사업 추가 예산 증액
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R&D)	일반회계	9,000	16,000	7,000	78	AI 관련 연구에 GPU중심 컴퓨팅자원 수요 급증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정보화)	방송통신발전기금	44,181	15,000	△29,181	△66	사업개편 등을 통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기반 조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제고
AI산업육성	정보통신진흥기금	76,664	21,855	△54,809	△71	세부사업내 내역이관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정보통신진흥기금	9,500	4,750	△4,750	△50	유사과제 통폐합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900	3,600	△6,300	△64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내역사업 종료로 감액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일반회계	2,300	10,400	8,100	352	AI 예후관리 서비스 개발 · 실증 확대
AI일상화확산	일반회계	30,870	8,296	△22,574	△73	2025년 종료되는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대폭 감액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정보통신진흥기금	110,186	12,031	△98,155	△89	사업구조조정(사업 개편 및 재투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R&D)	일반회계	13,500	21,000	7,500	56	사업구조조정(사업 개편 및 재투자)
생성AI선도인재양성(R&D)	일반회계	5,200	27,000	21,800	419	현장 수요 반영 지원 물량 확대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사업(R&D)	일반회계	6,000	34,000	28,000	467	현장 수요 반영 지원 물량 확대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정보통신진흥기금	50,752	91,188	40,436	80	사업구조조정(사업 개편 및 재투자)
미래디지털인재양성및저변확대	정보통신진흥기금	7,411	21,524	14,113	190	사업구조조정(사업 개편 및 재투자)
글로벌제조융합SW개발및실증(R&D)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00	13,500	12,000	800	당초 사업수행 범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반영
SW융합클러스터2.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65	1,514	△1,851	△55	사업구조조정(사업 개편 및 재투자)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VR·AR콘텐츠 산업육성	방송통신발전기금	29,378	9,178	△20,200	△69	사업구조조정(사업 개편 및 재투자)
ICT융합산업 혁신기술개발 (R&D)	정보통신진흥기금	5,774	2,591	△3,183	△55	25년 종료과제로 인한 감액
디지털혁신기술 국제공동연구 (R&D)	일반회계	6,460	9,751	3,291	51	해외 정부/펀딩기관과 국제공동연구 과제를 공동 기획 중으로, 규모있는 지속 협력을 위해 증액 필요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R&D)	일반회계	2,813	6,563	3,750	133	신규과제 25개 반영
AI 반도체 실증 지원	일반회계	24,370	102,370	78,000	320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 예산 반영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36,620	60,751	24,131	66	예타 투자 로드맵에 따른 신규과제 예산 반영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일반회계	17,263	42,300	25,037	145	추경 반영 사업 물량 확대 및 1개 내역사업 신설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 (R&D)	일반회계	2,000	4,000	2,000	100	계속과제 연구수행기간 증가(6개월→12개월) 반영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일반회계	4,472	14,558	10,086	226	NPU 인프라 구현 소요 반영
디지털 공공 혁신생태계 조성	일반회계	17,000	4,500	△12,500	△74	유사사업 정비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국가 데이터·서비스 연계 API기반 구축	정보통신진흥기금	10,188	4,299	△5,889	△58	통합플랫폼 2단계 구축 완료에 따른 운영 소요 등 반영
AI기반개방형5G-A융합서비스테스트베드 구축운영 (R&D)	일반회계	3,500	7,000	3,500	100	3GPP 국제 기술 표준화에 따라 기구축한 5G코어(핵심네트워크)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표준 기능들을 적용하여 시험·검증체계 고도화
사물인터넷신산업육성선도 (정보화)	방송통신발전기금	8,796	4,398	△4,398	△50	우선순위 조정
전자서명인증 (정보화)	일반회계	6,554	2,592	△3,962	△60	신규과제 예산 미반영
암호이용 활성화	일반회계	3,904	8,274	4,370	112	민생·경제·안보를 위협하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과 다가오는 양자컴퓨터의 암호해독 위협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암호체계 도입, 암호기술 검증, 랜섬웨어 복구지원 등 국가 암호체계·기술 강화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 확충	정보통신진흥기금	8,176	4,088	△4,088	△50	기금 수지 등을 고려한 기업 지원단가 축소 등 지출 효율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R&D)	일반회계	20,354	35,454	15,100	74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에 따른 연도별 금액 반영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R&D)	일반회계	1,000	3,070	2,070	207	신규 내역(차세대 모빌리티 고속통신 전파예측 기술 개발) 추진 등
EMP 등 전자파 침해 대응체계 마련	일반회계	150	535	385	257	EMP 취약점 분석평가 대상기관 확대 및 관련 장비도입 등

사업명	회계/기금	2025 본예산 (A)	2026 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증감 사유
기본경비(자본계정,총액인건비비대상)	국립과천과학관	116	841	725	625	노후 빙축열 냉동기 교체 등 시설 개선
창의전시관운영(자본계정)	국립과천과학관	4,347	7,650	3,303	76	첨단기술관 노후 전시품 전면 개편
국립어린이과학관운영(손익계정)	국립과천과학관	2,604	1,053	△1,551	△60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시설관리로 이전
자본계정 전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0,045	57,245	27,200	91	임대사업형청사건립(자본계정) 세출 증액에 따른 세입 재원 마련(세입-세출 수지차)
물류인프라 구축	우편사업특별회계	12,204	5,850	△6,354	△52	국제우편물류센터 증축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비 감액
임대사업형청사건립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5,218	57,455	32,237	128	서울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 공사 진도에 따라 소요되는 공사비 반영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94,729	46,522	△148,207	△76	세입액 감소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감소 전망 반영
우표문화사업	우편사업특별회계	8,335	4,044	△4,291	△51	국제우표문화 행사를 국내행사로 전환하여 홍보비 등 내실화
우편총액기본경비	우편사업특별회계	8	16	8	100	단가인상(7천원→9천원)에 따른 특근매식비 증액

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은 제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 3,951억 5,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8억 9,000만원(0.7%)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103억 4,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7억 800만원(35.4%)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수입은 1,187억 8,0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8,200만원(0.2%),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2,660억 3,0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392,267**	**395,157**	**2,890**	**0.7**
○ 재산수입	7,639	10,347	2,708	35.4
○ 경상이전수입	118,598	118,780	182	0.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66,030	266,030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계 기준 12조 9,007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3,194억 6,100만원(50.3%)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557억 2,8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1억 5,300만원(2.7%)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249억 4,5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9,100만원(0.8%)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2조 7,200억 8,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조 3,154억 9,900만원(51.3%)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8,581,301**	**12,900,762**	**4,319,461**	**50.3**
○ 인 건 비	151,575	155,728	4,153	2.7
○ 기본경비	25,136	24,945	△191	△0.8
○ 주요사업비	8,404,590	12,720,089	4,315,499	51.3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296억원), 지식재산처(32억원)으로 이관된 328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015억 1,8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98억 4,400만원(10.7%), 교육 분야는 2,607억 5,0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65억 6,700만원(21.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91억 4,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7억 4,300만원(4.7%)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86억 5,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2억 6,700만원(3.2%)이 감액 편성되었음.

○ 통신 분야는 3조 9,241억 2,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조 8,354억 400만원(260.4%), 과학기술 분야는 8조 5,365억 7,1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조 4,271억 7,000만원(20.1%)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분야·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8,581,301	12,900,762	4,319,461	50.3
□ 일반지방행정	91,674	101,518	9,844	10.7
○ 정부자원관리	91,674	101,518	9,844	10.7
□ 교육	214,183	260,750	46,567	21.7
○ 고등교육	210,876	257,269	46,393	22
○ 교육일반	3,307	3,481	174	5.3
□ 문화및관광	39,919	38,652	△1,267	△3.2
○ 문화예술	39,919	38,652	△1,267	△3.2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401	39,144	1,743	4.7
○ 산업혁신지원	37,401	39,144	1,743	4.7
□ 통신	1,088,723	3,924,127	2,835,404	260.4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방송통신	221,063	257,678	36,615	16.6
○ 정보통신	867,660	3,666,449	2,798,789	322.6
□ 과학기술	7,109,401	8,536,571	1,427,170	20.1
○ 과학기술연구지원	3,232,874	3,751,950	519,076	16.1
○ 과학기술일반	162,094	170,644	8,550	5.3
○ 과학기술인력및문화	129,944	179,850	49,906	38.4
○ 과학기술연구개발	3,584,489	4,434,127	849,638	23.7

주: 2025년 지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296억원), 지식재산처(32억원)으로 이관된 328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음.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 4,694억 9,7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37억 3,300만원(10.3%)이 증액 편성되었음.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분야는 60억 1,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39억 8,500만원(39.9%)이 감액되었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4,634억 8,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77억 1,800만원(11.5%)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425,764	469,497	43,733	10.3
□ 통신	10,000	6,015	△3,985	△39.9
○ 정보통신	10,000	6,015	△3,985	△39.9
□ 과학기술	415,764	463,482	47,718	11.5
○ 과학기술연구지원	106,538	119,559	13,021	12.2
○ 과학기술인력및문화	3,880	3,767	△113	△2.9
○ 과학기술연구개발	305,346	340,156	34,810	11.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음.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 4,647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40억 6,800만원(10.5%)이 증액 편성되었음.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4,647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40억 6,800만원(10.5%)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420,694	464,762	44,068	10.5
□ 과학기술	420,694	464,762	44,068	10.5
○ 과학기술연구지원	420,694	464,762	44,068	10.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 126억 9,8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6억 6,900만원(5.6%)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10억원으로 2025년 대비 100만원(0.1%), 경상이전수입은 116억 9,8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억 6,800만원(6.1%)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2,029	12,698	669	5.6
○ 재산수입	999	1,000	1	0.1
○ 경상이전수입	11,030	11,698	668	6.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 1조 1,861억 5,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657억 9,900만원(28.9%)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로 살펴보면, 지역자율계정은 1,586억 5,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56억 7,900만원(40.4%), 지역지원계정은 1조 161억 1,8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176억 8,300만원(27.3%)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69억 6,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억 9,400만원(32.1%),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은 44억 1,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억 4,300만원(20.2%)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계정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920,355	1,186,154	265,799	28.9
□ 지역자율계정	112,980	158,659	45,679	40.4
□ 지역지원계정	798,435	1,016,118	217,683	27.3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270	6,964	1,694	32.1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3,670	4,413	743	20.2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587억 6,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66억 7,900만원(83.2%), 교육 분야는 1,736억 2,8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170억 8,600만원(207.1%)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는 540억 7,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98억 7,100만원(22.3%), 과학기술 분야는 6,814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371억 6,200만원(25.2%)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통신 분야는 2,181억 9,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49억 9,900만원(10.3%)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920,355	1,186,154	265,799	28.9
□ 일반·지방행정	32,085	58,764	26,679	83.2
○ 정부자원관리	32,085	58,764	26,679	83.2
□ 교육	56,542	173,628	117,086	207.1
○ 평생·직업교육	56,542	173,628	117,086	207.1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4,208	54,079	9,871	22.3
○ 산업혁신지원	44,208	54,079	9,871	22.3
□ 통신	243,198	218,199	△24,999	△10.3
○ 방송통신	530	530	-	-
○ 정보통신	242,668	217,669	△24,999	△10.3
□ 과학기술	544,322	681,484	137,162	25.2
○ 과학기술연구지원	136,708	191,099	54,391	39.8
○ 과학기술인력및문화	69,866	80,992	11,126	15.9
○ 과학기술연구개발	337,748	409,393	71,645	2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없음.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 2,592억 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00억 300만원(137.4%)이 증액 편성되었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 분야는 1,761억 6,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269억 6,000만원(258.0%), 과학기술 분야는 830억 4,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30억 4,300만원(38.4%)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09,206	259,209	150,003	137.4
□ 통신	49,206	176,166	126,960	258.0
○ 정보통신	49,206	176,166	126,960	258.0
□ 과학기술	60,000	83,043	23,043	38.4
○ 과학기술인력및문화	60,000	83,043	23,043	38.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국립중앙과학관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 430억 3,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억 3,800만원(5.7%)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입은 14억 7,1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0억 3,400만원(41.3%)이 감액 편성되었고, 내부거래 수입은 407억 7,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7억 7,300만원(7.3%)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은 7억 9,0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5억 9,900만원(313.6%)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립중앙과학관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40,696	43,034	2,338	5.7
○ 일반수입	2,505	1,471	△1,034	△41.3
○ 내부거래 수입	38,000	40,773	2,773	7.3
○ 보전 수입	191	790	599	313.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국립중앙과학관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 430억 3,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억 3,800만원(5.7%)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립중앙과학관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430억 3,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3억 3,800만원(5.7%)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립중앙과학관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40,696	43,034	2,338	5.7
□ 과학기술	40,696	43,034	2,338	5.7
○ 과학기술일반	2,188	2,048	△140	△6.4
○ 과학기술인력및문화	38,508	40,986	2,478	6.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국립과천과학관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 443억 9,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3억 500만원(10.7%)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51억 3,6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내부거래수입은 374억 8,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1억 9,100만원(12.6%), 보전수입은 17억 7,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1,400만원(6.9%)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립과천과학관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40,089**	**44,394**	**4,305**	**10.7**
○ **자체 수입**	5,136	5,136	-	-
○ **내부거래 수입**	33,294	37,485	4,191	12.6
○ **보전 수입**	1,659	1,773	114	6.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국립과천과학관 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 443억 9,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3억 500만원(10.7%)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국립과천과학관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443억 9,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43억 500만원(10.7%)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립과천과학관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40,089	44,394	4,305	10.7
□ 과학기술	40,089	44,394	4,305	10.7
○ 과학기술일반	2,646	2,616	△30	△1.1
○ 과학기술인력및문화	37,443	41,778	4,335	1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9. 우편사업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 5조 4,107억 3,1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23억 8,000만원(0.6%)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3조 600억 6,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48억 4,300만원(2.1%), 재산수입은 677억 1,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억 2,100만원(0.6%)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경상이전수입은 42억 9,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5,300만원(1.3%),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12억 8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400만원(1.2%)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관유물매각대는 352억 5,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1,100만원(0.3%), 정부내부수입은 2조 1,536억 4,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44억 7,700만원(5.1%)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885억 4,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0억 1,100만원(7.3%) 감액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378,351	5,410,731	32,380	0.6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124,912	3,060,069	△64,843	△2.1
○ 재산수입	68,140	67,719	△421	△0.6
○ 경상이전수입	4,240	4,293	53	1.3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94	1,208	14	1.2
○ 관유물매각대	35,145	35,256	111	0.3
○ 세계잉여금	95,557	88,546	△7,011	△7.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049,163	2,153,640	104,477	5.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계 기준 5조 4,107억 3,1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323억 8,000만원(0.6%) 증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조 31억 2,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53억 1,500만원(3.9%) 증액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736억 9,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700만원(0.1%), 주요사업비는 3조 3,339억 1,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29억 800만원(1.3%)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378,351**	**5,410,731**	**32,380**	**0.6**
○ 인 건 비	1,927,811	2,003,126	75,315	3.9
○ 기본경비	73,720	73,693	△27	△0.1
○ 주요사업비	3,376,820	3,333,912	△42,908	△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우편사업특별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 분야는 5조 4,107억 3,1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323억 8,000만원(0.6%)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분야·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378,351	5,410,731	32,380	0.6
□ 통신	5,378,351	5,410,731	32,380	0.6
○ 우정	5,378,351	5,410,731	32,380	0.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0.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 5조 5,566억 5,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01억 100만원(4.0%)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은 3조 4,237억 1,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5억 7,800만원(0.1%), 재산수입은 8,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000만원(700.0%)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이전수입은 7억 1,0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2억원, 관유물매각대는 7,3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3,256억 7,8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4,766억 9,000만원(59.4%) 감액 편성되었음.

○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1조 8,062억 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439억 4,100만원(15.6%)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786,760**	**5,556,659**	**△230,101**	**△4.0**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421,135	3,423,713	2,578	0.1
○ 재산수입	10	80	70	700.0
○ 경상이전수입	710	710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0	200	-	-
○ 관유물매각대	73	73	-	-
○ 세계잉여금	802,368	325,678	△476,690	△59.4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562,264	1,806,205	243,941	15.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계 기준 5조 5,566억 5,9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2,301억 100만원(4.0%)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경비는 1억 7,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0만원(0.6%), 주요사업비는 5조 5,564억 8,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301억원(4.0%)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786,760	5,556,659	△230,101	△4.0
○ 기본경비	178	177	△1	△0.6
○ 주요사업비	5,786,582	5,556,482	△230,100	△4.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 분야는 5조 5,566억 5,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301억 100만원(4.0%)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분야·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5,786,760	5,556,659	△230,101	△4.0
□ 통신	5,786,760	5,556,659	△230,101	△4.0
○ 우정	5,786,760	5,556,659	△230,101	△4.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계 기준 9,993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65억 4,000만원(9.6%)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이전수입은 4억 1,0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재화및용역판매수입은 9,989억 7,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65억 4,000만원(9.6%)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105,924	999,384	△106,540	△9.6
○ 경상이전수입	410	410	-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105,514	998,974	△106,540	△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세출예산안

○ 2026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계 기준 9,993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65억 4,000만원(9.6%)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경비는 1억 4,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300만원(2.0%), 주요사업비는 9,992억 3,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65억 3,700만원(9.6%)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105,924**	**999,384**	**△106,540**	**△9.6**
○ 기본경비	150	147	△3	△2.0
○ 주요사업비	1,105,774	999,237	△106,537	△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신 분야는 9,993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65억 4,000만원(4.0%)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분야·부문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105,924	999,384	△106,540	△9.6
□ 통신	1,105,924	999,384	△106,540	△9.6
○ 우정	1,105,924	999,384	△106,540	△9.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2. 과학기술진흥기금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1,230억 4,3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756억 300만원(38.1%)이 감액 편성되었음.

○ 수입계획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31억 6,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1억 6,600만원(58.4%)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경상이전수입은 23억 7,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3억 1,400만원(35.6%),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25억 3,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529억 8,200만원(95.4%),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1,149억 7,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24억 7,300만원(16.4%)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98,646	198,646	123,043	△75,603	△38.1
○ 재산수입	1,997	1,997	3,163	1,166	58.4
○ 경상이전수입	3,690	3,690	2,376	△1,314	△35.6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5,512	55,512	2,530	△52,982	△95.4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37,447	137,447	114,974	△22,473	△16.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지출계획안

○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1,230억 4,3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756억 300만원(38.1%)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경비는 7억 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500만원(0.7%)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1,223억 4,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56억 800만원(38.2%)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98,646**	**198,646**	**123,043**	**△75,603**	**△38.1**
○ 기본경비	698	698	703	5	0.7
○ 주요사업비	197,948	197,948	122,340	△75,608	△38.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1,230억 4,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56억 300만원(38.1%)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분야·부문별 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98,646**	**198,646**	**123,043**	**△75,603**	**△38.1**
□ **과학기술**	198,646	198,646	123,043	△75,603	△38.1
○ 과학기술일반	98,382	98,382	33,968	△64,414	△65.5
○ 과학기술인력및문화	92,562	92,562	84,873	△7,689	△8.3
○ 과학기술연구개발	7,702	7,702	4,202	△3,500	△45.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3.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이하 “원자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규모는 총계 기준 2,878억 9,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48억 4,000만원(9.4%)이 증액 편성되었음.

○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3억 5,000만원으로 2025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 경상이전수입은 2,289억 1,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81억 9,200만원(3.7%),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586억 2,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6억 4,800만원(39.7%)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원자력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263,053**	**263,053**	**287,893**	**24,840**	**9.4**
○ 재산수입	350	350	350	-	-
○ 경상이전수입	220,725	220,725	228,917	8,192	3.7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41,978	41,978	58,626	16,648	39.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지출계획안

○ 2026년도 원자력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2,878억 9,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48억 4,000만원(9.4%)이 증액 편성되었음.

○ 원자력기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2,878억 9,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48억 4,000만원(9.4%)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원자력기금 분야·부문별 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263,053**	**263,053**	**287,893**	**24,840**	**9.4**
□ 과학기술	263,053	263,053	287,893	24,840	9.4
○ 과학기술일반	70,855	70,855	56,254	△14,601	△20.6
○ 과학기술연구개발	192,198	192,198	231,639	39,441	20.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4. 정보통신진흥기금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규모는 총계 기준 1조 1,030억 2,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36억 8,400만원(1.3%)이 증액 편성되었음.

○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37억 2,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9억 1,300만원(43.9%),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는 98억 9,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65억 5,300만원(62.6%),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449억 1,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579억 400만원(56.3%)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경상이전수입은 9,203억 5,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3,431억 5,500만원(59.5%)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부내수입및기타는 1,241억 3,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521억 100만원(67%)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001,043	1,089,336	1,103,020	13,684	1.3
○ 재산수입	6,637	6,637	3,724	△2,913	△43.9
○ 경상이전수입	577,202	577,202	920,357	343,155	59.5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446	26,446	9,893	△16,553	△62.6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102,814	102,814	44,910	△57,904	△56.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87,944	376,237	124,136	△252,101	△6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지출계획안

○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1조 1,030억 2,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36억 8,400만원(1.3%) 증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52억 3,1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억 3,000만원(4.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80억 4,1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억 600만원(11.1%)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비는 1조 797억 4,8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40억 6,000만원(1.3%)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001,043	1,089,336	1,103,020	13,684	1.3
○ 인건비	14,601	14,601	15,231	630	4.3
○ 기본경비	9,047	9,047	8,041	△1,006	△11.1
○ 주요사업비	977,395	1,065,688	1,079,748	14,060	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및관광 분야는 66억 3,6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0억 9,200만원(24.0%)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통신 분야는 1조 963억 8,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57억 7,600만원(1.5%)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분야·부문별 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1,001,043	1,089,336	1,103,020	13,684	1.3
□ 문화및관광	8,728	8,728	6,636	△2,092	△24.0
○ 문화예술	8,728	8,728	6,636	△2,092	△24.0
□ 통신	992,315	1,080,608	1,096,384	15,776	1.5
○ 방송통신	136,526	136,526	127,038	△9,488	△6.9
○ 정보통신	855,789	944,082	969,346	25,264	2.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5. 방송통신발전기금

1) 수입계획안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규모는 총계 기준 9,986억 2,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181억 7,400만원(13.4%)이 증액 편성되었음.

○ 수입계획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수입은 31억 3,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1억 8,700만원(41.1%)이 감액 편성되었음.

○ 경상이전수입은 8,701억 7,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367억 1,200만원(37.4%),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는 1,253억 2,1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709억 700만원(130.3%)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정부내부수입및기타는 1,872억 5,800만원이 순감되었음.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870,450	880,450	998,624	118,174	13.4
○ 재산수입	5,320	5,320	3,133	△2,187	△41.1
○ 경상이전수입	633,458	633,458	870,170	236,712	37.4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54,414	54,414	125,321	70,907	130.3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77,258	187,258	-	△187,258	순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2) 지출계획안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9,802억 3,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254억 4,500만원(14.7%)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28억 3,5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9,600만원(3.5%)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2억 6,7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700만원(5.0%)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사업비는 9,761억 3,0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254억 1,600만원(14.7%)이 증액 편성 되었음.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844,787**	**854,787**	**980,232**	**125,445**	**14.7**
○ 인건비	2,739	2,739	2,835	96	3.5
○ 기본경비	1,334	1,334	1,267	△67	△5.0
○ 주요사업비	840,714	850,714	976,130	125,416	14.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및관광 분야는 6,168억 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296억 7,400만원(59.3%)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통신 분야는 3,634억 2,3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1,042억 2,900만원(22.3%)이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야·부문별 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844,787**	**854,787**	**980,232**	**125,445**	**14.7**
□ **문화및관광**	387,135	387,135	616,809	229,674	59.3
○ 문화예술	387,135	387,135	616,809	229,674	59.3
□ **통신**	457,652	467,652	363,423	△104,229	△22.3
○ 방송통신	50,077	50,077	45,656	△4,421	△8.8
○ 정보통신	407,575	417,575	317,767	△99,808	△23.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16. 기후대응기금

1) 수입계획안

○ 기후대응기금의 운용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없음. 다만,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는 총계 기준으로 2조 9,056억 8,500만원 규모임.

2) 지출계획안

○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규모는 총계 기준 1,464억 8,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3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는 1,464억 8,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632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분야·부문별 기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부문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합 계	83,243	83,243	146,489	63,246	76
□ 과학기술	83,243	83,243	146,489	63,246	76
○ 과학기술연구개발	83,243	83,243	146,489	63,246	7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Ⅱ. 검토의견

1. 총괄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 연장을 통한 R&D예산 심의 내실화 및 민간위원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방안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예산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R&D예산 배분·조정 및 심의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가) R&D 예산안 배분·조정 개요

○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는 예산의 배분·조정 및 심의 등 R&D예산 편성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2026년 1월 2일부터 기획예산처장관, 이하 같음)에게 제출하고, ②매년 1월 31일까지는 다음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며,

  ③과기정통부장관은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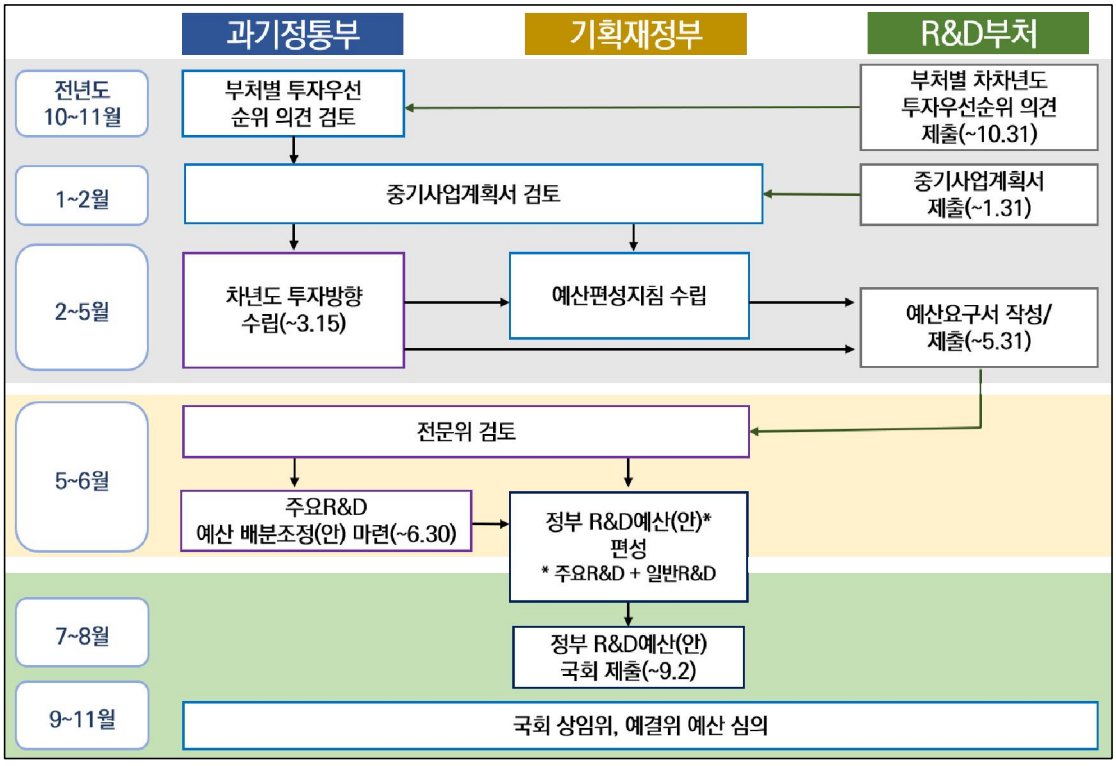
투자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재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④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R&D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5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⑤과기정통부장관은 주요 R&D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뒤인 6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⑥기재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절차 >



○ 즉, 현행법상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R&D사업,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R&D사업 등 '주요 R&D사업'[4]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가 기재부에 앞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과기정통부장관이 마련한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은 「대한민국헌법」 제127조제3항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그 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회의'와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R&D예산 등의 심의를 수행하는 '심의회의'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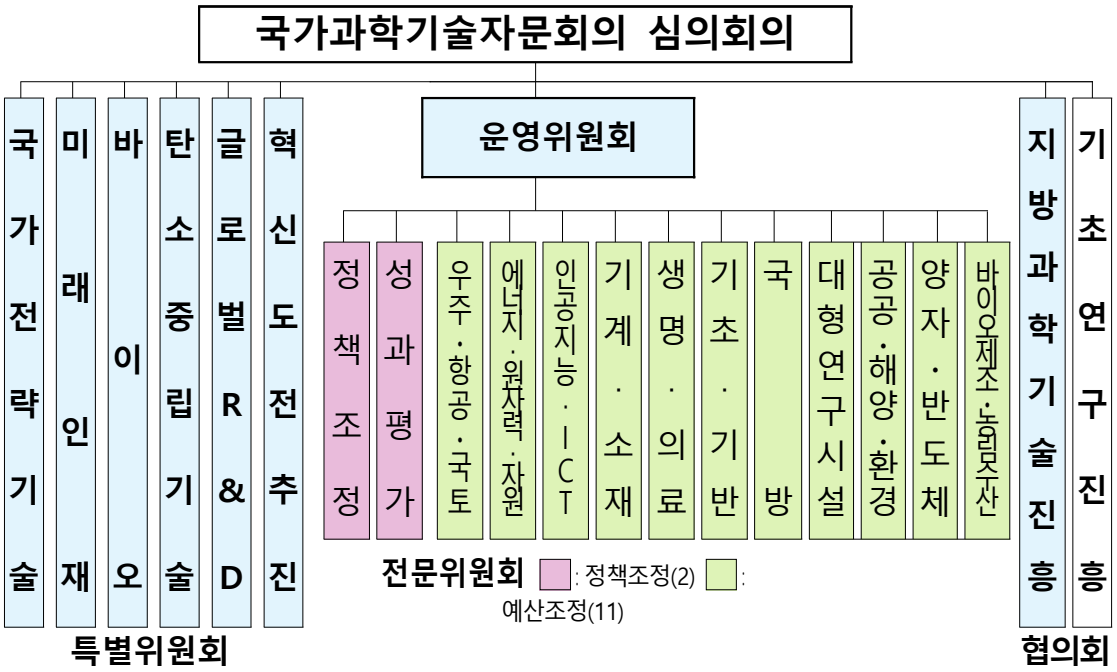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이하 "국과심") 체계를 살펴보면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회의 및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운영

---

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원회 산하에서 기술분야별 R&D예산 배분·조정을 담당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체계 >



구분	구성	기능
심의회의	**(의장)** 대통령 **(위원)** 정부위원(장관급) + 민간위원 총 20명 이하	■ 주요사항* 심의 * 과기자문회의법 제2조
운영위	**(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위원)** 정부위원(실장급) 20명, 민간위원(전문위 위원장) 10명	■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 ■ 심의회의 위임사항* 심의 * 과기자문회의법 시행령 제8조
전문위 (13개)	**(위원장)** 민간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20명 이내	■ 기술분야별 예산 배분·조정 (11개) ■ 정책분야별 정책 조정(2개)
특별위 (5개)	**(위원장)** 혁신본부장 또는 민간위원장 **(위원)** 정부위원(실장급) + 민간위원 총 25명 이내	■ 심의사항 중 특별한 사안 사전검토 및 실무적 자문
협의회 (2개)	**(위원장)** 민간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30명 이내	■ 지방과학기술진흥 및 기초연구진흥 사항 심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나) 검토의견

□ R&D예산 배분·조정 및 심의 기한 연장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고, 주요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6월 30일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므로, 주요 R&D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 및 자문회의 심의에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0일 정도임.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를 거쳐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과심을 소집해 의결하는 절차만으로도 약 일주일이 소요되는바, 30일 중 해당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3주 내외의 기간 동안 수십조원[5]의 1,500여 개 사업들을 검토하고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확정하여야 함.

○ R&D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 배분·조정을 위하여는 충분한 심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과기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R&D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은 당초 60일이었으나 2014년부터 30일로 축소[6]되어

5)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 기준 R&D예산 35.3조원 중 주요 R&D예산은 30.1조원(85.3%)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R&D예산을 배분·조정 및 심의하게 된 2005년 당시 심의 기간은 60일이었으나, 2012년 「국회법」 개정과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안 국회 제출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겨지면서 R&D예산 심의 기간도 30일로 축소되었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R&D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기준 35.3조원으로, 30일의 심의 기간이 설정된 당시의 R&D예산 규모(2015년도 예산안 기준 18.8조원) 대비 87% 이상 증가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예산 배분·조정 및 심의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현재 우리 위원회에 유사한 취지로 발의되어 계류 중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예산 배분·조정 내역을 기재부장관에게 알리는 기한을 8월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R&D예산을 검토하는 기간이 종전 30일에서 81일로 2배 이상 늘어나므로, 보다 심도 있는 R&D예산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7) 의안번호 제2211220호, 황정아의원 대표발의(2025.7.2.)

□ R&D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과심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총 11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8]에 따르면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인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임.

<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현황 >

(단위: 명)

기계·소재	기초·기반	국방	우주·항공·국토	에너지·원자력·자원	공공·해양·환경	인공지능·ICT	양자·반도체	바이오제조·농림수산	생명·의료	대형연구시설	합계
19	16	19	16	17	17	18	14	13	17	19	179*

*기술분야별 전문위원 중 대형연구시설 전문위원 겸임 6명 제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R&D사업에 대해 기술적 측면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2년 임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각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위원회 위원 전체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기가 종료되는 2년마다 위원 다수가 동시에 교체될 여지가 있음.

- 전문위원이 교체될 경우 R&D예산 심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R&D사업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위원 교체가 잦은 구조는 예산 심의의 내실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각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2년 임기로 운영하되, 임기 종료 후 연임하는 인원이 1/3 가량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R&D예산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위촉된 위원을 보다 긴 기간 동안 활용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R&D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위촉되는 만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R&D사업 검토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

- 특히, 기업 등 산업계 출신 민간위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자제하고 본인의 연구 분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R&D예산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예산 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 제척 제도 운영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R&D예산 심의를 위한 방안을 조치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예산 배분·조정의 내실화를 위해 심의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PBS 폐지에 따라 출연(연) 예산 배분을 위한 전략연구사업 기획 전담조직 기능 보강 및 철저한 계획 수립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제도 폐지에 따라 도입되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기획 전담조직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

가) 연구과제중심제도 및 전략연구사업 개요

□ 연구과제중심제도(PBS제도) 개요

○ 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based System, 이하 “PBS제도”)란 연구사업 기획, 예산 배분, 수주 및 관리 등 연구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프로젝트(연구 또는 사업과제) 단위의 경쟁체제에 의해 운영·관리하는 제도임.

○ PBS제도 하에서는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연구원의 선정, 교체 등 연구인력의 활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연구과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는 편성된 총액규모 내에서 연구책임자가 자유롭게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연구수행의 자율성이 높음.

- 다만,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연구과제를 발굴·수주해야 하며 인건비도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 연구기관 차원에서는 사업별로 인건비를 지급받음으로써 인력 관리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인력규모 관리에 대한 자율의 폭이 확대되어 인력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됨.

- 다만, 경상운영비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출연금 외에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경직성 예산인 인건비를 변동성이 강한 경쟁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기관 운영예산 확보가 불안정해졌음.

○ 즉, PBS제도는 연구과제 중심 경쟁체계를 통해 연구자와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과제 수주 경쟁 심화로 연구자 역량이 분산되고 단기 성과에 매몰되어 기관 고유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연구기관 성격에 따른 수주 과제량 차이로 인해 기관의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격차가 증가하는 등 재정 안정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과 정부·민간 등 수탁과제 예산의 금액 및 비중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이 2024년 결산 기준 23개 출연(연) 기관 운영비 전체의 64.7%를 수탁과제에 의존하고 있음.

< 2024년 결산 기준 출연(연)별 수탁과제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		정부수탁		민간수탁 등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KIST	202,927	48.1	164,435	39.0	54,603	12.9	421,965	100.0
녹색연	8,465	65.3	1,950	15.0	2,555	19.7	12,970	100.0
기초연	73,587	62.5	34,832	29.6	9,263	7.9	117,682	100.0
생명연	89,571	42.0	106,605	49.9	17,295	8.1	213,471	100.0
KISTI	92,374	53.5	66,281	38.4	13,990	8.1	172,645	100.0
한의학연	55,922	81.7	9,822	14.4	2,694	3.9	68,438	100.0
생기원	118,105	30.6	218,356	56.5	49,730	12.9	386,191	100.0
ETRI	101,501	14.7	470,114	68.3	116,652	17.0	688,267	100.0
국보연	79,280	66.7	17,402	14.6	22,207	18.7	118,889	100.0
건설연	59,126	35.0	79,356	47.0	30,340	18.0	168,822	100.0
철도연	51,819	49.5	27,150	26.0	25,649	24.5	104,618	100.0
표준연	85,518	45.6	76,721	40.9	25,386	13.5	187,625	100.0
식품연	38,875	63.3	9,791	15.9	12,782	20.8	61,448	100.0
김치연	14,403	77.9	1,713	9.3	2,380	12.8	18,496	100.0
지자연	92,386	49.8	65,760	35.5	27,280	14.7	185,426	100.0
기계연	68,033	34.4	89,670	45.4	39,945	20.2	197,648	100.0
에너지연	82,164	40.4	100,024	49.2	20,984	10.4	203,172	100.0
전기연	56,420	30.8	74,714	40.7	52,241	28.5	183,375	100.0
화학연	96,926	39.4	124,285	50.5	25,100	10.1	246,311	100.0
독성연	30,402	39.0	21,168	27.2	26,331	33.8	77,901	100.0
원자력연	149,742	18.6	322,150	40.1	332,228	41.3	804,120	100.0
재료연	41,944	24.6	88,936	52.2	39,588	23.2	170,468	100.0
핵융합연	84,547	40.5	103,283	49.5	20,948	10.0	208,778	100.0
계	**1,774,037**	**35.3**	**2,274,518**	**45.3**	**970,171**	**19.4**	**5,018,726**	**1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10.

□ 전략연구사업[9] 개요

○ 2025년 7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본연구보다 수탁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제도를 폐지하기로 발표하였음.

○ 이에 정부는 출연(연)이 축정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분야에서 주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단인 '전략연구사업'을 도입하기로 하였음.

- 전략연구사업의 단장은 출연(연) 연구자가 수행하며, PBS제도를 대체하는 만큼 인건비와 간접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해 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 연구사업의 기획, 예산 배분, 수주, 관리를 과제 단위 경쟁체계로 운영하는 PBS제도와 달리, 전략연구사업은 기관 단위의 임무 중심 연구관리 제도로 볼 수 있음.

○ 2026년도 예산안 기준 다음 77개의 전략연구사업이 출범하며, 향후 5년간 매년 전략연구사업이 유사한 규모로 신설될 예정임.

9)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기관전략개발단(Institute Strategic Development, ISD)'의 명칭으로 기획되었으나, 예산안 확정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연구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신규 전략연구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연구원 명	전략연구사업명	예산액
1	KIST	자율 구성 모듈형 휴머노이드 개발단	3,323
2	KIST	한반도 탄소위기 극복 기술 개발단	3,642
3	KIST	노화면역 정밀 제어 혁신치료제 개발단	4,734
4	KIST	반도체·배터리 열폭주 방지 혁신소재 개발단	3,398
5	KIST	가변형상 도심 에너지 시스템 개발단	4,670
6	KIST	저출산 극복 난임 해결기술 개발단	4,435
7	KIST	AI 주도형 ADC 혁신플랫폼 개발단	6,555
8	KIST	신경질환 리밸런싱 혁신기술 개발단	6,555
9	KIST	기계채널 표적 혁신진통제 개발단	4,370
10	기초연	췌장암 예측 메디칩 개발	2,913
11	기초연	고전력 에너지 시스템용 전력반도체 개발	5,693
12	생명연	AI 활용 하이브리드 치료제 전략개발단	6,555
13	생명연	이식형 오가노이드-장기 전략개발단	4,734
14	생명연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항공유 전략개발단	4,907
15	KISTI	AI-화이트해커 기반 해킹제로 시스템 개발	6,562
16	KISTI	생활하수 활용 질병 AI 조기경보 개발	3,642
17	KISTI	차세대 유무선통신 통합 게이트웨이 개발	5,660
18	한의학연	경혈기반 약물의존 대응 우울·PTSD 치료기기 개발	4,786
19	한의학연	아토피피부염 치료를 위한 인체모사시스템 기반 혁신형 한약제제 개발	4,687
20	생기원	지·산·연 협력기반 기업생태계 전환기술 개발	7,284
21	생기원	그린수소기반 그린메탄올 생산시스템 개발	5,958
22	생기원	스마트랩기반 All-다이아몬드 CMOS 개발	6,516
23	생기원	극한환경용 에너지-워터 넥서스 플랫폼 개발	4,734
24	생기원	지능형 미래모빌리티 상태진단 플랫폼 개발	5,958
25	생기원	검색증강생성 기반 에너지소재 제조플랫폼 개발	5,098
26	ETRI	저궤도 위성항법 핵심기술 개발 및 다중계층 PNT 시스템 개발	5,535
27	ETRI	3GPP 6G 표준 기반 Regenerative IoT 위성(탑재체) 발사 및 서비스	3,642
28	ETRI	사용자 맞춤형 형상 프리폼 미래 디스플레이 개발	4,151
29	ETRI	고집적 반도체 무열성 장비 및 소재 개발	6,919
30	ETRI	독자 피지컬AI-소형컴퓨터와 이를 적용한 소프트슈트 개발	6,919
31	ETRI	공공특화 멀티모달 AI 에이전트 개발 및 적용	4,370
32	ETRI	개인 AI 에이전트를 위한 AI-인글라스 기술개발	6,919
33	ETRI	종양 실시간 정밀진단 분자 내시경 개발	3,642
34	ETRI	차세대 엑스선 리소그래피 기술개발	3,642

35	ETRI	항로표지기반 해양IoT 무선통신 기술체계 개발	2,913
36	건설연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도로(K-SCOUR) 건설 기술 개발	5,350
37	건설연	도시형 CO2 포집 및 CCU 건설재료 기술 개발	5,424
38	건설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지하 데이터센터 건설·운영 기술 개발	2,913
39	건설연	에너지 자립률 100% 넷제로 건축물 구현 기술 개발	2,675
40	건설연	안전한 시공을 위한 AI Construction 모델 및 데이터 표준화 기술개발	6,482
41	철도연	고효율·대용량 차세대 고속철도차량 기술 개발	5,994
42	철도연	전력반도체기반 차세대 전력공급시스템 기술 개발	3,996
43	표준연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플랫폼 구축 전략개발단	5,784
44	표준연	첨단반도체 초정밀 측정분석 장비 개발단	5,760
45	표준연	플래시 방사선 1초 암치료기 개발단	3,642
46	표준연	양자소재 성능평가 플랫폼 구축 전략개발단	3,806
47	식품연	식품공정 전자동화 전략개발단	4,224
48	식품연	K-SPIRITS 전략개발단	2,913
49	김치연	글로벌 표준 김치팩토리 전략개발단	2,039
50	김치연	김치옴 활용 新바이오소재 전략개발단	1,638
51	김치연	Lacto-AI 기반 김치유산균 파마바이오틱스 전략개발단	1,311
52	지질연	희토류 가공 K-플랜트 핵심장비 개발 사업	4,424
53	지질연	인공지능형 지하수 인터랙티브맵(AEGIS) 개발 사업	2,913
54	지질연	복합 재난 안전망 혁신 개발 사업	5,098
55	기계연	미래산업용 20 K 대용량 모듈형 극저온 냉각시스템 개발	6,752
56	기계연	설계 엔지니어링 자율화를 위한 AI Agent 개발	6,410
57	기계연	반도체 제조용 차세대 플라즈마 식각장비 개발	2,185
58	기계연	폐플라스틱 열분해 플랜트 기술개발 및 실증	4,312
59	에너지연	국산 언어모델 기반 에너지 비용 15% 절감 건물에너지산업공정 설비 자율운전 AI 에이전트 개발	5,827
60	에너지연	플라스틱세 도입 및 재생원료 의무사용 30% 국제규제 대응을 위한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플랜트 개발	5,098
61	에너지연	폭발 위험없는 24시간(One-day) 사용 장주기 수계 배터리-ESS	3,725
62	전기연	차세대 소재적용 고출력 전력반도체 사업	4,753
63	전기연	환자맞춤형 국산 고성능 방사선암치료기 사업	5,463
64	전기연	고온초전도적용 혁신적 전선소재 사업	2,675
65	화학연	자동차용 규제 대응 신규 소재·부품 개발 사업	4,768
66	화학연	차세대 모달리티 기반 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사업	5,098
67	화학연	도심형 수소 전력 융합 에너지 모듈 기술 개발 사업	3,886
68	화학연	자율 실험 시스템 기반 첨단 소재 신속 Scale-up 개발 사업	5,098
69	화학연	가속화 플랫폼 기반 항생제 내성균 대응 치료제 개발 사업	4,734
70	독성연	첨단 바이오의약품 혁신 독성평가기술 개발	5,728
71	원자력연	표준설계인가 획득 SMR 상용화 위한 설계최적화 및 AI기반 운영시스템 개발	7,024

72	원자력연	난치성 질환 진단·치료 위한 방사성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발	3,277
73	원자력연	양자컴퓨터 오류정정 기술 혁신을 위한 양자급 무오류 양자소재 개발 및 실증	4,006
74	원자력연	고효율 초임계 CO2 발전을 위한 재압축기 개발	2,566
75	재료연	금속소재 조성·공정 자동설계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4,443
76	재료연	첨단항공엔진용 고온소재 개발	7,042
77	핵융합연	초미세 공정용 반도체 장비 개발사업	6,27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전략연구사업 기획 전담조직의 기능 보강 필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하 “연구회”)는 전략연구사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획, 점검, 메타평가 등을 수행하는 (가칭) ‘전략연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10]를 운영하기 위하여 2026년도 예산으로 36억원을 편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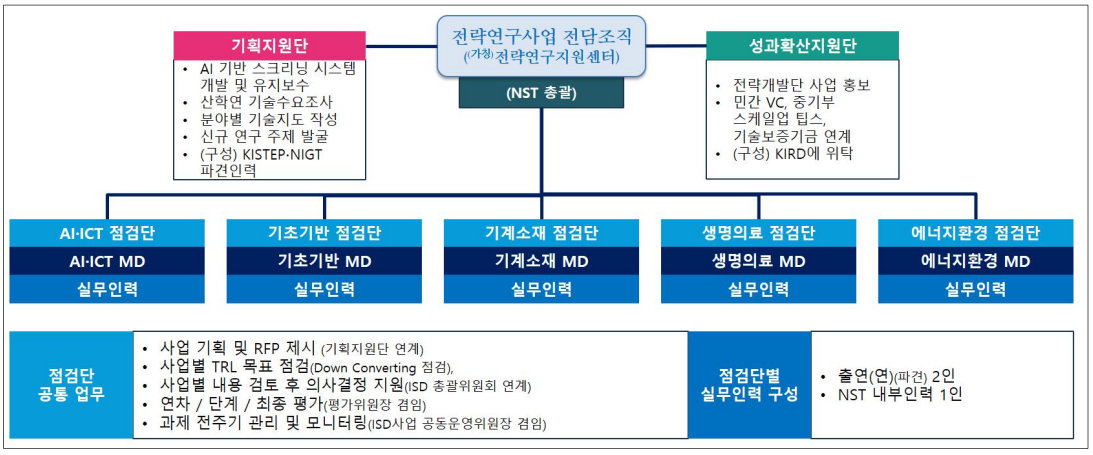
- 연구회에 따르면 지원센터는 전략연구사업이 PBS제도 폐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①전략연구사업 대상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기획, ②사업 점검, ③중간평가・최종평가, ④사업화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지원센터는 사업 운영체계를 기획하고 RFP 제시를 지원하는 ‘기획지원단’, 사업에 대한 VC 연계 및 기술사업화 업무를 수행

10)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기관전략개발단 평가센터(No Down Converting Center, NDCC)’의 명칭으로 기획되었으나, 예산안 확정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연구지원센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하는 ‘성과확산지원단’, 각 분야별 사업 점검·평가를 수행하는 ‘점검단’으로 구성될 계획임.

< 전략연구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10.

○ 연구회에 따르면 5개 분야별 점검단은 각각 8명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데, 점검단이 담당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점검인력이 과소한 수준이라고 보임.

- 5개 분야별 점검단(총 40명)이 2026년 기준 77개 전략연구사업의 3,636억원 규모의 예산을 점검하므로, 각 점검단별로는 8명의 인원으로 15~20개의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평균 727억원의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려는 계획으로 보임.

- 게다가 향후 5년간 매년 새로운 전략연구사업이 선정되어 출범할 것이고, PBS제도 폐지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조

달하는 예산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점검단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질 것으로 보임.

○ 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전략연구사업 전체 예산 3,636억원의 1% 수준에 불과한 36억원으로, 실질적인 기획·평가 등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임.

○ 또한 지원센터 조직 구조 및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전략연구사업의 미션과 사업이 올바르게 선정·기획되었는지,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PBS제도 폐지에 따른 전략연구사업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략연구사업 기획 전담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그 운영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가. 일반회계

1) 국가간협력기반조성(4731-402): 공동연구 신규과제 협약체결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예산상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모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 편성 기간과 실제 연구 기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은 국가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양자·다자간 협력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임. 내역사업으로 고위급 회담에 따라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국외 연구자와의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인력교류, 해외 과학기술협력 거점을 지원하는 협력센터, 국제기구와의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협력활동으로 구분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8억 6,400만원이 증액

된 499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국가간협력기반조성	23,985	23,985	38,070	33,796	49,934	11,864	31.2
○ 공동연구	10,629	10,629	17,430	14,972	22,156	4,726	27.1
○ 인력교류	2,047	2,047	2,020	1,635	2,200	180	8.9
○ 협력센터	8,585	8,585	11,784	10,352	14,562	2,778	23.6
○ 협력활동	2,724	2,724	6,836	6,836	11,016	4,180	61.1
□ 세출예산비목	23,985	23,985	38,070	33,796	49,934	11,864	31.2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3,985	23,985	38,070	33,796	49,934	11,864	31.2

주 1) 2025년 집행액은 9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공동연구 신규과제 협약체결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동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일부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지연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기간과 실제 연구기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4~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의 협약체결일을 살펴보면,

2024년도 신규 연구과제 142개 중 37개의 과제가 4/4분기 이후(10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 117개 과제 중 10월 22일 기준으로 53개 과제가 4/4분기에 체결되거나 미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기간 대비 실제 연구기간의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국가간협력기반조성 내역사업별 신규과제의 협약 체결 현황>

(단위: 개, %)

연도	내역사업	신규 과제	협약 체결 시점				예산 편성
			1~3분기 (A) (9월말)	4분기 (B) (10월후)	미체결 (C)	비율 [(B+C)/(A+B+C)]	
2024	공동연구	55	21	34	-	61.8	1~12개월
	인력교류	64	62	2	-	3.1	3~12개월
	협력센터	6	5	1	-	16.7	12개월
	협력활동	17	17	-	-	-	12개월
	소계	142	105	37	-	26.1	1~12개월
2025. 10. 22.	공동연구	105	52	38	15	50.5	3~12개월
	인력교류	9	9	-	-	-	3개월
	협력센터	2	2	-	-	-	6~12개월
	협력활동	1	1	-	-	-	12개월
	소계	117	64	38	15	45.3	3~12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처럼 동 사업의 신규 연구과제 협약 체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해당 연구개발 과제가 주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전제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전 내용 조율 및 협력 관계 설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일부 연구개발 과제가 예산상 계획보다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모와 협약 체결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 편성 기간과 실제 연구 기간 간의 불일치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지원: 연구개발 개념에 적합하게 홍보 등 과제 추진 필요 등

○ 신규 연구개발 사업인 동 사업의 홍보 연구과제가 연구개발의 본질적 개념(과학적·기술적 지식 창출)에 부합하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총사업비, 사업기간,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지원’ 사업은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 연구개발 공동협력분야 다자 연구협력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①회원국 간 실무·고위급 협의 ②사업 상세기획 ③국가간 협약(안) 및 운영세칙 마련 ④국내외 홍보 등의 내용을 추진하는 2026년도 신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한국연구재단 사업출연금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	-	-	-	1,000	1,000	순증
○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	-	-	-	1,000	1,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1,000	1,000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1,000	1,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연구개발 개념에 적합하게 홍보 등 과제 추진 필요 등

○ 동 사업은 경제·문화적으로 상승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 공동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인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고위급 협의, 국가간 협약(안) 및 운영세칙 마련 등의 사업을 2026년도에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은 ① 사전준비, ② 1단계 시범운영, ③ 프로그램 확대의 단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도는 사전준비 단계로 다자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을 도모할 예정임.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사업계획>

단계	주요 내용
사전준비	○ 다자 연구협력 구체화를 위한 회원국과의 정부간 대화채널, 협약 및 세부규약(안), 사업(안) 등 구축
1단계	○ **(1단계)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를 정하여 시범운영** - (후보분야) 한국의 역량이 높아 아태 국가들의 관심이 높고, 아태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으며, 향후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 AI, 첨단바이오, 양자, 기후변화대응 등의 기초원천 연구 - (후보국가) 우선 환태평양 지역 과학기술 선진국 중심으로 우선 참여 설득하고, 점진적 범위 확대 - (재원) 총규모 600억원대, 우리 분담금 50% 이상으로 시작 - (지원대상) 세계 각국의 신진연구자팀(2~4인)
2단계	○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확대 추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은 다음과 같은 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사업 내 홍보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연구개발의 본질적 개념(과학적·기술적 지식 창출)에 부합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고위급 협의 과제의 연간 연구개발비 4억원 중 연구가능기간 9개월(9/12) 동안 집행 가능한 예산 3억원, 홍보 등 연구과제의 연간 연구개발비 5억원 중 연구가능기간 9개월 동안 집행 가능한 예산 4억원 등을 합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백만원, 개월)

연구과제	2026년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과제수	과제당 연구개발비	연구가능 기간	2026년도 예산안
고위급 협의	1	400	9	300
회원국 실무협의	1	200	9	150
국가간 협약 및 운영세칙 마련	1	200	9	150
홍보 등	1	500	9	400[11]
합계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홍보 등’이라는 과제에 국내 공청회, 해외 석학 간담회, 해외 학술지 홍보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동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연계 없이 추진될 경우, OECD 에서 규정한 연구개발의 정의 및 정부 예산편성 지침 상의 R&D 범위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OECD에 따르면 연구개발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학기술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로 인정함.

11) 해당 내역 연구과제는 연구가능기간 9개월이지만 4억원만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연구개발 과제 지원 등을 연구개발로 예시하고 있는바, 홍보사업이 연구개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 연관성을 갖도록 기획·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예산편성 지침상 연구개발 개념과 범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예시사업
과학기술 활동	연구개발 (R&D)	사물·현상·기능에대한 새로운 지식을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활동	· 연구개발과제지원 · 연구기관지원 · 고급인력양성 · 연구시설·장비구축 등
	과학기술 교육훈련	과학기술 관련한 단순 교육훈련·연수활동 (고급인력양성사업제외)	· 이공계장학사업 · 교육과정개발 · 강의·연수지원 · 초중등교육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서비스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 p. 38. 2025. 10.

○ 둘째, 동 사업은 외국과의 협의, 국가 간 협약 마련, 다자간 협력 및 홍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이 확정된 이후, 총사업비 규모,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연구협력 사업으로, 사업 구체화를 위하여 정부가 회원국과의 고위급 협의 등 대화를 추진하고, 세부

협약 및 운영 세칙을 마련할 예정임.

○ 2026년도에는 사전준비 연구과제들을 통해 사업에 관한 다자간 협의를 진행하고, 이 결과로 사업계획이 일정 수준 이상 구체화되면 총사업비 규모,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포함한 상세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12]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규모가 확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위임을 받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13]에서는 추진계획 등의 예고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14]에 따르면 신규사업은 연차별 투자 계획을 감안하여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p. 30.
○ 신규사업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추진하되, **연차별 투자 계획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반영**
- **모든 신규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과학기술**

적정 소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신규사업은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예산 규모 등의 포함된 연구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15]에 따라서도 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필수항목으로 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평가계획, 자원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조속히 확정되어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인 동 사업의 홍보 연구과제가 연구개발의 본질적 개념(과학적·기술적 지식 창출)에 부합하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총사업비, 사업기간, 구체적 사업내용 등을 조속히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연구기획보고서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15)「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p. 101.
□ 사전기획 충실성
○ 모든 신규사업은 사전기획보고서(필수항목*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사업의 목표, 세부추진내용, 추진체계, 평가계획, 자원규모 및 인력확보방안 등**

3)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해외 기관과의 협력 어려움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감안한 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은 해외 기관과 국내 기업, 대학 등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개발이 추진되는 관계로 해외와의 협력 어려움으로 인하여 협약 체결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의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기술 분야의 원천 및 핵심기술 확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현안 대응을 목표로 추진되는 연구개발 사업임. 동 사업은 국내 기업, 대학 등이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9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2,930	2,930	6,460	6,460	9,751	3,291	50.9
○ 디지털핵심기술국제공동연구	2,430	2,430	5,460	5,460	7,798	2,338	42.8
○ 디지털융합기술국제공동연구	500	500	1,000	1,000	1,953	953	95.3
□ 세출예산비목	2,930	2,930	6,460	6,460	9,751	3,291	50.9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930	2,930	6,460	6,460	9,751	3,291	50.9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2026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

(단위: 개, 개월, 백만원)

내역사업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과제수	연간 연구비	연구 가능 기간	예산	과제수	연간 연구비	연구 가능 기간	예산안
디지털핵심 기술국제 공동연구	신규	5	466	6	1,165	4	472	6	944
	계속1	4	400	12	1,600	15	456.9	12	6,854
	계속2	5	593	10	2,470	-	-	-	-
	계속3	1	300	9	225	-	-	-	-
디지털융합 기술국제 공동연구	신규	1	332	6	166	3	414	6	621
	계속	2	500	10	834	3	444	12	1,332
합계		19	-	-	6,460	25	-	-	9,75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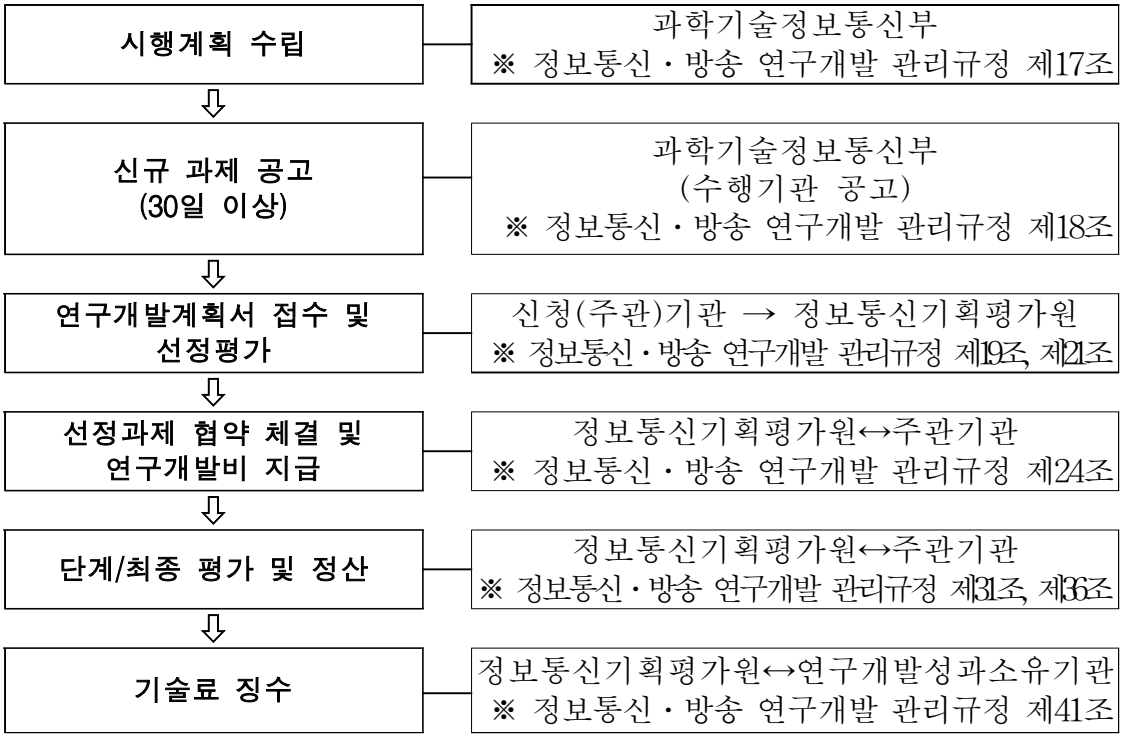
○ 동 사업의 2025~2026년도 예산 및 예산안 세부 산출 내역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으로 신규 연구과제는 6개월, 기존 연구과제는 9~12개월간 연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2026년도의 경우에는 신규 연구과제는 6개월간, 계속 연구과제는 12개월간 연구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사업의 사업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 지급을 위해서는 신규과제 사업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및 선정평가, 전문기관과 주관·참여기관과의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의 절차가 필요함.

- 동 사업의 연구개발비의 주관·참여기관 단계에서의 실제 집행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선정된 주관·참여기관과의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루어지게 됨.

<2024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추진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6.

나) 검토의견

□ 해외 기관과의 협력 어려움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감안한 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산상 편성 계획 대비 연구개발 협약 체결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연구개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주관·참여기관(기업·대학 등) 간 협

력을 통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해외와의 협력이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 선정 평가 과정의 각 국간의 이견으로 연구과제가 미선정되거나, 해외 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이 엄격[16]하여 접수 기관이 부족한 사유로 사업 추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 협약 체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차수	공고 일시	협약 체결 일시	공고			선정		
			연구과제 수	과제규모		연구과제 수	과제규모	
				전체	해당 연도		전체	해당 연도
1차	'24.1.10 ~ 2.13	①'24.7.16 ②'24.7.16	2(핵심기술)	1,500	250	2(핵심기술)	1,500	250
2차	'24.2.5 ~ 4.15	①'24.8.20 ②미선정	2(핵심기술)	3,900	650	1(핵심기술)	3,000	500
3차	'24.2.21 ~ 4.29	유찰	1(핵심기술)	900	150	-	-	-
4차	'24.4.5 ~ 6.4	①'24.10.24 ②'24.9.3 ③'24.8.30 ④'24.8.27 ⑤'24.9.6	4(핵심기술)	5,880	980	4(핵심기술)	5,880	980
			1(융합기술)	1,500	250	1(융합기술)	1,500	250
5차	'24.4.12 ~ 6.12	'24.9.2	1(융합기술)	1,500	250	1(융합기술)	1,500	250
6차	'24.7.18 ~ 8.19	'24.10.24	1(핵심기술)	900	150	1(핵심기술)	900	150
7차	'24.8.6 ~ 9.4	'24.10.25	1(핵심기술)	900	150	1(핵심기술)	900	1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16) 예를 들면, 미국 측 연구자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미국국립과학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연구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함.

- 2024년도 동 사업의 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차 사업공고에서 선정평가 과정에서 각국 이견으로 선정절차 중단 및 일반형으로 재공고(7차)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 또한, 3차 사업 공고에서는 미국 측의 접수 조건 난이도가 높아 최종 접수기관이 없어 유찰 및 일반형으로 재공고(6차)가 발생하여 협약체결이 예산상 계획 대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음.

<2025년도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 협약 체결 현황(10월말)>

(단위: 개, 백만원)

차수	공고 일시	협약 체결 일시	공고			선정		
			연구과제 수	과제규모		연구과제 수	과제규모	
				전체	해당 연도		전체	해당 연도
1차	’25.1.17 ~2.21	‘25.8.28	1(핵심기술)	750	125	1(핵심기술)	750	125
2차	’25.2.7 ~3.7	‘25.9.22.	1(핵심기술)	1,500	250	1(핵심기술)	1,500	250
3차	’25.4.1 ~6.2	①유찰 ②‘25.8.28	1(핵심기술)	1,623	270	-	-	-
			1(융합기술)	996	166	1(융합기술)	996	166
4차	’25.4.14 ~6.18	‘25.10.31.	1(핵심기술)	1,623	271	1(핵심기술)	1,623	271
5차	’25.8.23 ~9.23	협약 진행중	2(핵심기술)	3,123	520	2(핵심기술)	3,123	52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2025년도 동 사업의 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3차 공고에서 접수기관이 없어 과제 재기획 및 일반형으로 재공고(5차)하는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지연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2024~2025년도 연구과제 협약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신규 연구과제 12개 중 3개(25%)가 7월에, 9개(75%)가 8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예산상 편성기간인 6개월(7월 협약)을 준수한 과제는 3개임. 2025년에도 전체 6개 과제가 모두 8월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어, 예산상 계획대비 협약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 사업 신규 연구과제 협약 체결 시점>

(단위: 개)

연도	신규 연구과제 협약 체결 시점			
	7월	8~9월	10~12월	합계
2024	3	6	3	12
2025	-	3	3	6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은 해외 기관과 국내 기업, 대학 등의 협력을 통해서 연구개발이 추진되는 관계로 해외와의 협력 어려움으로 인하여 협약 체결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의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7031-401): 연례적 이월 과다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 정책연구 지원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과제가 과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ICT 분야 현안 조사·분석·연구 및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서 부처의 정책연구와 자문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4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기반 조성 및 행정능률 향상사업	538	629	2,403	1,444	2,404	1	-
○ 정책연구 지원	471	562	456	314	456	0	-
○ 2030자문단 운영	67	67	67	54	67	0	-
○ 청년인턴 운영	-	-	1,880	1,076	1,881	1	0.1
□ 세출예산비목	538	629	2,430	1,444	2,404	1	-
○ 정책연구비(260-02)	471	562	456	314	456	-	-
○ 일반수용비(210-01)	67	52	70	53	72	2	2.9
○ 일용임금(110-04)	-	-	1,585	912	1,615	30	1.9
○ 그 외	-	77	292	165	261	△31	△10.6

주 1) 2025년 집행액은 10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나) 검토의견

□ 연례적 이월 과다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 정책연구 지원 내역사업은 과학기술·ICT 분야 현안의 신속한 조사·분석·대응과,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정책 수립 및 기존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 연구 주제를 선정한 후,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연구과제가 많아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집행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연내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액 9억 4,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0억 2,900만원 중에서 6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67.4%에 불과하였음.

<정책연구지원 내역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조정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22	942	87	-	1,029	694	294	41	67.4
2023	942	294	-	1,236	916	256	64	74.1
2024	471	256	-	727	562	121	43	77.3
2025. 8.	456	121	-	577	211	-	-	36.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2023년도에도 예산현액 12억 3,600만원 대비 집행액이 9억 1,600만원으로 집행률이 74.1% 수준이었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현액 7억 2,700만원 대비 5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동 내역사업의 집행 실적이 매년 부진한 주된 원인은, 정책연구과제 및 수행기관의 선정이 지연되면서 연구과제 추진이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정책연구과제의 연도별 연내 집행 및 이월 현황>

(단위: 건)

연도	전체 과제	연내 집행 과제	이월된 과제
2022	17	3	14
2023	16	4	12
2024	10	3	7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정책연구과제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내 집행 및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전체 17개 과제 중 3개 과제만이 연내에 집행이 완료되었고 14개 과제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도에는 전체 16개 과제 중 12개 과제가 이월되었으며, 2024년도에도 10개 과제 중 7개 과제가 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정책연구 지원 내역사업은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과제가 과도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기타잡수입(69-691): 결산시정요구사항, 예산총계주의 등을 감안한 기관장 등 전세 관사 대금의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필요

○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2024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신규 관사 전세 계약 시 기존 관사에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신규 관사 전체 전세보증금을 예산을 통해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기타잡수입(69-691) 세목은 물품 매각 대금, 과오납금 환입, 기타 수수료 및 보증금 환수액, 공적항공마일리지 판매금 등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입을 포괄하는 세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세목을 직접 징수결정하고 수납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잡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A)	수납액			
□ 기타잡수입	28	23	28	19	28	-	-

주 1) 2025년 수납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결산시정요구사항, 예산총계주의 등을 감안한 기관장 등 전세 관사 대금의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제1·2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세종시 거주를 위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관사를 마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전세 계약 종료 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신규 계약의 전세보증금 지급에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세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말 관사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동일한 거주지에서 2019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계약이 지속되고 있는 제1차관 관사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계약된 제2차관 관사를 제외하고, 장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관사는 각각 2024년과 2023년에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거주지에 대해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등 관사 보유 현황>

(단위: ㎡, 백만 원)

위치	거주 형태	거주자	거주기간	전용 면적	임차	
					전세 보증금	임차료
세종시	전세	장관	2024. 1. 2. ~2026. 3. 2.	95.62	350	-
세종시	전세	1차관	2019. 6. 20. ~2027. 6. 19.	84.73	270	-
세종시	전세	2차관	2019. 6. 20. ~2026. 7. 31.	84.99	330	-
세종시	전세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2023. 7. 4. ~2027. 7. 4.	99.98	280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관사의 전세보증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장관의 경우 2024년도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 1억 원과 기존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합하여 3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3년도 기본경비 3,000만 원과 기존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합한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음.

-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관사 계약 과정에서, 기존 관사

의 전세 계약 종료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이를 직접 신규 관사 계약의 전세보증금 지급에 직접 활용하였으며, 전체 전세보증금 중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차액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기본경비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규 관사 계약 시 전세보증금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위치	거주 형태	거주자	거주기간	전용 면적	전세보증금 집행		
					해당연도 예산집행 (A)	기존 전세 보증금 (B)	합계 (A+B)
세종시	전세	장관	2024. 1. 2. ~2026. 3. 2.	95.62	100 (기본경비)	250	350
세종시	전세	과학기술 혁신본부장	2023. 7. 4. ~2027. 7. 4.	99.98	30 (기본경비)	250	2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관사에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신규 관사 전체 전세보증금을 예산을 통해 편성·집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채택한 바 있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예산총계주의에 따른 기관장 등 전세 관사 대금의 세입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잡수입(69-691)
	지적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관, 제1·2차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세종시 거주를 위한 관사를 전세 계약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마련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신규 계약에 직접 사용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신규 관사 계약 시 기존 전세보증금을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활용했으며, 부족분은 해당 연도 기본경비 예산으로 충당함
	시정요구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관사에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신규 관사 전체 전세보증금을 예산을 통해 편성·집행할 것

자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심사보고서', 2025. 8.

○ 따라서,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2024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신규 관사 전세 계약 시 기존 관사에서 반환된 전세보증금을 기타잡수입 등 세입으로 계상한 후, 신규 관사 전체 전세보증금을 예산을 통해 편성할 필요가 있음.

6) 행정사무정보화(7031-401): ISP[17] 조속한 완료를 통한 신규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철저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ISP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 방향과 범위 등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행정사무정보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업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개선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서 행정 업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대국민서비스시스템 유지관리 등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6억 5,900만원이 증액된 96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17)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2026년도 행정사무정보화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행정사무정보화	5,200	5,313	5,017	2,956	9,676	4,659	92.9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609	2,632	2,609	1,622	6,974	4,365	167.3
○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100	97	100	69	100	-	-
○ 행정사무자동화 유지관리	364	364	364	297	293	△71	△19.5
○ 행정기반통신망 운영	2,127	2,220	1,944	968	2,309	365	18.8
□ 세출예산비목	5,200	5,313	5,017	2,956	9,676	4,659	92.9
○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20	20	-	-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373	2,369	2,373	1,158	2,309	△64	△2.7
○ 관리용역비(210-15)	2,125	2,117	2,125	1,387	2,192	67	3.2
○ 일반연구비(260-01)	135	163	135	94	3,362	3,227	2390.4
○ 자산취득비(430-01)	547	644	364	297	1,793	1,429	392.6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ISP 조속한 완료를 통한 신규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철저

○ 동 사업에는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AI기반 과기정통부 특화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의 예산이 2026년도 31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음.

- ‘AI 기반 과기정통부 특화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은 행정 효율화, 데이터 개방, 맞춤형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범정부적 AI 공통기반을 마련하고 인터넷망과 내부 행정망에서도 보안 우려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AI기반 과기정통부 특화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도 예산안
AI기반 과기정통부 특화 행정서비스 구축	문서중앙화	400
	통합검색시스템	639
	지능형특화업무혁신	2,131[18]
합 계		3,17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지능형특화업무혁신(18억 9,700만원) 사업은 자체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집행의 계획과 방향을 제시하는 ISP가 2025년 10월 현재 수행 중임. 해당 ISP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특화업무혁신 사업과 관련된 ‘AI 기반 과기정통부 특화 행정서비스 구축’ 사업의 ISP는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예정으로

18) 동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이외에 ‘차세대 고도화 ISP(2억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국회 예산 제출 시점인 2025년 9월 2일에는 ISP 수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시스템 구축 예산이 편성되어, 향후 집행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 범위나 설계 등에서 변동이 필요할 수도 있음.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9]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ISP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추진 전략 및 범위,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으므로, 동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의 경우에도 조속히 완료하여 집행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ISP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업 추진 방향과 범위 등에 충실히 반영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19)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5.
□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BPR은 ISP·ISMP 수립 전 중앙관서의 장이 자체 판단하에 자체예산으로 수립 가능)
* ISP·ISMP는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된 경우에 한함
** 시범·실증사업 후, 본 사업(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은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ISP 또는 ISMP 수립 및 검토 신청

7)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7041-401): 온라인 홍보의 확대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홍보 사업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TV, 라디오, 대중교통(KTX·지하철 전광판) 등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정책홍보 추진을 위해 트렌드 및 이슈 분석을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내용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20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1,746	1,746	1,586	720	2,086	500	31.5
○ 오프라인 매체 홍보	773	771	691	252	851	160	23.2
○ 온라인 매체 홍보	759	734	676	386	980	304	45.0
○ 외신 홍보	75	75	60	-	80	20	33.3
○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 활용	139	137	159	82	175	16	10.1
□ 세출예산비목	1,746	1,746	1,586	720	2,086	500	31.5
○ 일반수용비(210-01)	948	948	830	285	990	160	19.3
○ 일반용역비(210-14)	658	658	597	353	921	324	54.3
○ 상용임금(110-03)	126	126	130	74	146	16	12.3
○ 고용부담금(320-09)	14	14	29	8	29	-	-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온라인 홍보의 확대 필요

○ 방송통신 광고시장에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의 홍보 사업도 온라인 매체 홍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9년도부터 2025년도(추정치)까지 광고 매체별 국내 광고비 현황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오프라인 광고인 방송광고는 2019년 3조 7,710억 4,600만원에서 2023년 3조 3,898억 5,2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문·잡지 광고도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반해, 모바일로 대표되는 온라인 광고는 2019년 6조 5,219억 2,900만원에서 2023년 9조 3,652억 5,6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프라인 광고보다 온라인 광고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광고 매체별 국내 광고비 현황(2019~2025년)>

(단위: 백만원)

매 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정치)	2025년 (추정치)
방송광고	**3,771,046**	**3,484,137**	**4,053,056**	**4,021,190**	**3,389,852**	**3,025,290**	**2,961,509**
	-4.09%	**-7.61%**	**16.33%**	**-0.79%**	**-15.70%**	**-10.75%**	**-2.11%**
지상파TV	1,244,653	1,106,607	1,359,684	1,376,216	1,109,433	975,660	971,662
	-12.47%	-11.09%	22.87%	1.22%	-19.39%	-12.06%	-0.41%
지상파 DMB	2,340	2,580	2,195	2,203	1,280	1,220	1,165
	-46.87%	10.26%	-14.93%	0.38%	-41.89%	-4.69%	-4.53%
라디오	208,481	232,980	259,767	254,022	215,956	181,029	181,251
	0.57%	11.75%	11.50%	-2.21%	-14.99%	-16.17%	0.12%
PP	2,002,092	1,891,678	2,182,364	2,152,390	1,852,745	1,691,875	1,641,169
	0.60%	-5.51%	15.37%	-1.37%	-13.92%	-8.68%	-3.00%

매 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정치)	2025년 (추정치)
SO	139,140	114,539	109,012	109,596	110,501	92,504	78,807
	-1.16%	-17.68%	-4.83%	0.54%	0.83%	-16.29%	-14.81%
위성방송	50,039	33,210	32,978	30,656	27,521	20,754	20,075
	-2.13%	-33.63%	-0.70%	-7.04%	-10.23%	-24.59%	-3.27%
IPTV	124,301	102,544	107,056	96,107	72,415	62,247	67,380
	7.05%	-17.50%	4.40%	-10.23%	-24.65%	-14.04%	8.25%
신문·잡지 광고	**2,372,993**	**1,920,054**	**2,020,766**	**2,127,737**	**2,026,075**	**2,039,377**	**2,024,613**
	1.07%	**-19.09%**	**5.25%**	**5.29%**	**-4.78%**	**0.66%**	**-0.72%**
신문	1,939,672	1,593,369	1,708,087	1,801,374	1,723,915	1,736,890	1,727,899
	1.92%	-17.85%	7.20%	5.46%	-4.30%	0.75%	-0.52%
잡지	433,321	326,685	312,679	326,363	302,159	302,487	296,714
	-2.58%	-24.61%	-4.29%	4.38%	-7.42%	0.11%	-1.91%
온라인광고	**6,521,929**	**7,528,378**	**8,003,643**	**8,706,170**	**9,365,256**	**10,135,816**	**10,648,035**
	14.08%	**15.43%**	**6.31%**	**8.78%**	**7.57%**	**8.23%**	**5.05%**
인터넷	1,871,643	1,839,362	1,779,736	1,902,682	2,076,573	2,255,583	2,337,198
	-8.94%	-1.72%	-3.24%	6.91%	9.14%	8.62%	3.62%
모바일	4,650,286	5,689,016	6,223,908	6,803,489	7,288,683	7,880,233	8,310,837
	27.00%	22.34%	9.40%	9.31%	7.13%	8.12%	5.46%
옥외광고	**1,256,765**	**835,759**	**930,197**	**1,069,335**	**1,220,803**	**1,259,140**	**1,280,470**
	-5.50%	**-33.50%**	**11.30%**	**15.00%**	**14.16%**	**3.14%**	**1.69%**
빌보드	370,482	292,140	351,470	397,332	423,480	430,822	443,216
	-1.37%	-21.15%	20.31%	13.05%	6.58%	1.73%	2.88%
교통	511,367	375,710	382,669	437,456	455,242	457,457	463,268
	-5.77%	-26.53%	1.85%	14.32%	4.07%	0.49%	1.27%
엔터테인먼트	301,240	107,359	136,694	156,304	200,546	220,249	224,806
	-10.65%	-64.36%	27.32%	14.35%	28.31%	9.82%	2.07%
기타옥외	73,677	60,550	59,365	78,243	141,536	150,613	149,180
	-1.05%	-17.82%	-1.96%	31.80%	80.89%	6.41%	-0.95%

매 체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정치)	2025년 (추정치)
기타광고	504,196	351,960	509,712	595,842	539,028	541,033	542,273
	17.53%	-30.19%	44.82%	16.90%	-9.54%	0.37%	0.23%
총광고비	14,426,928	14,120,289	15,517,375	16,520,276	16,541,014	17,000,656	17,456,901
	4.88%	-2.13%	9.89%	6.46%	0.13%	2.78%	2.6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2025. 1.)', 2025. 10.

○ 이처럼 온라인 광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스마트폰 사용자가 약 60억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숏폼 콘텐츠를 활용한 광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등 소비자가 광고를 접하는 방식이 오프라인(TV, 신문 등)에서 온라인(모바일, PC 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 글로벌 광고비 추이에 따르면, TV 광고는 2021년 1,492억 1,000만 달러에서 2027년 1,431억 4,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동안 5,684억 8,000만 달러에서 9,510억 달러로 약 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광고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줌.

<광고 매체별 글로벌 광고비 현황(2021~2027년)>

(단위: US$billion)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추정치)	2025 (추정치)	2026 (추정치)	2027 (추정치)
영화	1.88	2.55	3.14	3.48	3.82	4.05	4.40
	-	35.39%	23.39%	10.87%	9.76%	5.87%	8.66%
TV	149.21	148.27	148.91	147.97	146.37	144.67	143.14
	-	-0.63%	0.43%	-0.63%	-1.08%	-1.16%	-1.06%
온라인	568.48	614.86	678.81	750.07	818.13	884.93	951.00
	-	8.16%	10.40%	10.50%	9.07%	8.16%	7.47%
옥외	29.54	32.43	35.66	38.95	41.80	44.50	46.94
	-	9.77%	9.97%	9.23%	7.33%	6.46%	5.46%
신문·잡지	39.92	37.33	35.86	34.27	32.77	31.39	30.13
	-	-6.50%	-3.93%	-4.43%	-4.38%	-4.23%	-4.01%
라디오	28.29	28.37	28.57	28.61	28.49	28.32	28.19
	-	0.31%	0.68%	0.17%	-0.45%	-0.58%	-0.47%
기타	77.78	78.71	81.95	84.54	86.50	88.03	89.22
	-	1.19%	4.12%	3.16%	2.32%	1.76%	1.35%
전체	895.10	942.51	1012.90	1087.89	1157.88	1225.88	1293.00
	-	5.30%	7.47%	7.40%	6.43%	5.87%	5.48%

자료: Statista(2024). Advertising - Worldwide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홍보 사업의 경우에도,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2137-358): 자립준비청년 대상 인턴십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지원인원의 사후 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연장 등 사업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지원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창업, 창작 및 취업연계 등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20]의 보호대상아동이라 하며, 보호대상아동은 일정 연령[21] 경과 시 시설·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준비청년으로 분류가 됨.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20)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1) 만 18세를 의미하며 보호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 사유 없이 만 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함.

<2026년도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	1,040	1,040	1,040	1,040	1,000	△40	△3.8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창업지원	350	350	350	350	310	△40	△11.4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창작교육	180	180	180	180	240	60	33.3
○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취업연계	510	510	510	510	450	△60	△11.8
□ 세출예산비목	1,040	1,040	1,040	1,040	1,000	△40	△3.8
○ 사업출연금 (350-02)	1,040	1,040	1,040	1,040	1,000	△40	△3.8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자립준비청년 대상 인턴십의 정규직 전환 확대 등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내역사업인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취업연계' 사업은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기초 개념 및 초·중급 개발자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공통교육과, 디지털 분야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

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업수행기관이 인턴십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디지털 진로 코디네이터를 통해 수요 기반으로 기업을 매칭한 후, 자립준비청년이 디지털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자립준비청년의 인턴십 급여는 월 250만원 내외로 2개월 동안 지원받게 되며, 멘토수당(월 60만원 내외)이 존재하고,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숙박 제공 등이 가능함.

- 2개월의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에 인턴십 수요기업과의 조율을 통해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경우 지원기간 종료 이후 인턴십 인원의 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의 연장 등 사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 동 내역사업의 2024년도[22]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지원 인원 29명 중 연장된 인턴십 인원은 6명으로, 전체의 20.7%에 불과하며, 나머지 23명은 인턴십 종료 후 재계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22) 자립준비청년디지털진로지원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

또한 2025년 7월 기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1명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정규직 전환 등 실질적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4년도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인턴십 연장인원	정규직 전환인원
	인턴십 인원	평균보수 (월간)	국고지원 비율		
인턴십 프로그램	29	2.5	100	6	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 동 내역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인턴제' 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지원기간이 짧은 면이 있음. 정부의 지원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인턴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디지털 관련 실무를 경험할 수 있어 역량 강화에 유리한 면이 있음.

- 특히, 디지털 관련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인턴을 장기간 검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인턴에 대한 검증이 수월해지며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확대될 수 있음.

<청년 대상 인턴십 프로그램 비교>

구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인턴형 일경험)	중장년 인턴제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부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미취업 청년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	자립준비청년
지원기간	1~5개월 이내	1~3개월	2개월 이내
운영기관	인턴형 일경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기업	디지털 관련 기업(수요 기반)

자료: 각 부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교육 및 직업체험 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창작·창업·인턴경험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자립준비청년에게 있어서 인턴경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일자리의 창출(정규직 전환 등)이 더 의미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사업목적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지원인원의 사후 기간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연장 등 사업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9)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및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 (2033-412): 연구개발비 연내 실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 ‘온디바이스 및 IoT 연계 지능서비스를 위한 엣지AI 컴퓨팅 서버 핵심기술개발’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예산과 실제 연구개발기간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내역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연내 실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및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다수의 이종 온디바이스 AI 사물들이 클라우드 없이 상호 소통하고 협업하여 상황을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율 협업형 IoT 소프트웨어 및 통합 관리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규모·실시간 AI 서비스를 위해 이종 온디바이스에 지속적으로 최적화된 지능을 제공하는 엣지 AI 서버와 온디바이스 연계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9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및디바이스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 IoT핵심기술개발사업	-	-	8,669	8,669	9,750	1,081	12.5
○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 핵심기술개발	-	-	5,669	5,669	5,750	81	1.4
○ 개인정보보호기반지능형홈핵심 기술개발	-	-	3,000	3,000	4,000	1,000	33.3
□ 세출예산비목	-	-	8,669	8,669	9,750	1,081	12.5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	-	8,669	8,669	9,750	1,081	12.5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2026년도 동 사업의 세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온디바이스AI 기반자율협업IoT핵심기술개발’ 내역사업 계속 과제 5개 연구개발비 57억 5,000만원이, ‘개인정보보호기반지능형홈핵심기술개발’ 내역사업 계속 과제 3개 연구개발비 40억원을 합한 9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핵심기술개발사업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개월, 백만원)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과제수	개월	과제당 연구개발비	예산안
온디바이스AI기반자율협업IoT핵심기술개발	온디바이스AI자율협업IoT SW및통합관리기술개발	계속	2	12	1,282.5	2,565
	온디바이스및IoT연계지능서비스를위한엣지AI컴퓨팅서버핵심기술개발	계속	3	12	1,415.5	3,185
	소계		5	-	-	5,750
개인정보보호기반지능형홈핵심기술개발		계속	3	12	1,333	4,000
		소계	3	-	-	4,000
합계			3	-	-	9,7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나) 검토의견

□ 연구개발비 연내 실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철저

○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온디바이스 및 IoT 연계 지능서비스를 위한 엣지AI 컴퓨팅 서버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신규 과제의 협약 체결 후 실제 연구개발 기간이 예산상 편성 기간에 비하여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연내 실집행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 ‘온디바이스 및 IoT 연계 지능서비스를 위한 엣지AI 컴퓨팅 서버 핵심기술개발’ 내내역사업은 대규모·실시간 AI 서비스를 위해 이종 온디바이스에 지속적으로 최적화된 지능을 제공하는 엣지 AI 서버와 온디바이스 연계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신규 내역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의 경우 여러 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할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이 예산상 계획 대비 지연되었음.

- 2025년도 예산상 계획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의 신규 연구과제는 2025년 4월부터 주관/참여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연내 9개월간 실제 연구개발이 추진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실제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은 여러 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주관/참여기관의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8월 1일에 신규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실제 연내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간은 5개월에 불구하여 예산상 계획 대비 4개월이 지연된 상태임.

<온디바이스 및 IoT 연계 지능서비스를 위한 엣지AI 컴퓨팅 서버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공고 현황>

(단위: 백만원, 개)

공고문	공고기간		신규 과제 (연장)	협약 체결	예산 계획상
	최초	연장			
2025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 1. 2. ~ 2. 10. (40일)	2025. 2. 10. ~ 2. 24.. (15일)	3 (3)	2025. 8. 1.	2025. 4월 부터 연구 개발 시작
2025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디지털융합·스마트 디바이스 부문)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5. 5. 19. ~ 6. 18. (31일)	2025. 6. 18. ~ 7. 2. (15일)	3 (1)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처럼 동 내역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2025년도에는 예산상 계획에 비해 연내 실제 연구개발 기간이 단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도에도 계속 과제의 예산이 12개월분이 편성되는 것은 회계연도의 불일치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온디바이스 및 IoT 연계 지능서비스를 위한 엣지AI 컴퓨팅 서버 핵심기술개발' 의 핵심기술개발' 의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예산과 실제 연구개발기간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내역사업의 연구개발비가 연내 실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0)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2137-310):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내역사업의 지원 지역 다양화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내역사업의 지원 지역이 미국 동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여러 지역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K-테크 파이오니어즈 사업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AI 분야 등 미래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우수 SW, ICT솔루션, 플랫폼 등 융합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 및 레퍼런스를 확보하거나, 우수 융합 제품 서비스 현지화 및 확산 지원을 위한 국내외 기업 간 조인트벤처[23](Joint Venture, JV) 파트너십 형성 및 조인트벤처 관련 사업을 추진·운영·지원하거나, 디지털 혁신기업의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지원체계 구축 및 현지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3) 조인트벤처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협력하여 특정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형태를 의미한다.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96억 3,700만원이 증액된 423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7,763	7,763	22,663	22,663	42,300	19,637	86.6
○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 진출	3,178	3,178	3,178	3,178	4,015	837	26.3
○ DNA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1,585	1,585	1,085	1,085	1,085	-	-
○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	3,000	3,000	3,000	3,000	3,000	-	-
○ AI-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			10,800	10,800	21,600	10,800	100.0
○ AI·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	-	1,600	1,600	1,600	-	-
○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	-	3,000	3,000	3,000	-	-
○ K-테크 파이오니어즈	-	-	-	-	8,000	8,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7,763	7,763	22,663	22,663	42,300	19,637	86.6
○ 사업출연금(350-02)	7,763	7,763	22,663	22,663	42,300	19,637	86.6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내역사업의 지원 지역 다양화·확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사업’은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의 맞춤형 미국 동부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현지 파트너십 발굴 및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음.

- 우선, 뉴욕대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기업별 맞춤형 미국 동부 진출전략 수립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뉴욕대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음.

- 다음으로 글로벌 AI 프론티어랩(미국 뉴욕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동운영) 내 참여기업의 ‘업무용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내역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해외 대학 등과 체결한 MOU를 통해, 현지 기업이 파트너십 발굴을 위해 해외 대학 등에서 지원·교육(뉴욕대 특화 프로그램, 8주)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점 기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뉴욕대 간의 협약만 체결된 상태로, 미국 동부 지역에 한정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내역사업의 주요 지원내용>

항목	주요 지원내용
현지화비 지원 (과제비)	○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 기업별 해외 현지화비 4천만원 (해외 현지화 목적)
진출전략수립	○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출전략 수립 지원** - 뉴욕대 교수진 등과의 기업별 미 동부시장 진출 타당성 검토 등 사전진단 및 기업별 해외진출 준비도에 따른 맞춤형 전략수립 및 실행 지원(컨설팅, 멘토링) ○ **시장 탐색 및 잠재 파트너·투자자 초기 발굴을 위한 뉴욕 현지 프로그램** - 미동부시장 환경이해를 위한 현지 업계 전문가와의 역량강화 웨비나
진출지원활동	○ **미 동부시장 파트너 발굴을 위한 진출 활동** - 뉴욕대 네트워크를 연계한 산업계 리더 등 파트너 매칭 뉴욕 현지 프로그램(데모데이, 1:1 미팅, 현지기업 방문, 네트워킹 이벤트 등) -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내 참여기업 현지 오피스 공간 제공

자료: '2025년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특화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미국 동부 지역 외에도 AI·디지털 혁신 기업이 다양한 지역에 다수 존재하여 사업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지역을 보다 다양화·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미국 Startup Genome에서는 Performance, Funding, Talent & Experience, Market Reach, AI-Native, Knowledge 등의 지표로 세계 각 도시를 평가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가 잘 구축된 8개 도시를 선정하였는데, 이 중에는 동 내역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미국 동부 지역의 New York City와 Boston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Silicon Valley가 위치한 미국 서부가 1위에 올라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5위로 중국(Beijing)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의 AI·디지털 혁신 기업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수요가 미국 동부 외의 다른 지역에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상위 8개 도시>

순위	도시
1	Silicon Valley
2	New York City
3	London
4	Tel Aviv
5	Boston
5	Beijing
7	Los Angeles
8	Seoul

자료: Startup Genome. (2025). The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5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또한, '2024년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중소기업의 아시아 지역 수출 비율은 77.0%로, 국가별로는 중국 33.9%, 일본 13.0%로 나타나 미국(7.7%)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미국 동부 지역 이외에도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 수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4년 ICT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국가 비율>

(단위: %, 복수응답)

지역·국가	아시아(중국, 일본 제외)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북미(미국 제외)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비율	77.0	33.9	13.0	7.7	4.1	1.2	0.8	0.7	0.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동 내역사업은 우리나라 AI·디지털 혁신 기업 등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시장 진출 지역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미국 동부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대학 등과의 협약(MOU)을 통해 지원 지역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K-테크 파이오니어즈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 ‘K-테크 파이오니어즈’ 내역사업은 첨단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 인재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지원하여 한국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 내역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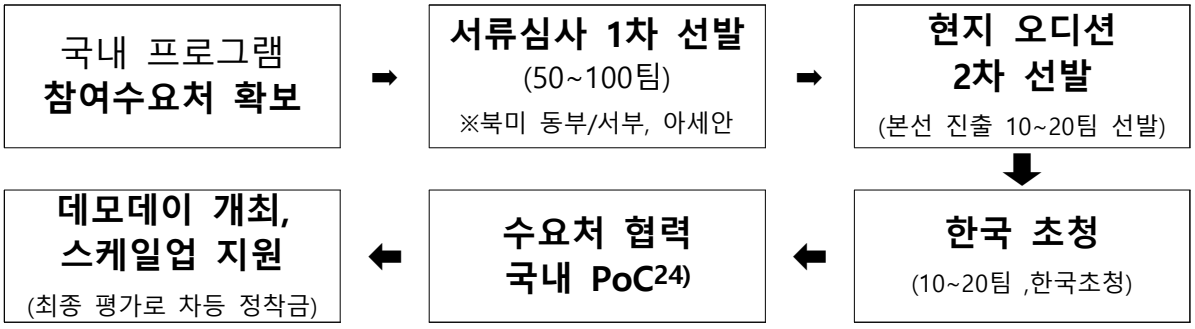
- 2026년도에는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우수 인재들을 대상으로 해외 권역별(북미 동부/서부, 아세안)로 50~100팀 정도가 참여하는 현지 오디션을 거쳐 본선진출 10~20팀을 선발하여, 우리나라로 초청한 후 최종평가로 차등 정착금(사무실 임차료,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팀들이 국내 기업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조인트 벤처, 지사 설립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동 내역사업의 지원대상 가운데 팀의 경우, 우리나라 국적자의 지분율을 높이거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내역사업의 추진 절차는 먼저 국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요처를 확보한 뒤, 해외 인재(개인·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지 오디션을 포함한 2차 선발 과정을 예선으로 진행함. 이후 본선 단계에서는

선발된 팀을 국내로 초청하여 체류비용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 후 성과물을 바탕으로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팀별로 차등적인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임.

<K-테크 파이오니어즈 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 중 지원 대상이 되는 팀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 10% 규모 이상 소유 또는 핵심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에 동 사업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동 사업의 지원 목적이 우리나라 국적 인재 지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적자가 기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더라도 외국인의 지분이 더 많거나 핵심 연구원의 개념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 목적과 달리 사실상 해외 국적자가 소유하거나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팀이 지원받을 우려가 있음.

24)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구체적인 참여 팀의 수요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향후 수요 파악 시 해당 팀이 우리나라 국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K-테크 파이오니어즈 사업의 지원대상>

구분		세부 내용
지원 대상	국적 보유자	○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재외동포청에 등록된 재외 한국인(국적자)
	팀 요건	○ 한국 국적자가 해당 기업의 지분 10% 규모 이상 소유 또는 핵심 연구원으로 활동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 집행 시에는 지원 대상의 팀 요건에서 한국 국적자가 해당 기업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 조건을 향상시키거나, 핵심 연구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사업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인 인재·팀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11) AI반도체 실증지원(2603-311): 지방비 매칭 지연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 내역사업의 지방비 매칭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예산이 연내에 실집행이 완료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생태계의 핵심 기반인 AI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AI 반도체의 활용과 확산을 위한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사업은 국산 AI 반도체(서버용·엣지용)에 다양한 AI 서비스를 적용하고, 비공개 기능·성능 테스트 및 실증을 통해 글로벌 레퍼런스를 확보하며, AI 반도체의 실질적 적용 사례 창출과 확산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40억원이 증액된 1,02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AI반도체 실증지원	18,813	18,813	98,370	90,800	102,370	4,000	4.1
○ AI반도체 응용실증지원	8,813	8,813	9,370	5,800	4,685	△4,685	△50.0
○ AI반도체 Farm 구축 및 실증	7,000	7,000	6,000	4,700	-	△4,700	순감
○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3,000	3,000	-	-	-	-	-
○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	-	40,000	40,000	65,685	25,685	64.2
○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	-	-	9.000	6,300	24,000	15,000	166.7
○ AX 실증지원	-	-	4,000	4,000	8,000	4,000	100.0
○ AI반도체 최적화 설계지원	-	-	30,000	30,000	-	△30,000	순감
□ 세출예산비목	18,813	18,813	98,370	90,800	102,370	4,000	4.1
○ 사업출연금(350-02)	18,813	18,813	98,370	90,800	102,370	4,000	4.1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지방비 매칭 지연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은

온디바이스 AI를 공공분야에 대규모로 선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실증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서비스 확산과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기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자체·지역산업진흥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국산 AI 반도체(NPU[25])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기기 개발 및 수요기업·기관에 특화된 경량화 AI 모델(sLLM[26] 등)을 적용한 서비스 실증을 지원할 예정임.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 내역사업의 2025년도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자체·지역산업진흥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내용	국산 AI반도체(NPU)를 탑재한 온디바이스 AI 기기 개발 및 수요기업·기관에 특화된 경량화 AI 모델(sLLM 등)을 적용한 서비스 실증
사업기관·선정규모	과제수: 2025년 총 3개 과제, 사업기간: 2년간 지원
2025년도 예산	90억원(1개 과제당 30억원)(국비: 지방비=3:1 매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25) 신경망 처리 장치(Neural Processing Unit, NPU)
26) 소형 LLM(small Large Language Mode, sLLM)

○ 또한,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과제 수는 총 3개로 하고, 사업기간은 2년으로 지원하고 있음.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비 지원액의 1/3을 지방비로 매칭(국비:지방비=3:1)하여야 하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국비·지방비 및 자부담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은 2025년도 선정 과제의 지방비 부담이 지연되고 있어 서비스 실증 추진 지연이 우려되므로, 향후 지방비가 적기에 매칭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내역사업의 2025년도 3개 과제의 지방비 매칭 현황을 살펴보면,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 과제는 2025년 9월과 10월에 지방비 부담이 이루어졌으며, ‘영주 ON : 온디바이스로 여는 안전하고 개선된 도시’도 2025년 9월에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져, 각 사업추진기관이 해당 지방비를 통하여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3~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해(海)양도시 부산(山) 특화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과제는 2025년 12월에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해당 지방비를 활용하여 연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매우 단기간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의 지연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동 내역사업의 지방비 매칭 현황(2025년 9월 기준)>

(단위: 백만원)

과제명	지자체 매칭 계획(2025년 기준)					지자체 매칭 실제	
	총 사업비	정부	지자체	민간		납부일자	금액
				현물	현금		
국산 AI반도체 기반 산불 조기경보 및 자율형 안전관제 온디바이스 AI 실증 사업	4,941	2,850	950	1,026.9	114.1	2025년 9월중	237.5
						2025년 10월중	712.5
해(海)양도시 부산(山) 특화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4,833.5	2,850	950	930.2	103.3	2025년 12월중	950
영주 ON : 온디바이스로 여는 안전하고 개선된 도시	4,840	2,850	950	885.2	154.8	2025년 9월중	9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 5개 과제 150억 원과 2025년부터 계속되는 2차년도 3개 과제 9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다만 2025년도 지방비 매칭 지연으로 계속과제 추진이 늦어질 경우, 2026년도 예산 집행에도 순차적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026년도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지원단가	2026년도 예산안
계속	3	3,000	9,000
신규	5	3,000	15,000
합계	8	3,000	24,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디바이스 AI서비스 실증 확산' 내역사업의 지방비 매칭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26년도 예산이 연내에 실집행이 완료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12)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 신규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에 대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 연구과제의 2025년도 예산상 편성기간 대비 실제 연구가능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예산이 연내에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 사업은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서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CT 융합형 온디바이스 지능 개발을 지원하고, 시험·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신규 사업인 동 사업의 예산을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원이 증액된 4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	-	-	2,000	2,000	4,000	2,000	100.0
○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	-	-	2,000	2,000	4,000	2,000	100.0
□ 세출예산비목	-	-	2,000	2,000	4,000	2,000	10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	2,000	2,000	4,000	2,000	100.0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신규 연구과제의 협약 체결에 대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로 예산 편성 당시 예상했던 연구 가능 기간에 비해, 협약 체결 지연으로 실제 연구 기간이 짧아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연내 실집행 완료를 위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5년 2개의 신규 연구과제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품목지정형 공모를 통해 추진하였음.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6개월간의 연구개발비가 반영되었으나, 실제 협약은 두 과제 모두 2025년 8월 18

일에 체결되었음. 이에 따라 연내 실제 연구 가능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하였음.

- 2개의 신규과제 모두 과제공고가 1차로 2025년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루어졌으나, 수요 부족[27]의 이유로 인하여 과제공고가 7월 2일까지 연장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결과 협약 체결도 예산상 계획 대비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동 사업 연구과제의 예산 편성 기간 대비 실제 협약 추진 현황>

연구과제명	사업추진 현황			연내 연구가능기간	
	과제공고 (1차)	과제공고 (연장)	협약체결	예산상	실제
지능 온디바이스 시험·인증 플랫폼 개발	2025. 5. 19 ~ 6. 18.	~ 7. 2.	2025. 8. 18.	6개월	4.5개월
지능 온디바이스 망연동 시험 플랫폼 개발	2025. 5. 19 ~ 6. 18.	~ 7. 2.	2025. 8. 18.	6개월	4.5개월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 연구과제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개의 연구과제 모두 12개월분의 연구개발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2025년도 예산상 편성 기간 대비 실제 연구가능기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2026년도 예산이 연내 실집행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보임.

27) 2025년도 신규 연구과제 최초 공고 시, 각 과제별로 단일 기관만 응모(경쟁률 1:1)하여 수요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8]에 따르면, 예산상 편성 기간과 실제 연구 가능 기간이 달라지는 회계연도 불일치형 연구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2개월이 아닌 10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함. 이처럼 연구개발비의 연내 실집행 완료를 위하여 예산 조정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 연구과제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개월)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 산출 내역		
	과제당 연구개발비	개월	2026년도 예산안
지능 온디바이스 시험·인증 플랫폼 개발	2,000	12	2,000
지능 온디바이스 망연동 시험 플랫폼 개발	2,000	12	2,000
합계	4,000	12	4,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동 사업 연구과제의 2025년도 예산상 편성기간 대비 실제 연구가능기간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연구과제의 예산이 연내에 실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8)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 5. p. 35.
- (계속과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6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13) ICT기반디지털서비스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2137-377):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에 포함 필요

○ 동 사업의 연구개발 사업목적, 필요성 및 향후 목표 성과 등을 감안하여「국가재정법」 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기반디지털서비스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 사업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디지털서비스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보화·지식화하고 전주기 탄소발자국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2026년도 신규 사업임.

- 동 사업은 빅데이터, AI, 디지털트윈 등 IC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예측·의사결정에 연계함으로써 전주기적 탄소 분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 서비스 산업과 연계·실증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예산을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56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ICT기반디지털서비스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ICT기반디지털서비스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	-	-	-	-	5,625	5,625	순증
○ ICT기반디지털서비스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	-	-	-	-	5,625	5,625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5,625	5,625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5,625	5,625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에 포함 필요

○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대상 사업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적 등을 살펴보면, 사업목적은 탄소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보화·지식화하고 전주기 탄소발자국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음.

사업내용 역시 ICT 기반의 탄소 배출량 측정, 데이터 분석·예측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탄소배출 관리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과 연관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 사업에 해당함

<ICT기반디지털서비스탄소중립혁신기술개발 사업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사업목적	○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 대응 및 탄소중립 디지털서비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 데이터 자동 정보화·지식화 및 전주기 탄소발자국 핵심기술 개발
필요성	○ 국내기업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 및 탄소규제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디지털 기반 탄소 측정, 분석, 예측 등 ICT 혁신기술에 대한 정부 R&D 지원 필요
사업내용	○ **(개요)** AI·빅데이터·디지털트윈 등 ICT 기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데이터 분석, 예측, 의사결정 등을 전주기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탄소배출 측정 및 관리 플랫폼 확보 ○ **(지원대상)** 국내 주요 탄소중립 기술 관련 수요 기업·대학·연구소 등 ○ **(사업기간/총사업비)** 2026~2029년, 총 281.25억(국비 281.25억)
대표성과 및 활용방안	○ **(성과물)** 탄소중립 데이터센터 구현을 위한 그린 데이터센터 아키텍처 및 운영 기술, AI기반 탄소 데이터 디지털 수집·분석·평가(디지털 MRV) 기술, 전주기 탄소발자국 분석을 위한 자율형 탄소 LCA 기술 등 ○ **(활용방안)** 개발 기술은 HPC허브 등 지역 AI데이터센터에서 단계별 실증을 거쳐 대형 민간 데이터센터(네이버·카카오·SK·KT 등)에 확산 적용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처럼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

산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 「국가재정법」 제27조[29]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9조의2제2항[30]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예산서에 포함되는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근거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31]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목적의 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은 모두 예산서 작성 대상에 해당함. 이에 동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하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29)「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31)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p. 59.
[작성 대상]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 (정책연계성) 탄소중립 정책(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등)과 연관된 사업

대상 사업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의 연구개발 사업목적, 필요성 및 향후 목표 성과 등을 감안하여 「국가재정법」과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14) AI반도체 지원플랫폼(2603-324): 기업 인재 매칭의 조기 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실제 수요기업과 매칭되는 인력이 2025년도의 경우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효과가 조기에 발생하지 않고 있고 연내 1인당 지원기간이 단기간에 그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반기에 기업인재 채용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AI반도체 지원플랫폼’ 사업은 국내 AI 반도체 기업이 직면한 기술 및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인재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기술인재 채용 및 선발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기술인재 채용 및 선발지원’ 관련 예산과 채용된 기술인재의 인건비 일부분을 지원하는 ‘기업 인재 활용지원’ 관련 예산으로 구분됨.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5,000만원이 감액된 22억 5,000만원임.

<2026년도 AI반도체 지원플랫폼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AI반도체 지원플랫폼	-	-	3,500	2,500	2,250	△1,250	△35.7
○ AI반도체 기술인재 공급 플랫폼	-	-	3,500	2,500	2,250	△1,250	△35.7
□ 세출예산비목	-	-	3,500	2,500	2,250	△1,250	△35.7
○ 사업출연금(350-02)	-	-	3,500	2,500	2,250	△1,250	△35.7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나) 검토의견

□ 기업 인재 매칭의 조기 추진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 필요

○ 동 사업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는 국내 AI 반도체 기업의 우수 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AI 반도체 분야의 고급 인력과 전문가를 선정하여 수요기업과 채용연계하고, 2~3차년도에는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을 50~70%까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임.

- 세부 사업 내용은 ① 기발굴 인재 풀 관리 및 신규 인재 모집(연 2회), 기술교육·역량진단 등을 통한 AI 반도체 인재 풀 구축, ② 기업 수요와 구직자 조건 분석을 통한 채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③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근무 현황 점검 등 후속 관리로 구성됨.

<AI반도체 지원플랫폼 사업 내용>

① AI반도체 기술인재 풀 구성	⇨	② 우수인재-수요기업 채용연계 지원	⇨	③ 인건비 지원 및 후속관리
AI반도체 우수인재 풀 관리 및 신규 채용 희망자 모집		기업의 채용조건과 우수인재의 취업조건 등을 파악하여 매칭		우수인재 채용, 인건비 지원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은 실제 수요기업과 매칭되는 인력이 2025년도의 경우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인건비 지원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채용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8월말 기준 AI반도체 지원플랫폼 사업의 상반기(1~6월)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상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지원될 예정이었으나, 6월말 기준 8개 기업만이 지원받고 있음.

○ 또한, 2025년 동 사업을 통해서 수요기업과 채용연계로 지원받은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며, 예산상 계획인 12개월 동안 지원받는 인력은 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예산상 계획에 따라 실제 수요기업과 채용 연계되어 인건비가 지원되는 상반기 실적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AI반도체 지원플랫폼 2025년도 상반기 지원 현황(6월말 기준)>

(단위: 개월, 백만원)

성명	기업	기업 규모	지원기간	연간 지원 개월	2025년 지원 현황		연간지원 예정금액
					예산	실집행 (8월말)	
김OO	△△△△	중소	2025. 2. 10. ~ 2025. 12. 31.	11	150	11	26
장OO			2025. 2. 10. ~ 2025. 12. 31.	11		11	25
김OO			2025. 9. 1. ~ 2025. 12. 31.	4		-	15
임OO	○○○	중소	2025. 2. 1, ~ 2025. 5. 30,	4	150	14	14
김OO	◆◆◆◆	중견	2025. 3. 4 ~ 2025. 12. 31	10	150	8	22
임OO			2025. 3. 4, ~ 2025. 12. 31,	10		8	22
유OO	★★★★★ 시스템	중소	2025. 2. 3. ~ 2025. 12. 31.	11	150	8	18
구OO	□□□□□	중소	2025. 1. 13. ~ 2025. 12. 31.	12	150	11	22
신OO			2025. 1. 1. ~ 2025. 12. 31.	12		19	39
임OO			2025. 1. 1. ~ 2025. 12. 31.	12		19	38
배OO	◀◀◀◀ 테크놀로지	중소	2025. 7. 1. ~ 2025. 12. 31.	6	150	-	38
소OO	◎◎◎◎	중소	2025. 9. 2. ~ 2025. 12. 31.	4	150	-	13
소OO	♥♥♥♥♥	중소	2025. 9. 1. ~ 2025. 12. 31.	4	150	-	16
봉OO			2025. 9. 1. ~ 2025. 12. 31.	4		-	10
정OO			2025. 9. 1. ~ 2025. 12. 31.	4		-	11
					1,200	109	32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의 3분기(7~9월) 채용 실적을 보면, 42명이 추가로 선정·지원되어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수요기업과 기술인재의 매칭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AI반도체 지원플랫폼 2025년도 3분기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기업	2분기		3분기	
	인원(누적)	금액(누적)	인원(누적)	금액(누적)
1	2	22	7	62
2	1	14	5	60
3	-	-	8	107
4	-	-	5	32
5	-	-	5	44
6	-	-	-	-
7	2	16	6	50
8	-	-	5	128
9	1	8	1	12
10	3	49	9	105
합계	9	109(7%)	51	600(4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은 실제 수요기업과 매칭되는 인력이 2025년도의 경우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사업효과가 조기에 발생하지 않고 있고 연내 1인당 지원기간이 단기간에 그치는 문제가 있으므로, 상반기에 기업인재 채용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5)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2137-381): 수요조사 확대를 통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 2026년도 동 사업의 예산안이 연내에 지연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학계, 민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 수요조사를 확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은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AI 융합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AI 전환을 지원하여 전 산업의 AI 활용을 확대하고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2026년도 신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으로 6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	-	-	60,000	60,000	순증
○ AI 기반 엔드프로덕트 상용화 지원	-	-	-	-	36,000	36,000	순증
○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	-	-	-	-	14,000	14,000	순증
○ AI 기반 차세대 보안 제품 상용화 지원	-	-	-	-	10,000	10,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60,000	60,000	순증
○ 사업출연금(350-02)	-	-	-	-	60,000	60,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수요조사 확대를 통한 사전준비 철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됨. 첫째, ‘AI 기반 엔드프로덕트 상용화 지원’은 ICT 융합 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생활안전, 치안, XR 등 일상생활의 AX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임. 둘째,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은 공급망부터 단말·서비스까지 E2E(end to end, 종단 간) 네트워크 장비와 서비스 전반의 신속한

AX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셋째, ‘AI 기반 차세대 보안 제품 상용화 지원’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확산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AI 기반 보안 제품과 플랫폼의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전체 내역사업은 Type 1과 Type 2로 구분되고 있음. Type 1은 1년 이내 즉시 개발이 가능하고 시장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단년도 과제로, 단기간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함. 반면 Type 2는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프로덕트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므로 2년간 지원될 예정임.

○ 동 사업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AI 기반 엔드프로덕트 상용화 지원’ 내역사업에 Type 1 과제 6개와 Type 2 과제 6개에 총 360억원이 편성되었음.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 내역사업에는 Type 1 과제 2개와 Type 2 과제 3개에 14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AI 기반 차세대 보안 제품 상용화 지원’ 내역사업에는 Type 1 과제 2개와 Type 2 과제 1개에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개, 백만원)

내역사업	Type 1			Type 2		
	과제수	과제당 단가	2026 예산안	과제수	과제당 단가	2026 예산안
AI 기반 엔드프로덕트 상용화 지원	6	4,000	24,000	6	2,000	12,000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	2	4,000	8,000	3	2,000	6,000
AI 기반 차세대 보안 제품 상용화 지원	2	4,000	8,000	1	2,000	2,000
합 계	10	4,000	40,000	10	2,000	20,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편성된 Type 1, Type 2 과제수에 비하여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과제 수가 충분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향후 수요조사를 확대하여 다양한 예상 과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요조사[32] 결과를 살펴보면, ‘AI 기반 엔드 프로덕트 상용화 지원’ 내역사업은 전체 20개의 과제 수요가 있어 예산안에 반영된 12개 과제보다 많은 수요가 확보된 상황임. 반면,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 내역사업의 경우 Type 1·2 수요조사로 파악된 과제가 총 3개로 예산안으로 편성된 과제가 2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음.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

구분	수요자	AI 기반 엔드 프로덕트 상용화 지원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		AI 기반 차세대 보안 제품 상용화 지원	
		Type 1·2	Type 2	Type 1·2	Type 2	Type 1·2	Type 2
수요 조사	기업	5	4	3	3	2	1
	기관	3	2	-	1	-	-
	대학	-	-	-	1	-	-
	합계	14	6	3	5	2	1
2026년 예산안		6	6	2	3	2	1

주: Type 1의 선호가 낮은 관계로 Type 1·2 공용 수요와 Type 2 수요를 파악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특히 'AI 기반 차세대 보안 제품 상용화 지원' 내역사업은 수요와 예산안 반영 과제가 1:1로 맞물려 있어, 만약 타 사업 중복이나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수요 과제 중 1개라도 선정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과제 수요조사가 필요하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과제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2026년도 동 사업 예산안의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고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학계, 민간,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 수요조사를 확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16)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2137-407): 사업구조 상세밀한 일정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등

○ 동 사업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사업구조로 인하여 세밀한 사업일정이 예상되므로 연구개발비가 연내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요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은 ICT 전략기술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 해소와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R&D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며 ICT 전략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2026년도 신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69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	-	-	-	-	6,900	6,900	순증
○ 디지털융합 촉진지원	-	-	-	-	4,400	4,400	순증
○ 국가전략ICT우수성과활용지원	-	-	-	-	2,500	2,5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6,900	6,900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6,900	6,9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1단계 연구과제 28개에 대해 과제당 2억원을 지원하되, 연내 연구 가능기간(3개월, 3/12)을 감안하여 총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단계 연구과제 22개에 대해 과제당 5억원을 지원하되, 연내 연구기간(6개월, 6/12)을 고려하여 총 55억원을 편성하였음.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은 총 69억원으로 산출되었음.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분	2026년도 예산안			
	과제수	과제당 단가	연내 연구가능기간	예산안
1단계	28	200	3	1,400
2단계	22	500	6	5,500
합계				6,9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나) 검토의견

□ 사업구조 상 세밀한 일정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 동 사업은 세밀한 사업일정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비가 연내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사업 공고를 통해 모집된 수요기업 등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사전기획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국가전략 ICT R&D 우수성과(예: 표준특허, 지능형 반도체, 메타버스 플랫폼 등)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2단계에 걸쳐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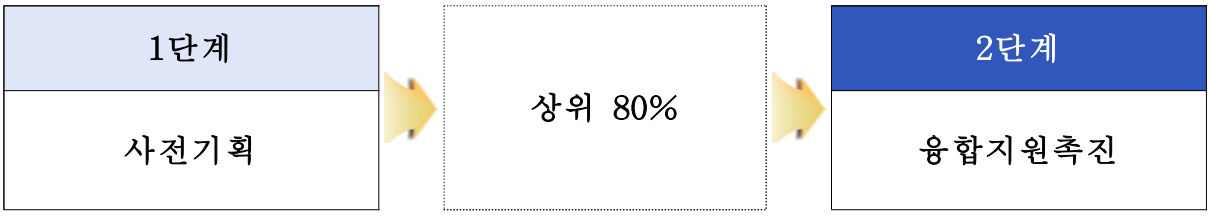
-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융합 촉진지원’ 내역사업에서 1단계 18개, 2단계 14개 과제를, ‘국가전략ICT우수성과활용지원’ 내역사업에서 1단계 10개, 2단계 8개 과제를 각각 지원할 예정임.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의 사업구조>

구분	주요내용
1단계 (사전기획 지원)	○ 수요기업·공급기관 간 사업수행 역할 최적화 및 BM 개발·검증,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지원
2단계 (융합촉진 지원)	○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여 융합 신시장 창출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한 ICT 기반의 융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지원 - (지원대상기업) 해당 산업의 자사 제품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융합 新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 - (전문연구기관 개발내용) 주관기관이 이종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ICT 기술을 가미하여 추가기능을 제공하여 새로운 혁신 제품·서비스를 완성 - (주관기관의 내재화 노력) 전문연구기관에서 개발하는 ICT 기술의 내재화를 위하여, 관련 연구인력의 추가 고용, 지속적인 개발 세부내용 협의 및 종료 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성과공유, 별도 과제 체결 등을 수행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단계별 지원 내용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사업 구조로 인하여, 2단계 추진을 위한 결과제출 및 평가, 사업 선정 등의 사업 추진 일정이 세밀하게 예정되어 있음.

- 1단계 과제가 6월말 종료된 이후, 결과 제출 및 평가와 2차 사업 선정이 7월초까지 단기간에 완료되어야만 연내 2단계 연구가능기간(6개월)이 확보되어 연구개발비의 연내 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의 2026년도 사업계획(안)>

구분	디지털융합촉진지원	국가전략ICT 우수성과활용지원
1단계 사업 공고	2025. 12월말~2026. 2월초	2025. 12월말~2026. 2월초
1단계 사업 대상자 평가·선정	2026. 3월	2026. 3월
1단계 과제수행	2026. 4~6월	2026. 4~6월
1단계 결과제출 및 평가	2026. 6월	2026. 6월
2차 사업 선정	2026. 7월	2026. 7월
2차 사업 추진	2026. 7월~2027. 12월	2026. 7월~2027. 12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연구개발이 2단계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결과 평가와 사업선정 등의 여러 절차가

존재하여 세밀한 일정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내에 연구개발비의 실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요를 감안한 규모 확대 방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수요조사에 따른 경쟁률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의 수요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관기관의 수요가 319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수요가 325개로 나타나고 있음.

<ICT전략융합R&D바우처지원사업의 2026년도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

구분		주관기관(기업)	전문연구기관 (연구개발기관)
기업	중소	303	160
	중견	16	
대학		-	100
연구기관		-	60
기타		-	5
합계		319	3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상 실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2단계 과제가 22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률은 약 15: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해당 수요조사가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수요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 사업의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따라서, 기업·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의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 사업의 수요 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2132-412): 딥페이크 범죄 대응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

○ 딥페이크 범죄는 경찰청·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 논의 등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디지털 사회에 만연한 유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변환과 확산에 대응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신뢰 사회를 구현하고 건전한 디지털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2026년도 신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3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	-	-	-	-	3,000	3,000	순증
○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	-	-	-	-	3,000	3,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3,000	3,000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3,000	3,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연구과제 2개에 대해 과제당 20억원을 지원하되, 연내 연구 가능기간(9개월, 9/12)을 감안하여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음.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사업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분	2026년도 예산안			
	과제수	과제당 단가	연내 연구가능기간	예산안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	2	2,000	9	3,000
합계				3,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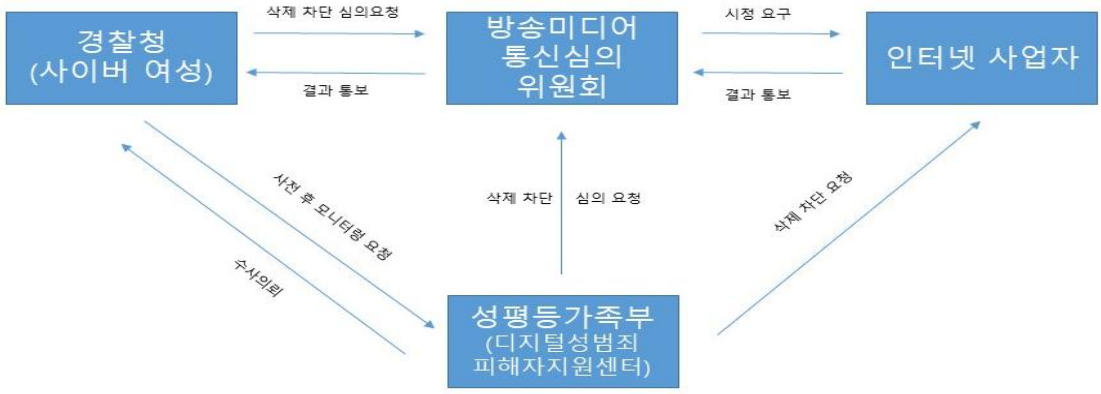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 딥페이크 범죄 대응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

○ 동 사업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 관련 부처·기관(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협의체 운영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가 향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상담 및 심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딥페이크 법죄 대응 시스템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성평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의 삭제·차단을 심의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시정 요구를 한 뒤 그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함.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경찰청,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관)가 협력하는 체계로 대응하고 있음.

○ 딥페이크 관련 연구개발은 타 부처에서도 수행되고 있음. 경찰청은 '사이버수사지원 기술개발(R&D)(4431-710)' 사업 내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시스템 개발' 연구과제(2026년도 예산안: 27억원)를 추진하고 있음.

○ 동 과제는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콘텐츠 조작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멀티모달 탐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콘텐츠의 진위 판별 및 원천 게시물 추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탐지 기술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타 부처의 딥페이크 대응 연구개발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2026년도 예산안	총연구비
경찰청	사이버수사지원 기술개발	허위조작 콘텐츠 진위여부 판별시스템 개발	2025~2027년	2,700	9,100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딥페이크 범죄는 경찰청·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 논의 등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8)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2601-403): 민간 부담분의 면밀한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

○ 동 사업은 총사업비 중 민간 매칭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컨소시엄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 의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민간 매칭 재원의 확보 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사업은 물리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며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실제 세계의 환경 상태와 물리 법칙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과 학습 등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2026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	-	-	-	15,000	15,000	순증
○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	-	-	-	15,000	15,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15,000	15,000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15,000	15,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연구과제 1개에 대해 과제당 225억원을 지원하되, 연내 연구 가능기간(8개월, 8/12)을 감안하여 총 150억원을 편성하였음.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사업 2026년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개, 백만원, 개월)

구분	2026년도 예산안			
	과제수	과제당 단가	연내 연구가능기간	예산안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1	22,500	8	15,000
합계				1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나) 검토의견

□ 민간 부담분의 면밀한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할 필요

○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 상 총사업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 2026~2027년도 동안 총사업비 460억원(국비 340억원, 민자 120억원)을 투입하여 실제 세계의 환경 상태와 물리 법칙을 유사하게 재현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상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과 학습 등 선도 기술을 확보할 예정임.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사업 총사업비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2026 ~ 2027년	
총사업비	총 460억원(국비 340억원, 민자 120억원)	
연도별 계획	2026년	2027년
연구개발 주요내용	- 기초 월드모델 설계 및 개발 - 학습 및 검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및 시나리오 개발	- 학습된 정책의 실제 환경 적용 및 파인튜닝 - 전이학습 성능 측정 및 개선
예산	203억원	257억원
국비	150억원	190억원
민자	53억원	67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기획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러한 동 사업의 총사업비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중 약 26.1%(120억원/460억원)를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주관/참여기관)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을 보면, 연구개발비 중 대기업은 50% 이상, 중견기업은 3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대학·비영리기관·연구소 등은 자부담 의무가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구분	지원비율	
	국고	민간
그 외(대학, 비영리기관, 연구소 등)	100% 이내	0% 이상
중소기업	75% 이내	25% 이상
중견기업	70% 이내	30% 이상
대기업 등(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0% 이내	50% 이상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의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이 전체의 26.1%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민간 매칭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주로 참여하거나, 컨소시엄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될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컨소시엄 구성원 중 연구개발비를 배분받는 참여기관에 자부담 의무가 없는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등이 포함될 경우, 해당 컨소시엄 내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거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신규 R&D 사업의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 부분의 비율을 비교하면, ‘AX 혁신기업 창의기술개발사업’과 같이 민간부담비율이 25.0%에 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ICT전략융합기술확보지원 사업’,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도 사업’과 같이 다수의 연구개발 사업이 10% 미만의 민간부담 비율을 보여 주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 민간부담 비율이 타 신규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026년도 신규 R&D 사업의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액 비율 비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A)	민간부담 (B)	민간부담 비율 (A/B)
AI기반 개방형 자율 디지털트윈 핵심기술개발	44,000	8,800	20.0
AX 혁신기업 창의 기술개발사업	48,100	12,015	25.0
ICT전략융합기술확보지원 사업	39,770	3,970	10.0
AI·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	45,700	9,130	20.0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	49,500	4,500	9.1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 선도 사업	46,200	4,200	9.1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46,000	12,000	26.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사업 기획보고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모델과 시뮬레이터 등 2개 기술분야로 구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신규 사업 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참여한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지컬 AI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는 실시하였으나 기업의 구체적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조사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2026년도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민간매칭 부분의 확보를 위한 계획이 보완되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기획보고서 상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 사업의 기업 간담회 현황>

일정	장소	주요내용	참석자
2025. 7. 10	IITP[33] (서울)	- 과기부 국장 주재 피지컬 AI 기업간담회 개최 - 피지컬 AI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 의견 청취	과기정통부 국장, IITP PM, 10개 기업 등 17명
2025. 7. 30	IITP (서울)	- 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피지컬 AI 산학연 간담회 개최 - 피지컬 AI 개념 및 현황, 분야별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논의 등	과기정통부 국장, IITP PM, 10개 기업 등 17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기획보고서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동 사업은 총사업비 중 민간 매칭 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컨소시엄에 대기업·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될 경우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 의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민간 매칭 재원의 확보 방안을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33) 정보통신기획평가원(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Institute, IITP)

19)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2033-416):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AI CCTV 전환” 대수는 예산 및 인력의 단순 투입을 통해 달성가능한 1차적 산출물에 해당하는 지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국산 NPU 수요증가율, 만족도 등 산출·영향지표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은 공공분야의 국산 NPU 수요 창출을 위하여 공공 CCTV의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및 신규 구축·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2026년도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	-	-	-	10,000	10,000	순증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	-	-	-	10,000	10,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10,000	10,000	순증
○사업출연금(350-02)	-	-	-	-	10,000	10,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은 현재 외산 GPU의 의존성이 높고, 국산 NPU는 시장확산에 한계가 있는 초기 단계로, 정부의 공공분야 수요 창출을 통한 마중물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은 3개 과제에 총 12,000대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음.

- AI CCTV 전환을 위한 국산 NPU 및 SW 지원 단가를 고려하여, 과제당 33억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약 4,000대의 AI CCTV 전환을 예상하고 있음.

<2026년도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비고
10,000백만원	사업출연금(350-02) : 10,000백만원 •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10,000백만원) - 3,333백만원 x 3개 과제 = 10,000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AI CCTV 전환” 대수로, 이는 예산

및 인력의 단순 투입을 통해 달성가능한 1차적 산출물에 해당하는 지표임.

<'22~'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AI CCTV 전환 (단위:대)	목표	-	-	-	-	12,000	AI CCTV 전환 단가를 고려하여 총 12,000대 가량 전환 목표 산출	직접조사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국산 NPU 수요증가율, 만족도 등 산출·영향지표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2232-331):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강화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경진대회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이 일회성 경진대회로 끝나지 않도록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은 경쟁 방식을 통해 AI 혁신인재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AI 분야 혁신·제품·서비스를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는 도전적인 자유주제로 AI 연구팀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우수연구팀의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AI 기술·제품·서비스를 확보하고 국민적인 AI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 ‘인공지능 활용 루키 프로젝트’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적용·응용할 수 있는 대학교 학부생

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전문가 멘토링 제공 및 AI 활용에 필요한 연구 인프라 등을 지원함으로써 AI 미래인재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30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1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2026년도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	-	-	-	13,000	13,000	순증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	-	-	-	10,000	10,000	순증
○인공지능 활용 루키 프로젝트	-	-	-	-	3,000	3,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13,000	13,000	순증
○사업출연금(350-02)	-	-	-	-	13,000	13,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의 연구성과 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은 2025

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되었던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R&D)' 사업과 동일한 사업임.

○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의 2025년도 추경예산액은 100억원이고,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제4항[34]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35]에 따른 포상금 형식의 R&D 사업으로, AI 혁신 인재가 제시된 도전과제를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해결하고 이 과정을 방송으로 홍보하며 우수한 AI 인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경진대회는 2025년 7월 'AI 챔피언 대회' 참가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심사, 중간심사, 멘토링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에 결선대회에서 연구팀의 발표 및 연구결과물 시연에 대한 평가에 따라 우승팀을 선정·시상할 예정임.

---

34)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5)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 방식(이하 "포상형연구방식"이라 한다)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의 수준 및 내용
2. 연구개발사업의 예상 수행기간 및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의 참여 조건
4.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의 지급 범위
5.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의 심사방법
6. 그 밖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포상형연구방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을 포상형연구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형연구방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우승팀은 R&D 과제협약을 통해 후속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후속연구비 지원 예산액은 최대 60억원임.

○ 그런데 경진대회가 진행 중이고 결과예측이 어려워 R&D 과제수, 연구수준, 연구비 지원규모 등 후속연구지원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사업 성과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동일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변경하였음.

○ R&D 사업은 전문기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우승팀과 협약을 통해 후속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고 이행하지만, 2026년도에는 AI 연구인프라(GPU, API[36], HW 등), 시상금 등 연구팀 지원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진대회에서 AI 연구에 필요한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고자 동 사업을 비R&D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선발된 우수 연구성과는 후속연구나 실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선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실제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활용한다는 계획임.

---

36)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사양)과 프로토콜을 의미함.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경진대회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이 일회성 경진대회로 끝나지 않도록 연구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21)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2602-357): 사업수행기관의 운영비 산출 및 편성 방안 검토 필요 등

○ GPU서버확충을 수행하는 사업자(CSP)에게 운영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확보한 GPU의 일부를 자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CSP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한 GPU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최대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 ○ 공공AI클라우드개발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 민간 SaaS 개발 지원사업은 기존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구축·운영하는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MEDIRO)과 취지·내용이 유사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MEDIRO의 사례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경험이 있는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 및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서비스 개발 등 현장 수요 대응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AI 산업 전 주기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조 1,087억 2,500만원을 신규 편성[37]하였음.

○ 동 사업은 세부적으로 ① GPU서버확충, ② GPU통합운영환경구축, ③ GPU 임차, ④ 소형데이터센터기반AI산업성장지원, ⑤ 공공AI

37)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 1조 6,19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클라우드개발지원, 5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출연받아 수행할 계획임.

<2026년도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	-	1,619,438	1,097,673	2,108,725	489,287	30.2
○GPU서버확충	-	-	862,496	603,085	1,399,875	537,379	62.3
○GPU통합운영환경구축	-	-	598,342	418,380	683,250	84,908	14.2
○GPU 임차	-	-	158,600	76,208	1,000	△157,600	△99.4
○소형데이터센터기반AI 산업성장지원	-	-	-	-	9,600	9,600	순증
○공공AI클라우드개발지원	-	-	-	-	15,000	15,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1,619,438	1,097,673	2,108,725	489,287	30.2
○사업출연금(360-05)	-	-	1,619,438	1,097,673	2,108,725	489,287	30.2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사업수행기관의 운영비 산출 및 편성 방안 검토 필요 등

○ 내역사업인 GPU서버확충은 국내 AI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GPU 서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GPU 구매 및 서버 구축을 위해 1조 3,99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편성되었고 추경 당시 예산은 GPU 서버 1,250대[38](GPU 기준 10,000장)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8,624억 9,600만원이었으며, 2026년도 사업을 통한 구축 목표는 서버 1,875대[39]임.

<2026년도 GPU서버확충 편성 근거>

2025(제1회 추경)	2026
○ 사업출연금(350-02) : 862,496백만원 가. GPU 서버 확충 : 862,496백만원 ・ (물량) 서버 총 1,250대 ※ (H200 8장 x 800대) + (B200 8장 × 450대) = 10,000장 ・ (산출내역) ① GPU(H200) 서버 800대(6,400장) 확충(440,440백만원) : 800대 × 550.55백만원/대=440,440백만원 ② GPU(B200) 서버 450대(3,600장) 확충(422,056백만원) : 450대 × 937.91백만원/대=422,056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1,399,875백만원 가. GPU 서버 확충 : 1,399,875백만원 ・ (물량) 서버 총 1,875대 ※ (B200 8장 x 1,875대) = 15,000장 ・ (산출내역) GPU(B200) 서버 1,875대(1.5만장) × 746.6백만원/대 = 1,399,875백만원

※ GPU 확보 기종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와 맞물려 단가·물량이 변동하여 내역사업(GPU 서버 확충,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간 산출 내역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의 진행방식을 보면 현재 서버를 구축하여 국내 사업을 영위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직접 정부의 목표에 맞추어 GPU를 확보하고 이를 사용한 서버를 구축하며,

정부의 계획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같은 국가프로젝트나 산학연의 연구에 제공하는

38) H200-800대(GPU 6,400장), B200-450대(GPU 3,600장)
39) B200(GPU 15,000장)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고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2025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GPU 1만 3,080장(H200 3,056장, B200 10,080장) 중 네이버가 3,056장(H200), NHN클라우드가 7,656장(B200), 카카오가 2,424장(B200)을 수급하여 서버를 구축할 예정임.

○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만 3,000여장[40]의 GPU의 활용 계획을 보면 10,000장은 국가 활용분으로 독자적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AGI와 국가 프로젝트에 40~50%,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계에 20~30%, AI 대학원 등 학계와 연구소에 20~30%를 투입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분배는 연말까지 구축될 (가칭)GPU 통합 지원 플랫폼[41]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40) 2025년도 제2회 추경 편성 당시 확보 목표는 GPU 1만장이었으나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GPU는 1만 3,080장임.

41)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5.12월 H200 서비스(네이버 구매·구축분, 2천장 규모)에 맞춰, '25.11월까지 구축을 추진(11월 중 수요접수, 12월초 평가 → 12월 말 배분)할 계획임.

<지원 대상별 배분방식(안)>

구분	배분 방식(안)
국가 프로젝트	○ 정책적 필요 등에 따라 年 단위로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GPU 우선 배분
산업계 (스타트업·중소 포함) 학계·연구계	○ 온라인으로 月 단위 신청을 접수하여, AI 연구계획 등을 별도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여 GPU 배분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 10.

○ 그리고, 국가 활용분을 제외한 3,000여장의 GPU는 사업수행자로 참여한 CSP가 자체 활용하도록 계획하였으며 CSP와 체결한 협약서에도 반영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내 일부 GPU 운영비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정확한 회계분리를 통한 세부 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사업에 참여하는 CSP가 GPU를 확보하고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비용을 별도 운영비로 편성하지 않고 확보한 GPU의 일부를 자체활용하도록 한 것임.

○ 그런데, CSP의 운영비에는 서버의 유지·보수비, 전력비, 냉각비, 네트워크 사용료, 인력 인건비, 보안 및 모니터링 비용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시장 환경, 기술발전, 전력 단가, 인건비 상승률 등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CSP의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경우, PPA[42]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정부 정책이나 입법[43]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요금 감면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사업수행자에게 GPU의 일정 부분을 자체 활용하도록 허용한 조치가 합리적인 운영비 보전 방안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GPU 자체활용분 제공이 운영비 대비 과도한지 혹은 과소한지에 대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소지가 있음.

○ 특히, CSP마다 설비 효율이나 전력 단가, 내부 자원 운영체계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기준으로 GPU 활용분을 산정하더라도 실질적 보전 수준은 사업자별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또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구매한 GPU를 CSP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산학연의 GPU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 AI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당초 사업 편성 취

42) 전력구매계약(PPA)는 전기수요자가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계약 방식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전기수요자는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입할 때보다 전기요금을 낮출 수도 있으며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허용됨.

43)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안, 의안번호 2210511),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황정아의원안, 의안번호 2213320)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려는 입법적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음

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44]이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현재와 같이 GPU 자체활용분으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은 향후 운영비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검증을 통해 CSP별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고 GPU는 모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동 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었고 추경으로 편성되다 보니 합리적으로 운영비를 산정할 시간이 부족했으나,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누적되는 CSP의 운영 경험과 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영비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CSP의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한 GPU는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최대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관련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업과의 연계 및 관계 부처·기관 협업 강화 필요

○ 내역사업인 ‘공공AI클라우드개발지원’은 공공부문 대규모 정보

44)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SP가 자체적으로 GPU를 활용토록 제공하여 시급한 산학연 GPU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CSP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연계하여 CSP가 GPU 운영비용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GPU 운영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AI 생태계 육성과 확장 측면의 순기능도 있다는 입장임.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AI 클라우드 기반 SaaS[45] 개발과 도입 및 시스템 연계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액은 5개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위해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공AI클라우드개발지원 근거>

2026
○ 사업출연금(350-02) : 15,000백만원 가. 의료정보시스템 SaaS 개발지원비 등 : 15,000백만원 ・ (산출내역) - 국내 공공병원에서 활용중인 의료정보시스템 중 상급병원 도입율이 높은 5개 시스템에 대한 SaaS 개발지원 등 : 5식 x 3,000백만원 = 15,000백만원

※ GPU 확보 기종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와 맞물려 단가·물량이 변동하여 내역사업(GPU 서버 확충,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간 산출 내역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구체적으로 2026년도에는 국내 공공의료기관에서 활용 중인 의료정보시스템(HIS)의 서브시스템 중 상급병원의 도입률이 높은 5개 시스템[46]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SaaS 개발·전환을 지원하며 1개 시스템에 대한 지원 예산은 30억원임.

45) SaaS란 기존에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사용자의 서버에 설치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클라우드화를 통해 사업자의 서버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자가 구독하여 이용하는 방식을 말함.
46)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임상검사정보시스템(LIS), 처방전달시스템(OCS), 약국관리시스템(PMS)

<HIS 서브시스템 도입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현재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은 노후화되어 SaaS 방식을 적용한 차세대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현재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민간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효율적·체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정보시스템 SaaS 전환과 의료데이터 표준화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① 의료정보시스템 통합 관리, ② 클라우드 네이티브 설계 구현, ③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이관, ④ 내·외부 시스템 연계, ⑤ AI 기반 의료·행정 서비스 개발임.

○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3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병원 9곳[47]을 대상으로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MEDIRO)을 구축·운영하였고 이는 동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의료정보시스템의 민간 SaaS 전환과 사업 취지와 방향이 유사함.

○ MEDIRO는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나, 의료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한 선행사업으로서 동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결과물을 활용하고 사업 추진과정을 벤치마킹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MEDIRO를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기관 의료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전환과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취지와 방향이 유사한 MEDIRO 구축·운영의 결과를 동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7)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소록도병원

22) 공공 AX 프로젝트(2602-364): 수행기관의 과제비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 지연 방지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수행기관이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과제당 사업비에 비하여 과다하게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행기관이 과제비를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지연 요인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공공 AX 프로젝트는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선도적으로 접목하고, 공공분야 전반의 AI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분야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50억원이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공공AX 프로젝트	-	-	15,000	18	100,000	85,000	△566.7
□ 세출예산비목	-	-	15,000	18	100,000	85,000	△566.7
○사업출연금(350-02)	-	-	15,000	18	100,000	85,000	△5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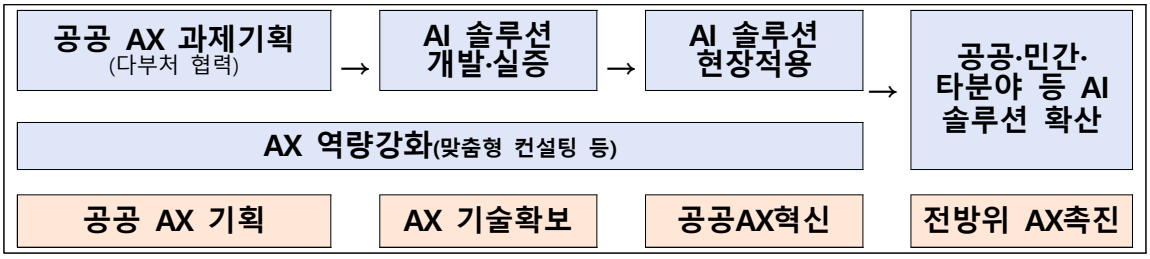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수행기관의 과제비 연내 집행을 위한 사업 지연 방지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부처공모를 통해 공공부문의 AX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기획한 과제에 대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을 거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년간 지원하는 구조로 추진될 계획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개요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동 사업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되었고 20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연간 15억 원(총 2년간 30억 원 지원)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하나, 추경 편성 시점이 2025년 6월로 실제 사업 기획 및 과제 선정절차를 거치면 집행 가능한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48]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음.

48)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이 동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 공고를 실시한 시점은 2025년 9월 9일이었음.

<2025년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과제 분과 목록>

①(조세심판분과) AI 기반 범국민 조세불복 통합검색 및 사건조사서 작성 지원 솔루션 개발·실증
②(건강관리분과) AI 기반 건강습관 개선정보 제공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③(복지행정분과) AI 기반 대국민 복지 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④(식품안전분과)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⑤(산재보상분과) 신속·공정한 AI 산재보상 플랫폼 개발·실증
⑥(생활화학분과) 식품모양 생활화학제품의 오인·섭취 사고 방지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⑦(가뭄대응분과) 농업용 지하수 예측·활용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⑧(감염병대응분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감염병 대응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⑨(교육훈련분과)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 관리 및 지원 AI 솔루션 개발·실증
⑩(분쟁조정분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⑪(안전환경분과)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개발 및 실증
⑫(검역관리분과) AI 기반 해외여행자 친화적 검역 시스템 개발·실증
⑬(농기계분과) 농작업 사고제로! AI 농기계 안전운행 서비스 개발·실증
⑭(특허정보분과) 모두를 위한 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 및 실증
⑮(법제정보분과)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실증
⑯(스마트팜분과) 스마트팜 재배관리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⑰(근대자료분과) 한국 근대 다문자 자료 활용 지원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⑱(근로감독분과) AI 기반 노동법 준수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⑲(자살예방분과)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조기 발굴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⑳(인포데믹분과) 인포데믹 관리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주 1) 컨소시엄은 20개 분과 中 택일하여 신청
2) 각 분과별 1개 컨소시엄 선정(총 20개 컨소시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10.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2025년도에는 과제당 7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 그리고, 이번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2025년부터 착수한 계속과제에 대해 남은 예산 22억 5천만 원을 과제당 추가 지원하도록 반영하였음.

○ 그런데, 이는 당초 과제 수행에 1년간 필요한 재원으로 산정된 15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실제 집행 여력 측면에서 과다 편성의 우려가 존재함.

○ 즉, 각 과제가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15억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제 협약을 2026년 12월까지로 체결하고 2026년도 예산액으로 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장비 도입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연이 발생하면 예산액이 연도 내 집행되지 못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비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과제당 미집행 예상 규모가 7억 5,000만원이고 계속과제는 20개이므로 2026년도 예산액 중 예상되는 이월 규모는 150억원이며 2025년도 추경 예산도 10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0.12%에 불과[49]하여 2026년으로 이월될 우려가 있음.

49)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초에 협약 체결을 완료한 후 사업비를 집행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추경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계속과제의 집행이 이월되지 않도록 각 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 가능성과 실제 사업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 지연 요인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3) AGI 준비 프로젝트(2602-365): 연구소 설립 기획 완료 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동 사업에 대한 기획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국가 AGI 연구소 출자 방식 등 사업 추진의 주요 사항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GI 연구소 설립에 관한 기획이 완전히 종료된 후 출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은 최적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방안을 기획·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 AGI 연구소 설립 자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 2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의 방식으로 수행될 예정임.

<2026년도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AGI 준비 프로젝트	-	-	-	-	20,000	20,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20,000	20,000	순증
○일반출자금(460-01)	-	-	-	-	20,000	20,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연구소 설립 기획 완료 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란 현재 주로 개발·사용 중인 LLM, VLA 등 특정 영역에 한정된 인공지능과 달리 모든 상황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아직 세부적·기술적 정의조차 공식화되지 않았을 만큼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범용적 지능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학문적·기술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AGI 기술 선점을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어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 특히, 미국은 메타,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AGI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의회에서도 AGI를 향한 정부 주도의 AI 맨해튼 프로젝트 촉구하는 등 국가적 의제로 AGI가 주목받고 있음.

○ AGI 기술은 아직까지 특정 국가나 기업에 뚜렷한 우위가 없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아직 글로벌 선두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속도감 있는 투자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속하게 국가 AGI 연구소를 출범시키고 국내 연구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동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아직 구체적 기획이 완료되지 않았고 민·관 협력 투자방식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 기획 결과 민·관 협력 출자가 적합하다는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기획 완료 후 AGI 연구소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까지 별도로 추진한 후 출자할 계획임.

<AGI 준비 프로젝트 개요도 및 자금 흐름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산업은행 출자	과기정통부	정부재정을 산업은행에 출자
⇩		
② 국가 AGI 연구소 출자	산업은행	정부재정 출자금을 국가 AGI 연구소에 재출자
⇩		
③ 국가 AGI 연구소 설립	국가 AGI 연구소	**최적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 방안이 민관 협력 투자 방식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민·관 공동 출자금을 바탕으로 AGI 연구소 추진

< 자금흐름표 >

부처 (20,000백만원)	**=> (출자)**	**산업은행 (20,000백만원)**	**=> (재출자)**	**국가 AGI 연구소 설립 초기 투자**	**=>**	**국가 AGI 연구소 연구인력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게다가, 동 사업은 단년도로 추진하는 출자사업으로 사업 성과지표가

‘최적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 방안 도출’로 제시되어 있는데 사업 설명자료에는 성과지표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사업 구조와 추진방식 전반이 불확실하고 2026년 연내 출자가 완료될 수 있을지가 불명확함.

○ 예를 들어, 기획이나 정책연구 과정에서 출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거나 출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예산안 확정에 따라 사업 기획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GI 연구소 설립 기획이 적기에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동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식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AGI 연구소 기획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 출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4)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2531-340),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2531-341):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기술개발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기술개발 사업인 중기사업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감액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기술 검증 및 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50] 시스템 기반으로 군집위성 동시 운용 및 위성-지상망 연결을 위한 지상국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 감소한 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50) 지구 표면으로부터 1,500km 내 저궤도에서 다수의 소형 위성을 띄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시스템으로, 통신지연 시간이 짧고 산악·해상 등 음영지역의 통신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2026년도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	4,960	4,960	4,000	4,000	3,860	△140	△3.5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4,960	4,960	4,000	4,000	3,860	△140	△3.5
□ 세출예산비목	4,960	4,960	4,000	4,000	3,860	△140	△3.5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4,960	4,960	4,000	4,000	3,860	△140	△3.5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반을 위한 실용급 3GPP[51] NTN[52](비지상통신) 표준 기반 단말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8,100만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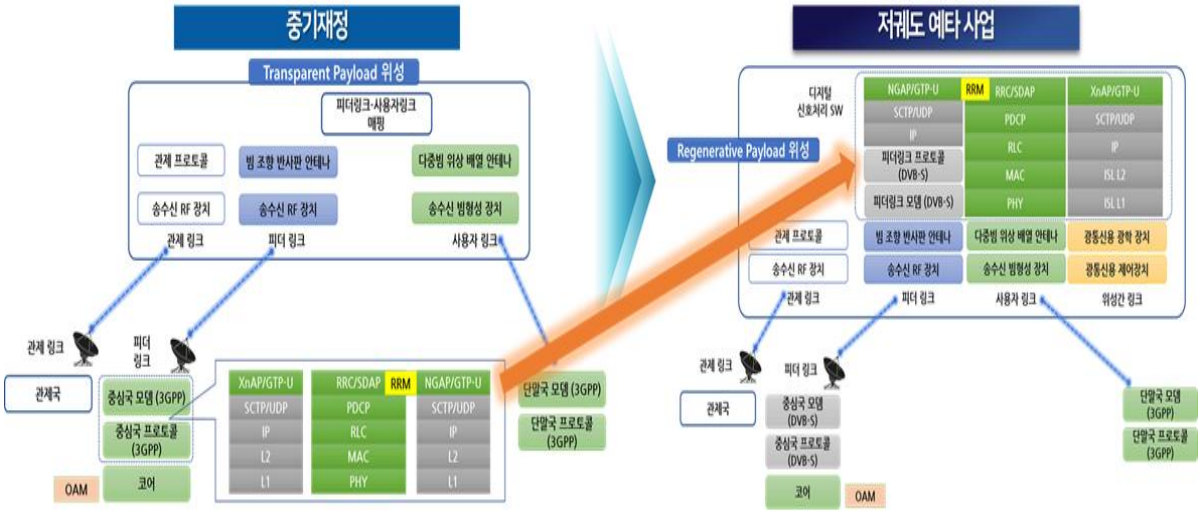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	6,155	6,155	4,281	4,281	4,000	△281	△6.6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6,155	6,155	4,281	4,281	4,000	△281	△6.6
□ 세출예산비목	6,155	6,155	4,281	4,281	4,000	△281	△6.6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6,155	6,155	4,281	4,281	4,000	△281	△6.6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51)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유럽, 미국, 한국 등이 참여하여 국제적인 이동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협력기구
52) NTN(Non-Terrestrial Network) : 지구 표면이 아닌 상공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 해당 사업들은 2030년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을 2기 발사하고 지상국, 단말국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려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이하 “예타사업”이라 함)[53]’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브릿지 사업으로서, 그 사업 결과물은 추후 예타사업에서 활용할 예정임.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사업 연계방안>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53) 사업코드: 2531-339 / 사업비: 3,224억원 / 사업기간: ’25～’30년(6년)

나) 검토의견

□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기술개발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사업 및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하 “중기사업”이라 함)은 ’24년~’26년 3년간 각각 199억 3,000만원, 209억 6,100만원을 투입해 5G-Advanced(3GPP NTN Rel-18[54]) 표준 기반 지상국 및 단말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임.

<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사업개요 >

- **(목적)**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반으로 **군집위성 동시 운용** 및 **위성-지상망 연결**을 위한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 **(사업기간/총사업비)** ’24~’26년 / 국고 199.3억원
- **(주요내용)** 저궤도 위성과 데이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피더링크 송수신 및 접속 제어를 위한 표준 기반 중심국 모뎀/프로토콜 기술 개발

<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사업개요 >

- **(목적)**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기반 초공간 통신기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3GPP NTN Rel-18 표준기반 단말 핵심기술 개발
- **(사업기간/총사업비)** ’24~’26년 / 국고 209.61억원,
- **(주요내용)**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용 3GPP NTN Rel-18 표준기반 단말 모뎀/프로토콜 및 셋톱박스형 단말용 Ka 대역 안테나/RF 기술 개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54) 3GPP NTN Rel-18 : 최신 5G-Advanced 저궤도 위성통신 표준 규격(‘24.3월 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표준화 전 선행 규격인 5G-Advanced(Rel-18) 표준 기반의 지상국 및 단말국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규격 변화[55]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통해 6G(Rel-21) 표준으로 개발예정인 예타사업에 활용한다는 입장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기사업의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다수가 예타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기사업 연구기관이 예타사업 정기점검회의와 마일스톤 점검회의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중기사업과 예타사업의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현황 >

구 분	중기사업	예타사업
	저궤도군집위성통신용 지능형지상국핵심기술개발	**저궤도위성통신기술개발(총괄/1세부)**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연구개발기관	**한화시스템, LIG넥스윈, 케이티샛**, SK텔링크,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국전파진흥협회,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에리카, 세종대학교	㈜케이티, **케이티샛, SK텔레콤, LG유플러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RFHIC㈜, ㈜우리별, 쏠리드, ㈜에치에프알, 쎄트렉아이, 넷커스터마이즈,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아주대학교, 고려대학교**

구 분	중기사업	예타사업
	3GPP기반위성통신단말핵심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2세부)**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쏠리드
공동연구개발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클레버로직**, ㈜엘지유플러스, KAIST, **연세대학교**	(주)케이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세대학교,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클레버로직**, 쏠리드랩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정 3GPP NTN 표준화 일정 : Rel-18('24.3)→Rel-19('25.12예상)→Rel-20('27.8예상)→Rel-21('28.12예상)

< 중기사업과 예타사업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현황 >

구 분	검토책임자	주 기	점검 및 관리 내용
정기 점검회의	사업부처, 전문기관,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	분기별 +@	사업 **일정관리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개발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공유하고, 개발·통합 이슈 사전 파악**
마일스톤 점검회의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술전문위원회(외부), 세부과제별 주관연구개발기관	연도별 * SDR, PDR, CDR, IRR, PSR	전체사업 마일스톤 점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의 객관적 진단 및 개선·해소방안** 도출 ※ **마일스톤별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개선·수정사항 이행여부**를 추적·관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중기사업의 선행 추진과 예타사업과의 병행은 예타사업 연계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중기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중기재정계획 대비 각각 71억 1,000만원(△64.8%), 65억 2,500만원(△62.0%)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6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중기사업 결과물이 당초 계획대로 예타사업에 연계·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56]

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연도 사업비 감액으로 ①주요 성능지표 및 시스템 완성도 등 성과물의 성능저하 및 ②에뮬레이터 구매 및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 삭감으로 기술 검증 불가 등의 영향이 있으며, 예타사업 연구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목표 달성 불확실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중기사업 결과물의 예타사업 활용 내용 >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구 분	결과물의 예타 활용
연계도	
지상국모뎀	○ 중기사업을 통해 3GPP NTN Rel-18 기반 중심국 모뎀 및 프로토콜 SW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하여 **예타사업의 통신 탑재체에 탑재될 3GPP NTN Rel-21 기반 위성기지국 모뎀 및 프로토콜 SW 개발 예정** * 중기사업의 결과물인 3GPP NTN Rel-18 모뎀 및 프토토콜 SW를 3GPP NTN 표준화 일정에 따라 **단계적 버전 업그레이드** * **통신탑재체의 환경에 적합하게 모뎀 및 프토토콜 SW 최적화**
인터페이스	○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심국과 코어망, 관제국 등 지상망 간 인터페이스를 통한 연동이 필수적으로 **중기사업의 중심국과 코어망, 관제국 등 지상망 간 인터페이스를 예타사업의 위성기지국 개발에 활용**
안테나/RF	○ 저궤도 위성과의 통신을 위한 지상국 안테나/RF는 중기사업에서 규격을 개발하고, **예타사업을 통해 지상국 RF/안테나 구축 예정**
테스트베드	○ 저궤도 위성과 통신을 수행하기 이전 지상에서 위성기지국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중기사업에서 구축한 에뮬레이터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험 환경을 **예타사업의 지상 시험 환경 구축에 활용**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구 분	중기사업	예타사업
연계도		
저궤도 위성 환경	○ Transparent Payload 위성 고려	○ Regenerative Payload 위성 개발 (3GPP NTN Rel-21 표준(6G) 기반 기지국 기능 탑재)
단말 개발 범위	○ 3GPP NTN Rel-18 표준 (5G-Advanced) 기반 단말 개발	○ 3GPP NTN Rel-21 표준(6G) 기반 단말 개발

단말모뎀	○ 저궤도 위성통신 채널 환경에서 단말 모뎀 모의실험 장비를 통해 기능/성능 검증	○ 실제 저궤도 위성에 탑재될 기지국 사용자 링크 모뎀과 송수신 시연 및 검증 수행
안테나/RF	○ 단말국 안테나/RFIC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기능/성능 검증은 안테나 모의실험 장비를 통해 검증 수행	○ 실제 저궤도 위성 사용자링크의 빔성형 신호와의 송수신 시연 및 검증 수행 * 안테나/RF핵심기술은 안테나 성능과 위성 추적 알고리즘의 정밀도 및 계산 속도 고도화 등과 연계
시험검증	○ 구축한 에뮬레이터 기반 시험 환경	○ 위성/지상 통합 단말국 시험에 활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편성 예산 감액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의 일부를 변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무선접속 기능 등 일부 기능을 생략하고, 기술 검증을 위한 에뮬레이터 개발·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임.

< 중기사업 예산 감액에 따른 연구개발 영향 >

사업명	(기존) 개발 내용 및 범위	(변경) 개발 내용 및 범위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중심국 핵심기술 개발 및 3GPP 표준화)** o 중심국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기술 개발 및 성능분석 시뮬레이터 개발 o 중심국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무선 전송 및 접속 구현기술 개발 o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3GPP 표준화 활동 **(중심국 시스템 개발)** o 중심국 모뎀/프로토콜 구현 및 HW 플랫폼 제작 **(TRL 6)** o 중심국 모뎀 및 프로토콜 통합 o 검증환경 구축용 관제국/코어 에뮬레이터 개발 o 검증환경 구축용 단말 에뮬레이터 구매	**(중심국 핵심기술 개발 및 3GPP 표준화)** o 중심국 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기술 개발 및 성능분석 시뮬레이터 개발 기능 **(축소)** o 중심국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무선 전송 및 접속 구현기술 개발 **(취소)** o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3GPP 표준화 활동 **(취소)** **(중심국 시스템 개발)** o 중심국 모뎀/프로토콜 구현 및 HW 플랫폼 제작 **(TRL 4)** **(축소)** ※ 개발 기능 대폭 축소로 인해 하향 조정 o 중심국 모뎀 및 프로토콜 통합 o 검증환경 구축용 관제국/코어 에뮬레이터 개발 **(축소)** o 검증환경 구축용 단말 에뮬레이터 구매 **(취소)**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	**(모뎀)** ㅇ 단말 모뎀 및 프로토콜 상세설계 핵심기술 고도화 ㅇ 저궤도 통신위성 환경 모사 기반 단말국 파라미터 설계 ㅇ 단말 모뎀 물리계층 상세설계 및 구현 ㅇ 단말 H/W 상세설계 및 구현 ㅇ 3GPP NTN 표준화 ㅇ 저궤도 통신위성 환경 모사 기반 안테나 정합 테스트베드 설계 ㅇ 단말 모뎀 프로토콜 스택 S/W 상세설계 및 구현 **(안테나)** ㅇ 안테나 설계 개선 및 시제품 제작 ㅇ 시제품 기본 기능 시험 ㅇ Radome 설계 및 금형/시제품 제작 ㅇ 기구부(방열판) 설계 및 금형/시제품 제작 ㅇ 안테나 제어 S/W 및 UX/UI 개발 **(RFIC)** ㅇ 고출력 빔포밍 송신 RF 회로 기능 검증 ㅇ 저잡음 빔포밍 수신 RF 회로 기능 검증 ㅇ 고출력 빔포밍 송신 RF 회로 제작 및 시험 ㅇ 저잡음 빔포밍 수신 RF 회로 제작 및 시험	**(모뎀)** ㅇ 단말 모뎀 및 프로토콜 상세설계 핵심기술 고도화 ㅇ 저궤도 통신위성 환경 모사 기반 단말국 파라미터 설계 ㅇ 단말 모뎀 물리계층 상세설계 및 구현 ㅇ 단말 H/W 상세설계 및 구현 ㅇ 3GPP NTN 표준화 ㅇ 저궤도 통신위성 환경 모사 기반 안테나 정합 테스트베드 설계 **(취소)** ㅇ 단말 모뎀 프로토콜 스택 S/W 상세설계 및 구현 **(취소)** **(안테나)** ㅇ 안테나 설계 개선 및 시제품 제작 ㅇ 시제품 기본 기능 시험 ㅇ Radome 설계 및 금형/시제품 제작 **(취소)** ㅇ 기구부(방열판) 설계 및 금형/시제품 제작 **(취소)** ㅇ 안테나 제어 S/W 및 UX/UI 개발 **(취소)** **(RFIC)** ㅇ 고출력 빔포밍 송신 RF 회로 기능 검증 ㅇ 저잡음 빔포밍 수신 RF 회로 기능 검증 ㅇ 고출력 빔포밍 송신 RF 회로 제작 및 시험 **(취소)** ㅇ 저잡음 빔포밍 수신 RF 회로 제작 및 시험 **(취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예타사업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3,22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57]에 근거하여 지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58] 중 하나인 차세대 통신 시장에서의 국내 독자 기술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57) 2024. 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확정
58) 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이동수단, 차세대원자력, 첨단생명공학,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행 기술개발 사업인 중기사업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감액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기술 검증 및 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5)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1138-488):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은 세계 최초로 고도노화의 정량 지표를 확립하고, 세포 단위로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제어기술을 개발하려는 연구개발사업으로, 2026년에 75억원의 예산안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고도노화 정량 지표 확립 및 세포-조직-장기별 다차원 노화지도 구축”은 현재 고도노화를 계량화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이 부재하므로 다수의 분자·세포 지표를 통합한 수치화된 기준 마련하고, 고도 노화 제어 원천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차원 노화지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에 2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노화 미세환경 기반 제어 원천기술 개발”은 각 조

직-장기 특이적 노화미세환경 조절 유전자 및 신호경로를 규명하고, 세포에서 노화가 일어나는 유전자·분자 단위의 경로를 분석하며,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표적 조절 후보 선별하여 노화인자 발현조절 도구 및 후보물질 발굴 및 효능 검증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신규 예산안 30억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노화 제어기술 효능 평가용 플랫폼 구축”은 고도노화 제어기술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기능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량지표 변화 중심의 효능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신규 예산안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	-	-	-	-	7,500	순증	순증
○고도노화 정량 지표 확립 및 세포-조직-장기별 다차원 노화지도 구축	-	-	-	-	2,250	순증	순증
○노화 미세환경 기반 제어 원천기술 개발	-	-	-	-	3,000	순증	순증
○노화 제어기술 효능 평가용 플랫폼 구축	-	-	-	-	2,250	순증	순증
□ 세출예산비목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7,500	순증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도전적인 목표 설정에 따른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 세부사업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은 ①고도노화 정량 지표 확립 및 세포-조직-장기별 다차원 노화 지도 구축(22억 5,000만원), ②노화 미세환경 기반 제어 원천기술 개발(30억원), ③노화 제어기술 효능 평가용 플랫폼 구축(22억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음.

○ 동 세부사업의 연도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6년에는 75억원이 편성되었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일괄 100억원을 각 연도별로 편성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역사업① 고도노화 정량지표 확립 및 세포-조직-장기별 다차원 노화지도 구축은 1개 과제에 대해 매년 3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고, 첫 해인 2026년에는 30억원에 대한 9개월분인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② 노화 미세환경 기반 제어 원천기술 개발은 과제당 10억원을 4개 과제에 지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40억원에 대해 9개월분 예산안 30억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③ 노화 제어기술 효능 평가용 플랫폼 구축은 2개 과제에 대해 15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30억원의 9개월분인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사업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6 예산안	2027 예산안	2028 예산안	2029 예산안	2030 예산안	합계
□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	7,500	10,000	10,000	10,000	10,000	47,500
① 고도노화 정량 지표 확립 및 세포-조직-장기별 다차원 노화지도 구축	2,250 1개x30억원 x9/12개월	3,000 1개x30억원 x12/12개월	3,000 1개x30억원 x12/12개월	3,000 1개x30억원 x12/12개월	3,000 1개x30억원 x12/12개월	14,250
② 노화 미세환경 기반 제어 원천기술 개발	3,000 4개x10억원 x9/12개월	4,000 4개x10억원 x12/12개월	4,000 4개x10억원 x12/12개월	4,000 4개x10억원 x12/12개월	4,000 4개x10억원 x12/12개월	19,000
③ 노화 제어기술 효능 평가용 플랫폼 구축	2,250 2개x15억원 x9/12개월	3,000 2개x15억원 x12/12개월	3,000 2개x15억원 x12/12개월	3,000 2개x15억원 x12/12개월	3,000 2개x15억원 x12/12개월	14,2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1단계(3년) 수준에서 내역①은 고도노화 표준지표 확보, 내역②는 조직·장기별 특화 노화 제어 후보(유전자 등) 발굴, 내역③은 인간 노화 특화 오가노이드 및 노화 특화 동물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할 계획임.

< 단계별 대표 성과목표(안) >

	1단계	2단계
내역①	고도노화 표준지표 확보	다차원 노화지도 구축
내역②	조직·장기별 특화 노화 제어 후보(유전자 등) 발굴	노화 제어 기술(유전자 조절 등) 및 후보물질 개발
내역③	인간 노화 특화 오가노이드 및 노화 특화 동물 모델 개발	노화 제어 기술 및 후보물질 유효성 검증

주: 단계별 성과목표는 전문가그룹 상세 기획회의를 통해 지속 수정·보완 예정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각 내역사업으로 수행할 과제들과 관련된 해외 연구 동향과 비교해 볼 때, 동 연구 분야는 연구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기 수준으로, 동 연구과제가 도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역①의 경우 RNA 정보에 대한 고도노화 표준지표 확보만 이루어진 상황이고, 내역③은 개발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각 내역별 해외 연구 동향>

	해외 연구 동향
내역①	○ Chen Zuckerberg Biohub(마크 주커버그 설립) 주도로 늙은 생쥐의 세포·장기 유형별 노화 지도 구축 성과. 다만 RNA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어 정보의 양에서 한계

	해외 연구 동향
내역②	○ 체세포로부터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발현시켜 조로증 생쥐의 노화 속도를 늦추거나 (Nature, 2020) 손상된 시신경을 회복(Cell, 2022). ○ 칼리코(구글 자회사), 알토스랩, 라이프 바이오사이언스 등 다양한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유전인자 조절 기반의 역노화 전략으로 임상에 도전 중.
내역③	○ 현재 해외에서도 인간 노화 상태를 모사한 오가노이드 등에 대한 개발 현황은 없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따라, 사업 수행 기간 3년 이후 이루어질 1단계 평가에서 해당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도 도전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체노화 리프로그래밍 원천기술 개발 사업이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26)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1138-502):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사항을 검토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은 AI 바이오 분야의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AI바이오 혁신 거점을 시범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10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AI 바이오 혁신연구거점 구축	-	-	-	-	10,200	순증	순증
□ 세출예산비목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10,200	순증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검토 필요**

○ 세부사업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은 혁신 연구거점을 조성하여 그 연구 거점을 기반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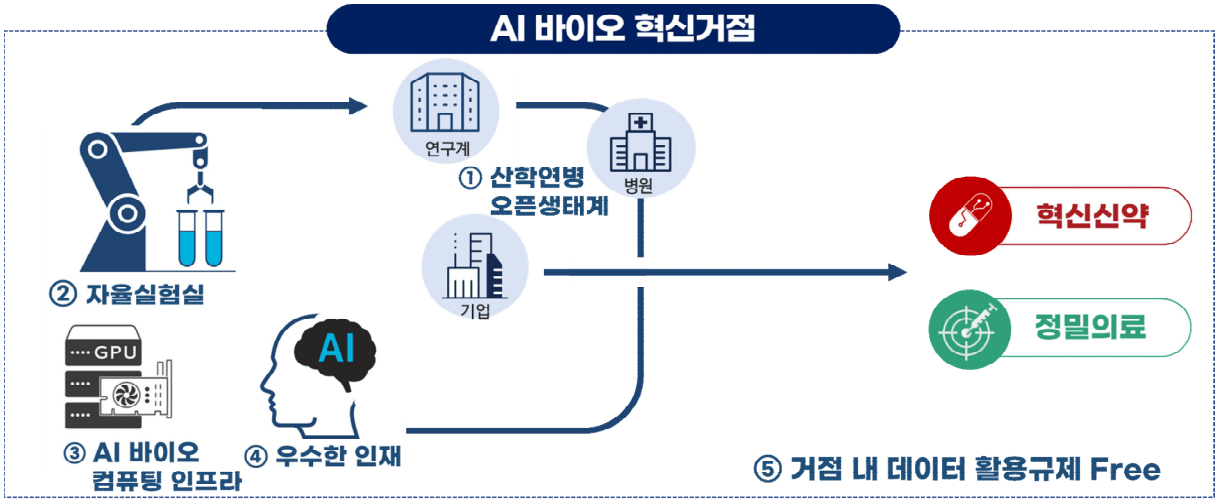
① 대학, 출연연, 의료기관, 기업체 등 연구 주체 간 장벽을 허물고 연구자 중심의 도전과제를 수행하는 오픈생태계를 구축하고,

②·③ GPU, 자동화 실험장비, 데이터 시뮬레이터 등 고성능 분석 인프라를 공동자산으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AI 가상실험실 및 자율실험실을 구축하여 연구자가 필요할 때 패키지로 대여·활용할 수 있게 하며,

④ 대학원-전문과정으로 연결되는 AI 바이오 융합 교육 트랙을 개설하고 세계적 수준의 해외 석학을 초빙하는 등 AI바이오 융합인재를 양성하고,

⑤바이오데이터와 고품질 임상데이터를 연구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거점 내 데이터 활용규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AIxBio 혁신 연구 거점 개념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를 위해서 2026년에 총 102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이 중 3억원은 향후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이고, 나머지 99억원은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 조성에 들어가는 연구비, 인건비, 장비도입비, 운영비 등임.

<2026년도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예산 세부 내역>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 AI 바이오 혁신 연구거점 조성(26년도 1개소) - AI 바이오 융합연구비: 25억원 내외 - 인재유치 및 인재양성비: 8억원 내외 - 연구단 인건비: 5억 5,000만원 내외 - 연구단 기타운영비: 3억 5,000만원 내외 - AI컴퓨팅장비 도입 및 유지관리비: 30억원 내외 - 자율실험장비 및 AI 가상화실험실 구축 및 운영비: 27억원 내외	99억원
○ ISP 수립 - AI 바이오 연구에 활용할 GPU 컴퓨팅 인프라(총 114억원)	3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오픈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거점 내에서 연구목적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데이터 활용에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규정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임.

<데이터 활용 관련 주요 규제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병원 보유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제3자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가명처리·익명처리 후 통계/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

○ **(생명윤리법)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하면 **IRB(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병원→혁신거점으로 전송된 가명정보를 제3자(연구자, 기업 등)가 사용 또는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기관(병원)의 IRB 면제 및 DRB(데이터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함

⇒ 다수 병원에서 수집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연구자는 모든 병원에 IRB 면제 신청 및 DRB 승인 필요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병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때, **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가명처리 필요)과 안전한 활용(폐쇄망 이용)을 심의하는 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하고, 기업의 상업적 활용은 불가
- 가명처리 대상 해당여부 구분 및 가명처리의 적절성 판단기준이 모호함

※ 공용 데이터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각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기관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심의

- 모호한 판단기준으로 인해 **가명 처리가 과도**하게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유용**

한 정보가 삭제되는 등 원데이터의 가치 손상 발생
- 활용데이터가 **민감정보(유전체정보, 건강정보 등)를 포함**한 경우 **폐쇄환경망에서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1)폐쇄망 접근을 위해 여러차례 보안과 인증 필요, 2)폐쇄망 내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환경 설정이 어렵거나 불가능, 3)분석결과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매번 DRB 승인을 받아야 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제 대상이 되는 데이터 정도에 따라 AI 바이오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활용가능한 데이터 규모가 상이해지므로,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시작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 사항을 검토하여, 규제 완화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수행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7)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1139-458): 지자체 제안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역 한정 공모 기준을 준수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 사업이 지자체 제안사업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한정 공모 기준을 준수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은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세라믹 소재·부품·공정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및 기술자립을 달성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3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	-	-	-	-	3,200	순증	순증
□ 세출예산비목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3,200	순증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지자체 제안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역 한정 공모 기준을 준수할 필요

○ 세부사업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은 총사업비 400억원(사업기간 5년)이고, 이 중 국비가 284억원, 지방비가 116억원인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임.

○ 2026년도에는 5개 과제에 대해 6개월분 예산인 32억원이 국비로 편성되었고, 지방비는 16억원을 매칭할 계획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국비 64억원, 지방비 25억원을 매칭할 계획이고, 2030년에는 국비 60억원, 지방비 25억원을 매칭하여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2026년도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 예산 세부 내역>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 - 5개 과제 x 12억 8,000만원 x 6/12개월	32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동 사업은 “지자체 ’25년 예산 연계 사업 추진계획 및 ’26년 예산 연계 사업 선정 결과”[59]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지방

자치단체가 제안한 6개의 사업 중에서 강원도가 제출한 첨단 세라믹 반도체 관련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 받아 2026년도 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자체 연계사업 선정 결과보고서는 동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 강원은 지역 내 핵심기업(미코세라믹, 후성정공 등)을 활용하여 첨단세라믹 소재라는 강원 특화 분야의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였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기술 분야를 적절히 선정하였다고 평가하였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2026년도 지자체 제안사업의 기본방향을 “지역이 그간 축적한 역량·자원을 기반으로 중점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력 R&D를 지원하여, 연구성과를 지역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해당 심의 결과보고서는 “신규사업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도록 추진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

59) 동 선정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2025년 4월 30일에 심의·의결한 것임.

○ 이러한 지자체 제안사업의 기본 취지 및 추진 방안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강원도”의 첨단세라믹 소재에 대한 역량을 기반으로 “강원도”에 소재한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그 연구성과를 “강원도”의 지역기업과 산업으로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참여 범위를 강원도 소재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 구체적인 참여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정부안 확정 시에 강원도와 과기혁신본부와 협의를 통해 참여범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수도권 소재 기업도 향후 강원도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음.

○ 이렇게 참여 가능한 지역 범위를 수도권까지 고려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추진 방향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가 동 사업을 심의·의결한 취지와는 다소 상이한 문제가 있음.

○ 또한, 향후 지자체 제안사업이 지역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동 사업의 심의·의결한 취지대로 “강원도” 소재 산학연이 동 사업을 수행하여 그 성과도 “강원도”의 지역기업으로 확산이 되도록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 사업이 지자체 제안사업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 한정 공모 기준을 준수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28)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1159-443):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해당하는 예산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할 필요

○ 내역사업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의 2026년도 예산안 중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해당하는 예산안 84억원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1159-443)”은 국가 퀀텀칩 제조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양자기술 분야 공급망 진입 및 글로벌 선도 제조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신규 예산안 168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는 글로벌 퀀텀칩 공급망 진입을 위한 퀀텀칩 제조기술의 초고도화를 위하여 대면적(8인치급), 고밀도(3D적층), 시양산급(고수율) 퀀텀칩 제조공정을 위한 초전도 양자팹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활용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8억 5,000만원임.

○ 내역사업 “양자공정산업확산기반구축”은 개방형 양자팹 구축 및

산업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의 양자기술을 기업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양자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개방형 양자전용 팹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원임.

<2026년도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	-	-	-	-	16,850	순증	순증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	-	-	-	-	11,850	순증	순증
○ 양자공정산업확산기반구축	-	-	-	-	5,000	순증	순증
□ 세출예산비목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16,850	순증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해당하는 예산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로 편성할 필요

○ 세부사업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1159-443)”의 내역사업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는 퀀텀칩 제조공정을 고도화하고 이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는 298억원이고, 사업기간은 4년이며, 전액 연구개발활동비(360-05목)으로 편성되었음.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는 연구개발과제를 과제형으로 수행하는 예산임.

○ 동 내역사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①양자팹 고도화(전공정)에 2차년도까지 143억원을 투자하고, ②성능평가체계구축(후공정에 2차년도까지 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③팹 활용체계 고도화에 4년동안 71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내역사업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의 연도별 로드맵>

세부 내용	1단계			2단계	합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 지원내용1. 양자팹 고도화(전공정)	40억원	103억원	-	-	143억원
○ 지원내용2. 성능평가체계 구축(후공정)	64억원	20억원	-	-	84억원
○ 지원내용3. 팹 활용체계 고도화	14.5억원	17억원	21.5억원	18억원	71억원
합 계	118.5억원	140억원	21.5억원	18억원	298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전반기는 장비구축 중심, 사업 후반기는 공정고도화 중심으로 로드맵을 설계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지원내용1 및 지원내용2의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60]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해당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임.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61]은 연구개발출연금(360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구개발장비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예산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예산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하도록 구분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동 내역사업의 지원내용1·2에 해당하는 2026년도 예산안 104억원은 주로 장비 구축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 중 장비 구축 비용인 84억원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으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내역사업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의 2026년도 예산안 중 연구시설·장비 구축에 해당하는 예산안 84억원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으로 비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60)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0.
61)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02

29) 개인기초연구(R&D)(1234-301): 하반기 집행 예정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개인기초연구(R&D)사업은 하반기에 협약 체결 예정인 신규과제의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점, 연례적인 회계연도 불일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인기초연구(R&D)사업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및 최근 예산 증가율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개인기초연구(R&D)(1234-301)”는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산·학·연 소속 이공 분야 연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03억 9,300만원(18.9%) 증액된 2조 2,65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세부사업은 2025년까지 우수연구(2025년도 예산 1조 8,595억 2,200만원)와 생애기본연구(2025년도 예산 457억 3,600만원)의 두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되었으나, 2026년부터 “우수연구”로 내역이 통합되었음.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개인기초연구(R&D)	1,698,247	1,698,247	1,905,258	1,905,258	2,265,651	360,393	18.9
○ 우수연구	1,578,767	1,578,767	1,859,522	1,859,522	2,265,651	406,129	21.8
○ 생애기본연구	119,480	119,480	45,736	45,736	-	순감	순감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698,247	1,698,247	1,905,258	1,905,258	2,265,651	360,393	18.9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하반기 집행 예정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관리 철저 필요

○ 세부사업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은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①리더연구에서 19개, ②핵심연구에서 4.660개, ③신진연구에서 1,730개, ④세종과학펠로우십에서 465개의 신규과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신규과제 예산 중 ①리더연구에 해당하는 19개 사업은 9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6,855개의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62]은

1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2신규과제는 협약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하도록 하며,

3단, 기초연구 등은 회계연도 일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과제에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초연구 예산에 해당하는 동 사업은 신규과제에 대해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음.

○ 이렇게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신규과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구의 안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러한 신규과제 중에서도 ④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에 해당하는 200개 과제, ②핵심연구(도전형, 전략형, 기본연구 A, 기본연구B)에 해당하는 2,110개의 과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

62)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5.

개시일(협약일)을 9월 1일로 계획하고 있어 202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해당 과제들은 단년도 과제가 아니므로, 주어진 연구기간 동안 연례적인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 연구개시일 및 연구기간>

구분	공고 차수	사업명		공고 시기	신청시기	연구 개시일	연구 기간
개인 연구	1차	리더 연구	유형B(Top-tier), 유형A	’25.11월	’25.11월 말 ~12월 중	6.1.	9년 (3+3+3)
		핵심 연구	유형C, 유형B, 유형A			3.1.	최대 5년
			도약형				최대 3년
			한우물파기				10년 (5+5)
		신진 연구	유형B				5년
			유형A				3년
			신진인프라				1년
		세종 과학 펠로우십	국내				5년 (3+2)
			국외				1년
			복귀			**9.1.**	**5년**
	2차	**핵심 연구**	**도전형, 전략형,**	’26.3월	’26.4월 중	**9.1.**	**최대 3년**
			기본연구B, 기본연구A		’26.5월 중		**최대 5년**

자료: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은 개인연구를 상반기(1차), 하반기(2차)에 걸쳐 신규과제 공고를 하는 것은 대학 학사 일정(3월, 9월)과 선정평가 소요기간(3~6개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④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의 경우에는 2026년에 신규로 200개 과제에 대하여 각 1억 3,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박사후연구원 등 해외 체류 우수 인력의 복귀 트랙을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1차에 공고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협약을 연구자 개인이 아닌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외 체류 인력과 주관연구기관과의 매칭 기간이 소요되고, 해외 체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하는 기간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연구개시일을 9월 1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이러한 과제들에 대하여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세종과학펠로우십(복귀) 260억원, 핵심연구(도전형) 50억원, 핵심연구(전략형) 120억원, 핵심연구(기본연구B) 750억원, 핵심연구(기본연구A) 400억원 등 총 1,580억원임.

<하반기 개시 과제의 예산안 편성 내역>

구분		신규과제 세부 편성 내역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200개 x 1.3억원 = 260억원
핵심연구	도전형	50개 x 1억원 = 50억원
	전략형	60개 x 2억원 = 120억원
	기본연구B	1,200개 x 6.25억원 = 750억원
	기본연구A	800개 x 0.5억원 = 400억원
합 계		1,58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개인기초연구(R&D)사업은 하반기에 협약 체결 예정인 신규과제의 경우 상반기 예산 집행이 어렵다는 점, 연례적인 회계연도 불일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의 상향 조정 검토 필요

○ 세부사업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은 성과지표 “개인기초연구사업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및 “IF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비율”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지표들은 2024년 성과달성률이 각각 110.5%, 175.5%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각각 0.54%, 1.1% 상향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 성과지표 “개인기초연구사업표준화된 영향력지수”의 경우 2026년 성과목표를 71.08로 설정하였는데, 2022년에 이미 해당 성과목표보다 높은 실적 71.6을 달성하였고, 2023년 실적이 72.91, 2024년 실적이 78.09로 매년 실적이 상향하고 있는 상황임.

○ 또다른 성과지표 “IF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비율” 역시 2026년 성과목표를 19.2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2022년 실적 20.2, 2023년 실적 21.0, 2024년 실적 33.0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이렇게 성과목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된 이유는 각 성과지표가 5년간 평균 증가율, 3년간 평균 증가율을 상향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임.

<“개인기초연구(R&D)”의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개인기초연구사업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단위: MRNIF)	목표	69.90	70.28	70.66	71.04	71.08	’25년 목표치 대비 0.54%(5년간 평균 증가율)를 상향한 목표치로 설정	SCI 논문의 표준화된 영향력지수 합계 ÷ SCI논문수	전수조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실적	71.6	72.91	**78.09**	-	-			
	달성도	102.4	103.7	**110.5**	-	-			
IF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비율 (단위: %)	목표	18.4	18.6	18.8	19.0	19.2	’25년 목표치 대비 1.1%(3년간 평균 증가율)를 상향한 목표치로 설정	IF 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건수/SCI	전수조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실적	20.2	21.0	**33.0**	-	-			
	달성도	109.8	112.9	**175.5**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계획,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동 사업은 두 성과지표 모두 2022년 실적보다 낮은 수준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자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목표에 해당함.

○ 또한, 동 사업은 2024년 예산보다 2025년 예산이 2,070억 1,100만원(12.2%) 증액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보다 3,603억 9,300만원(18.9%) 증액되어 보다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세부사업 “개인기초연구(R&D)”의 성과지표는 성과목표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및 최근 예산 증가율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30)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7601-301): 과제 특성 등을 반영한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편성 필요

○ 한국연구재단의 기획평가관리비에 대해 과제 교차점검이 추가 및 관리 대상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비 편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7601-301)”은 기초・원천연구(바이오·양자·반도체 등), 국제협력, 인문사회 분야 등 전 사업 분야의 기획연구, 연구과제 평가·협약·관리 및 사후 성과관리 등 연구개발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7,300만원(4.7%) 증가한 56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기획·평가비”는 중장기 전략 기획, 사업 기획, 과제(RFP) 기획 등 R&D 사업·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예측·수요·특허·해외사례 조사 등의 사업 및 과제 기획과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과제 단계·최종평가 등 사업·과제 평가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전년대비 28억 5,300만원(16.3%) 증액된 203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51,378	51,378	54,265	46,965	56,838	2,573	4.7
○기획비	6,138	6,138	-	-	-	-	-
○평가비	13,070	13,070	-	-	-	-	-
○기획·평가비	-	-	17,523	16,539	20,376	2,853	16.3
□ 세출예산비목	51,378	51,378	54,265	46,965	56,838	2,573	4.7
○기획평가관리비(360-06)	-	-	17,523	16,539	20,376	2,853	16.3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과제 특성 등을 반영한 기획평가관리비 예산 편성 필요

○ 내역사업 “기획평가비”는 2025년 대비 28억 5,300만원(16.3%)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평가비에 평가 대상 과제 수 증가(60,303과제→74,914과제)가 반영된 것이고, 기획비의 경우 기획은 증가하였으나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단가가 4,290만원에서 3,590만원으로 700만원(16.3%) 감소하였음.

<내역사업 “기획평가비” 세부 산출 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523	○기획평가관리비(360-06):17,523백만원 가. 기획비(6,213백만원) • 중장기·자체기획 등: 145개 기획×42.9백만원=6,213백만원 나. 평가비(11,310백만원) •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60,030과제x0.19백만원=11,310백만원	20,376	○기획평가관리비(360-06):20,376백만원 가. 기획비(6,213백만원) • 중장기·자체기획 등: 173개 기획×35.9백만원=6,213백만원 나. 평가비(14,163백만원) •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74,914과제x0.19백만원=14,163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동 내역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①과제 교차점검이 추가되어 기획비 증액이 필요한지, ②한국연구재단의 관리 대상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비 편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획비의 경우 과제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연평균 증가율(3.7%)을 반영 및 교차점검 추가에 대한 예산 반영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차점검은 과제 기획시의 목표보다 협약 체결시의 목표가 과도하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점검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임.

○ 기획비에 대하여 연평균 증가율(3.7%)를 반영할 경우 2억 3,3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교차점검 추가 예산을 반영할 경우

3억 2,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모두 반영할 경우 총 6억 3,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함.

<기획비 예산 증액 소요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2026년도 기획비 정부안(A)	2025년도 기획비 실소요(B)	연평균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반영 시(C)	교차 점검 소요 예산액(D)	2026년 기획비 소요(E)
6,213	6,291	3.7%	6,524	16개x20=320	6,844(=C+D)
			+311(C-A)	+320	+631(E-A)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둘째, 평가비의 경우 관리대상 과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반영할 경우 31억 8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함.

- 2026년도 예산안은 개별 과제의 평가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각 과제당 단가를 19만원으로 일괄 편성하였음.

-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의 본부 특성에 따라 기초연구 및 인문사회는 주로 서면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과제수를 기준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국가전략, 국제협력, 학술진흥, 연구정책본부는 대면평가 중심이기 때문에 평가과제수보다는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여야 하는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평가비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따를 때, 우선 서면평가 중심의 기초연구 및 인문사회 본부의 평가비를 산출해보면, 2026년도 평가과제수를 기준으로 144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평가비 중 기초연구·인문사회 본부 소요 예산 산출안>

(단위: 개, 백만원)

평가 방식	평가비 산출식	본부	'25년 평가과제 수	'25년 평가비	'26년 추정 평가과제 수	'26년 추정 평가비(안)
서면 평가 중심	평가대상 과제 수 ∝ 평가비	기초연구	40,515	7,900	60,758	11,847
		인문사회	14,189	2,394	15,307	2,583
소 계			54,704	10,294	76,065	**14,43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또한, 대면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전략 본부 등은 각 본부에서 관리하는 관리대상 예산에 따라 평가비를 산출할 경우, 2026년도 추정 평가비는 28억 4,100만원임.

<평가비 중 국가전략 등 본부 소요 예산 산출안>

(단위: 백만원)

평가 방식	평가비 산출식	본부	'25년 관리예산	'25년 평가비	'26년 정부안 관리예산	'26년 추정 평가비(안)
대면 평가 중심	관리예산 ∝ 평가비	국가전략	1,656,504	1,491	2,137,852	1,924
		국제협력	117,106	392	159,254	533
		학술진흥	98,480	206	123,487	258
		연구정책	861	48	2,261	126
소 계			1,872,951	2,137	2,422,854	**2,84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렇게 평가비를 산출할 경우, 144억 3,000만원과 28억 4,100만원을 합하면, 총 평가비 소요 예산은 172억 7,100만원이고, 현재 편성된 정부안 141억 6,300만원보다 31억 8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함.

○ 따라서, 이러한 산출 내역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획평가 관리비에 대해 과제 교차점검이 추가 및 관리 대상 과제의 특성에 맞는 평가비 편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25):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산학연 D센서실험시설 증축사업” 예산 조정 필요

○ 내역사업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2231-425)”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사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

○ 내역사업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은 반도체 융합 센서 제작을 위한 기업 전용 실험시설 확충을 통해 반도체 센서 스타트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신산업 창출 및 지역혁신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16억 3,3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16,101	16,101	14,150	11,257	10,742	△3,408	△24.1
○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	14,501	16,433 [2,198]	11,285	8,978 [27]	1,633	△9,652	△85.5
□ 세출예산비목	16,101	16,101	14,150	11,257	10,742	△3,408	△24.1
○ 연구개발건축비(360-03)	14,501	16,433 [2,198]	11,285	8,978 [27]	1,633	△9,652	△85.5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3) [ ]는 실집행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산학연 D센서실험시설 증축사업” 예산 조정 필요

○ 내역사업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2023년~2025년간 실험시설을 증축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309억 8,300만원임.

○ 동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에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시배정사업을 지정되었고(2022년 12월), 2023년 예산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중간설계 진행 중으로 2025년 12월에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 내에 2025년 공사비 추가 집행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대로 2026년 중반에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2025년도에 편성된 후 실집행되지 못한 공사비를 2026년에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내역사업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의 집행계획 대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집행계획	설계비	1,400	-	-	-	-	1,400
	공사비	-	13,728	10,653	1,541	1,541	27,463
	감리/부대비	532	773	632	92	91	2,120
	합계	1,932	14,501	11,285	1,633	1,632	30,983
집행내역	(실집행액)	-	2,198	8	-	-	2,206

주: 2025년 8월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내역사업 “산학연D-센서실험시설증축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을 감안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32)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R&D)(1160-452): 다부처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 확보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부처 사업인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수립할 것

가) 사업 개요

○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 사업은 극지(남극) 대륙 탐사 및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안전 문제 극복을 위하여 첨단 로봇과 ICT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광역탐사를 구현하고 실증하기 위한 신규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대한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한 14억원 전액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전문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임.

<2026년도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집행액	
□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R&D)	-	-	-	-	1,400
○3D-IoET를 위한 극한지 통신 및 장비 기술개발	-	-	-	-	1,400
□ 세출예산비목	-	-	-	-	1,4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1,4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은 '21～'25년 동안 진행된 선행사업(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의 후속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임.

○ 동 사업의 선행사업은 장보고기지 인근 50km 이내 고정형 관측장비의 완성품을 사람이 직접 이동시켜 설치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동 사업에서는 선행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1,500km 이상의 광역탐사를 위하여 관측장비를 모듈화하고 양팔로봇을 활용하여 무인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검토의견

□ 공동 사업 참여 부처인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 확보 필요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3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다부처 운영협의회를 통해 연구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계방안을 협의하는 등의 의사결정체계로 운영할 계획임.

< 사업 추진체계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468억 8,500만원 규모이며, 6년의 사업기간 동안('26~'31년) 해양수산부가 26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4억원, 산업통상부가 84억 8,5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는 스마트 광역 빙권 탐사 및 감시 기술개발을, 산업통상부는 양팔 작업형 친환경 이동체 플랫폼 및 운용기술개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 운용을 위한 통신 및 장비 기술개발을 담당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대하여 2026년도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사업’을 3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산업통상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음.

○ 과기정통부와 해수부는 산업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처별 핵심기술 검토를 통해 연구내용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예산 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고려하겠다는 입장임.

- 산업부 예산이 축소 편성되는 경우 기존 산업부 사업 중 다부처 협력에 필수적인 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조정하고, 산업부 예산이 미편성되는 경우 산업부의 필수 연구 분야를 과기부와 해수부가 분담하여 수행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 방위

사업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다부처 사업인 ‘민군기술협력(R&D)’ 사업에서 방위사업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 6억 1,600만원과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10억 8,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이 국회에서 지적된 이력[63]이 있는바, 동 사업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산업통상부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한편,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63) 245-250p,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 8.

33)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R&D) (1531-428): 설치실증형 트랙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대규모 인프라 및 실증연구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도출 및 실증연구에 대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설치실증형 트랙에서의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것

가) 사업 개요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 사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실증을 수행하기 위한 신규사업임.

○ 동 사업은 ‘연구개발 및 실증’과 ‘첨단기술 실증지원 허브’의 2가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대한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한 26억 2,500만원 전액을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할 계획임.

- 연구개발 및 실증 내역사업의 경우 개별 공간이나 환경에서 발생하는 명확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특정 기술·시제품 중심 실증을 통해 단기간 내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제품

을 개발하여 현장 실증하는 ‘제품실증형’과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설치하여 실증하는 ‘설치실증형’의 2가지 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임.

<2026년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집행액	
□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R&D)	-	-	-	-	2,625
○ 연구개발 및 실증	-	-	-	-	2,222
○ 첨단기술 실증지원 허브					403
□ 세출예산비목	-	-	-	-	2,625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2,6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설치실증형 사업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설치실증형 트랙의 경우 각 과제당 3년의 지원기간을 두고 총 5개의 과제를 2030년까지 완료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설치실증형 트랙 3개 과제는 과제 공모 및 선정을 2026년 7월에 시작해 인프라 구축 및 실증연구를 전부 2029년까지 완료하려는 계획임.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1-1 제품 실증형	신규 (과제수)	800 (2개)	1,200 (3개)				2,000
	계속 (과제수)		1,6000 (2개)	2,4000 (3개)			4,000
	종료 (과제수)			800 (2개)	1,200 (3개)		2,000
합계		800	2,800	3,200	1,200		8,000
1-2 설치 실증형	**신규 (과제수)**	**1,422 (2개)**	**2,133 (3개)**				**3,555**
	계속 (과제수)		**2,844 (2개)**	**7,110 (5개)**	**4,266 (3개)**		**14,220**
	종료 (과제수)				**1,422 (2개)**	**711 (3개)**	**3,555**
합계		1,422	4,977	7,111	3,911	2,133	21,330
2 첨단기술 실증지원 허브	신규 (과제수)	403 (1개)					403
	계속 (과제수)		538 (1개)	538 (1개)	538 (1개)		1,614
	종료 (과제수)					538 (1개)	538
합계		403	538	538	538	538	2,555
총계		2,625	8,315	10,848	7,426	2,671	31,88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①해결 목표가 되는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도출하고, ②이에 적합한 관련 기술을 매칭하여 ③실증에 필요한 인프라를 기획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설치실증형 트랙의 지원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인프라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향후 과제 기획을 통해 지원 대상을 마련할 계획임.

○ 2026년 상반기에 신규과제가 착수되어 사회문제 도출부터 구축할 대규모 인프라의 형태, 위치 등의 결정까지를 7월 전에 완료하기 위하여는 세부 계획 수립 및 구체화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적기에 착수·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문제 도출 및 실증연구에 대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설치실증형 트랙을 통한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4)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1432-430): 연구장비 구축시 구축형 R&D로 편성 및 심의 절차 준수 필요

○ 동 사업은 기술개발과 장비구매 내역을 통합하여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장비구축 내역을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로 분리편성하여 예산 심사·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는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시심의를 통해 연구장비규모의 적절성을 심의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사업은 전략기술인 방사성의약품의 필수원료인 의료용 동위원소 안정공급을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 분리정제기술, 원료의약품 품질 확보 및 생산을 위한 핫셀 구축 등을 추진하는 신규사업임.

○ 동 사업은 '26~'30(5년)간 총사업비 38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 편성된 예산안은 60억원임.

<2026년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	-	-	-	6,000	6,000	순증
○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	-	-	-	6,000	6,00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6,000	6,000	순증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6,000	6,00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검토의견

□ 연구장비 구축 시 구축형 R&D 사업으로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① 방사성의약품에 특화된 의료용 동위원소의 대량 분리정제 기술개발, ②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기술개발, ③ 의료용동위원소 생산인프라 고도화 등 3개 과제를 통합하여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 비목으로 편성하였음.

<2026년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사업 세부 산출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6,000백만원 (신규) 가. 대량 분리/정제 기술개발 (1,400백만원) • 대량 분리/정제 기술개발 : 1,400백만원×1개=1,400백만원 * 기존대비 생산량 200% 이상 향상 기술개발, 스케일업 생산장치 개발 나.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기술개발 (500백만원) •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기술개발 : 500백만원×1개=500백만원 * 연차별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절차서 발간 다. 의료용동위원소 생산인프라 고도화 (4,100백만원) • 의료용동위원소 생산인프라 고도화: 4,100백만원×1개=4,100백만 * 핫셀 개념설계안 도출, 핫셀 구축을 위한 구매계약 및 설계도면 확보 ** 핫셀: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고 실험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밀폐된 공간(시설)으로, 두꺼운 벽과 특수 유리창으로 방사선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원격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기재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은 연구개발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중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 구축형이 아닌 연구개발 수행 예산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장비 구축이 주요 목적인 ③의료용동위원소 생산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업이 장비도입뿐 아니라 인허가·설계·활용 등 연구를 포함하므로 이를 구축형이 아닌 과제형 R&D 사업으로 분류하고,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통합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의료용동위원소 생산인프라 고도화 (4,100백만원) 산출내역>

- **핫셀(Comercer社) 구축비 78억원의 1차년도분 19.5억원(4년 분납)** ※ 핫셀의 경우 통상 개념설계, 상세설계, 제작, 설치까지 턴키로 진행 - **유도방출플라스마 분광광도기(동위원소품질분석용) 1.5억원** - 위탁연구비(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등 검증 및 활용연구) 1억원 - GMP 컨설팅, 시설설계변경(건물, 공조, 전기 등) 등 용역비 2억원 - 인건비 5MY, 시운전, 연계설계, 인허가변경, 동위원소생산변경허가, 적격성평가, 절차서 생산 등 직접비 7.1억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9.9억원(한국원자력연구원 간접비 비율 24.2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축형 R&D를 일반 과제와 별도 비목으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은 장비·시설 등 구축사업이 일반 연구사업보다 단계가 복잡하고 사업기간·예산 변동 위험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준비도를 엄밀히 검증하려는 취지도 있음. 따라서 장비구축이 본질인 경우 부가적 연구활동이 포함되더라도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로 구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개정될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만 사업추진심사의 대상이 되는바,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비목인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와 비구축형 비목인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의 구분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예정임.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

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의결하였음[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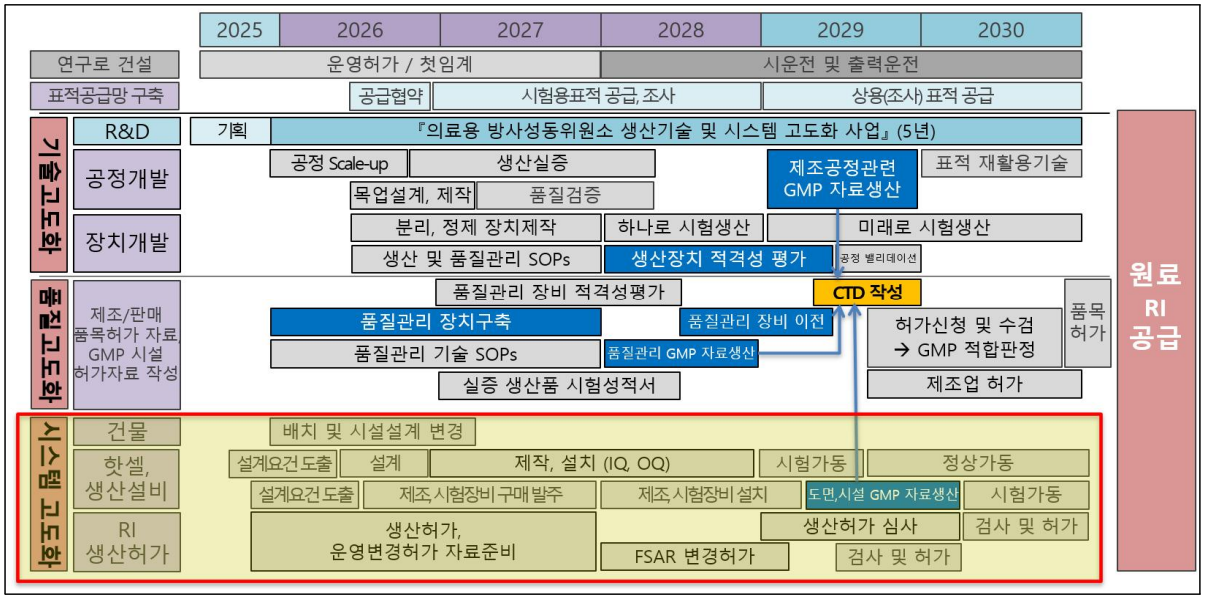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장비 구축 내역을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360-04목)’로 구분 편성함으로써 예산 심사·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64)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9.

□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조속한 장비구축 심의 필요

○ 동 사업의 2026년 사업예산에는 원료의약품 수준 의료용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장비인 핫셀 등 생산설비의 구축 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연내 장비구축을 위한 계약을 마치고 장비의 설계 및 구매 발주를 진행할 계획임.

<사업 계획 일정(안)>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제3항[65]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에 따른 장비 도입 심의를 거쳐야 함.

65)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동 표준지침[66]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시설장비의 해당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전략적 필요성, 시설장비의 중복성·활용성·적정성, 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구축비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 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본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하여 예산요구서 기준으로 본심의를 신청

---

66)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이하 "심의평가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심의에 필요함을 인정한 전문가
3. 지원기관에 소속된 직원

②·③ (생략)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4. (생략)

제20조(심의방법)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호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사업(연구) 부합성
2. 국가전략적 필요성
3.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4.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5.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6.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7. 도입 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실태(제41조 내지 제44조에 따른 처분절차 준수 여부, 유휴 연구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현황 등)
8. 구축비용의 적정성

(2025.5.12.)했으나 사업예산 미확정[67]으로 본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6년 상시심의에 재제출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물론 심의위원회는 ①예산편성 단계에서 장비 구입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본심의'와 예산 편성 후 집행단계에서 적정성을 심사하는 ②'상시심의'로 구분하고 있으나,

- 장비구입 심의는 장비 구입의 타당성과 적정 가액을 검증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므로 예산 편성 전 본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상시심의를 신청·완료하여 사업예산의 집행 타당성을 확보한 후 장비구입 계약 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7)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 예산을 한도 내 15억, 한도 외 45억으로 제출하였는바, 한도 외 예산액은 변동 가능성이 큰 미확정 예산으로 분류되어 본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3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 설립사업,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Bio CoreLink)에 참여할 의대·한의대 학생 모집 등 사업 추진의 현실적 가능성과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 설립사업 추진에 앞서 연구회 부설기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ISP 수립 이후 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가) 사업 개요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하 “연구회”)의 고유 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경상경비, 주요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대한 2026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31억 7,500만원(49.8%) 증가한 3,70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로 구성되는 ‘기관운영비’는 전년 대비 176억 5,400만원 증가한 32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1,055억 2,100만원 증액되어 3,377억 1,800만원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7		2026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비목별 분류	195,226	194,792 (192,995)	247,439	227,489 (204,455)	370,614
○기관운영비	14,681	14,247 (14,168)	15,242	9,401 (8,900)	32,896
-연구개발인건비(360-01)	11,066	10,632 (10,553)	11,568	6,748 (6,517)	28,605
-연구개발경상비(360-02)	3,615	3,615 (3,615)	3,674	2,653 (2,473)	4,291
○주요사업비	180,545	180,545 (178,827)	232,197	218,088 (202,980)	337,718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80,545	180,545 (178,827)	232,197	218,088 (202,980)	337,71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연구회의 주요사업은 다음 표와 같이

①출연(연) 지원·육성사업 (203억 9,800만원),

②연구성과확산·관리지원사업 (24억 9,400만원),

③융합연구사업 (2,599억 4,600만원),

④출연(연) 인재생태계 조성사업 (148억 8,000만원),

⑤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 설립사업 (400억원, 신규)

으로 구성됨.

<'26년 연구회 예산 정부(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5년 예산(A)	정부(안) (B)	증감		세부내역 요약
			B-A	%	
□ 주요사업비	**232,197**	**337,718**	**105,521**	**45.4**	
1. 출연(연) 지원·육성사업	**15,755**	**20,398**	**4,643**	**29.5**	
• 출연(연) 연구행정생태계 지원사업	12,971	17,882	4,911	37.9	• 정책기획 **423**(△400) • 경영효율화 지원사업 **3,479**(△2,200) - 연구행정혁신 효율화 1,399(△400) - 통합홍보, 사업관리, 지역조직(전년동) - *인력운영 1,000(△800) 4번 과제로 이동* • 글로벌연구협력 네트워크 **3,600**(△570), • 연구행정 디지털전환 **2,773**(△300) • NST 혁신생태계 구축 **8,381**(신규) - CoreLink 4,200, NDCC 3,600, 행정통합 581
• 평가사업	960	760	△200	△20.8	• 지출구조조정(△200)
• 출연(연) 자체감사지원사업	1,824	1,756	△68	△3.7	• 지출구조조정(△68)
2. 연구성과확산·관리지원사업	**4,078**	**2,494**	**△1,584**	**△38.8**	
• 성과확산관리지원사업	3,084	1,500	△1,584	△51.4	• 지출구조조정(△1,584)
• 중소·중견기업지원사업	994	994	-	-	
3. 융합연구사업	**203,304**	**259,946**	**56,642**	**27.9**	
•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152,050	210,400	58,350	38.4	• 계속과제 증액분(58,350)
• 창의형융합연구사업	20,220	20,458	238	1.2	• 계속과제 증액분(238)
• 사회현안대응기술지원(가칭)	-	-	-	-	미반영
• 융합연구단사업	27,942	27,196	△746	△2.7	• 종료사업(△3,034), 계속과제 증액(2,288)
• 선행융합연구사업 등	3,092	1,892	△1,200	△38.8	• 선행(△200), 융클(△300), 관리비(△200), 권리·사업화(△500)
4. 출연(연) 인재생태계 조성사업	**9,060**	**14,880**	**5,820**	**64.2**	전년동
• 출연(연) 미래인재 양성사업	9,060	8,760	△300	△3.3	• 지출구조조정(△300)
• 출연(연) 인재혁신 지원사업	-	6,120	6,120	순증	• 전략연구사업 성과보상 제도 5,120 • *인력운영 효율화(1,000) 1번에서 이동*
5. 버티컬 AI연구센터(NAIS)	**-**	**40,000**	**40,000**	**순증**	• 국가AI연구센터 순증(40,000)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10.

나) 검토의견

□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 추진의 현실적 가능성과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 연구회 주요사업① 출연(연) 지원·육성사업 중 NST 혁신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Bio CoreLink)’이 4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음.

○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은 출연(연) 핵심인재로 정착할 미래 Bio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여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 의대·한의대 본과과정의 재학생을 매년 40~50명 선발하여

2) 본과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연(연) 인턴십을 제공하며

3) 전문면허 취득 후에는 출연(연)에 2년 이상 의무복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국가맞춤인재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1단계 (재학 中)	⇨	2단계 (졸업 後)
Bio 인재(50명) 의대·한의대 본과 3학년 재학생	• 장학금(기본 2년) • 출연(연) 인턴십 – 인턴 급여 – 연구장려금(연구인건비성) • 공동멘토링 • R&D 역량교육		• 출연연 의무복무(기본 2년) • 연구정착금(Seed) * 연구전공의 희망 시 • 단기 해외연수 • R&D 역량교육 • 연구수당 지급 * 과제 참여 시 • 정규직 전환 기회 * 병역특례 추가 적용 검토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10.

- 구체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한 의대・한의대 학생은 본과 과정 재학 중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며, 출연(연)에 인턴십 참여로 급여 및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본과 졸업 이후에는 각자 매칭된 출연(연)에서 기본 2년간 실질적 임상에 참여하는 의무복무를 마쳐야 하며, 의무복무 미이행 시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바이오 분야의 경우 임상연구와 실험과정에서 의료면허 소지자 참여가 필수적이나 출연(연) 내에는 소수 인원에 불과하고,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사과학자로 성장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의 사업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 첫째, ①의료면허 취득 후 예상되는 기대소득 대비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 ②의대・한의대 본과 재학 중 출연(연)으로 통근하며 임상실습 및 멘토링 병행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③졸업 후 전공의로 재직할 경우 2년 동안 출연(연)으로 출근하면서 실질적 임상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여 의무복무를 온전히 마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대·한의대 학생 중 동 사업에 참여하고 졸업 이후 출연(연)에 정착할 인원 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임.

○ 둘째,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019년부터 이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을 수행하며 임상 지식을 갖춘 의사를 대상으로 의과학 연구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 목적 및 지원 대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해당 사업에서는 의과대학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 전주기 중 최대 11년 이내에서 등록금과 연구비를 지원[68]하는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셋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의 사업 범위[69]에는 연구개발 관련 인재 양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임.

---

68) 2025년 기준 전공의 75명에게 각 3,000만원, 전일제 박사학위과정생 95명에게 각 7,500만원을 지원하였음(국비보조율 66.6%)

6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이하 "협동·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에 관하여는 연구회가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할 사업 범위[70]에 해당한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참여할 의대·한의대 본과과정 학생의 수요와 참여 유인 수준을 고려할 때의 현실적인 사업 추진 가능성과 기존의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70)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NAIS) 설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필요

○ 동 사업은 개별 기술·산업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인공지능(Vertical AI)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센터(이하 “버티컬 AI센터”)를 연구회 부설 독립연구센터로 신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은 GPU임차료[71] 185억원, 연구비 100억원, 인건비 97억원, 사무실 임차료 및 사무환경 조성비 18억원으로 구분됨.

○ 현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버티컬AI센터 설립 기획위원회’에서 버티컬AI센터 중장기 운영계획과 세부 역할 등 타당성 검토 중이며, 2025년 12월 중 상세기획보고서 발간 예정임.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버티컬AI센터를 연구회 자체 부설기관으로 두고자 하나, 관계 법령 및 연구회 정관상 부설기관 설치에 대한 근거가 부재함.

- 소관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71) 과기부는 2026년에 필요한 GPU 60장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임차할 계획임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72] 및 기관별 정관에 따라 지역조직이나 부설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나,

연구회는 정관 제3조에 주된 사무소 위치만 규정할 뿐 부설기관이나 본원 외 조직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참고로, 2025년 11월 현재 기관별 정관에 의거하여 부설기관을 두고 있는 연구기관은 아래 4개임.

연구기관	부설기관	근거 규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관」**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제6조에 따른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32조의2(부설기관)** ① 녹색기술 연구개발 정책수립과 녹색기술 관련 국가간 연계·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녹색기술센터를 둔다. 영문으로는 Green Technology Center (약칭 GTC)로 표기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관」**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며, 제6조에 따른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32조의2(부설기관)** ① 국가보안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둔다. 영문으로는 National Security Research Institute (약칭 NSR)로 표기한다

7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 승인 등) ① 연구기관은 지역조직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에 미리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조직의 시급한 설립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조직의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적·재정적 타당성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연구회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식품 연구원	세계김치 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정관」**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전라북도에 두며, 제6조에 따른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32조의2(부설기관)** ① 김치종주국의 위상 제고와 글로벌 김치문화 창진(倉進)을 위해 김치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김치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세계김치연구소를 둔다. 영문으로는 World Institute of Kimchi (약칭 WiKim)로 표기한다
한국화학 연구원	한국독성 과학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정관」** **제3조(소재지)**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대전광역시에 두며, 제6조에 따른 관할 연구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부설기관, 본원 외 조직 등을 둘 수 있다. **제32조의2(부설기관)** ① 화학·바이오 등 각종 물질에 대한 안전성평가연구, 관련 기술개발, 산학연지원 등을 통한 국가산업발전 및 국민보건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둔다.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약칭 KIT)로 표기한다.

○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버티컬AI센터 설립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전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73] 결과나 예타 면제 사유

---

7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이 400억원 규모의 단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예타 기준 규모에 미달하며, 내내역사업으로서 예타 대상사업 단위인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7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며, 최근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당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동 사업이 내내역사업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기정통부 입장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 등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 내역사업을 예타 대상사업 단위로 보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75] 동 사업은 예타 대상에 해당함.

○ 즉, 버티컬AI센터 설립 시범사업 예산만으로도 400억원이 소요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7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6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7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6조(대상사업의 단위)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된다는 점에서 본사업 포함 시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예산 편성에 앞서 예타를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타에 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가 면제된 것도 아님.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티컬 AI 연구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연구회 부설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수립 이후 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

○ 출연(연)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은 연구회 내 행정통합 및 행정 전문화를 위하여 연구회 및 출연(연) 보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통합전산센터를 대전에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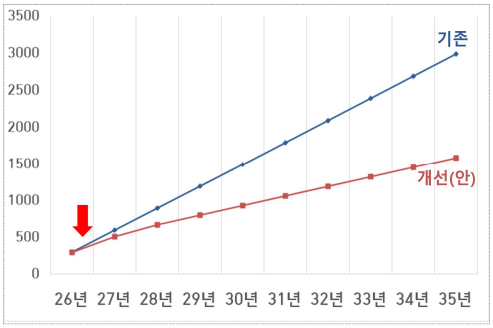
- 동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은 5억 8,100만원 규모로, 전산센터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과 ISP 수립에 집행할 계획임.

○ 종전에는 출연(연)이 개별 전산센터를 운영하여 전산센터 부지, 관리인력, 보안장비 등을 각 기관이 직접 확보해왔으나,
연구회 차원의 통합전산센터를 구축할 경우 ①우수 전문인력 및 장비 공동 활용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어 비용이 절감되고, ②기관별 전산센터 부지를 추가적인 연구공간으로 전환되며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 연구회는 통합전산센터 운영으로 기관 간 칸막이가 해소되고, 향후 10년간 유지관리비, 보안장비비, 인건비 등 약 1,403억원이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다만, 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행정 통합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존 행정직 직원의 고용 불안정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관별 행정인력 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의견 수렴 기회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10년 유지시
- 당초 2,990억(유지비 1,600억 + 보안장비+1,200억 + 인건비 190억)
- 개선 1,587억(유지비 1,010억 + 보안장비 460억 +인건비 117억)

○ 구축비 390억원 포함 시
10년간 운영효과 1,013억원 비용 절감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25. 10.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통신사·카드사 해킹 사건 등으로 데이터 이중화 및 보안 강화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출연(연)별로 분산된 전산정보를 연구회가 통합 관리하고 우수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여 보안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회 소관 23개 출연(연) 중 전산정보를 이중화하여 관리하는 연구기관은 KIST, 생명연, 과기정보연, ETRI 등 10개에 불과한 상황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이 데이터 소실과 시스템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센터 및 데이터 이중화를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대한 2026년도 예산에는 ISP 등 계획 수립을 위한 항목만 반영되어 있으며, 부지 확보 및 설계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지 못한 상황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ISP 수립 이후 단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6)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R&D)(4602-307): 혁신창업대학 내역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창업대학’ 내역사업을 교육부, 중기부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성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사업’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가) 사업 개요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은 대학, 출연(연) 등의 사업화 유망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고도화 및 기술사업화・창업으로 연계 강화하여 정부 R&D 투자의 생산성 및 공공연구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2026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98억 5,700만원(74.9%) 증액된 93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차세대 유망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공동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의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7		2026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R&D)	22,017	22,017 (22,017)	53,195	53,195 (53,195)	93,052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5,500	5,500 (5,500)	11,725	11,725 (11,725)	34,440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5,325**	**5,325 (5,325)**	**10,650**	**10,650 (10,650)**	**14,800**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2,000	2,000 (2,000)	8,850	8,850 (8,850)	15,850
○차세대 유망 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	7,475	7,475 (7,475)	12,253	12,253 (12,253)	14,907
○대학연구소-스타트업 공동 혁신 R&D	-	-	7,500	7,500 (7,500)	10,375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1,217	1,217 (1,217)	1,217	1,217 (1,217)	430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	-	-	-	-	**2,2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필요

○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은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대학 실험실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혁신형 창업을 단절 없이 지원하여 대학 실험실을 창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소관 예산으로는 148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정하고, 대학 내 선정된 혁신창업실험실에 대하여 창업 인프라(교육부)와 창업 준비(과기정통부)를 연계 지원하며, 창업에 성공한 초기 실험실 창업기업은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 중임.

- 동 내역사업을 통해 2023년에 지정된 13개 대학에서 혁신창업실험실 235개가 선정되었고, 이 중 199개 실험실에서 창업이 완료(창업률 84.7%)되었음.

< 창업선도대학 관계부처 협업체계 >

부처	교육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시행기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창업진흥원
사업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과학기술 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	⇨	실험실특화형 창업중심대학
역할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실험실 창업 준비 지원		실험실 창업기업 성장 지원
지원 내용	창업 교과목·동아리, 학생 수당 등 지급		BM고도화, R&BD, 전문인력		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
			창업 유도		창업기업 성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다만, 교육부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과 중기부의 ‘실험실특화형 창업중심대학’사업은 비R&D사업이자 계속사업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동 내역사업은 R&D사업으로 분류되어 5년 이내 일몰 기한을 적용받아 종료 후 신규 편성이 반복되고 있음.

- 기존 사업 종료로 사업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신규 사업 편성 과정에서 사업명 변경과 사업기획서, 결과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는 1단계 사업인 ‘과학기술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2018~2022년)이 종료 후 2단계 사업으로 ‘과학기술기반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2023~2026년)을 수행 중이며, 내년 사업 종료를 대비하여 혁신창업대학 명칭을 바꾼 신규사업 기획이 재차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음.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우수 혁신창업실험실 발굴부터 창업 및 후속성장까지의 이어지는 대학실험실 창업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내역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창업대학 육성사업을 합동으로 수행하는 타 부처와 같이 계속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 우수연구성과 확산 촉진 지원사업은 기술사업화가 가능한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의 후속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으로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은 최근 3년 동안 선정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이하 “우수성과 100선”)을 대상으로 제한 공모를 실시하여 매년 6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3년간 13억 7,5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우수성과 100선은 과기정통부가 매년 9개월에 거쳐 全부처의 全영역 R&D과제 중 기술이전 실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대표 연구성과임.[76]

- 우수성과 100선에 대하여 그동안 실질적인 연구자 보상이나 후속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수월성과

76) 2023년 기준 全 R&D 과제 71,804개를 대상으로 4월에 후보를 추천받아 12월에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상위 0.1%에 해당하는 100개의 우수 성과를 선정하였음.

유망성이 확보된 우수연구성과가 사장되거나 활용도가 저하되기 전에 조기 후속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이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긴 하나, 정부R&D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 부처 전 영역 R&D 과제 중 수월성을 공인받은 대표성과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2026년도 예산안 기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 현황 >

연번	사업명	예산액 (백만원)	
		2025년	2026년(안)
1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53,195	93,052
2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	1,710	1,260
3	학연협력플랫폼구축시범사업	10,000	10,000
4	K-HERO 육성·지원	2,882	8,922
5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지원	-	820
6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	12,750
7	직할 출연(연) 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 성과관리	1,839	1,550
8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20,220	56,925
9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3,500	4,890
10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3,125	1,275
11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7,782	9,225

○ 다만, 최근 3년간('22~'24년) 선정된 우수성과 100선(총 300개) 중 51개는 이미 사업화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로,[77] 기술

77) 2022년 16개, 2023년 14개, 2024년 21개로 3년치 우수성과 300개 중 51개(17%) 과제에서 기술사업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임.

사업화에 유리한 성과 상당수가 이미 후속R&D 및 사업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수성과 100선은 반드시 기술사업화 가능성만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중 사업화에 근접한 성과들이 이미 사업화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동 내역사업 지원 대상을 우수성과 100선으로 한정하는 대신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타 연구성과를 포함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과기정통부는 수월성과 공신력이 담보되고 대표성이 있는 우수성과 100선에서 출발하여 신속한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추진하되, 다양한 성과(한국과학상・공학상, IR52 장영실상 등)를 포괄하는 개방적 구조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겠다는 계획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성과 100선 외에도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 내역사업의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37)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R&D)(4602-437): 기존 사업인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추진할 때 유사한 기존 사업인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가) 사업 개요

○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치안분야 R&D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에 대한 2026년 예산으로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집행액	
□ 기능별·비목별 분류	-	-	-	-	820
○ 치안기술국내사업화 지원	-	-	-	-	788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788
○ 기획평가관리비	-	-	-	-	32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	-	-	3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에 대하여 6년간('26～'31년) 총 273.1억원의 예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6.6억원, 경찰청 13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치안 분야 전문기관인 과학치안진흥센터[78]에 전액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나) 검토의견

□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치안기술 국내사업화 지원사업'은 경찰청의 기존 R&D성과 및 출연(연)·대학의 우수한 치안기술을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인증적합 기술개발, 성능개선 및 제품화 등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다만,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년부터 수행 중인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과 사업 취지 및 지원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은 치안분야 우수 R&D 성과물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①기술수준(TRL) 5~6단계 기술을 8단계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단기 기술사업화를

78) 「경찰청 고시 제2023-03호」에 의하여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지원하고, ②유망 기초·원천 연구성과를 발굴해 사업화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R&D)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 시범사업(R&D)	1,530	1,530	1,710	1,710	1,260
○단기 치안R&D 기술실용화	450	450	630	630	720
○기초·원천연구성과 치안분야 기술실용화	1,080	1,080	1,080	1,080	54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기존 시범사업*에서 지원하던 공공(치안)분야 유망 성과 발굴 및 기술성숙도 제고뿐만 아니라 치안 R&D 성과가 실제 치안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성능개선·규격화·인증획득 등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고도화하고 계승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임.

- 동 사업은 2027년에 종료되어 추가 신규과제가 없는 시범사업 대비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체화·고도화하고 있음.

○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치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치안 분야 R&D 성과의 기술수준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경찰청과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간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과 시범사업 간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을 철저히 하고, 과제 공모 및 선정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서 지원 중인 과제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2137-301): 법률에 따른 신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준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은 3D 프린팅의 활용 및 확산 지원,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9억 800만원이 감액된 4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3D프린팅산업 육성기반 구축	16,323	16,323	8,459	8,459	4,551	△3,908	△46.2
○ 3D프린팅 활용·확산 지원	7,171	7,171	6,700	6,700	3,400	△3,300	△49.3
○ 3D프린팅 전문교육 및 인식확산	808	808	808	808	598	△210	△26.0
○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	8,344	8,344	951	951	553	△398	△41.9
□ 세출예산비목	16,323	16,323	8,459	8,459	4,551	△3,908	△46.2
○ 사업출연금(350-02)	16,323	16,323	8,459	8,459	4,551	△3,908	△46.2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법률에 따른 신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제조건이 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준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5조[79]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는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기본계획에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기반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원 확보 및 배분 등 동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핵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음.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도별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제1차 기본계획은 계획기간(2017~2019년) 시작 전인 2016년 12월에 수립되었으나, 제2차 기본계획은 계획기간(2020~2022년) 중인 2020년 6월에 수립되었고, 제3차 기본계획은 계획기간(2023~2025년) 첫해 말인 2023년 9월에야 수립되는 등 지연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6.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
7.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10.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연도별 수립 현황>

구분		제1차	제2차	제3차
수립일시	기본계획	2016. 12.	2020. 6.	2023. 9.
	시행계획	2017. 3. 2018. 2. 2019. 2	2020. 10. 2021. 3. 2022. 6.	2023. 10. 2024. 4. 2025. 6.
계획기간		2017~2019	2020~2022	2023~202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2026년도에는 제4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해당 계획에는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시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예산 편성에 앞서 이러한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적절하나, 2025년 10월 기준으로 2026년도에 적용될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준비에 미흡한 점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4231-301),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4231-302),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R&D)(4231-426):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정성 검토,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나,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임. ○ 3개 사업의 사업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NIPA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질적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철저한 사업준비와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은 피지컬 AI 특화 고신뢰성 융합데이터 및 LAM(PINN[80] 기반 물리지능 행동모델) 원천기술 확보로 우리나라의 피지컬AI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고 AX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80)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되는 물리법칙을 손실 함수에 통합하여 기초 물리성을 거스르지 않는 해를 얻는 방향으로 학습 과정을 이끄는 신경망을 말함.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은 국내의 강점 산업에 특화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AI모델, 시뮬레이션, 제어, 표준화 등) 개발로 글로벌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AI메타팩토리[81] 기반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R&D)’ 사업은 전(全)산업의 AI 전환에 따른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해 ‘AX R&D 허브’ 조성을 통한 글로벌 선도기술력을 확보하고 전략산업의 AX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79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81) 현대차 싱가포르 무인공장(HMGICs) 모델 기반 국산·경량화 SDF 기술 구현, 국내 제조기업의 피지컬AI 기술 검증·확산을 지원하는 파일럿 팩토리 등

<2026년도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	-	-	-	40,000	40,000	순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	-	-	-	40,000	40,000	순증
□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	-	-	-	7,920	7,920	순증
합 계	-	-	-	-	87,920	87,92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87,920	87,920	순증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87,920	87,92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은 AI 지역거점 사업으로 2026년도부터 추진되며 3개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사업 현황>

구 분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지역	경남	전북	대구
주요내용	- 고신뢰성 융합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실증 - 융합데이터 기반의 LAM 핵심기술 개발 - 글로벌 표준화 등 협력체계 구축	-피지컬AI 핵심기술 개발 -기술 실증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 -글로벌 연구 협업	-표준모델 AX R&D 지원 -공정솔루션 및 응요제품 AX R&D 지원 -글로벌 AX R&D 센터 구축
2026년 예산안	400억원	400억원	79억 2,000만원
사업기간	2026~2030년	2026~2030년	2026~2030년
총사업비	1조원 (국비 6,000억, 민자 4,000억)	1조원 (국비 6,000억, 지방비 1,500억, 민자 2,500억)	5,510억원 (국비 2,976억, 지방비 1,130억, 민간 1,404억)
사업추진 방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출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출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한국연구재단 출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3개의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82]에 따라 국가 정책적으로

82)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2025. 8. 1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적정성 검토가 2026년 2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임.

○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83]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84]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

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8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84)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

조[85]에 따르면 지방비가 있는 2개의 사업(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투자심사 대상이므로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8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투자심사 의뢰 → 심사 → 결과 통보”의 절차에 최소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87].

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86)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경우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15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의뢰받은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7) 심사기간을 연장(40일 범위)하지 않는다는 전제임.

○ 즉 3개의 사업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중 2개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절차 등을 차례대로 이행한 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적정성 검토,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나, 적정성 검토 등의 절차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임.

□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편성안에 따르면,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역거점 AX혁신 기술개발’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 한편, NIPA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에 AI·AX·지역진흥 관련 사업이 증가하면서 2025년도부터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NIPA 예산, 사업, 정원 현황>

(단위: 억원,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예산	9,286	8,574	7,898	24,099	29,558
사업	59개	59개	57개	64개	72개
정원	437	429	429	430	436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3개의 대형 지역R&D 사업은 총사업비가 2조 5,510억원, 2026년도 예산안은 879억 2,000만원 규모임.

○ 또한 3개 사업의 사업추진 체계를 살펴보면 NIPA 내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단을 설립하는 등 NIPA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임.

<2026년도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및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사업 추진 체계	과기정통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NIPA 내 사업단 설립	과기정통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NIPA 내 사업단 설립	정부부처[88]가 사업을 총괄하고 지자체(대구시) 산하 사업추진단 설립
NIPA 역할	-사업추진을 위한 과제 기획·평가·관리, 예산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 사업 선정·관리, 성과확산 등 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관리, 예산 운영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지원 -사업 선정·관리, 성과 확산 등 지원	-사업 기획·평가·관리 기준의 적용 및 이행여부 등 사업추진단 관리·감독 -과제 성과물의 관리·확산 및 정책 활용성 검토 -사업예산 운용 및 관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따라서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철저한 사업준비와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부처협력 사업으로,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임.

2)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1831-403): 지역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지역과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바우처 도입, 소득공제 대상에 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1831-403)”은 전국적으로 고른 과학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과학관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고, 전시콘텐츠 개발·지원하며, 과학관 평가·환류 및 조사·분석 및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조성 등을 통해 지역과학관 운영 활성화 및 과학기술문화 창달·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억 7,000만원(109.8%) 증액된 49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 중 내역사업 “과학관전문인력 지원”, “과학관 콘텐츠 제작 및 전시지원”, “과학관 육성정책 지원”은 한국과학관협회가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수행하는 사업이고, 내역사업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임.

-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은 내역사업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의 예산안의 15억원 증액 및 “과학관 육성정책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6억 7,000만원)임.

<2026년도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2,340	2,340	2,340	2,090	4,910	2,570	109.8
○ 과학관전문인력지원	1,440	1,440	1,440	1,440	1,440	-	0.0
○ 과학관콘텐츠제작 및 전시지원	400	400	400	400	800	400	100.0
○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	500	500	500	250	2,000	1,500	300.0
○ 과학관 육성정책 지원	-	-	-	-	670	순증	순증
□ 세출예산비목							
○ 민간경상보조(320-01)	1,840	1,840	1,840	1,840	2,910	1,070	58.2
○ 자체단체자본보조(330-03)	500	500	500	250	2,000	1,500	300.0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지역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동 사업은 전국적으로 고른 과학문화 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지역과학관 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역과학관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과학관 이용자들이 과학관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학문화 바우처” 제도와 유사하게, 국·공립 과학관의 관람료 또는 특별 전시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과학문화바우처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과학관 관람료나 특별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유

사하게 과학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재126조의2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제3호에서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상여분을 규정하여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예정이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정부 제안, 의안번호 2212653)」이 발의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임.

○ 따라서, 지역과학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바우처 도입, 소득공제 대상에 규정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임.

[참고] 등록과학관 현황

연번	지역	운영 주체	분야	기관명	개관일	비고
1	서울	공립	천문/우주	노원천문우주과학관	'09.03.12.	
2	서울	공립	종합	서울시립과학관	'17.05.19.	
3	서울	공립	교육/어린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04.07.01.	
4	서울	공립	천문/우주	강서별빛우주과학관	'23.11.03.	
5	서울	공립	이공학/전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24.08.20.	
6	서울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롯데월드아쿠아리움	'14.10.16.	
7	서울	사립	이공학/전문	에너지정보관	'07.03.27.	
8	서울	사립	교육/어린이	육영재단어린이회관	'77.06.10.	
9	서울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코엑스아쿠아리움	'00.05.03.	
10	서울	사립	이공학/전문	한생연생명과학박물관	'06.09.28.	
11	서울	사립	이공학/전문	한생연실험누리과학관	'10.12.06.	
12	서울	사립	이공학/전문	한생연융합교육과학관	'07.02.15.	
13	서울	사립	이공학/전문	한생연인간과로봇과학관	'12.05.25.	
14	서울	사립	이공학/전문	한생연휴먼탐구과학관	'18.08.17.	
15	서울	사립	이공학/전문	LG디스커버리랩 서울	'22.11.12.	
16	부산	국립	종합	국립부산과학관	'15.12.11.	
17	부산	국립	자연사(해양·어류)	국립수산과학관	'97.05.26.	
18	부산	공립	자연사(동·식물)	낙동강하구에코센터	'07.06.12.	
19	부산	공립	교육/어린이	부산과학체험관	'16.10.20.	
20	부산	공립	교육/어린이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87.12.03.	
21	부산	공립	교육/어린이	부산광역시교육청어린이창의교육관	'74.09.07.	
22	부산	공립	교육/어린이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09.09.01.	
23	부산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씨라이프부산아쿠아리움	'01.11.07.	
24	부산	사립	이공학/전문	LG디스커버리랩 부산	'21.10.05.	
25	대구	국립	종합	국립대구과학관	'13.12.24.	
26	대구	국립	이공학/전문	국립대구기상과학관	'14.11.26.	
27	대구	공립	교육/어린이	대구창의융합교육원	'83.07.18.	
28	대구	사립	자연사(동·식물)	네이처파크전문과학관	'13.10.19.	
29	대구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대구 아쿠아리움전문 과학관	'16.12.15.	
30	인천	공립	교육/어린이	인천학생과학관	'02.04.18.	
31	인천	공립	자연사(동·식물)	인천나비공원	'09.10.14.	
32	인천	공립	교육/어린이	인천어린이과학관	'11.05.01.	
33	인천	공립	천문/우주	강화천문과학관	'24.05.01.	

연번	지역	운영주체	분야	기관명	개관일	비고
34	인천	사립	자연사(동·식물)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96.09.07.	
35	인천	사립	이공학/전문	소리체험박물관	'10.04.10.	
36	광주	국립	종합	국립광주과학관	'13.10.15.	
37	광주	공립	교육/어린이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74.09.07.	
38	대전	국립	종합	국립중앙과학관	'90.10.09.	
39	대전	공립	교육/어린이	대전과학체험관	'89.11.01.	
40	대전	공립	천문/우주	대전시민천문대	'01.05.03.	
41	대전	사립	자연사(동·식물)	대전나비곤충박물관	'11.04.17.	
42	대전	사립	이공학/전문	대전 신세계 넥스페리움	'21.08.27.	
43	대전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대전 엑스포아쿠아리움	'21.09.10.	
44	울산	공립	교육/어린이	울산과학관	'11.03.30.	
45	울산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태화강생태관	'16.03.15.	
46	경기	국립	종합	국립과천과학관	'08.11.14.	
47	경기	공립	교육/어린이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75.09.09.	
48	경기	공립	천문/우주	안성맞춤천문과학관	'13.03.21.	
49	경기	공립	자연사(동·식물)	의왕조류생태과학관	'12.04.24.	
50	경기	공립	천문/우주	의정부과학도서관어린이과학체험실	'07.10.10.	
51	경기	공립	천문/우주	포천아트밸리천문과학관	'14.07.18.	
52	경기	사립	이공학/전문	광명에디슨뮤지엄	'19.12.14.	
53	경기	사립	자연사(동·식물)	민제생태환경과학관	'12.12.27.	휴/폐관
54	경기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아쿠아플라넷광교	'21.01.19.	
55	경기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아쿠아플라넷일산	'14.04.10.	
56	경기	사립	이공학/전문	어메이징파크과학관	'14.07.08.	
57	경기	사립	자연사(동·식물)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	'10.01.01.	
58	경기	사립	천문/우주	자연과별가평천문대	'04.04.23.	
59	경기	사립	천문/우주	재단법인송암스페이스센터	'07.07.20.	
60	경기	사립	이공학/전문	한생연마이크로박물관	'16.07.20.	
61	경기	사립	종합	한얼테마과학관	'05.05.19.	휴/폐관
62	강원	공립	천문/우주	국토정중앙천문대	'07.05.31.	
63	강원	공립	자연사(동·식물)	인제곤충바이오센터	'22.07.15.	
64	강원	공립	자연사(동·식물)	홍천생명건강과학관	'08.09.25.	
65	강원	공립	천문/우주	화천조경철천문대	'14.10.10.	
66	강원	사립	이공학/전문	로하스파크와카푸카	'09.10.12.	휴/폐관
67	강원	사립	천문/우주	천문인마을	'99.05.01.	
68	강원	사립	자연사(동·식물)	한생연자연속과학체험관	'15.11.06.	

연번	지역	운영주체	분야	기관명	개관일	비고
69	충북	국립	이공학/전문	국립충주기상과학관	'20.07.01.	
70	충북	공립	이공학/전문	제천한방생명과학관	'10.08.02.	
71	충북	공립	천문/우주	증평좌구산천문대	'13.09.05.	
72	충북	공립	자연사(동·식물)	충북산림과학박물관	'06.09.22.	
73	충북	공립	천문/우주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08.04.18.	
74	충북	공립	교육/어린이	충주어린이과학관	'22.05.05.	
75	충북	공립	자연사(동·식물)	충주자연생태체험관	'09.04.29.	
76	충북	공립	이공학/전문	충북농업과학관	'01.05.10.	
77	충북	사립	자연사(동·식물)	별새꽃돌과학관	'07.01.05.	
78	충남	국립	이공학/전문	국립충남기상과학관	'23.09.21.	
79	충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보령서해갯벌과학관	'13.11.29.	
80	충남	공립	천문/우주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10.09.01.	
81	충남	공립	이공학/전문	장영실과학관	'11.07.22.	
82	충남	공립	천문/우주	천안홍대용과학관	'14.05.29.	
83	충남	공립	교육/어린이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63.12.04.	
84	충남	공립	천문/우주	칠갑산천문대스타파크	'09.07.28.	
85	충남	공립	천문/우주	태안군별똥별 하늘공원	'17.07.13.	
86	충남	공립	자연사(동·식물)	홍성조류탐사과학관	'09.04.15.	휴/폐관
87	충남	사립	자연사(동·식물)	천리포수목원	'70.07.14.	
88	전북	국립	이공학/전문	국립전북기상과학관	'16.06.30.	
89	전북	국립	이공학/전문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	'02.11.15.	
90	전북	공립	교육/어린이	남원어린이과학체험관	'23.03.14.	
91	전북	공립	천문/우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09.10.09.	
92	전북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13.03.22.	
93	전북	공립	천문/우주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08.05.05.	
94	전북	공립	자연사(동·식물)	부안곤충탐사과학관	'10.05.28.	
95	전북	공립	자연사(동·식물)	순창건강장수체험관	'16.04.26.	
96	전북	공립	이공학/전문	순창옹기종기놀이과학관	'22.06.04.	
97	전북	공립	교육/어린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과학교육원	'75.05.02.	
98	전남	국립	이공학/전문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25.01.02.	
99	전남	공립	천문/우주	고흥우주천문과학관	'11.02.28.	
100	전남	공립	천문/우주	곡성섬진강천문대	'07.09.19.	
101	전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13.02.05.	
102	전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무안생태갯벌센터	'11.05.17.	
103	전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섬진강어류생태관	'08.03.11.	

연번	지역	운영주체	분야	기관명	개관일	비고
104	전남	공립	천문/우주	순천만천문대	'08.12.08.	
105	전남	공립	이공학/전문	장흥 정남진 물과학관	'13.03.19.	
106	전남	공립	천문/우주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	'06.07.07.	
107	전남	공립	교육/어린이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90.09.01.	
108	전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관	'98.05.16.	
109	전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한국토종민물고기과학관	'08.04.23.	휴/폐관
110	전남	공립	자연사(동·식물)	함평자연생태과학관	'03.04.22.	
111	전남	사립	천문/우주	국제환경천문대과학관	'86.08.06.	
112	전남	사립	천문/우주	나로우주센터우주과학관	'09.06.11.	
113	전남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아쿠아플라넷 여수	'12.05.12.	
114	경북	국립	자연사(해양·어류)	국립해양과학관	'20.07.31.	
115	경북	공립	교육/어린이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71.04.21.	
116	경북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경상북도민물고기생태체험관	'06.11.08.	
117	경북	공립	이공학/전문	구미과학관	'11.04.01.	
118	경북	공립	이공학/전문	김천녹색미래과학관	'14.09.19.	
119	경북	공립	천문/우주	영양반딧불이천문대	'05.09.03.	
120	경북	공립	천문/우주	영천시보현산천문과학관	'09.05.03.	
121	경북	공립	이공학/전문	영천시최무선과학관	'12.04.20.	
122	경북	공립	자연사(동·식물)	울진곤충여행관	'09.07.10.	
123	경북	공립	이공학/전문	울진과학체험관	'10.09.09.	
124	경북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울진해양생태관(울진아쿠아리움)	'09.07.13.	
125	경북	공립	자연사(동·식물)	칠곡꿀벌테마과학관	'18.03.28.	
126	경북	공립	이공학/전문	콩세계과학관	'15.04.30.	
127	경북	공립	이공학/전문	경상북도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22.03.15	
128	경북	공립	이공학/전문	고령어린이과학체험관	'24.04.26.	
129	경북	공립	교육/어린이	성주과일어린이과학체험관	'24.06.28.	
130	경북	사립	이공학/전문	로보라이프뮤지엄	'08.01.18.	
131	경북	사립	역사/민속	신라역사과학관	'95.02.01.	
132	경북	사립	천문/우주	예천천문우주센터	'02.03.08.	
133	경남	국립	이공학/전문	국립밀양기상과학관	'20.05.21.	
134	경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거제조선해양문화관	'09.07.10.	
135	경남	공립	천문/우주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14.03.22.	
136	경남	공립	교육/어린이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07.11.01.	
137	경남	공립	자연사(동·식물)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	'12.03.30.	구.고성공룡테마과학관

연번	지역	운영 주체	분야	기관명	개관일	비고
138	경남	공립	천문/우주	김해천문대	‘12.02.01.	
139	경남	공립	천문/우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20.05.21.	
140	경남	공립	천문/우주	사천항공우주과학관	‘13.08.20.	
141	경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수협효시공원	‘18.12.26.	
142	경남	공립	이공학/전문	양산3D과학체험관	‘13.08.01.	
143	경남	공립	이공학/전문	옥포대첩기념공원	‘05.06.18.	
144	경남	공립	자연사(동·식물)	의령곤충생태학습관	‘16.03.25.	
145	경남	공립	자연사(동·식물)	지리산생태과학관	‘15.05.05.	
146	경남	공립	이공학/전문	창원과학체험관	‘10.01.05.	
147	경남	공립	자연사(동·식물)	천적생태과학관	‘11.10.25.	
148	경남	공립	자연사(해양·어류)	통영수산과학관	‘02.01.10.	
149	경남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아라마루아쿠아리움	‘23.07.09.	
150	경남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거제씨월드	‘11.08.25.	
151	제주	공립	천문/우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06.06.15.	
152	제주	공립	교육/어린이	제주융합과학연구원	‘99.03.01.	
153	제주	공립	천문/우주	제주별빛누리공원	‘09.03.02.	
154	제주	사립	이공학/전문	로봇스퀘어	‘16.07.30.	휴/폐관
155	제주	사립	이공학/전문	로봇플래닛	‘21.11.27.	휴/폐관
156	제주	사립	자연사(해양·어류)	제주해양과학관(아쿠아플라넷 제주)	‘12.07.14.	
157	제주	사립	이공학/전문	이너리스제주	‘25.07.20.	

주: 2025년 8월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 (1235-301): 연례적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은 건축공사의 연속 유찰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이월 발생과 건축-장비 공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은 산업적 R&D 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여 산업지원 역량 강화 및 사회적 현안·국가안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기술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1억원(70.4%) 증가한 1,188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	53,000	38,417	69,700	57,154	118,800	49,100	70.4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	53,000	38,417	69,700	57,154	118,800	49,100	70.4
□ 세출예산비목	53,000	38,417	69,700	57,154	118,800	49,100	70.4
○ 연구개발건축비 (360-03)	14,583	-	34,000	27,880	30,300	△3,700	△10.9
○ 연구개발장비시스템구축비(360-04)	30,000	30,000	22,700	18,614	75,500	52,800	233
○ 연구개발활동비 등 (360-05)	8,417	8,417	13,000	10,660	13,000	-	-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연례적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동 사업은 충북 청주 오창에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1기와 초기 빔라인 10기 장비, 관련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대형 국가연구시설 조성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643억원(국비 9,643억원, 지방비 2,000억원)이 투입되는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임.

○ 동 사업은 2021년 착수 이후 주관기관·사업단 구성 등 추진체계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어 초기 지연이 발생하였고, 설계단계의 발주계획 조정 및 총사업비 변경 절차가 이어지면서 지연이 누적되어 연차별 집행률이 저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당초 6.5년(2021.7.~2027.12.)으로 계획되었던 사업기간은 2024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8.5년(2021.7.~2029.12.)으로 연장되고 총사업비도 대폭 증가되었음[89]. 또한, 사업지연이 반복되면서 이월 또는 불용이 연례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89) 2021년 당초 총사업비는 1조 787억원이었으나 2024년 1조 1,643억원으로 7.9% 증가하였음.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 실집행 내역(2021～)>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이월액)	실집행액 (집행율)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이월사유
2021	11,500 (-)	52 (0.5%)	11,448	-	○ 예타 완료('21.4월) 후 주관기관 선정, 사업단장 공모, 사업단 구성 등 추진체계 구축에 따라 사업계획 일부 지연으로 이월금 발생
2022	41,000 (11,448)	9,985 (19.0%)	42,463	-	○ 설계과정에서 장치 사양변경, 기본부지 확장 등 발주계획 수정으로 이월금 발생
2023	60,000 (42,463)	18,257 (17.8%)	84,206	-	○ 중간설계 결과 사업비가 당초계획 대비 증가 ○ 중간설계 정밀검증으로 인해 설계 완료 시점이 순연됨에 따라 이월금 발생
2024	53,000 (84,206)	66,555 (48.5%)	56,068	14,583	○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24.10월) 이후 장치구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이월금 발생(건축비는 전액 불용)
2025 (10.15. 기준)	69,700 (56,068)	11,188 (8.9%)	-	-	-

○ 특히 2024년부터 기반시설 건축을 위한 연구개발건축비(360-03)가 편성되었으나, 총사업비 협의 등 추가 절차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어 예산액 145억 8,3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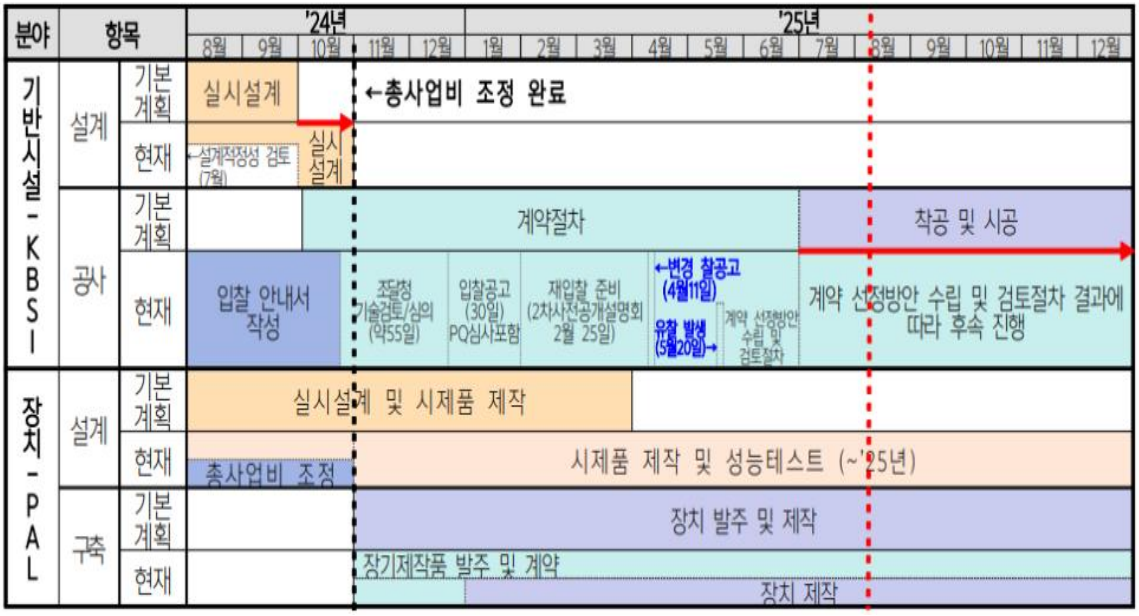
2025년에도 입찰이 연속 유찰[90]되어 2025.10.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5년 착공 계획과 달리 편성액 340억원의 연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90)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고 및 재공고 내역

구 분	일 자	내 역
1	2024.12.11.	공사계약요청 접수(조달청)
2	2024.12.31	입찰 공고
3	2025.04.11.	입찰 공고 / * 유찰에 따른 새로운 공고
4	2025.05.01.	입찰 공고 / * 유찰에 따른 재공고

○ 한편, 장비 구축은 2024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발주가 진행되었으나 앞서 기술했듯이 기반시설(건축공사) 미착공으로 설치·시운전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기 제작된 장비를 별도 공간에 분산 보관해야 하며, 공간 확보·임차 및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 우려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R&D) 사업추진계획(2025.7.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재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2026년 초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현재 조달청과 사전협의 중이며,

향후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기 단축, 공정률 상향, 관급자재 신속 구매 등을 통해 2025년 미집행으로 이월 예정인 건축비 340억원

과 2026년 신규 편성 건축비 303억원의 2026년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임.

○ 아울러, 현재 기제작 장비 보관을 위해 포항가속기연구소(PAL)의 시설을 활용[91]하고 있으며, 향후 납품될 장치의 발주·계약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납품 시점 조정으로 보관 문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임.

○ 이처럼 동 사업은 사업관리 미비로 인한 대규모 이월 반복과 건축-장비 공정 불일치로 국가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히 기반시설 건축공사의 조달·공정 일정을 엄정 관리하여 계획된 기한 내 준공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91) < (참고)기 제작 장치 주요 부품 현황: 포항방사광가속기 건물 내 보관중 >

장 치 명	세부 부품
빔전송선	빔전송선 헬륨 누출 감지기
	빔전송선 게이트 밸브
진공장치	선형가속기 잔류기체분석기
	선형가속기 비증발성게터 펌프
	선형가속기 앵글 밸브
	선형가속기 게이트 밸브
	부스터 앵글 밸브
	부스터 게이트 밸브
	저장링 비증발성게터 펌프
	저장링 헬륨 누출 감지기
	저장링 잔류기체분석기
	저장링 게이트 밸브
	저장링 앵글 밸브
저장링 고주파 시스템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
빔라인 광자빔 전송선	게이트 밸브

4)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4601-302): 4극 3특 지역별 지원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극 3특 지역별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간 R&D 목표와 이견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구축하고 사업 추진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재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것

가) 사업 개요

○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은 지역의 초격차 기술 발굴 및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4극3특 지역별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지역 자율 중심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종전 내역사업이던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지역의 미래를 여는 프로젝트’,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게 되었고, 2026년 예산으로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사업과 신규 편성된 4극 3특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지원사업을 통틀어 총 89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4극(중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지역에는 각 131억 600만원,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는 각 88억 3,600만원과 88억 3,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2025.7		2026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77	77 (71)	4,100 (53)	4,100 (53)	89,016
○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	-	4,000	4,000 (-)	8,000
○ 중부권 과학기술혁신 지원	-	-	-	-	**13,106**
○ 호남권 과학기술혁신 지원	-	-	-	-	**13,106**
○ 대경권 과학기술혁신 지원	-	-	-	-	**13,106**
○ 동남권 과학기술혁신 지원	-	-	-	-	**13,106**
○ 강원특자도 과학기술혁신 지원	-	-	-	-	**8,836**
○ 전북특자도 과학기술혁신 지원	-	-	-	-	**8,834**
○ 제주특자도 과학기술혁신 지원	-	-	-	-	**8,834**
○ 기획평가관리비	77	77 (71)	100 (53)	100 (53)	2,088
□ 세출예산비목	77	77	4,100	4,100 (53)	89,106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4,000 (-)	4,000 (-)	86,928
○ 기획평가관리비(360-06)	77	77 (71)	100 (53)	100 (53)	2,08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 예산 전액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에 출연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92)]

92) 특구재단은 다음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등을 전문

나) 검토의견

□ 4극 3특 지역별 지원사업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필요

○ 4극 3특 지역별 지원사업은 묶음형 예산(블록펀딩) 형식으로, 특구재단이 각 지자체에 출연하면 지자체는 중앙에서 제시한 주제 중 자율적으로 선택·조정한 주제의 R&D과제를 기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됨.

-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1월 중 지자체의 지역 자율형 R&D사업 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임.

○ 다만, 동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됨.

○ 첫째, 지역이기주의 및 지자체 간 경쟁으로 인해 특정 분야(AI, 바이오 등)에 지자체 수요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과방위에 계류중인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93]에 따르면,

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93) 의안번호 제2200095호, 박충권의원 대표발의(2024.6.3.)

①시・도지사가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중점기술'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 및 이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이 다른 시・도와 중복・충돌되는 경우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고 있음.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5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한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 9.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도의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동 사업에 대하여도 지자체별 R&D 수요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견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에 대하여 과기정통부는 독립적인 권역별 기획단 및 중앙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94] 위상을 강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 둘째, 동 사업은 전면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총사업비 500억원,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R&D사업이 되었으므로 타당성재조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2026년부터 신설되는 신규 내역사업의 예산액 합계가 789억 2,800만원으로 전체 사업 예산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종전 사업과 완전히 달라진 신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동 사업을 점검하지 않았음.

- 2026년도 예산의 경우 6개월분만으로도 4극 3특 지역에 총 789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7년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9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협의회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부처 실장급 공무원과 지자체별 부시장·부지사로 구성됨.

예산 편성 시 1,578억 6,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과기정통부는 우선 2026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 후 2027년부터 다년도 혹은 계속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므로, 향후 계속사업으로 개편 시에는 타당성재조사, 적정성 재검토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즉, 4극 3특 지역별 예산으로 88~131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지역 간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보이고, 사업 추진 및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 간 R&D 목표와 이견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구축할 필요가 있고, 향후 계속사업으로 개편 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재조사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AI·SW중심대학(2232-301): 사업관리 강화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대학별 지원규모가 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신규 과업이 추가되는 만큼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동 사업의 성과지표인 “AI·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의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AI·SW분야 취업률 등 산출·영향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AI·SW중심대학’ 사업은 대학의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이끌 핵심인재 및 디지털 전 산업에 가치를 창출할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중심대학 사업으로,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AI중심대학’은 대학교(학부) 교육을 AI 중심으로 혁신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55억원이 편성되었음.

- ‘SW중심대학’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SW 중심으로 대학

의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 전문·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924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에 1,179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2026년도 AI·SW중심대학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AI·SW중심대학	-	-	-	-	117,960	117,960	순증
○AI중심대학	-	-	-	-	25,500	25,500	순증
○SW중심대학	-	-	-	-	92,460	92,46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117,960	117,960	순증
○사업출연금(350-02)	-	-	-	-	117,960	117,960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대학별 지원규모 확대 및 신규 과업 추가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SW중심대학'은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의 내역사업에서 2026년도에 ‘AI·SW중심대학’의 내역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음.

○ ‘SW중심대학’은 2015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학과를 보유한 국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연 20억원 내외의 지원금을 최장 8년 동안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58개 대학(계속대학 48개, 신규대학 10개), 총 975억원 규모임.

○ ‘AI·SW중심대학’ 사업의 추진배경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AI교육은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전교생)에게도 필요한 역량으로 변화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SW중심대학을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SW중심대학은 사업기간에 따른 과제종료 및 AI중심대학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2032년도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고, 신규 AI중심대학은 2030년까지 30개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연차별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음.

<’26~‘30년 AI중심대학 연차별 지원규모 계획(안)>

(단위: 개, 억원)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계
총 운영대학	10	15	20	25	30	30
신규대학	10	5	5	5	5	-
총 지원예산	255	425	575	725	875	2,85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중심대학’은 기존 SW중심대학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학 교육체계를 AI·AX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기존 SW중심대학의 이행목표를 강화하거나 변경·신설하였으며, AI중심대학에서는 추가 과업 실시 비용을 고려하여 대학별 지원규코를 연 3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임.

- SW중심대학 AI중심대학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SW중심대학 및 AI중심대학 비교>

구 분	SW중심대학	AI중심대학
사업목적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 양성	AI전문·AX융합 인재 양성
지원대상	소프트웨어학과를 보유한 국내 4년제 대학	AI 관련 학과가 설치된 국내 4년제 대학
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액	대학당 연 20억원 내외 ※ 특화트랙은 연 10억원 내외	대학당 연 약30억원 이내
지원기간	최대 8년(4+2+2) ※ 특화트랙은 최대 6년(4+2)	최대 8년(3+3+2년)
주요 예산내역	인건비, SW실습실 구축, 교과과정 개발비, 국내외 인턴십 및 해외 교육, 산학협력 및 석박사 R&D 프로젝트 등	전교생 AI 교육 강의실 구축, AI 교수채용, AI+X 융합교과목 개발, 학·석사 패스트트랙 운영, 지역산업과 AI 연계 구축, 창업지원비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와 같이 AI중심대학은 대학별 지원규모가 연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고 신규 과업이 추가되는 만큼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도전적인 목표 설정 및 예산 및 인력의 단순 투입을 통해 달성되는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고, 목표 및 성과지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임.

<'22~'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AI·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	85.0	신규 지표	Σ(내역사업별 교육생 만족도 평균(100점 만점)) / 전체 과제 수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AI·SW 전공·융합인력 배출 인원 (단위: 명)	목표	-	-	-	-	13,740	AI·SW중심대학 배출인력 목표	Σ(내역사업별 전공·융합인력 배출 인원) / 전체 과제 수	전담기관의 성과분석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첫째, 성과지표 "AI·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의 목표를 상향 설정할 필요가 있음.

- 'SW중심대학' 사업의 최근 5년간 교육생 만족도의 평균은 89.3

점임. 그런데 ‘AI·SW중심대학’의 성과지표인 “AI·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의 2026년도 목표는 85점에 불과함.

<SW중심대학 사업의 교육생 만족도(최근 5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교육생 만족도(점)	87.3	89.4	89.6	89.5	90.5	89.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이 SW중심대학의 성과를 계승하고 대학별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AI·SW인재양성 교육생 만족도”의 목표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성과지표 “AI·SW전공·융합인력 배출 인원”은 예산 및 인력의 단순 투입을 통해 달성가능한 1차적 산출물에 해당하는 지표로 동 사업이 의도한 최종 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AI·SW분야 취업률 등 산출·영향지표를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마. 우편사업특별회계

1) 우편업무정보화(정보화)(5135-500):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G-클라우드 기반 우편정보시스템 자원 증설을 추진하면서 재난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우편업무정보화'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우편정보시스템[95] 및 전산장비를 운영·관리하고, 타 기관과의 안정적 연계를 통한 능동적·지속적인 시스템 성능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53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 중 내역사업 '우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우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 보급·유지관

95) 우편물의 접수에서 운송·구분·배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우편물류시스템(PostNet), 인터넷우체국·쇼핑(ePOST), 계약고객시스템 등 포함

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800만원 증액된 304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편업무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우편업무정보화(정보화)	37,843	40,316	35,381	17,537	35,381	-	-
○ 우편정보시스템 운영관리	32,869	35,449	30,407	15,031	30,445	38	0.1
○ 우편업무기반 정보화	4,974	4,867	4,974	2,506	4,936	△38	△0.8
□ 세출예산비목	37,843	40,316	35,381	17,537	35,381	-	-
○ 일반수용비(210-01)	500	496	500	226	479	△21	△4.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061	3,995	4,061	2,077	4,044	△17	△0.4
○ 특근매식비(210-05)	5	3	5	5	5	-	-
○ 임차료(210-07)	13,499	12,824	13,954	6,882	13,954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700	7,500	7,700	3,788	7,449	△251	△3.3
○ 일반용역비(210-14)	10	9	10	-	10	-	-
○ 관리용역비(210-15)	8,743	8,734	8,743	4,361	9,032	289	△3.3
○ 국내여비(220-01)	104	102	104	85	104	-	-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4	-	-
○ 일반연구비(260-01)	2,917	6,382	-	-	-	-	-
○ 자산취득비(430-01)	300	267	300	109	300	-	-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도입된 우편정보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시기 도래에 수반하여 2023년도부터 G-클라우드[96] 전환 및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5년에 G-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완료하였음.

96)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행정기관의 IT자원 수요를 모아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일괄구축· 공동활용하고,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나) 검토의견

□ 우편정보시스템 자원 증설 시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용 추세에 맞추어 정보자원의 비효율성 개선과 신규서비스와 기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우편사업 영역 전반을 포괄하는 우편정보시스템을 망분리 보안 등이 적용된 G-클라우드 환경으로 개편 추진하였음.

<G-클라우드 전환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우편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안정화 사업 ○ **(사업기간)** '23.12.26. ~ '25.12.30. ○ **(총 소요예산)** 11,662백만원 ○ **(후속조치)** '25.6월 전환(대전 국정자원 본원 5층) 후 안정화 운영중. 9.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구)레거시 우편시스템으로 대체 가동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0.

○ 클라우드 전환은 2025년 완료되었으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망분리·망연계[97] 적용시 서비스 응답속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우편정보시스템은 인터넷망·업무망 DB서버

97) 우편정보시스템은 G-클라우드의 여러 영역 중 핵심 가상화 기술이 모두 적용된 클라우드 S존으로 이관되어 단순 망분리가 아닌 망간 연계까지 가능한 환경으로 구성될 예정임

를 이원화해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망연계를 우회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에 2026년도 예산안에는 망분리·망연계 적용 포함 완전한 G-클라우드 환경 구성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구축과 연계하여 ①DB 이원화, ②서버 이중화, ③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리용역비 2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G-클라우드 기반의 우편정보시스템 자원 증설계획 개요>

○ **(사업기간)** '26.1월 ~ '28.12월(예상)
○ **('26년 편성예산)** 289백만원(관리용역비)
○ **(망연계 적용시기)** '26년 국정자원 자통사업 이후 DB 재구성 및 AP 개발
※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자통사업)을 통해 서버 증설 예정

○ **주요 추진내용**
- **(DB이원화)** 기관 공동사용 구역(S존)의 망분리 보안을 위해 인터넷망, 업무망 DB 분리 구성을 위한 DB 재구성 및 AP 프로그램 재개발
- **(서버 이중화)** '26년 국정자원 자통사업을 통한 1등급(이중화 미구축) DB 서버 증설에 대응하는 AP 개발
- **(서버 및 스토리지 증설)** '26년 국정자원 자통사업을 통한 내용증명 우편물 증가 관련 장비 증설에 대응하는 AP개발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0.

○ 그러나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우편정보시스템 또한 일부 데이터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입었

는데, 이로 인하여 G-클라우드 기반 자원 증설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정자원 화재 당시 우편정보시스템 중단은 국민적인 혼란과 우체국쇼핑몰 입점 업체 등 소상공인 피해를 유발했으며, 기구축된 서버 이중화는 재난 시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족했음이 드러났음.

○ 더불어 우편정보시스템 자원 증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자통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통사업의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망연계 우회 허용 시한인 2026년 12월까지 자원 증설이 완료되지 못하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G-클라우드 기반 우편정보시스템 자원 증설을 추진하면서 재난 시에도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별정 및 취급국 운영(5142-407):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고갈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예산 편성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악화가 지속되어 2027년 연금자산 고갈이 예상되며, 연금재정 고갈이 임박해진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한의 규모로 책임준비금 편성을 검토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가) 사업 개요

○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1982년 도입되어 별정우체국 직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직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공적연금 제도이며, 기여율 및 급여의 종류 등 운영방식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음.

○ 2025년 9월 말 기준 별정우체국연금 총적립기금은 876억원이며, 연금 수급자 2,793명 / 재직자 3,214명으로 부양률은 86.9%임.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적립기금 현황>

적립기금 ('25년 9월말)	가입자 현황('25년 9월말)			부양률(B/A)
	재직자(A)	연금수급자(B)	합 계	
876억원	3,214명	2,793명	6,007명	86.9%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9.)를 재구성

<공무원연금과 별정우체국연금 비교>

구분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근거법(도입연도)	공무원연금법(1960)	별정우체국법(1982)
적용대상	국가·지방공무원	별정우체국 직원
기여율	국가 9%, 공무원 9%	피지정인(국가) 9%, 직원 9%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비공무상장해연금, 퇴직수당	퇴직급여, 유족급여, 비업무상장해연금, 퇴직수당
주무부처	인사혁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나) 검토의견

□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악화로 2027년 연금 고갈 예상

○ 별정우체국은 1961년 국가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우체국망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자본으로 설치되었으며, 1966년 최대 843국까지 늘었다가 2025년 9월말 기준 674국으로 감소하였음.

<연도별 별정우체국 수 변동 현황>

연도	'61년	'62년	'66년	'15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국수	8	138	843	750	720	712	704	697	685	674

주) 25년은 9월말 기준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 별정우체국 직원수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도입된 1982년 3,934명에서 1999년 5,013명까지 증가하였으나, 내·외부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별정우체국 관서 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원이 감소하여 2025년 9월말 기준 3,214명이 재직하고 있음.

<별정우체국 재직자 및 수급자 변동 추이>

구 분	'82년	'90년	'00년	'15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재직자(명)	3,934	4,792	4,913	3,747	3,336	3,319	3,302	3,258	3,214
수급자(명)	-	-	244	1,545	2,321	2,447	2,576	2,677	2,793
부양률(%)	-	-	4.97	41.2	69.6	73.7	78.0	82.2	86.9

주) 25년은 9월말 기준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7.)를 재구성

○ 별정우체국연금은 2024년 12월말 기준 2,677명의 수급자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직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가 맞물리며 부양률[98]이 82.1%에 이르는 등 타 연금 대비 높은 수급구조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공무원연금 53.4%, 사학연금 38.1%, 군인연금 59.1%, 국민연금 32.5%).

<각 직역연금 및 국민연금과 비교>

('24. 12. 31. 기준)

구 분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가입인원	**3,258명**	1,292,545명	323,542명	180,963명	21,984,003명
연금수급자	**2,677명**	692,573명	123,274명	106,984명	7,155,257명
부양률	**82.1%**	53.4%	38.1%	59.1%	32.5%
재직/수급자수	**1.2명**	1.9명	2.6명	1.7명	3.1명
정부지원('24년)	-	약 7.5조원	-	약 2.2조원	-
자산고갈시기 (예정)	**2027년**	국가지원 (2001년~)	2049년	국가지원 (1973년~)	2055년
평균 연금월액	**217만원**	274만원	302만원	비공개	20년 이상 109만원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 2025년도 역시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어 부양률이 86.9%로 상승했으며, 향후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임.

98) 부양률= 연금수급자 수/연금가입자(재직자) 수

○ 별정우체국연금은 별정우체국 직원 및 국가의 부담금 및 적립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퇴직·유족연금,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충당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수입과 지출 현황을 보면, 매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적자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손실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대(2020년 52억 원 손실 → 2024년 343억 원 손실)되고 있는 상황임.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연금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담금(기여금)	45,764	43,920	41,677	42,904	40,966
운용수익	15,159	19,861	9,610	9,102	8,816
수입계(A)	**60,923**	**63,781**	**51,287**	**52,006**	**49,782**
급여지출	60,705	63,753	67,884	76,246	78,306
운영경비	5,437	6,178	5,911	6,171	5,770
지출계(B)	**66,142**	**69,931**	**73,795**	**82,417**	**84,076**
당기순손익(A-B)	**△5,219**	**△6,150**	**△22,508**	**△30,411**	**△34,294**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 별정우체국연금은 외부 환경 변화[99]와 지정승계자 부재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별정우체국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어 재직자는

99) 24년 말 기준 별정우체국 685국 중 읍·면 지역에 648국(94.6%)이 집중되어 우편 물량·지역 인구 감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감소하는 반면, 수급자는 증가(연금 도입 후 40년 이상 경과)하고 있어 연금 수급구조가 매우 불균형적임.

○ 시대적·환경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별정우체국 운영 국 수 및 재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추세 하에서는 부담금 수입 대비 급여 지출액 규모가 점차 커질 수밖에 없어 별정우체국 연금재정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연금자산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100)]

- 2025년부터 연금지급 자금 부족으로 보유 자산(투자자산,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2027년
연금수지(A)	△262	△333	△373	△453	△501	△579
사업수지(B)	37	29	30	29	5	1
재정수지 (C=A+B)	△225	△304	△343	△424	△496	△578
자산규모	1,695	1,443	1,050	626[101)]	130	-

주1) 연금수지 : 부담금 수입 - 퇴직자의 퇴직급여금
주2) 사업수지 : 연금자산 운용수익금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9.)를 재구성

100) 「별정연금 재정추계 검증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5.) 결과에 따르면, 2029년에 연금자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해당 연구 이후 고갈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임

101) 2025년도 이후 연도말 자산규모는 2024년도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자료로 전년도 자산에서 당해연도 재정수지 적자 충당을 가정(결산시점마다 변동될 수 있음)

□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고갈에 대비한 책임준비금 예산 편성 등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 그간 별정우체국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2016년 공무원연금을 준용한 연금개혁[102]을 실시하고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차원의 긴축 운영과 사업 조정 등 자구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연금의 구조적·환경적 문제로 자산 고갈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연금 자산 고갈에 따른 연금지급 자금 부족에 대응해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부동산 유동화 추진을 통한 자산효율화 노력(523억원), 운영경비 절감 및 조직·인력 혁신(41억원), 대부 축소 등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40억원)과 같은 자구노력[103] 등을 통해 2025년 기준 604억원의 운용자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함.

-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에는 서울

---

102) 부담률 2%p 상향(7%→9%), 지급률 0.2%p 하향(1.9%→1.7%)

103)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자구노력 세부내역

① 건물 매각(연금관리단 본사)을 통한 유동성 확보: 523억원

< 건물 매각 예상 금액(백만원) >

매각가(A)	장부가액 ('24.12.)(B)	매각차익	제반비용(C)				현금유입액 (A-B-C)
			제비용	법인세 등	보증금	합계	
87,000	**24,000**	**63,000**	**636**	6,807	3,284	10,727	**52,273**

* '25. 9월 현재 매각 진행 중으로 최종 매각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② 운영경비 절감 및 조직·인력 혁신: 41억원

- 인건비 감축 편성(△10명): '24년 대비 약 6억원 절감

- 자산매각에 따른 조직·인력 축소 : 25명 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약 35억원 절감

③ 대부 축소 등을 통한 사업 구조조정 : 별정우체국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던 대부사업을 '24. 2분기부터 중지(연 약 40억원 원금상환액 확보)

마포구에 위치한 사옥 매각을 추진하면서 세종시 조치원으로 사옥을 이전하였고, 매각 완료시 건물 관리인력을 추가 감축하는 등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별정우체국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에 역부족이며, 2027년부터는 보유 자산을 모두 매각하여도 연금 적자 충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3[104]에 근거하여 2021년 예산안부터 매년 우편사업특별회계에 책임준비금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재정당국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별정우체국연금 책임준비금 연도별 산출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2021년 예산안	2022년 예산안	2023년 예산안	2024년 예산안	2025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
산출액	20	20	20	4	9.5	142
편성 결과	정부안 미반영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9.)를 재구성

104) **「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관리단 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

○ 우정사업본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별정우체국연금 고갈에 대비한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142억원(579억원×1/4)[105]으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산출했던 금액(9.5억원) 대비 15배 가량 증액되었음.

○ 이는 연금자산 고갈이 임박해감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의 시급성이 심화되고 그 필요 규모 또한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2026년도 예산안에도 책임준비금이 반영되지 못하면 2027년도 예산안에는 연금 지급 부족분 전액[106]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나, 우편사업 적자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과 우체국예금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변동 폭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편성이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있음.

○ 「별정우체국법」 제33조의3에서는 연금관리단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준비금 편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책임준비금의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107]과 달리 임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별정우체국 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규정한 것이라

105) 산출식: '27년도 연금수지적자 예상액 (△579억원[e]) × 1/4 (3개월분, 금융기관 평균 현금유동성 관리현황 고려)≒142억원

106) 별정우체국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448억원=130억원(2026년도 자산규모)-578억원(2027년도 재정수지)

107) **「공무원연금법」**
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음.

- 국가 재정이 부족한 시기에 전국적 우체국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설치되었고, 현재는 인구감소 지역인 읍·면에서 도시와 동일한 보편적 우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별정우체국의 도입 목적 및 공적 역할을 고려하면 국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은 크다고 보임.

○ 2027년까지 책임준비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별정우체국 연금은 공적연금 중 처음으로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되어 연금가입자의 반발 등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큼. 연금재정 고갈이 임박해진 만큼, 최소한의 규모로 책임준비금 편성을 검토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3) 우체국건립(5143-411): BTL 방식을 활용한 우체국건립 추진 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BTL 방식을 활용한 우체국 건립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공공시설의 BTL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실히 보완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우체국건립’ 사업은 신도시 지역 우정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우체국을 신축하고 노후 협소 우체국의 재건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매입, 건축공사 및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54억 4,100만원이 감액된 970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우체국건립 주요 사업내용은 ①우체국 건립을 위한 우체국 신축부지 매입비 50억원, ②노후 집배관서[108] 신·개축 공사 계속공사비 888억 6,700만원, ③ 민자개발 적정성검토 용역비 등 부대비용 31억 5,700만원 등 총 970억 2,400만원임.

108) 총괄우체국. 집배센터국 등 우편 접수업무와 배달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우체국

<2026년도 우체국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우체국 건립	157,508	134,881	142,465	53,150	97,024	△45,441	△31.9
○ 토지매입	5,000	5,000	20,350	7,221	5,000	△15,350	△75.4
○ 건축공사	149,167	127,102	119,205	45,183	88,867	△30,338	△25.5
○ 부대비용	3,341	2,779	2,910	746	3,157	247	8.5
□ 세출예산비목	157,508	134,881	142,465	53,150	97,024	△45,441	△31.9
○ 일반수용비(210-01)	93	65	81	49	372	291	359.3
○ 임차료(210-07)	1,153	724	1,004	310	1,163	159	15.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01	1,346	1,221	269	1,085	△136	△11.1
○ 기타운영비(210-16)	229	183	199	103	177	△22	△11.1
○ 건설보상비(410-00)	5,000	5,000	20,350	7,221	5,000	△15,350	△75.4
○ 기본조사설계비(420-01)	763	2,463	3,418	1,162	1,235	△2,183	△63.9
○ 실시설계비(420-02)	1,145	3,534	3,199	1,322	3,052	△147	△4.6
○ 공사비(420-03)	143,203	115,944	105,545	41,361	78,806	△26,739	△25.3
○ 감리비(420-04)	3,896	4,699	6,449	1,145	5,467	△982	△15.2
○ 시설부대비(420-05)	160	462	594	193	307	△287	△48.3
○ 자산취득비(430-01)	465	461	405	15	360	△45	△11.1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우체국건립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2,465	토지매입 - 5국(20,350백만원) 건축공사 - 집배관서 20국(46,955백만원) - 창구관서 27국(72,250백만원) 부대비용 - 창구관서 27국(2,910백만원)	97,024	토지매입 - 1국(5,000백만원) 건축공사 - 집배관서 16국(88,867백만원) - 창구관서[109] 미반영(△72,250백만원) 부대비용 - 민자개발 적정성검토 용역 및 KDI 수수료, 노후 창구관서 폐기물처리, 원상복구, 임차료, 이사비, 비품교체 등(3,157백만원)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109) 우편 접수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우체국

나) 검토의견

□ BTL 방식을 활용한 우체국건립 추진 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 이후 우체국 건립예산 축소로 노후 우체국이 적체됨에 따라 노후 시설로 인한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35년 이상 노후 우체국[110]을 매년 선정하여 재건축하는 우체국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 말 기준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우체국은 437국으로 전체 1,613국 중 27.1%에 해당하며, 매년 약 60국 정도 대상국이 증가할 예정임. 적기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29년 대상국은 744국으로 그 비율은 46.1%로 증가하게 됨.

< 건물 준공 후 경과연수별 투자우체국 현황('24년말 기준) >

국사 유형	노후 우체국								30년 미만	합계
	재건축 대상		향후 재건축 검토 대상(매년 약 60국씩 증가)					소계		
	40년 이상	39~35년	34년	33년	32년	31년	30년			
총괄국	13	43	6	10	5	7	12	**96**	149	**245**
집배센터	11	28	8	8	7	10	7	**79**	157	**236**
창구국	123	219	49	35	48	49	46	**569**	563	**1,132**
합계	**147**	**290**	**63**	**53**	**60**	**66**	**65**	**744**	**869**	**1,613**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110)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인프라 개선 기준으로 ①건물 노후도(35년 이상), ②안전진단 결과(C·D등급), ③협소도 등 건물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국을 선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정사업 재정 상황에 따른 예산 제약과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최근 4년간 우체국 준공 실적은 '22년 6국, '23년 35국, '24년 53국, '25년(7월말 기준) 26국에 불과하여, 재건축 필요소요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도에 신규로 신·개축하는 우체국 건립(25국 예정)부터 민간투자개발방식[111]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이에 필요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과 KDI 타당성 분석의뢰를 진행 중임.[112]

< 신규건립 예정 우체국(25국) 목록 >

연번	지방청	총괄국명	우체국명	건립유형	경과연수	부지면적(㎡)
1	서울청	서울강서	서울화곡4동	개축	42년	585.1
2	서울청	서울영등포	서울신길5동	개축	41년	462.0
3	서울청	서울강서	서울발산동	개축	41년	460.6
4	서울청	서울강동	서울성내동	개축	39년	462.7
5	경인청	안양	과천	개축	42년	1,648.3
6	경인청	수원	수원북문	개축	37년	458.2
7	경인청	인천	인천구월동	개축	38년	395.1
8	경인청	김포	김포월곶	개축	38년	797.0
9	전남청	서광주	광주농성동	개축	43년	325.9
10	전남청	광주	광주학동	개축	40년	609.6
11	전남청	여수	여수교동	개축	40년	331.0

111) 2026년 우체국 건립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중
112)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 2025. 6. 완료 / KDI 민간투자개발 타당성 검토 : 진행중(2025. 7.~11.말 예정)

12	전북청	동전주	전주에코시티	신축	-	941.5
13	전북청	동전주	전주송천동	개축	36년	543.0
14	전북청	임실	임실오수	개축	37년	515.0
15	부산청	창원	창원반송동	개축	39년	627.4
16	부산청	거제	거제옥포동	개축	40년	616.9
17	부산청	해운대	부산반여1동	개축	40년	583.0
18	부산청	진주	진주칠암동	개축	39년	544.2
19	충청청	대전	대전도마동	개축	45년	363.7
20	충청청	서청주	청주옥산	개축	41년	860.0
21	충청청	단양	단양	개축	40년	2,315.0
22	경북청	포항	포항죽장	개축	46년	399.0
23	경북청	대구	대구신천4동	개축	37년	890.2
24	경북청	경산	경산중방동	개축	41년	1,072.1
25	강원청	동해	묵호	개축	38년	621.0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 민간자본을 활용한 우체국 건립은 건립 초기 대규모 재정투입 필요성이 없어 우편사업의 적자 폭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정사업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재 BTL 방식의 시설 건립이 활성화된 학교 등 교육시설 사례[113]를 살펴보면, 실시협약 체결 시점과 착공시기 간 공사비 변동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건설사들의 자본 조달 실패 등으로 착공 및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113) 금강일보, “충남교육청, BTL준공 지연 신속대응반 긴급 가동”, 2025. 7. 23.

○ 또한 2026년도 우체국 건립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2026년도 예산안 요구 시점 이후에 확정되면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도 우체국 건립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114], 이로 인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존재함.

○ 전국 우체국 망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악화하는 우정사업 재정 여건 및 부정적 외부 요인 발생으로 최근 4년간의 우체국 재건축은 계획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였고, 사업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음.

- 2026년에 민자사업으로 신규 건립 예정인 25국이 차질없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노후국 60여국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건축 필요소요에 충분히 미치지 못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BTL 방식을 활용한 우체국 건립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에 공공시설의 BTL 활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실히 보완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14)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반영을 추진한다는 입장임.

4)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8811-88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산정 시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규모를 산정할 때 집행추이를 분석하여 세입·세출 추계의 오차를 줄이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가) 사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115]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116]에 예탁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위해 세입 대비 세출 재원(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을 충당한 후 여유 재원을 편성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7억 6,200만원 감액된 9,070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115)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6)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용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920,775	330,000	920,775	180,000	907,013	△13,762	△1.5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920,775	330,000	920,775	180,000	907,013	△13,762	△1.5
□ 세출예산비목	920,775	330,000	920,775	180,000	907,013	△13,762	△1.5
○기금예탁금(480-03)	920,775	330,000	920,775	180,000	907,013	△13,762	△1.5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나) 검토의견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산정 시 집행가능성 고려 필요

○ 우정사업은 확보된 자금 내에서 지출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세입의 감소 및 세출의 증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의 실제 지출 재원 부족을 초래함.

- 특별회계 특성상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액이 일치해야 하므로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 등 세출 편성 후 세입과의 차액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는데, 편성예산과 실집행액의 차이가 연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사업(8811-881) 관련하여 예산 편성과 실제 집행결과의 차이에 대한 국회의 지적[117]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 동 사업의 과거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2019년: 0%, 2020년 11.1%)하였고, 그 이후 2021년 88.7%, 2022년 81%로 집행률이 개선되었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집행률이 저조해졌음(2023년: 45.6%, 2024년: 35.8%)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9	763,179	763,179	△81,137	682,042	-	-	-	682,042
2020	301,145	360,394	△8,500	351,894	40,000	11.1	11.4	311,894
2021	202,957	202,957	-	202,957	180,000	88.7	88.7	22,957
2022	364,898	370,482	-	370,482	300,000	81.0	81.0	70,482
2023	942,893	942,893	-	942,893	430,000	45.6	45.6	512,893
2024	920,775	920,775	-	920,775	330,000	35.8	35.8	590,775
2025	920,775	920,775	-	920,775	180,000	19.5	19.5	740,775

주 1) 2025년 집행액은 9월말 기준임.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9.

○ 특히 예산 편성액과 실제 예탁액의 차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엔 2,029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29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나, 2024년엔 9,207억 7,500만원이 편성되어 그 중 5,907억 7,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1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적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 추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및 기금예탁이자수입의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예탁금 및 우정사업 수익 적정 추계 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 집행가능성 없는 예탁금 편성 부적정

○ 2025년도 또한 9월말 기준 9,207억 7,500만원 중 1,800억원만 집행되어 불과 19.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연도말까지 집행을 가정하여도 약 4,300억원 예탁이 이루어져 편성 대비 46.7% 집행에 그칠 것으로 보임.

○ 게다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2024년도) 대비 28.2% 증가한 1조 1,805억 5,100만원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였다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년동 수준으로 감액된 바 있었음을 감안하면 금년도 집행 부진은 실질적으로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만 감액된 9,070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집행 현황을 고려하면 편성된 만큼 집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예산 편성 시점(n-1년 5월)에 다음 연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가능액을 예측하여 편성하나, 실제 예탁금액은 해당 연도 말의 세입·세출 수지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임.

- 우편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특히 최근 세입예산에서 큰 수납차가 발생했던 것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 차이>

(단위: 억원)

구 분	세입예산(A)	수납액(B)	수납차(B-A)
2021년	45,372	44,672	△700
2022년	46,449	45,663	△786
2023년	54,244	48,584	△5,660
2024년	54,396	48,286	△6,110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세입과 세출예산을 일치시키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다시 기금예탁이자수입[118] 등 세입예산에 영향을 끼쳐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구조를 왜곡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 한편, 예탁금 편성과 달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예탁이자수입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38.1% 감액된 193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편성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었음.

118) 사업코드: 95-953,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2026년도 우편사업특별회계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수납액			
□ 기금예탁이자수입	24,303	14,023	31,273	6,281	19,357	△11,916	△38.1

주 1) 2025년 수납액은 7월말 기준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 최근의 집행현황 및 세입예산 수납차 추이를 고려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예탁규모 산정 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다소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탁금 편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금예탁이자수입의 감액폭이 큰 것과 대비하여도 부적정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향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규모를 산정할 때 집행추이를 분석하여 세입·세출 추계의 오차를 줄이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바.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 보험모집보상금(5331-386): 보험모집 실적과 보상금 집행 추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규모 현실화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보험모집 실적과 보상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험모집 규모에 따른 보상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험시장 규모 파악 및 성장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적정 편성 규모를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가) 사업 개요

○ ‘보험모집보상금’은 우체국보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험 신규모집, 수금 및 유지관리 등의 실적에 따라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우정사업본부 및 별정우체국 직원(이하 “부내자”)과 외부 보험모집인(이하 “부외자”)[119]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0억원 증액된 2,064억원이 편성되었음.

119) 우체국의 위탁을 받아 우체국보험을 모집하고 보험료 수금업무를 하는 개인을 말함.

<2026년도 보험모집보상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보험모집보상금	206,400	218,142	191,400	125,513	206,400	15,000	7.8
○부내자 보상금	50,000	49,957	50,000	27,503	50,000	0	0.0
○부외자 보상금	156,400	168,185	141,400	98,010	156,400	15,000	10.6
□ 세출예산비목	206,400	218,142	191,400	125,513	206,400	15,000	7.8
○포상금(310-03)	50,000	49,957	50,000	27,503	50,000	0	0.0
○기타보전금(310-04)	156,400	168,185	141,400	98,010	156,400	15,000	10.6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9.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① 부내자보상금 500억원 ②부외자보상금 1,564억원이 편성되었음.

○ 보험모집보상금의 종류는 모집자보상금, 관서영업지원보상금, 비례보상금, 기타 제수당 및 수수료로 구분됨. 이 중 모집자보상금은 부내자(직원)와 부외자 모두에게 지급되며, 관서영업지원보상금 등은 체신관서에, 비례보상금 등은 부외자에게 지급됨.

<최근 5년간 보험모집보상금 지급 현황(보상금 종류별)>

(단위: 백만원)

연도	지급 구분	보험모집보상금 집행액				
		모집자보상금	관서영업 지원보상금*	비례보상금	기타 제수당 및 수수료**	합계
2020	부내자	32,621	15,115	-	1,356	49,092
	부외자	112,132	-	48,242	37,864	198,238
	합계	144,753	15,115	48,242	39,220	247,330
2021	부내자	27,965	16,497	-	1,218	45,680
	부외자	97,971	-	43,173	35,756	176,900
	합계	125,936	16,497	43,173	36,974	222,580
2022	부내자	24,357	22,935	-	1,681	48,973
	부외자	88,844	-	41,769	38,797	169,410
	합계	113,201	22,935	41,769	40,478	218,383
2023	부내자	25,896	22,789	-	1,302	49,987
	부외자	84,713	-	37,385	34,296	156,395
	합계	110,609	22,789	37,385	35,598	206,382
2024	부내자	26,846	21,881	-	1,230	49,957
	부외자	87,821	-	42,617	37,747	168,185
	합계	114,667	21,881	42,617	38,977	218,142

* 관서영업지원보상금: 관서실적비례보상금 등 관서 마케팅경비 및 평가포상금
** 기타 제수당 및 수수료: 유지관리보상금, 모집자양성보상금 및 정책수수료·교육수수료·유공자 평가포상금 등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2024년 12월말 기준 보험모집인원은 부내자가 13,878명, 부외자(FC[120] 등)는 4,105명이며, 2024년 보상금 지급액은 부내자보상금이 499억 5,700만원, 부외자보상금은 1,681억 8,500만원임.

<보험모집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부내자	부외자	합 계
보험모집인	13,878	4,105	17,983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4. 12. 기준

120) 보험설계사(Financial Consultant)

나) 검토의견

□ 보험모집 실적과 보상금 집행 추이를 고려한 예산 편성 규모 현실화 필요

○ 최근 5년간 보험모집보상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3년을 제외하면 연례적으로 보상금이 과소계상되어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118억원~313억원)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조달하여 집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보험모집보상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1	206,400	20,000	226,400	222,580	3,820
2022	206,400	12,662	219,062	218,383	679
2023	206,400	-	206,400	206,382	18
2024	206,400	11,800	218,200	218,142	58
2025.9.	191,400	31,374	222,774	161,148	미정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9.)를 재구성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부외자보상금'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을 제외하면 2020년 이후 매년 과소계상되어 타 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조달하고 있고,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을 보면 부외자보상금

부족분을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9701-971)에서 이용을 통해 충당하고 있음.

< 연도별 부외자보상금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
예산편성액	156,400	156,400	156,400	156,400	156,400	141,400
이·전용	**47,000**	**20,700**	**13,300**	**-***	**11,800**	**31,374**
집행액	198,238	176,900	169,410	156,395	168,185	125,759
예산 증감액	+18,400	-	-	-	-	△15,000

* 2023년: GA(법인보험대리점) 확대 등에 따른 영업실적 하락으로 보험모집보상금 지급소요 감소
자료: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2025. 9.)를 재구성

<최근 4년간 부외자보상금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에서 세부사업	금액	~으로 세부사업 (내역사업)	이·전용 등 사유
2021	이용	우체국보험 적립금운용	20,000	보험보상금 (부외자보상금)	보험보상금의 과소 편성과 신상품 및 공익상품 판매 증가 등에 따른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이용
	조정	보험보상금	700	보험보상금 (부외자보상금)	부외자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세목간 조정
2022	이용	우체국보험 적립금운용	13,300	보험보상금 (부외자보상금)	소요액 대비 보험보상금의 과소 편성 등에 따른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이용
2024	이용	우체국보험 적립금운용	11,800	보험보상금 (부외자보상금)	소요액 대비 부외자보상금 과소 편성, 보험영업 실적 증가에 따른 지급소요 추가발생 등에 따른 부족액 충당을 위해 이용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7.

○ 부외자보상금의 이·전용액 규모는 2020년 470억원에서 2022년은 133억원으로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2023년에는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4년 이후 다시 이·전용이 발생하여 2025년도는 9월 기준 313억원까지 확대되었음.

○ 2025년도는 전년도의 이·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50억원 감액 편성된 부외자보상금 예산 1,414억 중 9월말 기준으로 1,257억 5,900만원을 집행(88.9%)하였고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313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전용 규모를 고려하면 금년도 집행은 예년 예산 수준의 1,564억원을 상당 부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6년도 예산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증액 편성되는데 그쳤음.

○ 더구나 보험모집보상금 부족 시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였던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이 대폭 감액된 465억 2,200만원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향후 예산 부족 시 원활한 예산 조정이 가능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보험모집보상금은 그 성격상 집행 확대가 보험료 실적 증대 및 우체국보험사업의 촉진을 수반하는 만큼, 집행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실제 필요한 소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보험모집 규모에 따른 보상금의

적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험시장 규모파악 및 성장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적정 편성 규모를 산정하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보험모집 실적과 보상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예산 편성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이·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431-302):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사업의 집행부진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감안하여, 예산과 집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은 전기통신번호 관리, 통신회계 검증조사, 방송통신 허가 심사 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인 전기통신번호 관리체계 운영 사업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개선·운영 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위탁사업 형태로 수행하고 있음. 또한, 합리적인 통신소비

환경 조성 사업과 최적요금제 추천 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20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766	1,739	2,452	1,463	2,009	△443	△18.1
○ 전기통신번호관리체계 운영	309	306	309	123	121	△188	△60.8
○ 전기통신사업자 회계자료 검증·조사	596	737	586	374	686	100	17.1
○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및 접속원가 검증 조사	160	103	166	58	181	15	9.0
○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126	65	126	34	126	-	-
○ 기타	575	528	1,265	874	895	△370	△29.2
□ 세출예산비목	1,766	1,739	2,452	1,463	2,009	△443	△18.1
○ 일반연구비(260-01)	586	737	586	374	802	216	36.9
○ 사업출연금 (350-02)	225	335	335	722	353	18	5.4
○ 기타	845	667	1,531	367	854	△677	△44.2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사업의 집행부진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은 통신사업(기간통신)의 인·허가 및 승인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심사위원 수당, 회의 지원, 심사장소 임차, 간담회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경우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통신산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의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조정 등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집행률 (B/A)
2020	132	-	-	132	55	77	41.7
2021	132	-	-	132	81	51	61.4
2022	126	-	-	126	41.2	84.8	32.7
2023	125.9	-	-	125.9	68.7	57.2	54.6
2024	125.7	-	-	125.7	65.4	60.3	52.0
2025. 7.	126	-	-	126	33.7	-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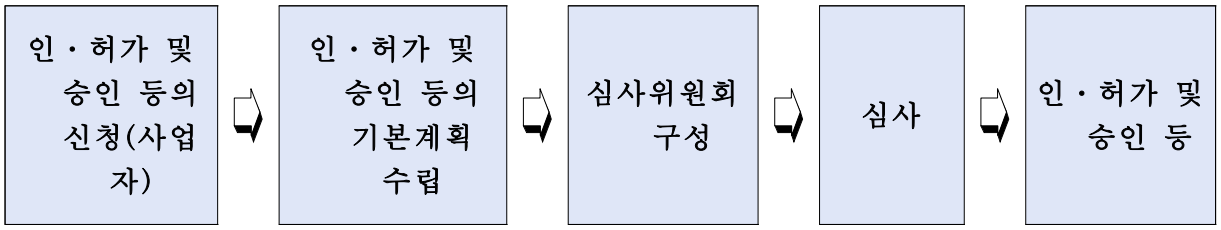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9.

○ 동 내역사업의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예산현액 1억 3,200만원 중 5,5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41.7%이며, 2022년도도 전체 예산현액 1억 2,590만원 중 4,12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32.7%로 나타나고 있음.

-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전체 예산현액 1억 2,600만원 중 3,370만원이 집행되어, 동 내역사업의 경우 최근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동 내역사업에서 최근 집행 부진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통신사업 인·허가 심사 절차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수시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심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통신사업 인허가심사 절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동 내역사업의 수요가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불용액이 과다하

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사업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현재에 예산 편성 규모를 즉시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동 사업의 '통신사업 인가 등 심사지원' 내역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감안하여, 예산과 집행이 일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1233-302): 예산 편성 근거 및 규모 명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정 조속한 완료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천시 및 국제기구인 UN (ESCAP)과의 APCICT 관련 협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도 예산에서 동 사업의 국제부담금(340-02) 편성·집행의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사업은 UN 산하기구의 국내 유치 및 지원으로 국제사회에서의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UN ESCAP[121]에 약정에 따른 국제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음.

- 동 사업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UN ESCAP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6년 6월부터 운영 중인 ICT 전문 교육기관인 APCICT[122]의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국제부담금(340-02)으로 지원하고 있음.

---

121)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는 유엔(UN)의 지역 경제사회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임.

122)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 교육센터(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APCICT)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9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949	949	971	971	971	-	-
○ UN ESCAP ICT 개발센터 지원	949	949	971	971	971	-	-
□ 세출예산비목	949	949	971	971	971	-	-
○ 국제부담금 (340-02)	949	949	971	971	971	-	-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나) 검토의견

□ 예산 편성 근거 및 규모 명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정 조속한 완료 필요

○ 동 사업은 2025년 10월 기준으로 UN ESCAP와의 협정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 편성 근거 및 국제부담금 부담 규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협정 체결을 신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23]에 따르면,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

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N(ESCAP), 인천시 간의 협정서를 통해 국제부담금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체결된 협정서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미화 약 72만 달러 이상을 ESCAP에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2026년도에도 국제부담금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시가 2025년에 해당 협정서를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갱신해야 하는 상황임.

<한국 정부와 UN(ESCAP) 간 기관 간 약정(2021~2025년>

○ 제3조. 과기정통부는 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2021년부터 2025까지 매년 미화로 약 72만 달러 이상을 ESCAP에 기여한다.** 연간 기여금의 최종금액은 한국원화로 결정되며, 과기정통부의 연간 예산 절차에 따른다. 이 기여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그러나 2025년 10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시, 국제기구인 UN(ESCAP) 간의 APCICT 관련 비용 지급을 위한 협정서 체결 협의는 진행 중이나, 아직 협정서 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2026년

123)「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62.
□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
○ 조약·법령·협정 등에 분담율·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동 금액을 원칙적으로 계상하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국제부담금은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반영

도 국제부담금 편성을 위한 근거가 미흡한 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기존 협정의 자동 갱신 조항에 따라 예산 편성 근거는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구체적 기여금 수준의 합의는 완료되었으나, 최종적인 UN ESCAP의 서명을 받는 등의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천시 및 국제기구인 UN (ESCAP) 과의 APCICT 관련 협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6년도 예산에서 동 사업의 국제부담금(340-02) 편성·집행의 근거가 명확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이자 수입 추계 방식의 정교화 필요

○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기금 정산금 이자수입의 추정 이자율 등을 추정하는 방식을 정교화하여 해당 수입의 과소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기타재산이자수입(58-581)’ 수입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기금 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에 따라 사업 대기성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지출금 반납금(기금사업 정산금 이자수입), 기타(국고예금이자 등) 수입을 합한 수입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24]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

12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 기타재산이자수입의 2024년도 수입계획액은 전년 대비 21억 8,700만원이 감액된 3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수납액	계획액 (A)	수납액			
□ 기타재산이자수입	5,294	10,131	5,320	5,824	3,133	△2,187	△41.1

주 1) 2025년 수납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이자 수입 추계 방식의 정교화 필요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연례적으로 수입계획액이 실제 수납액 대비 과소 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자수입의 수입 추계 방식을 정교화하여 수입계획액의 과소 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동 수입의 2021~2025년도 연도별 수입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도 계획액 14억 6,700만원 대비 실제 수납된 금액은 23억 6,6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161.3%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계획액 36억 3,9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이 99억 5,200만원으로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273.5%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계획액은 53억 2,000만원인 반면 수납액은 58억 2,400만원이 발생하여 7월말 기준 계획액 대비 수납률이 109.5%로 계획액이 실제 수납액 대비 과소 계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연도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입계획액 대비 실제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1,467	1,467	1,467	2,366	2,366	161.3	-	-
2022	1,200	1,200	1,200	4,729	4,729	394.1	-	-
2023	3,639	3,639	3,639	9,952	9,952	273.5	-	-
2024	5,294	5,294	5,294	10,131	10,131	191.4	-	-
2025 (7월말)	5,320	5,320	5,320	5,824	5,824	109.5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기타재산수입을 정확히 예측·계상하기는 어렵지만,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타재산수입 중 기금사업 정산금 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운용수익의 운용수익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추계의 정확성이 낮은 상황임. 따라서 향후 해당 수입의 추정 방식을

개선하여 기타재산수입의 과소 계상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까지는 여유자금 추정 평잔에 추정 운용수익률을 곱한 금액을 동 수입의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별도로 기금 정산금 이자수입에 대한 추정은 하지 않았으나, 2025년도부터는 추정 사업비 집행잔액에 추정 이자율을 곱하여 기금 정산금 이자수입을 별도로 추정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연도별 산정 방식>

(단위: 백만원)

구분	산정 방식	계획액
2020년	여유자금 추정 평잔(286,370) × 추정 운용수익률(2.00%)	5,728
2021년	여유자금 추정 평잔(128,545) × 추정 운용수익률(1.14%)	1,467
2022년	여유자금 추정 평잔(119,958) × 추정 운용수익률(1.00%)	1,200
2023년	여유자금 추정 평잔(227,431) × 추정 운용수익률(1.614%)	3,639
2024년	여유자금 추정 평잔(162,892) × 추정 운용수익률(3.25%)	5,294
2025년	여유자금 추정 평잔(149,267) × 추정 운용수익률(3.00%) + 추정 사업비 집행잔액(28,068) × 추정 이자율(3.00%)	5,320
2026년	여유자금 추정 평잔(100,000) × 추정 운용수익률(2.50%) + 추정 사업비 집행잔액(21,106) × 추정 이자율(3.00%)	3,13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그러나, 2025년 기준으로 기금사업 정산금 이자수입의 추정 이자율이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등이 엄밀하게 추정되지 않

아 실제와 차이가 있어, 2025년도 7월말 기준으로 계획액 8억 4,200만원(28,068백만원 × 3.00%) 대비 수납액이 31억 2,900만원으로 수납률이 371.6%로 과소 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금사업 정산금 이자수입의 2025년도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A)	수납액 (7월말 기준) (B)	수납률 (B/A)
기금사업 정산금 이자수입	842	3,129	37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기금 정산금 이자수입의 추정 이자율 등을 추정하는 방식을 정교화하여 해당 수입의 과소 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3231-305):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사업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사업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하고 이에 대한 예산상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의 기관 근거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은 청각·언어 장애인 등 통신소외계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원활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중고 단말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영상(수어), 문자, 음성 등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내역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출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에 대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사업을 추진하는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내역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민간 위탁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3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	3,213	3,213	3,201	1,706	3,201	-	-
○ 소외계층통신 접근권보장	1,828	1,828	2,201	1,281	2,201	-	-
○ 농어촌주민통신 접근권보장	1,385	1,385	-	-	-	-	-
○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	-	1,000	425	1,000	-	-
□ 세출예산비목	3,213	3,213	3,201	1,706	3,201	-	-
○ 사업출연금(350-02)	3,213	3,213	2,201	1,281	2,201	-	-
○ 민간위탁사업비(260-01)	-	-	1,000	425	1,000	-	-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사업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미흡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①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거나, ② 정상적인 중고 단말 거래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중고 단말 이용자가 안심하고 중고 단말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 2026년도 계획안 기준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사업과 거래 사실 확인서 발급 사업은 모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 동 내역사업의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사업의 경우 정부 권한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위탁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 제1항[125]에 근거하고 있으며, 거래사실 확인서 제도는 같은 법 제60조의2제2항[126]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125)「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126)「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미흡한 측면이 있음.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의 민간위탁 근거 비교>

구분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권한 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제1항** -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	○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2항**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
민간위탁 근거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제4항** - 기관·단체 위탁 가능	○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 전문기관 지정 가능
	위임명령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제6항**[127]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기관 지정
예산상 사업 수행 방식		민간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

12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전문기관 등)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제4항[128]에 있으나, 구체적인 위탁 기관을 정하는 시행령이 미비한 상태임.

-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없는 반면,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제6항에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음.

-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의 민간 위탁 기관은 2025년 1월 21일 폐지된 법률 제20675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 제15조제2항[129]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상위 법률 폐지[130] 이후 해당 시행령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현재까지(2025. 10.) 새롭게 규정되지 않아 민간위탁되는 구체적인 기관

128)「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29)「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업무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실·도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확인 업무

13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에 따르면, “구법의 위임에 의하여 유효하게 제정된 법규명령이라 하더라도,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소멸하면 그때부터는 무효인 법규명령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상위 법률이 폐지되는 경우, 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위임명령(시행령·시행규칙 등) 역시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석됨.

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기인[131]하고 있음.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13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133]에 따라,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므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의 운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사업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민간 위탁하고 이에 대한 예산상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 위탁의 기관 근거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나, 현재 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행령 개정이 지연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132)「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3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5)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1232-303): 수원국의 정세 불안정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신규 내역사업인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사업은 수원국인 페루의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6년도 해당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원국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세 변화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위험 대응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개도국 정보방송통신 개발협력지원' 사업은 본 사업은 ICT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프로젝트, 개발컨설팅, 프로그램, 초청연수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획, 사전타당성조사, 자체평가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거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파관리 인프라와 정책 자문을 지원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교부하는 출연금이나, 한국전파진흥협회에 교부하는 민간위탁사업비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3억 7,800만원이 감액된 41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개도국 정보방송통신 개발협력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개도국 정보방송통신 개발협력 지원	9,303	9,303	7,550	7,550	4,172	△3,378	△44.7
○ ICT ODA 관리체계 구축	225	225	392	392	354	△38	△9.7
○ ICT 기술정책협력	1,225	1,225	663	663	300	△363	△54.8
○ K-Lab 설치 및 운영	2,850	2,850	2,600	2,600	1,300	△1,300	△50.0
○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1,200	1,200	1,500	1,500	418	△1,082	△72.1
○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3,150	3,150	2,125	2,125	1,500	△625	△29.4
○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	-	-	-	300	300	순증
○ 개발은행 협력지원	635	635	270	270	-	△270	△100.0
□ 세출예산비목	9,303	9,303	7,550	7,550	4,172	△3,378	△44.7
○ 사업출연금(350-02)	6,153	6,153	5,425	5,425	2,372	△3,053	△56.3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150	3,150	2,125	2,125	1,800	△325	△15.3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나) 검토의견

□ 수원국의 정세 불안정을 감안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 강화' 사업의 대

상 국가인 페루의 정세 불안정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내역사업은 전파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페루를 대상으로 기술·정책 자문, 전파관리 인프라 구축, 전파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134]) 사업임.

<AI 디지털 전파관리 역량강화 내역사업의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전파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사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디지털 공공복리 증진 및 개도국 정부의 부가수익 증대에 기여
사업내용	**○ 기술/정책 자문 지원** - 전파자원 확보 및 관리, 효율적인 전파 이용, 안전하고 깨끗한 전파환경 구축 등에 대한 기술/정책 자문 지원 **○ 전파관리 인프라 구축 지원** - 개도국 전파관리 담당 기관이 전파 품질, 불법 전파 감시 등을 위한 측정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파관리 시스템 구축 **○ 전파관리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개도국이 전파자원 관리 프로세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대상국가	페루
총사업비	2,500
사업기간	2026~2028년
2026년도 계획안	3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134)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동 내역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2026년도 기준으로는 동 내역사업에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동 내역사업의 수원국인 페루는 대통령 탄핵 및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2026년도 해당 ODA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원국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관리 및 리스크 대응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페루는 2025년 3월에 정부가 범죄 폭증을 이유로 리마-카야오에 3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5년 10월 10일에는 페루 헌법에 따라 '영구적 도덕적 무능력(permanent moral incapacity)'을 이유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탄핵되었음.

<2025년 페루의 주요 사건 현황>

일시	주요 사건
2025. 3.	○ 당시 대통령 디나 볼루아르테 정부가 범죄 폭증을 이유로 리마-카야오에 3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
2025. 10. 10.	○ 의회가 볼루아르테 대통령을 탄핵하고, 호세 제리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함
2025. 10. 22.	○ 제리 정부가 리마 및 카야오 지역에 대해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함
2025. 10. 23. 이후	○ 비상사태 조치가 자정(10월 22→23일)부터 효력 발생. 군병력 거리 배치 등 실제 집행 시작함

자료: 페루 관련 언론 기사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2025년 10월, 호세 제리가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으나 정세 불안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리 정부는 2025년 10월 22

일 리마 및 카야오 지역에 대해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현재(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군 병력이 페루 도심에 배치되어 치안 유지를 위한 거리 통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은 2026년도 페루의 전파 담당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각종 자문,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페루의 정세 불안정이 지속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 과거 외교부의 국가별 ODA 사업 중에는 수원국의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은 정세 악화로 인한 공관 및 사무소 철수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미얀마의 경우에도 군부 쿠데타 이후 다수의 ODA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2024년 외교부 ODA 사업 중 정세 불안정으로 집행 부진한 경우>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명	내역사업명	2024			집행가능성 저하 사유 등
		본예산 (A)	예산 현액	KOICA 집행액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 (ODA)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	50	50	-	· 수원국 정세 악화로 공관 및 사무소 철수(2021.8.~) 이후 사업 추진 잠정 중단되었으며, 외교부, 수행기관(UNOPS)와 협의하여 금년도 사업 현장 유지 관리 등 최소한의 사업비로 사업 중지상태 유지중
미얀마 (ODA)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	200	200	5	· 2021.2월 미얀마 사태 이후 우리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정지 상태 ·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2025년 초까지 연장됨에 따라 연내 사업재개 불가, 사업장 유지관리용역(소액) 추진 중
미얀마 (ODA)	미얀마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사업	600	600	115	·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업 활동 제한
미얀마 (ODA)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	100	100	-	·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업 활동 제한(기획조사 미실시)

자료: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동 내역사업의 경우에도 수원국인 페루의 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인한 정세 불안정이 사업추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2026년도 해당 ODA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원국 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세 변화에 따른 사업 관리 및 위험 대응을 면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정보통신진흥기금

1) 해외IT지원센터운영(2137-303): 지원센터 입주 기업 수출 실적의 개선 노력 방안 필요 등

○ 한정된 예산 내에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사업 해외IT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수출 실적이 감소하며 사업 성과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수행기관 간 특별한 소관 변동이 없음에도 비목간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해외IT지원센터운영 사업'은 ICT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주요 수출 전략지역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여 현지 마케팅, 기술ㆍ비즈니스 컨설팅 등 ICT 분야 맞춤형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싱가포르,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중동(UAE)에 총 6개국 7개소에 해외 IT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는 사업출연금으로 교부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65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해외IT지원센터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해외IT지원센터운영	6,905	6,905	6,502	5,720	6,502	-	-
○ 현지거점활용인프라지원	5,271	5,271	5,014	4,533	5,014	-	-
○ 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	1,634	1,634	1,488	1,187	1,488	-	-
□ 세출예산비목	6,905	6,905	6,502	5,720	6,502	-	-
○ 민간경상보조(320-01)	2,898	2,898	2,457	2,160	3,095	638	26.0
○ 사업출연금(350-02)	4,007	4,007	4,045	3,560	3,407	△638	△15.8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지원센터 입주 기업 수출실적의 개선 노력 방안 필요

○ 동 사업의 해외IT지원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입주 기업의 수출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출실적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해외IT지원센터 입주 기업의 연도별 수출실적 현황>

(단위: 개, 천 달러)

연도	해외IT지원센터	기관	지역	입주기업	수출실적
2022	6개 도시	코트라	실리콘밸리	49	92,680
			도쿄	16	66,810
			베이징	9	3,230
		NIPA	싱가포르	11	24,177
			하노이	9	10,943
			호치민	5	322
		소계		99	198,162
2023	6개 도시	코트라	실리콘밸리	49	81,190
			도쿄	16	60,210
			베이징	8	9,150
		NIPA	싱가포르	10	25,082
			하노이	11	6,213
			호치민	10	1,400
		소계		104	183,245
2024	7개 도시	코트라	실리콘밸리	47	97,208
			도쿄	17	48,261
			베이징	11	6,785
		NIPA	싱가포르	13	6,393
			하노이	11	7,273
			호치민	11	2,008
			UAE	6	4,513
		소계		116	172,441
2025 (8월말)	7개 도시	코트라	실리콘밸리	46	56,965
			도쿄	17	19,920
			베이징	8	3,505
		NIPA	싱가포르	9	1,200
			하노이	13	3,479
			호치민	15	2,248
			UAE	6	222
		소계		114	87,53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IT지원센터에 ICT 기업이 입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의 현지에서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 기업의 연도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도 총 6개 도시, 99개 입주 기업의 수출실적은 198,162 천 달러로 나타나고 있지만, 2023년에는 183,245 천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24년도에는 UAE(두바이)에 해외IT지원센터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의 수출실적은 총 116개 기업, 172,441 천 달러로 오히려 2023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이처럼, 해외IT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ICT 수출의 글로벌 경기 둔화,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도쿄(2022년 66,810 천 달러 → 2024년 48,261 천 달러), 싱가포르(2022년 24,177 천 달러 → 2024년 6,393 천 달러)에 입주한 기업의 수출 실적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사업 해외IT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사업 성과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계획안 편성 상 비목간 조정 필요

○ 동 사업의 사업수행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에 담당하고 있는 지사의 변동이 없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각 기관에 배분될 비목의 계획안 편성의 변동이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사업수행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는 사업출연금(350-02)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는 민간경상보조(320-01)가 각각 편성됨.

○ 2024년 UAE(두바이) 지사 설립 이후, 해외IT지원센터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싱가포르·하노이·호치민·UAE(두바이) 지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실리콘밸리·도쿄·베이징 지사를 각각 담당하고 있음. 2026년도에도 동일한 체계로 각 기관이 해당 해외 지사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각 사업수행기관별 담당 해외지사 현황(2024~2026)>

기관명	해외지사	기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리콘밸리	2024 ~ 2026(계속)
	도쿄	
	베이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싱가포르	
	하노이	
	호치민	
	UA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이처럼 양 사업수행기관 간의 담당 해외지사의 변동이 없음에도 2026년도 계획안에서는 2025년도 계획액 대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배분될 예정인 사업출연금은 6억 3,800만원 감액되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배분될 예정인 민간경상보조는 동일 금액인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업수행기관 간 연도별 비목간 계획액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목명	2025년 계획액 (A)	2026년 계획안 (B)	증감 (B-A)	(B-A)/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경상보조(320-01)	2,457	3,095	638	26.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출연금(350-02)	4,045	3,407	△638	△15.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따라서, 해외지사 담당에 변동이 없어 업무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기관별 비목 편성에서 불합리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6억 3,800만원 감액하고, 사업출연금(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같은 금액 증액하는 비목간 조정이 필요함.

2)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고유사업 사업출연금에 대한 기관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 동 사업의 교부 대상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법정기관이 아니어서 출연금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 사업은 자율주행 등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 표준 적합성 검증, 실 환경 성능 검증 및 국제공인 인증 시험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험 장비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고 주관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억 7,2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	1,965	1,965	1,572	1,572	1,000	△572	△36.4
○ ICT융합자율주행기반구축	1,965	1,965	1,572	1,572	1,000	△572	△36.4
□ 세출예산비목	1,965	1,965	1,572	1,572	1,000	△572	△36.4
○ 민간경상보조(320-01)	1,965	1,965	-	-	-	-	-
○ 사업출연금(350-02)	-	-	1,572	1,572	1,000	△572	△36.4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고유사업 사업출연금에 대한 기관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 동 사업은 2024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서는 “해당 보조사업을 민간위탁·출연 등으로 비목을 전환하여 정보통신 표준 보급 및 기술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개선 요구가 제시되었음. 이에 따라 2025년도부터는 사업출연금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25년도부터 동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부설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사업출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정보통신기술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출연금을 재교부하고 있음.

○ 동 사업에서 사업출연금이 교부되고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비법정기관으로 고유사업에 대한 출연금 교부 법적 근거가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완의 필요가 있음.

○ 「국가재정법」 제12조[135]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이나,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편성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법률에 근거한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36]에 따르면,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135)「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36)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401.
350-02 사업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또한, 해당 지침[137]에 따르면, 출연금 존속 필요성 판단 기준에는 “기관 설립 근거법상 고유사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폐지 또는 비목 전환을 검토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사업출연금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해당 법률에 근거한 법률상 기관 설립 근거에 따른 고유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가능한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기관 설립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는 부설기관[138]임.

○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출연금 편성 가능 여부는, 기관 설립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 한국연구재단의 기관 고유사업 범위에 자율주행 사업 지원을 위한 국제표준 적합성 검증, 실환경 성능검증,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개발의 수행 시 기획, 평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법률에 따른 고유

137)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265.
□ 출연금 존속 필요성 판단기준
1. 기관 설립 근거법 상 고유사무와 관련 없는 경우 폐지·비목전환 검토

138)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기관의 고유 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는 상태임.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의 목적인 자율주행 관련 표준화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출연금이 편성되는 것은 「국가재정법」과 이에 근거한 지침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면이 있음.

- 「한국연구재단법」 제5조[139]의 사업 규정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사업의 자율주행 관련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을 한국연구재단의 고유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사업의 사업출연금이 편성되는 것은 미흡한 면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140]와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에 대한 정

---

139)「한국연구재단법」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2.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지원
3.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국제협력 촉진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조사·수집·분석·평가·관리·활용과 정책개발 지원
5.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6. 국내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류협력 지원
7. 그 밖에 학술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40)「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인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율주행 관련 통신 시험 등의 업무의 출연금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금 교부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고유사업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기관에 대한 출연금 근거로 보기 어려움. 또한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운영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정관으로서 법률이 아니므로, 고유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법적 근거[141]로 보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3.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홍보·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1)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르면,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므로, 법률이 아닌 정관에 따라 출연금 교부는 어렵다고 보임.

○ 따라서, 동 사업의 교부 대상 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법정기관이 아니어서 출연금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차입금 이자상환지출(7177-301): 차입금 이자 상환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 사업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 상환액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차입금 이자 상환'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정 사용 용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차입금 이자상환지출 사업'은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2023년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차입금 이자액을 매년 상환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억 7,500만원이 증액된 10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지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차입금 이자상환지출	9,326	9,325	10,100	7,554	10,875	775	7.7
□ 세출예산비목	9,326	9,325	10,100	7,554	10,875	775	7.7
○ 차입금이자(510-03)	9,326	9,325	10,100	7,554	10,875	775	7.7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10.

나) 검토의견

□ 차입금 이자 상환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률상 사용 용도에 차입금 이자 상환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142]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 관

14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5. 삭제 <2010. 3. 22.>
6.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적 사용 용도 현황>

법률 조항	사용 용도
제44조제1항제1호	○ 정보통신(전파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제44조제1항제2호	○ 정보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제44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 관련 인력의 양성사업
제44조제1항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외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제44조제1항제6호	○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제44조제1항제7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률상 사용 용도를 감안할 때,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다른 기금들도 자체 재원이 부족한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부터 차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차입 가능성이 있는 기금들의 법률상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군인연금기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을, 기후대응기금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예금보험기금은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을 기금 사용 용도로 명시하고 있

어,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타 기금의 사용 용도 중 차입금 관련 규정 현황>

기금	조항	내용
피해구제자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2조제3호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 제50조제2호	3. 차입금의 상환과 그 이자의 지급
금융안정기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제2호	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제5호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기후대응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8호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남북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7호	7.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예금보험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3항제4호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정보통신사업 진흥법」 제44조제2항[143]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

143) 「정보통신사업 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정함으로써 기금의 법정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고 있는 바,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에 대해서도 기금 사용 용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기금을 활용하여 차입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부적절한 면이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동 사업에서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이자 상환액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차입금 이자 상환’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법정 사용 용도에 명확히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4)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2137-308): 사업준비기간을 감안한 신규 과제와 파견학생 관련 예산의 집행 관리 철저

○ 내역사업인 디지털분야 글로벌연구지원 내역사업의 신규 과제와 파견학생 관련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은 사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내 실집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디지털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대학 자율형, 기업·연구소 연계형)를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최고 석학을 유치하여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연구개발 출연금을 교부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12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8,000	8,000	12,000	12,000	12,000	-	-
○ 디지털분야글로벌연구지원	6,000	6,000	9,000	9,000	9,000	-	-
○ 디지털분야해외석학유치지원	2,000	2,000	3,000	3,000	3,000	-	-
□ 세출예산비목	8,000	8,000	12,000	12,000	12,000	-	-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8,000	8,000	12,000	12,000	12,000	-	-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 산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도와 2026년도 동 사업의 계획액은 동일하나, 2026년도에는 디지털분야 글로벌 연구지원에서 11명의 신규인원을 파견할 예정임. 해당 인원은 지역 다변화(벤쿠버 등)와 동시에 국내 AI·디지털 인재의 파견·공동연구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예정임.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안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12,000	○ 디지털분야글로벌연구지원 : - 계속과제 : 9,000백만원 (99명×91백만원×12/12 개월) ○ 디지털분야해외석학유치지원 : - 계속과제 : 3,000백만원 (2개과제×1,500백만원×12/12개월)	12,000	○ 디지털분야글로벌연구지원 : - 계속과제 : 8,000백만원 (88명×91백만원×12/12 개월) **- 신규과제: 1,000백만원** **(11명×91백만원×12/12 개월)** ○ 디지털분야해외석학유치지원 : 3,000백만원 - 계속과제 : 3,000백만원 (2개과제×1,500백만원×12/12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나) 검토의견

□ 사업준비기간을 감안한 신규 과제와 파견학생 관련 예산의 집행관리 철저

○ 공동과제 협약체결, 파견학생 선정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2026년도 파견학생에 대한 연구개발출연금 예산이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중 디지털분야 글로벌연구지원 내역사업은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동연구, 인턴십, 자율과정(학점연계) 등을 설계하여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석·박사생의 해외 파견(매년 180일 이상)이 이루어지며, 과제 대상으로 글로벌 공동연구비, 학생인건비, 파견학생 해외파견비(여비/체제비 등)이 지원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4년도 디지털분야 글로벌연구지원 내역사업의 신규 파견학생의 사업공고와 협약체결 일시를 살펴보면, 2024년 2월 19일에 사업공고가 이루어졌으며 협약은 2024년 5월 17일에 체결된 것으로 나와, 협약 이후 즉시 파견학생이 선정된다고 가정하여도 사업준비기간이 최소 5개월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분야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의 협약체결 현황>

내역사업	사업공고	협약일시	2026년도 신규 파견학생 예산상 편성기간
디지털분야글로벌연구지원	2024. 2. 19.	2024. 5. 16. ~ 2024. 5. 17.	12개월
디지털분야해외석학유치지원	2024. 5. 9.	2024. 8. 23.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2024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의 신규 과제는 기존 협약 기관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공동 과제를 추가하는 형태에 해당함. 따라서 성격이 다른 2026년도 과제의 경우 공동 과제 협약이 기존 보다 신속히 체결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신규 과제와 파견학생 11명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파견학생 선정에 필요한 공고, 평가, 선정 등에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과제와 파견학생에 대한 연구개발 출연금이 연내 12개월분 전부 실집행되기 위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석·박사생 선정 및 파견과 공동과제의 협약 등을 2026년 1월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동 사업 중 내역사업인 디지털분야 글로벌연구지원 내역사업의 신규 과제와 파견학생 관련 연구개발 출연금 예산은 사업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연내 실집행을 완료하기 위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2232-325):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증축사업의 집행점검 및 일정관리 철저 필요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증축사업은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없는 사업계획, 원자재 가격상승 및 건축허가권자의 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당초 계획한 예산(237억 800만원)의 38.5%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91억 3,500만원) 소요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점검 및 일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가) 사업 개요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사업은 AX 가속화로 전(全)산업에 AI·SW전문인재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 미취업자, 재직자 등 대상으로 창의·혁신적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AI·SW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입·발굴하고, AI활용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산업을 선도할 AI·SW전문인재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계획안에는 2025년도 예산 대비 354억 3,600만원(63.6%)이 증가한 911억 8,8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2026년도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실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액]			
□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81,858	81,858 [81,510]	55,752	55,752 [40,864]	91,188	35,436	63.6
○대학·기업협력형 SW아카데미	16,051	16,051 [16,050]	12,842	12,842 [9,247]	2,190	△10,652	△82.9
○채용연계형SW 전문인재양성	10,883	10,883 [10,816]	9,282	9,282 [6,682]	-	△9,282	순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19,309	19,309 [19,228]	10,059	10,059 [8,642]	45,127	35,068	348.6
○SW마에스트로	9,700	9,700 [9,696]	7,760	7,760 [5,588]	27,700	19,940	256.9
○산업재직자 AI역량강화	10,200	10,200 [10,068]	6,780	6,780 [4,203]	8,400	1,620	23.9
○SW역량검정	2,500	2,500 [2,497]	2,000	2,000 [1,440]	3,000	1,000	50.0
○디지털콘텐츠 인력양성	12,225	12,225 [12,173]	6,237	6,237 [4,491]	4,771	△1,466	△23.5
○AI·디지털기반 미디어융합인재	990	990 [982]	792	792 [571]	-	△790	순감
□ 세출예산비목	81,858	81,858 [81,510]	55,752	55,752 [40,864]	91,188	35,436	63.6
○사업출연금(350-02)	81,858	81,858 [81,510]	55,752	55,752 [40,864]	91,188	35,436	63.6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증축사업의 집행점검 및 일정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은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국내·외 잠재력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여 창의·혁신적인 AI·SW 인재를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는 2025년도 예산(100억 5,900만원)보다 350억 6,800만원(348.6%)이 증가한 451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출연하여 수행할 계획임.

- 동 사업의 산출내역 중 ‘AI이노베이션아카데미고도화, AI이노베이션아카데미확산, AI네이티브과정’은 자기주도·동료학습 중심의 한국형 혁신 AI·SW 플랫폼 도입, 신규지역(대전, 경남)으로의 확산, 현장형 AI·SW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반면,

  ‘이노베이션아카데미운영’의 91억 3,500만원은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시설 증축사업의 예산임.

<2026년도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비고
45,127백만원	사업출연금(350-02) : 45,127백만원 • (이노베이션아카데미운영) 9,135백만원 - 건축공사 7,755백만원 + 전기공사 1,067백만원 + 통신공사 207백만원 + 소방공사 106백만원 • (AI이노베이션아카데미고도화) 13,742백만원 - 교육비 4,250백만원(300명) + 교육기관 운영 및 시설구축 관리 5,292백만원 + 플랫폼 관리·운영·업데이트 3,200백만원 + 사업관리비 1,000백만원 • (AI이노베이션아카데미확산) 14,500백만원 - 신규 2개소(대전, 경남) x 7,250백만원 • (AI네이티브과정) 7,750백만원 - 교육비 5,750백만원(400명) + 해외연수 2,000백만원(40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시설 증축사업은 2019년도에 최초로 계획되었고 2022년 내 완공 및 시설물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였음.

<2019년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시설 증축 최초 계획>

장 소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열림관(체육관) 위치
규 모	약 6,600㎡(약 2,000평, 지하 1층~지상5층) - 코딩룸(고정석 600석, 자유석 150석), 멘토링룸, 휴게공간
총 사업비	237.08억원
총 사업기간	2년 6개월 내외(**2022년 말 완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 추가, 설계기간 연장, 건축허가 지연, 심의기간 연장, 관련 요구사항 대응 등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

되면서 증축공사는 2025년도에 시작되었고, 10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임.

○ 이에 따라 당초 총사업비 예산 237억 800만원 중 87억 3,400만원(36.84%)이 집행되는데 그쳤고, 2020년도부터 매년 발생한 이월액을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음.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시설 증축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2025. 10월말 기준)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0년	7,902	-	7,902	11	0.14	7,891	-
2021년	7,903	7,891	15,794	794	5.03	15,000	-
2022년	7,903	15,000	22,903	61	0.27	22,842	-
2023년	-	22,842	22,842	-	-	22,842	-
2024년	-	22,842	22,842	2,735	1.97	20,107	-
2025년	-	20,107	20,107	5,133	25.53	-	-
총사업비	**23,708**			**8,734**	**36.8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2026년 12월까지 건물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당초 계획(2022년 완공)보다 4년 지연된 것임.

○ 결국 공사 지연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건축비 증가분 등 추가 소요예산 9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이는 사업의 추진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없는 사업계획, 원자재 가격상승 및 건축허가권자의 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로, 결국 당초 계획한 예산(237억 800만원)의 38.5%에 해당하는 추가 예산(91억 3,500만원) 소요가 발생하였음.

○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의 집행점검 및 일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6) 사이버보안펀드 조성(2333-306): 타 정책펀드와 차별화된 유망기업 투자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이버보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통해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보안 펀드를 통해 기업에 투자할 때 다른 정책펀드와 차별화된 유망기업 등 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사업은 사이버보안 기술(AI, 클라우드, ZT[144], 융합보안 등)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M&A를 통한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원 감소한 80억원을 편성하였음.

○ 해당 사업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규모 정보보호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정보보호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하고 있음.

144) 제로트러스트(Zero Trust, ZT)란 일체의 사용자와 프로세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모든 사용자와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과 트랜잭션에 확인을 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이버보안 전략임.

<2026년도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20,000	20,000	10,000	10,000	8,000	△2,000	△20.0
□ 세출예산비목	20,000	20,000	10,000	10,000	8,000	△2,000	△20.0
○ 일반출자금(460-01)	20,000	20,000	10,000	10,000	8,000	△2,000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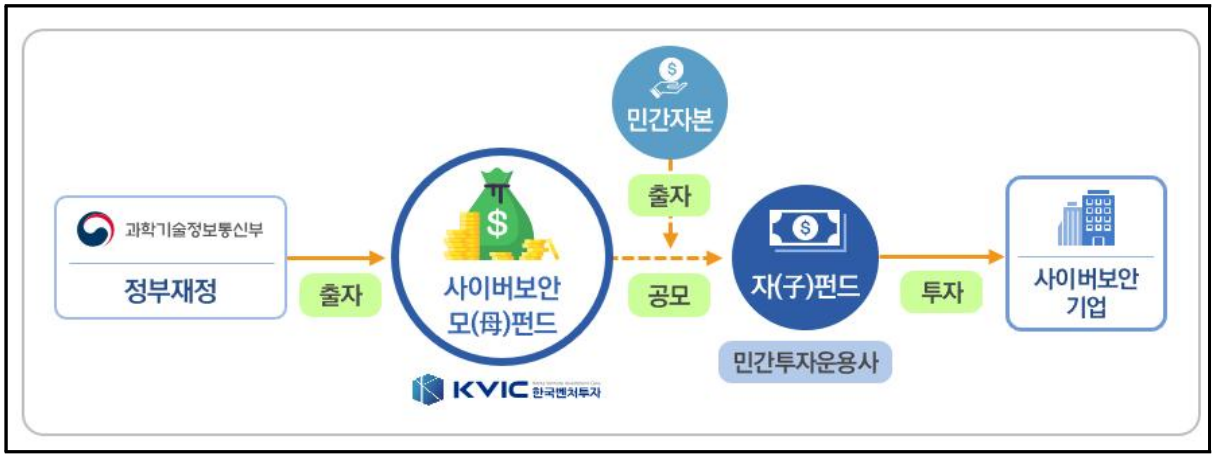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타 정책펀드와 차별화된 유망기업 투자 지원 방안 검토 필요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를 선정하고 정부출자금과 동일한 비율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자펀드를 구성하는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짐.

<사이버보안펀드 조성 투자 구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동 사업은 사이버보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처음 편성되었으며 정보보호산업(물리보안 제외)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 중 ① 사이버보안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②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 기업, ③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145]에 50% 이상을 투자해야 함.

<2024~2025년도 사이버보안펀드 개요>

구분	2024	2025
주목적투자 대상 및 의무비율	○ 정보보호산업(물리보안 제외)에 해당하는 중소·벤처 기업에 50% 이상 투자, 단, ①, ②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사이버보안 기술(AI, ZT, 융합보안, 클라우드 등)을 보유한 혁신기업 ②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에 투자	○ 정보보호산업(물리보안 제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50% 이상 투자, 단,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사이버보안 기술(AI, ZT, 융합보안, 클라우드 등)을 보유한 혁신기업 ②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한 M&A에 투자 ③ 해외에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에 투자
정부출자비율	50%	50%
결성목표액	400억원	200억원
선정운용사수	2개	1개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200억원	200억원
신청가능 조합형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145) 주목적투자대상 요건 ③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합작법인을 설립한 사이버보안 기업은 2025년도 사업 추진부터 추가된 요건임.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조성하고 자금을 출자하여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음.

<스타트업코리아펀드 투자의무대상>

○ 다음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대상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① 10대 초격차 분야* 중소기업 ② 정부가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10대 초격차 분야 : ❶시스템반도체, ❷바이오·헬스, ❸미래 모빌리티, ❹친환경·에너지, ❺로봇, ❻빅데이터·AI, **❼사이버보안·네트워크**, ❽우주항공·해양, ❾차세대 원전, ❿양자기술

○ 그런데, 사이버보안 펀드의 지원 대상인 사이버보안 분야 중소기업은 스타트업코리아 펀드를 통해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이버보안 펀드로 기업을 지원할 때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지원 기업을 제외하는 별도의 조건은 두고 있지 않아 일부 기업이 두 정책펀드로부터 복수 지원을 받을 우려가 있음.

○ 두 정책펀드의 투자의무대상이 일부 중복될 경우 특정 기업이 각각의 정책펀드로부터 복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정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할 여지가 있음

○ 특히, 최근 방송·통신분야의 실적 악화에 따른 부담금 수입감소로 인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이 축소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펀드를 포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책펀드 출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동 사업을 통한 자금 지원대상을 세부 분야로 분리하거나 기업 성장 단계별로 나누는 등 사이버보안 기업에 투자하는 다른 정책펀드와 차별화된 투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같은 다른 정책펀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이미 지원받은 기업을 사이버보안 펀드로 중복하여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정책펀드와 차별화된 유망기업 등 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2333-308):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사업 기능 강화 및 상위과정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차세대보안리더양성 프로그램 중 '화이트햇스쿨'은 최고급 과정인 BOB의 선수과정 성격임을 고려할 때, 우수한 중·고등학생 인재의 발굴·성장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중·고등학생 참여율이 낮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가디언즈' 사업의 기능을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화이트햇스쿨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대학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운영 수와 인력 배출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수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력의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사업은 정보보호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인력양성 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원 증가한 23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세부적으로 ① 대학의 정규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정규교육)', ② 중·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중·단기 교육)', ③ 정보보호 관련 활동 및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

하는 ‘정책기반’까지 총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6년도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24,101	24,101	22,155	15,951	23,655	1,500	△6.8
○ 교육훈련(정규교육)	3,500	3,500	3,500	2,328	5,000	1,500	△42.9
○ 교육훈련(중·단기 교육)	19,650	19,650	17,704	12,908	17,704	0	△0.0
○ 정책기반	951	951	951	781	951	0	△0.0
□ 세출예산비목	24,101	24,101	22,155	15,951	23,655	1,500	△6.8
○ 일반출자금(460-01)	24,101	24,101	22,155	15,951	23,655	1,500	△6.8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 사업 기능 강화 및 상위과정과의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교육훈련(중·단기 교육)’의 내내역사업 ‘차세대보안리더 양성’은 정보보호 분야 잠재력을 보유한 청년층(만 26세 이하)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가의 교육 및 멘토링 제공을 통해 중·고급 화이트해커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차세대보안리더(BoB)’와 ‘화이트햇스쿨’ 2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 ‘차세대보안리더(BoB)’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비재직자를 대상으로 단계별·트랙별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인재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5년에는 BoB 14기 172명이 선발되어 7월부터 교육 중임.

<2025년도 차세대보안리더(BoB) 추진 계획>

1단계	→	2단계	→	3단계	→	인증
공통교육, 전공트랙교육		팀 프로젝트 및 실무·실습		분야별 심화과정 (프로젝트 고도화)		우수 인재 및 프로젝트팀 선정
’26. 7~8월		’26. 9~12월		’27. 1~2월		’27. 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화이트햇스쿨’은 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비재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정보보호 기초·필수교육 및 수준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5년에는 3기 420명이 선발되어 3월부터 교육 중임.

<2025년도 화이트햇스쿨 추진 계획>

1단계	→	2단계	→	3단계	→	인증
기초·교양교육, 필수교육		프로젝트 및 멘토링		수준별 교육 및 온라인 CTF		우수 인재 선정
’26. 3~4월		’26. 5~7월		’26. 8월		’26. 9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그런데, 두 프로그램 모두 지원자를 선발할 때 현재 학력이나 연령대 등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필기시험, 면접 등[146]을 총괄로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2025년 기준 각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된 중·고등학생의 비중은 BOB가 4.1%(7명), 화이트햇스쿨이 3.5%(15명)에 불과한 상황임.

<2025년 차세대보안리더 및 화이트햇스쿨 교육생 선발현황>

과정	구분	인원(명)	비율(%)
BoB 14기 (25.7.~26.3.)	고등학생	7	4.1
	대학생 (전문대, 학점은행제 포함)	165	95.9
	합계	172	100.0
화이트햇스쿨 3기 (25.3.~25.9.)	중학생	1	0.2
	고등학생	14	3.3
	대학생 (전문대, 학점은행제 포함)	405	96.4
	합계	420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화이트햇스쿨은 최고급 과정인 BoB의 선수(先修)과정 성격으로 운영 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우수한 중·고등학생이 화이트햇스쿨에 선발되는 것이 바람직함.

---

146)차세대보안리더(BoB) : 1차 서류전형(지원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 2차 인적성 검사/필기시험/심층면접
화이트햇스쿨 : 1차 서류전형(지원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 2차 인적성 검사/필기시험/면접(AI면접, 비대면 면접)

- 참고로, 현재도 화이트햇스쿨 수료생이 BoB 교육프로그램에 지원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BoB 수료생이 취업 후 화이트햇스쿨 멘토로 활동하고 있음.

○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역사업 ‘정보보호인력양성기반구축’의 내내역사업인 ‘사이버 가디언즈’ 사업을 통해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진로 탐색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생 대상 사업인 ‘사이버 가디언즈’의 교육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화이트햇스쿨 선발 시 ‘사이버 가디언즈’ 활동 결과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내역사업인 ‘차세대보안리더양성’을 추진할 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가디언즈’ 사업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위과정인 화이트햇스쿨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수한 중·고등학생의 화이트햇스쿨 참여율 향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을 통한 장기적인 인력양성 목표 설정 필요

○ 내역사업 ‘교육훈련(정규교육)’의 내내역사업 ‘정보보호특성화대학’은 국내 4년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실습장 구축, 커리큘럼 개발 및 산학협력 등을 지원하여 학부 과정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직무중심의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임.

○ 정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매년 1,400~2,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을 통한 정보보호 관련 전공자의 배출이 중요한 상황임.

○ 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4년 동안 대학별로 5억원을 지원하되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학당 매년 수혜인원(학부 과정 3~4학년) 30명 이상을 목표로 설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5년에 3개 대학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현재 총 4개 대학(고려대, 아주대, 서울여대, 충북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7개 대학(고려대(세종), 세종대, 성신여대, 전남대, 충남대, KAIST, 강원대)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임.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 현황(2025년 기준)>

구분	학교명	학과(전공)명	사업기간
지원 완료	고려대	정보보호융합전공	'15~'20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15~'20
	서울여대	기업보안융합연계전공	'15~'20
	충북대	정보경영학과 보안컨설팅전공	'16~'21
지원중	고려대(세종)	인공지능사이버보안학과	'21~'26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21~'26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22~'25
	전남대	인공지능학부 정보보안전공	'23~'26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23~'26
	KAIST	전산학부(정보보호특성화트랙)	'24~'27
	강원대	사이버보안융합학과	'24~'27

자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 10.

○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026년까지 10개 대학 지원이라는 단순 지원 실적을 설정했을 뿐,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양성 목표나 지원대상 학부과정의 규모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원대학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보호 관련 학과 및 전공의 개설 현황, 졸업생 수급 실태, 산업계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매년 필요한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어느 시점까지 몇 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동 사업으로 지원한 정보보호특성화대학에서 배출된 졸업생 수는 410명이나 정보보호 전문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 규모를 알기 어려움.

○ 정보보호 부문은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함께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대학의 정보보호 관련 학과·전공을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특정 시점을 정하여 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아래에서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의 정보보호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수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력의 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8)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2602-333): 취지와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내역사업 간 차별화된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과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는 국내 데이터센터 지원이라는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내역사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은 데이터센터 관련 국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4억 5,000만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	-	13,200	8,944	4,750	△8,450	△64.0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발전 지원			9,500	5,890	3,450	△6,050	△63.7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3,700	3,054	1,300	△2,400	△64.9
□ 세출예산비목	-	-	13,200	8,944	4,750	△8,450	△64.0
○사업출연금(350-02)	-	-	13,200	8,944	4,750	△8,450	△64.0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취지와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내역사업의 차별화된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국산 장비 및 SW[147]의 개발·실증 고도화, ② 데이터센터 장비·SW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③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④ 산업 인식개선 및 홍보 추진 등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기술 자립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 그리고, 내역사업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는 ①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데이터센터 분산 기반 조성, ② 친환경·고효율 장비·SW 실증 지원, ③ 부산 등 지역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④ 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친환경 전환 및 균형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원래 다른 세부사업인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의 내역사업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내내역사업이었으나,

1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핵심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부문별 추정 국산화율은 서버 3.03%, 스토리지 1.82%, 네트워크 11.02% 수준임.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어 편성됨.

<내역사업 간 주요 사항 비교>

구분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발전 지원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사업 규모	○ 2025년 : 9,500백만원 ○ 2026년 : 3,450백만원	○ 2025년 : 3,700백만원 ○ 2026년 : 1,300백만원
사업 기간	○ 2025년~(계속)	○ 2024년~(계속)
취지	○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원 추진	○ 데이터센터 탄소중립 및 지방분산 활성화 기반 조성
주요 내용	○ 국산 장비 개발·실증지원 ○ 테스트베드 조성·활용 ○ 규제발굴 개선, 홍보 등	○ 친환경 기술 실증 ○ 지역집적단지 활성화 지원 ○ 비수도권 전문인력 양성 ○ 실태조사
출연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 그런데, 두 내역사업은 모두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유사한 취지로 편성되었고 장비·SW 실증 지원, 법제도·규제 개선 지원 등 주요 내용이 중첩되어 있으며 출연기관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동일하여 지원 대상이 중첩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서로 유사한 사업을 같은 수행기관이 추진하면서 사업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산의 중복투입, 지원 대상 간

형평성 저해, 사업 성과관리의 분절화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예를 들어, 현재도 두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 간 사업 추진 사항이 유사하여 서로 연계하여 수행하는 부분이 있어 유사한 사항은 같은 내역사업에서 추진하도록 사업 구조를 개편하면 내역사업 간 차별회된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예컨대,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의 내내역사업인 ‘친환경·고효율 장비 실증 지원’을 추진할 때,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사업에서 구축한 테스트베드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실증 비용을 절감하고 결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음.

○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로 유사한 내역사업이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사업 중복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사업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두 내역사업이 서로 차별화되어 관리·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 총 괄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지출 규모는 2,372억 6,200만원으로, 2025년도 2,422억 6,600만원 대비 50억 400만원(△2.1%) 감소하였음.

○ 2026년도 예산안(일반회계)의 총지출 규모는 521억 7,800만원으로, 2025년도 487억 3,800만원 대비 34억 4,000만원(7.1%)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850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1,935억 2,800만원 대비 84억 4,400만원(△4.4%)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지출 계(A+B)	242,266	237,262	△5,004	△2.1
예산(일반회계)(A)	48,738	52,178	3,440	7.1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B)	193,528	185,084	△8,444	△4.4

주: '25.9.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이 제외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2026년도 재원배분 방향

○ 2026년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 조성, ②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 조성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 조성을 위해서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위치정보 사업 모델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화를 지원하며, 안전한 AI 활용기반 조성 및 불법스팸·불법유해정보 차단 등을 통해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②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맞춤형 TV 보급 확대를 통해 소외계층의 시청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및 방송정보 가치정보 분석 등을 실시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정책을 조성한다.	1,154	55.7
• 전략목표 2 : 국민이 행복한 이용자 정책을 조성한다	917	44.3
계	2,071	100.0

자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과계획서

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12개 세부사업을 이관받았고, 해당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안은 393억 3,500만원임.

○ 주요 이관사업은 ‘디지털이노베이션 기술개발’사업 97억 9,600만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 41억 5,700만원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이관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미디어 핵심기술개발(R&D)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 미디어 핵심기술개발 (R&D)	4,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재난관리 (정보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미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87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1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2,4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16,7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발전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발전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170
합계						39,335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는데, 2025년도 예산 309억 5,100만원에 비하여 104억 400만원(△33.6%) 감액된 205억 4,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증감액(B-A)	증감률(%)
벌금 및 과료	6	6	0	0.0
과태료	4,077	4,077	0	0.0
과징금	25,585	15,134	△10,451	△40.8
가산금	180	200	20	11.1
기타경상이전수입	979	979	0	0.0
면허료 및 수수료	74	78	4	5.4
기타 잡수입	1	1	0	0.0
기타재산이자수입	49	72	23	46.9
계	30,951	20,547	△10,404	△33.6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벌금 및 과료[148]는 2010년 이전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예산액 수준인 600만원이 편성됨.

148) 2010년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벌금 및 과료'로, 이후 부과된 과태료는 2010년 신설된 '과태료' 항목으로 계상됨.

○ 과태료는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수준인 40억 7,700만원이 편성됨.

○ 과징금 역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104억 5,100만원(△40.8)이 감액된 151억 3,400만원이 편성됨.

○ 가산금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데,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2,000만원(11.1%) 증액된 2억원이 편성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금 및 소송비용 보전금 등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액 수준인 9억 7,900만원이 편성됨.

○ 면허료 및 수수료는 방송국 및 방송보조국 허가 신청 수수료로 2025년도 대비 400만원(5.4%) 증액된 7,800만원으로 편성됨.

○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출연 및 보조사업비 예치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대비 2,300만원(46.9%) 증액된 7,200만원로 편성됨.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1억 7,800만원으로, 2025년도 487억 3,800만원 대비 34억 4,400만원(7.1%) 증액 편성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건비	24,486	25,407	26,732	1,325	5.2
기본경비	4,275	3,563	3,611	48	1.3
주요사업비	19,246	19,768	21,835	2,067	10.5
계	48,007	48,738	52,178	3,440	7.1

주: '25.9.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인건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67억 3,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254억 700만원 대비 13억 2,500만원(5.2%)이 증액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건비 합계	24,488	25,407	26,732	1,325	5.2
□ 세 목 별					
○ 보 수(110-01)	23,463	24,050	25,366	1,316	5.5
○ 기타직보수(110-02)	909	1,171	1,172	1	0.1
○ 연가보상비(110-05)	116	186	194	8	4.3

주: '25.9.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인건비 처우개선 및 전문임기제 채용 등으로 전체 인건비는 13억 2,500백만원 증액됨.

3) 기본경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36억 1,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35억 6,300만원 대비 4,800만원(1.3%)이 증액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액인건비대상	운영지원과	1,169	1,087	1,119	32	2.9
	기획조정관	162	178	190	12	6.7
	대변인	73	78	83	5	6.4
	방송정책국	21	24	24	0	0.0
	이용자정책국	33	34	34	0	0.0
	방송기반국	12	17	15	△2	△11.8
	방송통신사무소	93	106	106	0	0.0
	소 계(A)	1,563	1,524	1,571	47	3.1
총액인건비대상	운영지원과	760	598	655	57	9.5
	기획조정관	1,301	714	714	0	0.0
	대변인	42	47	42	△5	△10.6
	방송정책국	117	107	137	30	28.0
	이용자정책국	140	153	140	△13	△8.5
	방송기반국	95	100	95	△5	5.0
	방송통신사무소	257	320	257	△63	△19.7
	소 계(B)	2,712	2,039	2,040	1	△0.0
합 계(A+B)		4,275	3,563	3,611	48	1.3

* 2025년 9월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정부조직개편('25.10.1.)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진흥국 기본경비는 제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218억 3,5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97억 6,800만원 대비 20억 6,700만원(10.5%)이 증액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합 계	19,246	19,768	2,1835	2,067	10.5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497	1,940	2,338	398	20.5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	2,080	2,705	2,401	△304	△11.2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15	215	183	△32	△14.9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3,221	3,201	3,304	103	3.2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	5,642	6,089	5,480	△609	△10.0
EBS 방송인프라개선	983	1,210	1,144	△66	△5.5
국내외협력 업무수행	574	442	442	0	0.0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87	361	366	5	1.4
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34	237	242	5	2.1
법정위원회운영	131	202	347	145	71.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설운영	946	969	857	△112	△11.6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지원	108	185	205	20	10.8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248	841	3,530	2,689	319.7
행정사무정보화	1,080	1,171	996	△175	△14.9

주 1. 음영: 증액사업

주 2 2025년 9월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조직개편('25.10.1.)으로 인해 과기정통부로부터 이체·이관받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은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26억 8,900만원(319.7%) 증가한 35억 3,000만원이 편성됨.

- ‘법정위원회운영’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억 4,500만원(71.8%) 증가한 3억 4,700만원이 편성됨.

3. 기금운용계획안

가. 수입계획안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규모는 9,986억원 2,400만원으로, 2025년도 수정대비 1,181억 7,400만원(13.4%)이 증가하였음.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 당초	2025 수정(A)	2026 계획안(B)	증 감 (B-A)	(B-A)/A
수입 합계	870,450	880,450	998,624	118,174	13.4%
□ 자체수입	638,778	638,778	873,303	234,525	36.7%
○ 법정부담금	563,333	563,333	848,525	285,192	50.6%
○ 재산수입	5,320	5,320	3,133	△2,187	△41.1%
○ 기타수입	70,125	70,125	21,645	△48,480	△69.1%
□ 정부내부수입	177,258	187,258	-	△187,258	△100.0%
○ 공자기금 예탁원금회수	-	-	-	0	0.0
○ 공자기금 예탁이자수입	-	-	-	0	0.0
○ 공자기금 예수금	177,258	187,258	-	△187,258	△100.0%
□ 여유자금회수	54,414	54,414	125,321	70,907	130.3%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미통위·과기정통부 공동관리기금으로 수입은 통합하여 작성

○ 첫째, 자체수입 중 법정부담금은 방송사 분담금 및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으로, 법정부담금 8,485억 2,500만원 중 주파수할당대가는 6,959억 1,700만원이고 방송사분담금은 1,526억원 800만원임.

- 주파수할당대가는 주파수 재할당 등에 따라 2025년도 대비 2,898억 700만원 증가된 6,95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방송사 분담금은 IPTV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25년도 대비 46억 1,500만원 감소된 1,526억 800만원이 편성됨.

<방송사 분담금 수입 예산>

(단위: 백만원)

소관	사업자	2026년 전망액
방미통위	지상파	20,949
	종편·보도 PP	7,177
	종합유선(SO)	23,516
	위성방송	7,009
	IPTV	77,302
	홈쇼핑	16,655
합 계		152,608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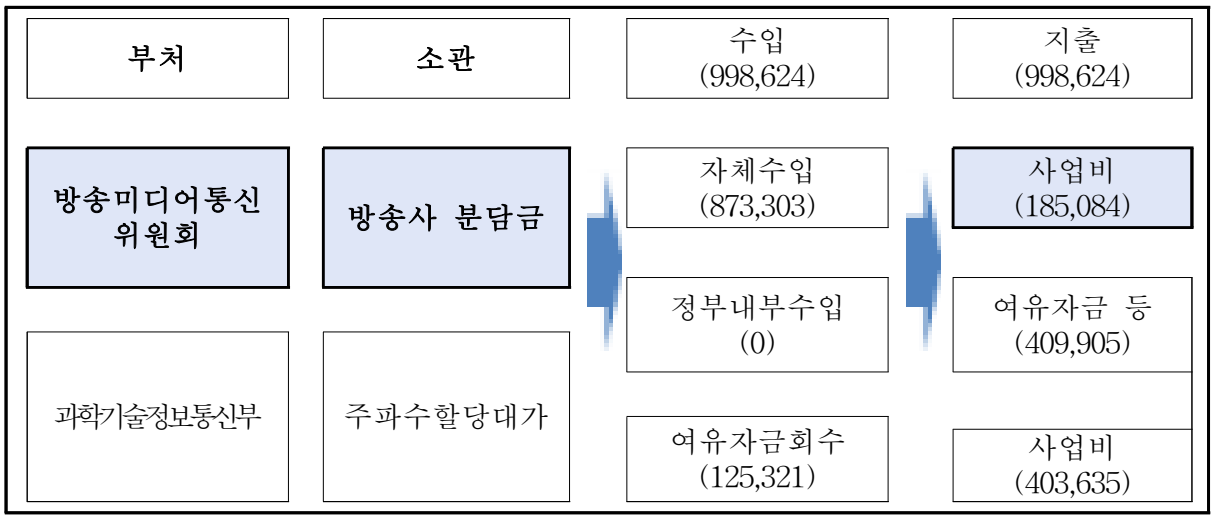
- 재산수입은 기금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25년도 대비 21억 8,700만원 감소한 31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2025년도 대비 484억 8,000만원 감소한 216억 4,500만원이 편성됨.

○ 둘째,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025년 대비 전액 감소하여 편성되지 않음.

○ 셋째, 여유자금회수는 통화 및 비통화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026년도에는 2025년 기금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2025년도 대비 709억 700만원 증가한 1,253억 2,1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 개요>

(단위: 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지출계획안

1) 총 괄

○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은 9,986억 2,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1,181억 7,400만원(13.4%)이 증액 편성되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지출계획안은 1,850억 8,400만원으로, 2025년도 대비 90억 3,400만원(△4.7%)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A)	2026 계획(B)	증 감 (B-A)	(B-A)/A
지출 합계	880,450	998,624	118,174	13.4%
○ 사업비	738,456	588,719	△149,737	△20.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94,118	185,084	△9,034	△4.7
▪ [3131]방송인프라지원	58,228	57,817	△411	△0.7
▪ [3132]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76,742	74,887	△1,855	△2.4
▪ [3133]시청자권익보호 및 참여활성화	23,709	19,957	△3,752	△15.8
▪ [3134]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8,285	5,523	△2,762	△33.3
▪ [3135]방송통신운영지원	6,712	6,499	△213	△3.2
▪ [3251]안전한인터넷정보활용기반구축	20,442	20,401	△41	△0.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4,338	403,635	△140,703	△25.8
○ 기금운영비	4,073	4,102	29	0.7
○ 정부내부지출	46,248	100,239	53,991	116.7
- 기금예수이자상환	46,248	50,239	3,991	8.6
- 기금예수원금상환	0	50,000	50,000	순증
○ 여유자금운용	91,673	305,564	213,891	233.3

주 1. 2025년은 수정액을 기준으로 작성
주 2 2025년 9월 제출된 정부예산안 기준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소관 지출 계획안 중 기금운영비는 41억 200만원으로 2,900만원(0.7%) 증액되었고, 기금예수이자상환은 502억 3,9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39억 9,100만원(8.6%)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금예수원금상환을 500억원 신규 편성하였고, 여유자금운용은 3,055억 6,4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2,138억 9,100만원(233.3%)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사업비

○ 2026년도 사업비 계획안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방송인프라 지원 4억 1,100만원(△0.7%),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18억 5,500만원(△2.4%),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37억 5,200만원(△15.8%),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27억 6,200만원(△33.3%), 방송통신 운영지원 2억 1,300만원(△3.2%),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4,100만원(△0.2%)이 2025년도 계획 대비 감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비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계획(B)	증 감 (B-A)	(B-A)/A
□ 사업비	200,478	194,118	185,084	△9,034	△4.7
○ 방송인프라지원	61,710	58,228	57,817	△411	△0.7
-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2,774	30,064	31,083	1,019	3.4
-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	13,430	12,070	11,022	△1,048	△8.7
- 국악방송 지원	5,842	5,258	4,732	△526	△10.0
-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5,034	6,272	5,916	△356	△5.7
- 지역·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강화	4,530	4,464	4,964	500	11.2
- AM라디오송출지원	100	100	100	-	-
○ 미디어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77,419	76,742	74,887	△1,855	△2.4
- 미디어다양성증진	3,290	3,290	2,155	△1,135	△34.5
-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468	457	457	-	-
-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0,176	21,870	19,677	△2,193	△10.0
-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13,802	14,545	14,719	174	1.2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6,052	33,630	34,893	1,263	3.8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	1,770	1,640	1,692	52	3.2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조사 지원	622	565	620	55	9.7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	300	270	270	-	-
- 인터넷환경의 신뢰도 기반조성	939	475	404	△71	△14.9
○ 시청자 권익보호 및 참여 활성화	23,099	23,709	19,957	△3,752	△15.8
-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1,444	1,276	894	△382	△29.9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1,655	22,433	18,863	△3,570	△15.9
-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	-	200	200	순증
○ 방송콘텐츠 경쟁력강화	9,643	8,285	5,523	△2,762	△33.3
- 방송콘텐츠 기반강화	297	290	270	△20	△6.9
- 방송평가 기반조성	871	850	508	△342	△40.2
- 방송광고 공공인프라구축지원	2,449	1,932	1,352	△580	△30.0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2,356	1,883	944	△939	△49.9
- 방송정보활용기반 체계화	202	452	407	△45	△10.0
-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2,868	2,278	1,442	△836	△36.7
- OTT산업 경쟁력 강화	600	600	600	-	-
○ 방송통신 운영지원	7,278	6,712	6,499	△213	△3.2
-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2,392	2,400	1,768	△632	△26.3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2,148	1,626	1,445	△181	△11.1
- 재난방송 운영지원	2,738	2,686	3,286	600	22.3
○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 기반구축	21,329	20,442	20,401	△41	△0.2
-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지원체계 강화	1,400	1,360	1,088	△272	△20.0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629	1,466	2,291	825	56.3
-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	6,463	6,140	5,219	△921	△15.0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830	792	781	△11	△1.4
- 위치정보산업활성화기반구축	1,970	1,920	1,920	-	-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4,662	4,195	4,991	796	19.0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3,230	3,370	2,864	△506	△15.0
- 인터넷이용자보호 지원	1,145	921	969	48	5.2
- 안전한 AI활용 기반조성	-	278	278	-	-

주: 음영은 10% 이상 증액사업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세부사업별로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2억원이 신규 편성됨.

○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아동·청소년 유해정보·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보호 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신규 내역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이 반영되어 2025년도 예산 대비 8억 2,500만원(56.3%) 증가한 22억 9,100만원이 편성됨.

○ ‘재난방송 운영지원’ 사업은 방송을 통한 정확·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으로 태풍·지진·산불 등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원(22.3%) 증가한 32억 8,600만원이 편성됨.

Ⅱ. 검토의견

1. 총괄

1)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안 조정 필요사항

○ 방미통위 상임위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고 비상임위원이 0명에서 4명으로 증가 됨에 따라, 상임위원 인건비 감액, 비상임위원의 경우 회의 관련 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 ○ 방미심위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직급수준, 인건비 및 관련 경비 지급방식, 방미심위 위원 인건비 수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할 필요 ○ 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진흥국'이 신설되고 관련 인력 및 사업이 이관되면서 관련 경비는 물론, 추후 위원회 구성·운영을 대비한 기관 기본경비 수준에 대한 고려 필요

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변동 개요

○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조직 및 인력의 변동이 발생하였음.

- 舊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

으로 그 구성이 변경되었음.

- 또한,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였던 유료방송 등 방송진흥과 관련된 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방송미디어진흥국'이 신설되는 등 정원이 33명 증가하였음.

< 조직개편 전/후 정·현원 >

구분		계	장관급	차관급	고공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	개편후	316	1	2	8	7	17	21	96	164
	개편전	283	1	4	7	6	15	19	81	150
현원	개편후	338	0	0	8	8	18	19	117	168
	개편전	306	1	0	7	8	16	17	103	154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에 따라 2025년 10월 1일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전입되는 인원 3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이 이체되었음.

- 인건비의 경우 전입인원 33명에 대한 연봉월액 계산 후 3개월 예산을 산정하여 이체하였고, 기본경비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국의 기본경비 사업예산의 1월부터 9월까지의 집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이체함.

< 인건비, 기본경비 예산 이체 현황 >

세부사업(주는 소관)	세목	이체 금액	세부사업(받는소관)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특근매식비	12,051,450원	방송미디어진흥국 (총액대상)
	기타운영비	3,339,620원	
	직책수행경비	8,656,460원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4,174,690원	방송미디어진흥국
	공공요금및제세	1,039,700원	
	임차료	6,258,900원	
	국내여비	14,553,000원	
	국외업무여비	3,847,550원	
	관서업무추진비	3,452,870원	
총액대상 인건비	보수	579,385,880원	방송미디어진흥국 인건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방미통위 정무직공무원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 조정 필요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방미통위 위원 관련 인건비 및 기본경비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부안 편성 시점 8월 말은 조직개편 이전 舊방통위 정무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방미통위 위원 관련 인건비 및 기본경비 편성현황>

구 분	세 목	예 산	산출내역	비 고
2025년 예산	보수	555,405	**봉급** 1. 장관(급) 12,111,000원*1명*12개월*1.034 2. 차관(급) 11,762,000원*4명*12개월*1.034 **가족수당** 1. 장관(급) 40,000원*1명*12개월 **정액급식비** 1. 장관(급) 1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140,000원*4명*12개월 **직급보조비** 1. 장관(급) 1,2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950,000원*4명*12개월 **조정재원(국회)** : △248,000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 인건비 248,000천원 삭감
	기타운영비	0	-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장급 이상 비서실 운영비, 직책수행경비 전액 삭감
	직책수행경비	0	-	
2026년 예산안	보수	830,550	**봉급** 1. 장관(급) 12,474,300원*1명*12개월*1.0397 2. 차관(급) 12,114,800원*4명*12개월*1.0397 **가족수당** 1. 차관(급) 120,000원*1명*12개월 **정액급식비** 1. 장관(급) 1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140,000원*4명*12개월 **직급보조비** 1. 장관(급) 1,240,000원*1명*12개월 2. 차관(급) 950,000원*4명*12개월	정부안 편성 시점(8월)은 조직개편 이전으로 기존 방통위 정무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기타운영비	0	-	'25년 예산을 베이스로 편성하여 별도 증액 내역은 없음
	직책수행경비	0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상임위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고 비상임위원이 0명에서 4명으로 증가 됨에 따라,[149] 상임위원 인건비 감액, 비상임위원의 경우 회의 관련 수당을 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 본부(총액대상)(7101-101) 내 보수(110-01)에서 상임위원 2명분 인건비 328,464,000원을 감액하고, 비상임위원의 회의 관련 수당으로 170,080,000원을 기획조정관(7111-212) 내 일반수용비(210-01)에 증액할 필요가 있음.

< 정무직 공무원 인건비 변동내역 >

구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비고
위원장	172,194천원 (14,350천원*12월*1명=)	172,194천원 (14,350천원*12월*1명=)	1명
부위원장	164,229천원 (13,686천원*12월*1명=)	164,229천원 (13,686천원*12월*1명=)	1명
상임위원	492,696천원 (13,686천원*12월*3명=)	164,229천원 (13,686천원*12월*1명=)	**3명→1명**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회의관련 수당 산출내역 >

구 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회의 관련 수당	비상임 위원	- (미편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전원 상임위원으로 위원회 회의 관련 수당 미지급	17,008만원 ▪ 회의참석수당 : 3,340만원 - (대면회의) 4인 × 33회 × 15만원 - (서면회의) 4인 × 34회 × 10만원 ▪ 안건검토비 : 10,720만원 - 4인 × 67회(대면+서면) × 40만원 ▪ 여비 : 2,948만원 - (교통비) 2인 × 67회(대면) × 12만원 - (숙박비) 2인 × 67회(대면) × 10만원
합 계		-	17,008만원

주: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현행법 또는 개정안에 따른 정원에 맞게 모두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 보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92호) 등을 적용하여 산정함

2) 회의 개최 횟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상 정원(5인)을 충족하여 운영된 2022년 회의 개최현황(대면회의 33회, 서면회의 34회)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함

3) 회의참석수당, 안건검토비는 타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의 사례(참고자료 참조)를 참고하여 산정함

4) 여비는 비수도권 인구 분포(약 49%)를 고려하여 비상임위원 4인 중 2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상 '국장급 이상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여 평균 왕복교통비(KTX 특실 평균비용) 등을 산정하였으며, 공식회의 전 사전 논의, 안건설명등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비횟수를 산정

5) 본 추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현행법 또는 개정안에 따른 정원에 맞게 모두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및 타 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의 현원 수, 회의 개최 횟수 및 회의 참석 위원 수, 회의 참석 수당 지급액 등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심위 위원장·위원 인건비 관련 조정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非공무원 신분이었던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150]

○ 2026년도 예산안은 조직개편 전에 제출된 것으로 동 예산안에서 방미심위 위원장의 보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 내 민간보조사업비 안에 포함하여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심의위원장에 대한 보수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내 민간보조(260-01) 비목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보수(110-01)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음. 이와 관련해 방미통위는 지급 방식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며,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임.

○ 또한 舊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보수에 대해, 국회 과방위는 기관의 경상경비나 인건비 등 예산 전액이 방송통신발전기

15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④심의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심의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금의 민간보조사업으로 지급되며, 장관이나 차관 등에 비해 그 보수가 과다하다는 점에서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주요 임원의 연봉을 삭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151]을 의결한 바 있음.

○ 심의위원장이 국가직 공무원 化 되면서 부대의견 취지는 달성될 것으로 보이나, 방미심위의 다른 심의위원과의 보수 수준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

- 방(미)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의 보수자료를 살펴보면, 위원장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이 되면서 2025년과 2026년은 그 이전 기간에 비해 급여 총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급여 총액이 위원장 급여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급여 수준이 지속된다면 위원장 보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급여가 높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

15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과방위 부대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사업의 내역인 인건비에서 위원장 연봉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등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의 연봉을 삭감(2억 4,2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한다.

< 방(미)심위 위원장 급여 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연도	연봉액 ①	가족수당 ②	정액급식비 ③	직급보조 ④	급여 총액 (①+②+③+④)	비고
방심위	2022년	187,427	480	1,680	0	189,587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4% 인상)
	2023년	190,614	480	1,680	0	192,774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7% 인상)
	2024년	195,380	480	1,680	0	197,540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2.5% 인상)
	2025년	175,842	480	1,680	0	178,002	국회 과방위 부대의견 등에 따라 전년대비 연봉액 10% 삭감
방미심위	2025[1)]	149,692	480	1,680	14,880	**166,732**	정무직 공무원 (장관급)[2)]
	2026년	154,932	480	1,920	14,880	**172,212**	2026년 공무원 임금인상 적용

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5년 10월 1일자로 적용
2) 방미심위 위원장 보수는 정무직 장관급(미확정)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심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급여 수준>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연봉액 ①	가족수당 ②	정액급식비 ③	급여 총액 (①+②+③)	비고
방심위	2022년	177,726	480	1,680	179,886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4% 인상)
	2023년	180,748	480	1,680	182,908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1.7% 인상)
	2024년	185,267	480	1,680	187,427	공공기관 공통 처우개선 적용 (전년대비 연봉액 2.5% 인상)
	2025년	185,267	480	1,680	187,427	전년 동결(위원 미위촉)
방미심위	2025년	185,267	480	1,680	**187,427**	보수 조정은 위원 위촉 후 전체회의 의결 예정
	2026년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총액 인건비는 공통인상률 3.5%가 증액되었으나, 세부내역은 향후 의결 필요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와 관련해, 방미심위는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민간 심의위원이며 현재 미위촉 상태인바, 관련 보수 조정 등의 사항은 추후 위원 위촉 후 방미심위 전체회의 의결 등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현재 방미심위 위원장을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인건비 및 관련 경비 등 지급 방식, 방미심위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건비 수준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기관 기본경비에 대한 고려 필요

○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과기정통부 내 ‘방송진흥정책국’이 없어지고, 방미통위 내 ‘방송미디어진흥국’이 신설되면서 인건비, 경비, 소관 사업 등이 방미통위로 이체·이관되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조직개편으로 방미통위가 출범함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해 고려할 사항이 있음.

-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방미통위에 비상임위원이 4명 위촉될 예정으로 이들에게 지급할 회의 관련 수당 등이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를 편성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존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통신재난관리 사업'이 방미통위로 이관되었는데, 동 사업 내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내역사업의 경우 재난방송 송출을 방송사에 요청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공요금을 해당국의 기본경비 내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했으나,[152] 2025년 방미통위의 방송정책국 기본경비 예산은 1억 3,700만원으로 공공요금을 기본경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음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1국 3과, 33명의 인력이 방미통위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에 해당 인력들의 근무지 또한 세종과기부청사에서 정부과천청사로 변경되었음. 정부조직개편이나 정기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5년 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나 2026년도 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152) 관련 공공요금 집행액은 다음과 같음

구분	'21	'22	'23	'24	'25.9월말
요청건수	1,203	1,271	1,571	2,836	5,068
집행액(천원)	23,000	30,000	32,000	64,000	117,000

는 방미통위에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지 이사비용에 대한 지원금 편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53]

○ 둘째, 舊방통위의 경우 2025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시 기본경비가 정부안 대비 삭감되었으나, 신설된 '방송미디어진흥국'은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예산을 이관받으면서 다른 국과의 기본경비 등의 차이가 존재함.

- 방송미디어진흥국을 제외한 방미통위 내 국·과의 경우 2025년 예산안 심의시 국장급 이상 부서 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이 전액 삭감되었고, 이외에도 여비나 일반수용비, 임차료, 업무추진비 등이 일부 삭감되었음.

- 그러나 '방송미디어진흥국'의 경우 기존 과기정통부에 편성된 예산을 이체·이관받으면서 국장급 이상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부서 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삭감되지 않았고 유지된 상태임.

- 국별 기본경비가 차등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기관의 사기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셋째, 방미통위 기본경비는 2025년 정부안(48.52억원) 대비 12.4

153)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사비 300만원을 20명 직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가정할 시 약 6,000만원의 국내여비가 필요하다고 함.

억원 감액된 36.1억원으로, 국내여비, 국외여비, 직책수행경비, 임차료, 유류비, 일반수용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기관운영의 필수적인 활동과 관련된 예산의 부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통해 주요정책 등을 결정하나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임.

- 그러나 위원회 구성의 부재로 인한 기능의 마비는 추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삭감된 기본경비가 기관의 정상적인 활동 재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방미통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AI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마련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황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 조사, 출장 등 실무적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업무 정상화 지연 또는 정책품질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1) 과징금(56-565): 장기간 지연되는 주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조속한 처리 및 적정 세입예산 편성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후 지연된 과징금 부과 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 집행 공백을 해소할 필요

○ 현재의 과징금 세입예산안은 단통법 폐지 등 제도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과징금 세입을 조정할 필요

가) 사업 개요

○ “과징금(56-563)”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방송사업자들의 위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세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4억 5,100만원(△40.8%) 감액된 15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징금 세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6 예산안 (D)	증감 (E=D-A)	증감률 (E/A)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징수대비 수납률(C/B)			
□ 과징금	25,585	339	31	0.1	9.1	15,134	△10,451	△40.8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과징금 부과절차의 조속한 완료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조사착수 → 시정조치안 통보 → 사업자 의견청취 → 위원회 심의·의결 → 처분 및 의결서 송부]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조사착수’ 단계는 인지 또는 신고를 통해 법 위반행위가 의심될 경우 실태점검 등으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단계임.

- ‘시정조치안 통보’는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위반 내용, 제재 처분안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을 마련하여 통지하는 단계이고, 시정조치안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일정 기간 내 조치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를 가지며, 방미통위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리적 쟁점 등을 검토함(‘사업자 의견 청취’ 단계).

- 이후 조사 및 법리 검토 등이 완료되면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과징금 부과 여부와 최종금액을 의결(‘위원회 심의·

의결’ 단계)하고, 방미통위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식적인 처분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송부(‘처분 및 의결서 송부’)하면,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불복 등을 진행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인앱결제 강제금지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과징금 부과처분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임.

- 우리 국회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개정)’를 의결하였고, 2022년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등 앱 마켓 사업자로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후 방미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각각 최대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처분이 지연되고 있음.

<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관련 경과>

- **('22.5~8월)** 앱 마켓사업자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 - **('22.8월~'23.9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소지가 있는 앱 마켓사업자(구글, 애플, 원스토어)에 대한 사실조사 추진 - **('23.10월)**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금지행위를 위반한 구글, 애플에 시정조치안 통보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3.12월~현재)** 방통위, 시정조치안에 대한 구글·애플 의견서 접수('23. 12월) 및 의견서에 대한 사실확인 및 법리 검토 등 진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외에도 방미통위는 2024년 10월 말 알리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154]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10월 30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안을 통보하여 사업자 의견을 듣고 최종심의·의결을 앞둔 상황임.

○ 2021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내외 주요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지연은 법률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유사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경각심을 낮추는 등 규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초래함.

154) 유료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혜택을 허위·과장 고지하고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다크 패턴' 방식으로 유료 결제를 유도했으며 ▲해지 시 현금이 아닌 자체 쿠폰으로 환불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사안임(舊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방통위, 알리 익스프레스의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추진」, 2024.10.30.).

나아가 관련 과징금 수입의 발생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 따라서 방미통위는 향후 적법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연된 안건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 집행 공백을 해소해야 할 것임.

□ 과징금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방미통위의 과징금 예산안은 연례적으로 소관법률 위반에 대한 최근 5년간 과징금 결산액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부터 과징금 수납액이 급감하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104억 5,100만원 감액한 151억 3,400만원을 편성함.

< 과징금(56-565)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25,585천원	▪ 소관법 위반 최근 5년간 결산액 평균(25,585) = 단말기유통법(21,696) + 전기통신사업법(3,651) + 방송법(193) + 위치정보법(28) + 전파법(11) + 방송광고판매대행법(6) ※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반 소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20.8월 이관됨에 따라 과징금 결산액 5년 평균값(27,412)에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결산액 3년 평균값(1,827) 제외함
2026 예산안	15,134천원	▪ 관련법 위반 과징금 최근 5년간 결산액 평균(15,134) = 단말기유통법(10,998) + 방송법(167) + 방송광고판매대행법(6) + 위치정보법(155) + 전기통신사업법(3,803) + 전파법(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20.8월)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결산평균액(4,455)은 제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과징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세입예산안에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방미통위의 과징금 예산 대비 수납률은 매년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 과징금(56-565) 예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16	55,515	55,515	55,515	16,985	6,284	11.3	37.0	10,701
2017	30,012	30,012	30,012	20,135	20,023	66.7	99.4	112
2018	30,012	30,012	30,012	53,354	53,244	177.4	99.7	110
2019	30,012	30,012	30,012	5,831	3,820	12.7	65.5	2,011
2020	36,633	36,633	36,633	53,464	58,021	158.4	108.5	110
2021	30,012	30,012	30,012	-1,401*	-1,511*	△5.0	92.1	110
2022	26,183	26,183	26,183	17,053	16,932	64.7	99.3	121
2023	25,246	25,246	25,246	1,632	213	0.8	13.1	1,419
2024	25,585	25,585	25,585	3,983	3,571	14.0	89.7	412
2025.7	25,585	25,585	25,585	339	31	0.1	9.1	307
2026(안)	15,134	15,134	-	-	-	-	-	-

* 2021년 과오납반납(49.9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수납액이 음수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의 시 과징금 과다추계와 관련해 국회의 시정요구[155]를 받은 바 있으나, 아직 비슷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55)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이고, 시정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과 과태료 세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과징금 수입은 대규모 위반 사건의 발생 및 처분시점,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예측이 어려워 예산안 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점을 가진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 과징금 수입은 특정 연도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등 대규모 제재가 집중될 경우 수백억 대로 급증했다가 해당 사안이 없는 경우 수십원 대로 급감하는 등의 변동성을 보였음.

○ 그러나 최근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면서 과징금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단말기유통법 과징금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2년부터 과징금 부과 실적이 없는 상황이나,[156] 2026년도 과징금 세입안으로 편성한 151억 3,400만원 중 109억 9,800만원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5년간 결산액 평균에 근거해 산정한 금액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것은 국가 재정운용을 국회가 통제하도록 한 재정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으로, 정부는 최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

156) 참고로 단통법 제정 이후 연도별 과징금 부과액은 다음과 같음.

2014년	24억원	2017년	21.24억원	2020년	512억원
2015년	315.8억원	2018년	506.39억원	2021년	37.9억원
2016년	18.2억원	2019년	28.51억원	2022~2025년	없음

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세입 규모의 착시를 유발할 수 있는 세입추계 오차를 가능한 줄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과징금 세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는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과징금 세입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157]

157) 현재 예산안에 편성된 151억 3,400만원 중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과징금(109억 9,800만원)을 제외하면, 2026년도 과징금 예산안은 41억 3,600만원임. 구글 및 애플에 대한 과징금 예정금액은 약 630억원으로 추정되나 일반적으로 처분 부과가 임박하더라도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당 금액을 과징금 세입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

2)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상임위원 위촉계획 등을 수정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

가) 사업 개요

○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2억 200만원 대비 1억 4,500만원(71.8%) 증액된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 예산으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10개의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함.

<2026년도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법정위원회 운영	144	131	202	61	347	145	71.8
○위원회 수당 및 안건사례비 등	137	126	137	137	130	△7	△5.1
○참석교통비	2	2	2	2	2	0	0.0
○간담회비	5	3	5	5	5	0	0.0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	-	58	58	210	152	262.1
□ 세출예산비목	144	131	202	61	347	145	71.8
○일반수용비(210-01)	137	126	137	60	130	△7	△5.1
○국내여비(220-01)	2	2	2	1	2	0	0.0
○관서업무추진비(240-02)	5	3	5	0	5	0	0.0
○기타직보수(110-02)	-	-	58	0	176	118	203.4
○고용부담금(320-09)	-	-	-	-	34	34	순증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 보수 예산 반영 필요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158]에 근거

158)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하여 2019년부터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약관, 품질 등과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신설 당시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 12일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고,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12일부터 2023년

---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월 11일까지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운영되었음.

○ 이후 2023년 1월에 법 개정으로, 당초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 구성에서, 위원장 포함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되었음.

- 해당 「전기통신사업법」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적용례[159]에 따라 2023년 7월 이후 구성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부터 적용하여야 함.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인 2023년 7월 이후에 구성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2항 종전 및 현행 규정 >

종 전	현 행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개정 이후인 2025년 10월 현재 기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6명의 비상임위원(법조계 3명,

159) **부 칙 <법률 제19153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계 1명, 회계 1명, 시민소비자단체 1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법 개정 이후 구성된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은 2023년 8월 21일부터 2025년 8월 20일까지임. 2024년 2월 27일에 추가로 6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16명으로 확대되었으나, 현재 기존 위원 10명의 임기가 도과되어 6명으로 운영 중임.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기수별 위원 구성 및 임기 >

구분	임기(2년)	위원 구성
제1기	· '19.6.12. ~ '21.6.11.	9인, 비상임
제2기	· '21.6.12. ~ '23.6.11.	10인, 비상임
제3기	· '23.8.21. ~ '25.8.20.	10인, 비상임
	· '24.2.28. ~ '26.2.27.	6인*, 비상임

* 최근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16인 중 10인의 임기가 만료('25.8.20.)되어 현원 6인으로 운영 중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취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위원 수 부족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법정처리 기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임.

-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5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법 규정 30명의 취지에 부

합하는 수준의 위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상임위원 2명을 하반기에 위촉할 계획을 세워, 상임위원 2명에 대한 6개월 인건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위촉이 지연되면서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임.

○ 또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에도 여전히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위원 구성은 지연될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월 500만원을 12개월 동안 2명의 상임위원에게 지급하고, 6개월 동안 3인의 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편성내역>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 (25년)58백만원 → (26년)210백만원 ※ 상임위원 2인×5백만원×12개월 + 상임위원 3인x5백만원x6개월

< 상임위원 1인당 기간별 소요 예산 >

구분			상임위원 1인당 소요금액(원)			비고
			1개월	1년	0.5년	
기타직보수 (110-02)	연봉	연봉월액	3,606,200	43,274,400	21,637,200	
	수당	정액급식비	140,000	1,680,000	840,000	-
		명절상여금	360,620	4,327,440	2,163,720	연봉월액×60%×2회(설,추석)/12개월
		기타	90,297	1,083,564	541,782	-
고용 부담금 (320-09)	퇴직급여적립금		342,098	4,105,176	2,052,588	(연봉+수당)×8.33%
	사회보험료		460,785	5,529,420	2,764,710	(연봉+수당) × 총 11.22%
상임위원 1인 소요 예산			5,000,000	60,000,000	30,000,00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에 상임위원 2인을 위촉할 예정으로 이들 2인에 대해서는 1년 소요액을 편성하고, 상임위원 3인은 2026년 하반기에 위촉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또한, 현재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됨에 따라 위촉이 늦어지고 있으며, 2025년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였고, 올해 안에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원 2명을 위촉하고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위원 10명에 대해서도 위촉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그러나 이미 개정 법률 시행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명의 상임위원을 위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예산안에 2명에 해당하는 보수만 전액 편성하고, 3명에 해당하는 보수

는 6개월만 편성한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내년 하반기로 계획하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위촉을 가능한 앞당겨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원 위촉계획 등을 수정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3)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 민간보조방식으로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것의 적절성 검토 필요 등

○ 방미통위 소속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사무공간을 민간보조사업비로 조성하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고, 나아가 통신분쟁조정이라는 국가사무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식 관련 사업추진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한계점이 있으므로, 방미통위와 KAIT 간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정보제공과 이용자 보호활동을 수행하고,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및 상담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대한 민간보조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3억 3,800만원으로, 전년 19억 4,000만원 대비 3억 9,800만원(20.5%) 증액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내역사업 내에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내내역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2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			
□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499	2,497 (2,424)	1,940	1,540 (840)	2,338	398	20.5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376	1,376 (1,344)	1,376	1,032 (553)	1,578	202	14.7
○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499	499 (499)	-	-	-	-	-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62	62 (59)	-	-	-	-	-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562	560 (522)	564	508 (287)	760	196	34.8
□ 세출예산비목	2,499	2,497 (2,424)	1,940	1,540 (840)	2,338	398	20.5
○ 민간경상보조(320-01)	2,499	2,497 (2,424)	1,940	1,540 (840)	2,338	398	20.5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3)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보호',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내역사업은 시장조사심의관 신설('23.11.)에 따라 2025년에는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 내역사업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는 통신분쟁지원시스템과 통신분쟁상담센터 등을 운영하여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도모하는 것임.

- 통신분쟁조정제도란 이용자가 스마트폰·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안을 받아 당사자간 합의를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임.

- 동 내역사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운영, 통신품질 현장측정체계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통신분쟁조정 제도 홍보 등에 3,600만원,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사무공간 조성에

5,600만원,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서버 이중화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음.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사업 증액내역>

□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 (25년)564백만원 → (26년)760백만원(+196)**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 218백만원 → 222백만원(+4)

- (상담센터 운영 인력) 182백만원 → 186백만원(+4) ※인력 최저시급 인상분

○ 통신분쟁조정 제도 홍보 및 협력체계 운영 : 0백만원 → 36백만원(+36)

- (통신분쟁 사례집 발간) 0백만원 → 5백만원(+5)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0백만원 → 21백만원(+21)
- (세미나·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 0백만원 → 10백만원(+10)

○ 통신분쟁조정 사무공간(상임위원) 조성 : 0백만원 → 56백만원(+56)

- (사무공간 조성 인테리어) 0백만원 → 20백만원(+20)
- (전산기자재 구매) PC, 모니터, 복합기 등 [0백만원 → 18백만원(+18)]
- (사무기자재 구매) 책상・의자・파티션 등 [0백만원 → 18백만원(+18)]

□ **통신분쟁조정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5년)140백만원 → (26년)240백만원(+100)**

-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웹서버 이중화) 0백만원 → 90백만원(+90)
- (민원상담 통신시설 유지보수) 0백만원 → 10백만원(+1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는 현재 소속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무공간을 민간보조사업비 내에 편성하고 있는데, 사무공간의 경우 분쟁조정위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로 민간보조사업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로, 현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는 ‘법정위원회 운영(7131-304)’에 방미통위가 직접 집행하는 ‘기타직보수(110-02)’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상임위원 사무공간과 관련된 비용은 현재 민간보조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 상임위원 사무공간 조성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방미통위는, 동 예산으로 운영되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통신분쟁 상담 및 통신분쟁조정회의 등이 수시로 개최되므로,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상임위원 전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업무 연속성, 협업, 예산절감, 접근성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와 그 인력이 사용할 사무공간 등의 비용은 동일한 예산 체계 내에서 관리되어야 예산 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이고, 사무공간 구축에는 자산 취득이 수반되는데, 이를 방미통위의 직접 예산이 아닌 민간기구 보조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가능함.

○ 나아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은 당초 방미통위 소속 법정위원회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민간보조사업의 방식으로 운영된 것에 기인하며, 차후 사업수행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국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로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제5항[160]은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방미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 등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전제하고 있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공간을 마련하는 등 행정효율 상 사무국 운영 등에 민간이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면 민간보조가 아닌 국가 고유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의 방식이 적절할 것임.

---

160)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하 생략)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현재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접수~종결까지의 사건 관리 및 운영 등은 방미통위 내 통신분쟁조정팀에서 운영하나,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대면 분쟁조정실 운영, 상담센터 관리, 통신품질 현장측정 등은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구축·운영하고, 상임위원 사무공간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민간보조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임.

○ 방미통위는 현재 KAIT는 부수적인 조정 지원업무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필수적인 운영기능이 사실상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실정으로 보이므로, 현행 사업추진방식을 재검토하여 직접수행, 민간보조, 민간위탁 등의 범위를 구분해 적절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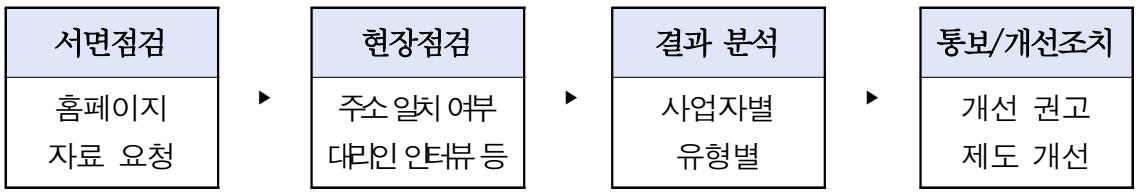
□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사업의 실효적인 추진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외플랫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는 내역사업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의 내내역사업으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사업이 2억 200만원 신규 편성되었음.

○ 동 내내역사업은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161]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2025년 기준 46개사)에 대해, 국내대리인 관련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안내서 제작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하는 사업임.

1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국내대리인 운영실태 점검 절차(안) >



<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점검 주요 내용(안) >

구분	유형	점검 내용
서면 점검	대리인 지정 여부	o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 타 사업자와 대리인 중복 지정 여부
	대리인 지정의 적정성	o 대리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여부 o 국내 법인 또는 지배력이 있는 법인을 지정했는지 여부
	대리인 정보 공개 여부	o 인터넷사이트에 대리인 정보 게시 여부 ※ 게시 내용(명칭,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및 위치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o 관계 부처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현황 등 o 이용자 민원처리 현황 ※ 향후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 현행화
현장 점검	주소 일치 여부	o 주소지에 직접 방문하여 대리인 실제 운영 여부 확인
	대리인 업무 현황	o 대리인 담당자 업무 범위 및 처리 절차 등
	국내대리인 인터뷰	o 국내대리인 업무 이해 정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미통위는 동 내내역사업과 관련해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민간보조사업비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 국내대리인 지정 운영 실태점검 예산안 편성내역 >

구 분	산출내역	금액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o 국내대리인 실태점검 운영 : 189백만원 ※ 책임연구원 : 7.4백만원 x 12개월 x 50% = 45백만원 ※ 보조원 : 2.8백만원 x 12개월 x 3명 = 102백만원 ※ 점검 여비, 법률자문, 공공요금 등 운영비 : 12개월 x 3.5백만원 = 42백만원 o 안내서 제작 및 설명회 : 13백만원 ※ 안내서 제작·인쇄·배포 : 2만원 x 150부 = 3백만원 ※ 장소 임차 등 설명회 기획·개최 : 5백만원 x 2회= 10백만원	202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와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정단체로, 방송통신시장 모니터링,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사업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수행할 것으로 계획됨.

○ 그러나 KAIT가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제도적, 물적 한계점 등이 존재함.

- 첫째, 국내대리인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이 수반되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정보통신망법[162]상 국내대리인

1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제도의 실태점검, 관리·감독, 위반시 제재 등의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있다는 점에서 KAIT의 역할은 제한됨.

- 둘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는 대부분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법적 권한이 부재한 KAIT의 실태점검은 사업자의 협조 부재나 법적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KAIT는 실태점검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준비하는 역할이고 실태점검 등은 방미통위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함.

○ 향후 실효적인 실태점검이 될 수 있도록 KAIT의 역할은 해외사업자 지정현황 취합, 법규 안내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수집에 엄격히 한정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위반여부 판단,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조사 실시 등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모든 핵심과정은 방미통위가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방미통위와 KAIT 간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4)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동 사업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과 사업물량이 대폭 확대되었음. 그러나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경우 매칭비 부담으로 지원기관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면밀한 집행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의 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은 터널이나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환경을 개선해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 등이 원활하게 수신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재난피해 예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재난방송 수신환경 등을 조사하는 '수신환경 실태조사', 수신환경 불량인 터널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통해 기술지원을 하는 '음영지역 기술지원', 중계설비 등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 등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보다 26억 7,300만원(456.9%) 증액된 32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			
□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1,256	1,248 (1,222)	841	677 (337)	3,530	2,689	319.7
○방송재난관리 강화	200	199	200	139	220	20	10.0
○방송재난관리 활동 지원	20	17	20	4	20	0	0.0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활동 지원	36	32	36	7	32	△4	△11.1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1,000	1,000 (974)	585	527 (187)	3,258	2,673	456.9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수신환경 개선지원사업의 적극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등

○ 동 내역사업은 ①수신환경 실태조사, ②음영지역 기술지원, ③수신환경 개선지원 등 3개의 내내역사업[163]으로 구성되며, ‘수신

163) 내내역사업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신환경 실태조사)**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터널, 지하공간)의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통한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및 운용현황 파악
- **(음영지역 기술지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결과 수신상태 불량인 터널 대상 기술지원을 통하여 음영지역 해소
- **(수신환경 개선지원)** 도로, 철도터널, 지하철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재난방송 중계설비 지원

환경 실태조사’는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직접 수행하고, ‘음영지역 기술지원’과 ‘수신환경 개선지원’은 도로·철도 터널 및 지하철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이 중 ‘수신환경 개선지원’은 선정된 지원기관과 50:50의 매칭으로 보조금이 집행됨.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6억 7,300만원(456.9%) 증액되었으며 세부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6년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 산출내역>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ㅇ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5억 8,500만원	32억 5,800만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3억 1,000만원 = 약 5,600개 시설 × 측정장비 및 인력 55천원	5억 1,000만원 = 약 5,600개 시설 × 측정장비 및 인력 55천원 + 측정시스템 2억원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9,700만원 = 51개소 × 측정장비 및 인력 1.9백만원	5억 7,000만원 = 190개소 × 측정장비 및 인력 3백만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1억 7,800만원 =FM/DMB 중계기 2,000만원 x 18대 x 50%	21억 7,800만원 =FM/DMB 중계기 2,010만원 x 218대 x 5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동 사업은 전년 대비 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물량확대에 맞춰 지원대상기관의 신청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집행과 관련된 우려가 있음. 특히 ‘수신환경 개선지원’의 경우 도로·철

도터널, 지하철 시설관리기관에서 공사비, 운용비용 등을 부담하고, 동 사업을 통해 중계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50:50의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바, 사업자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자의 신청이 저조할 수 있음.

-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설비(중계기, 안테나, 케이블 등) 구축을 위해서는 연장 1km당 약 3.5억원이 소요되어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으로,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중계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재정확보가 어려운 지자체 등에 있어서 신청이 저조할 수 있음.

- 동 내내역사업의 사업경과를 살펴보면, 2022년에는 9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지원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중계설비 설치가 12월에 완료되어, 2022년 예산 중 2억 6,800만원은 다음해인 2023년 1월 19일에 이르러서야 지원기관에 지급하는 등 집행과정에서 이월 문제가 발생하였고, 2023년에도 지원기관이 없어 10월 19일이 되어서야 지원대상을 선정한 바 있음.

- 2024년에는 초기 선정위원회 개최(6.13.) 시에는 한국도로공사(9개 터널), 강원도 영월군(1개 터널)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양호한 한국도로

공사에만 시설지원이 이루어졌음(9개 터널, 60대 총 5억원).

- 2025년에는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1차 공고를 통해 6개소를 선정하고,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2차 공고를 진행해 6개소를 추가 선정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중임.

○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수요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5년 말 전국 시설관리기관 대상 사전 수요조사 및 주요기관과 협의 예정이며 2026년 사업신청 희망기관이 다수 있다는 의견임.

○ 그러나 지원물량이 2022년 40대, 2023년 20대, 2024년 60대, 2025년 18대에서 2026년 218대로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는 점, 특히 50:50의 매칭방식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기관의 참여를 저해한다는 점 등에서 수요 측면의 우려가 존재함.

○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연도 초기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매칭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사업의 전국적 확대 및 균형적 수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 할 필요가 있음.

3.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5) 가산금(58-581):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수입 편성 필요

○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세목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가산금(58-581)’ 세목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7항[164]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165] 등에 따른

16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16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분담금 미납부나 보조금 부정 사용 등 관련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부과되고 있는 추가적인 납부 금액인 가산금을 수납하고 있는 수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166]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음.

○ 가산금의 2024년도 수입계획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2,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음. 2026년도 수입 계획안에서 편성되지 아니함.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6)「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기금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기금의 융자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2026년도 가산금 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수납액	계획액 (A)	수납액			
□ 가산금	-	7	-	-	-	-	-

주 1) 2025년 수납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나) 검토의견

□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수입 편성 필요

○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은 매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세목에 대해서는 수입에 편성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의 징수결정액은 2021년 7,600만 원, 2022년 7,300만 원, 2023년 7,000만 원, 2024년 1억 2,800만 원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 계획액은 편성되지 아니하고 있음.

- 수납액도 2021년도 1,100만원, 2022년도 700만원, 2023년도

400만원, 2024년도 700만원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과다하여 수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가산금 연도별 수납 현황(2021～2024)>

(단위: 백만 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변경						
2021	-	-	-	76	11	14.5	65	-
2022	-	-	-	73	7	9.6	66	-
2023	-	-	-	70	4	5.7	66	-
2024	-	-	-	128	7	5.5	121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5. 10.

- 「국가재정법」 제17조[167]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168]에 규정된 전대차관, 수입대체경비 등의 예외 사

167)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68)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제1항제6호[169]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2호[170]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가산금 수입은 연례적으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령상 기금의 재원에 해당하고 있음에도 수입 계획액이 편성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가산금의 경우 기금 주요관리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라고 보고 있음. 2024년도 동 수입의 징수결정액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부분이 6,500만원[171]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5년 10월 1일 이관 부분) 소관 부분이 6,200만원[172]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9)「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170)「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수입금) 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

171) 3개 기업 6,500만원 가산금

○ 따라서, 「국가재정법」 상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매년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는 가산금 세목을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172) 1개 기업 6,200만원

6) 아리랑국제방송지원(3131-302), 국악방송 지원(3131-304): 기금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등 특정 방송사업자에 대해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감독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 최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사업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국제방송의 TV프로그램 제작과 영어FM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억 4,800만원이 감액된 1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국악방송이 운영하는 국악방송의 라디오 채널프로그램, 영상콘텐츠 및 영상 채널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5억 2,600만원 감액된 4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아리랑국제방송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실집행)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			
□ 아리랑국제방송지원	13,430	13,430 (12,982)	12,070	7,523 (5,701)	11,022	△1,048	△8.7
○ TV프로그램 제작	11,655	11,655 (11,221)	10,475	6,529 (4,957)	9,427	△1,048	△10.0
○ 영어FM프로그램제작	1,775	1,775 (1,761)	1,595	994 (744)	1,595	-	-
□ 세출예산비목	13,430	13,430 (12,982)	12,070	7,523 (5,701)	11,022	△1,048	△8.7
○ 민간경상보조(320-01)	13,430	13,430 (12,982)	12,070	7,523 (5,701)	11,022	△1,048	△8.7
□ 국악방송 지원	5,842	5,842 (5,785)	5,258	3,523 (1,821)	4,732	△526	△10.0
○ 정규 프로그램 제작	1,967	1,967 (1,966)	1,770	1,186 (839)	-	△1,770	순감
○ 특집 프로그램 제작	260	260 (259)	234	157 (43)	-	△234	순감
○ 라디오 채널 프로그램 제작	-	-	-	-	1,803	1,803	순증
○ 국악 영상 콘텐츠 제작	749	749 (747)	674	452 (312)	670	△4	△0.6
○ 프로그램 제작지원	425	425 (378)	383	267 (162)	345	△38	△9.9
○ 한국음악의 명곡명연주 제작	77	77 (74)	70	47 (-)	-	△70	순감
○ 영상채널 프로그램 제작	2,364	2,364 (2,361)	2,127	1,425 (465)	1,914	△213	△10.0
□ 세출예산비목	5,842	5,842 (5,785)	5,258	3,523 (1,821)	4,732	△526	△10.0
○ 민간경상보조(320-01)	5,842	5,842 (5,785)	5,258	3,523 (1,821)	4,732	△526	△10.0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문체부 소관 기관에 대한 기금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방송사업자인 아리랑국제방송(국제방송교류재단) 및 국악방송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173]에 근거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원연혁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 기관이 공보처로 일치하였으나,[174] 2000년 「방송법」 제정과 함께, 방송 부분을 소관으로 하는 방송위원회가 출범하고, 공보처 소관의 공익자금이 방송위원회 소관의 방송발전기금[175]으로 확대·개편되면서 예산지원기관은 '방송위원회'로 소관 기관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된 것으로 비롯함.

- 이후 '국악방송'의 경우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2009년부터, 시설운영비는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에서 지원

---

17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174) 참고로, (재)국악방송은 공익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된 2000년 이후 설립되었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은 1996년 설립되었음.

175) 언론공익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1980년부터 방송광고수수료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오던 공익자금이 확대되어 2000년 방송발전기금으로 개편되었고, 2011년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가 통합되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개편되었음.

하여 현재까지 프로그램 제작비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아리랑국제방송'의 경우 2021년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고, 2024년에는 경상비 편성도 모두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어 현재는 프로그램 제작비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 지원연혁 >

구 분	2000 이전	2001~2010	2011~현재
예산 지원기관	공보처 (공익자금)	방통위(舊방송위 포함) (방송발전기금)	방미통위(舊방통위 포함) (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감독기관	공보처	문화체육관광부(舊 문광부 포함)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연도별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 문체부/방미통위 지원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제방송교류재단	방발기금 (방미통위)	35,447	22,987	23,675	23,423	13,430	12,070	11,022
	일반회계 (문체부)	11,164	21,544	24,650	14,732	19,954	24,099	25,848
국악방송	방발기금 (방미통위)	6,700	6,370	6,470	6,456	5,842	5,258	4,732
	일반회계 (문체부)	9,376	8,999	8,841	11,096	10,521	10,549	11,36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가능함.

- 첫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은 문체부 소관 기관으로 문체부의 정책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임.

- 둘째, 지상파·유료방송·홈쇼핑 등의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기금 분담의무가 없는 특정 채널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셋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176]으로 재원이 한정되는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소관 불일치 문제에 대한 지속된 국회 지적에 따라 202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76) 방송통신발전기금 순자산은 2019년 763억원에서 2024년 △1조 4,165억원으로 크게 악화되었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산	7,400	4,777	5,723	5,800	4,429	4,886
부채	6,637	6,809	11,170	15,074	16,859	19,051
순자산	763	△2,032	△5,447	△9,274	△12,430	△14,165

○ 국회는 이에 대해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속하여 의결한 바 있으며,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 소관 기관과 예산지원기관과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하도록 아리랑국제방송지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관련 부대의견[177]을 첨부해 의결한 바 있음.[178]

[최근 5년간 관련 결산 시정요구사항]

구분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유형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리랑TV 및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축소할 것	제도개선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과방위	○ 방송통신위원회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 예산을 문체부 일반회계로 편성할 것	시정

주: 2024회계연도 결산은 아직 예결위·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임.

177) 2025회계연도 과방위 예비심사에서 채택한 부대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 지원 사업의 예산안을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의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한다.

178) 다만, 2025년도 예산안 예결위 심의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음.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여력 및 기금운용의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예산 지원기관과 소관 기관을 일치시키는 것이 소관주의 원칙상 바람직하다는 점, 이와 관련한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일반회계 등으로 편성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감액할 필요가 있음.

7)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251-306):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관련 방미심위와의 면밀한 협조관계 구축 필요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미심위에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방미심위와의 면밀한 연계가 필요함.

가) 사업 개요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이 유해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모바일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에서는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내역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음.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해 해외 주요 SNS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제안되었음.

○ 2026년도 계획안에는 10억 4,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전액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179]할 계획이라고 함.

<2026년도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실집행)	계획액 (A)	집행액 (실집행)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629	1,629 (1,622)	1,466	1,129 (622)	2,291	825	56.3
○ 클린스마트모바일 환경조성	1,393	1,393 (1,393)	1,253	965 (520)	1,064	△189	△15.1
○ 클린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	236	236 (229)	213	164 (102)	182	△31	△14.6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	-	-	-	1,045	1,045	순증
□ 세출예산비목	1,629	1,629 (1,622)	1,466	1,129 (622)	2,291	825	56.3
○ 민간경상보조(320-01)	1,629	1,629 (1,622)	1,466	1,129 (622)	2,291	825	56.3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179) 참고로, 동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클린 인터넷서비스 환경조성' 사업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의무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점검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보조하여 수행하고 있음.

< 2026년도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예산 세부내역 >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1,045백만원(신규) - 상시점검 결과분석 및 운영: 202백만원 = 67.5백만원×3명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68백만원 = 67.5백만원×1명 - 상시점검 모니터링: 634백만원 = 2.4백만원×12개월×22명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구축: 120백만원 = 120백만원×1식 - 모니터링 운영경비: 21백만원 = 21백만원×1명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추진에 있어 방미심위와의 면밀한 협조관계 구축 필요

○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의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현황 등 동향조사를 수행하고, 플랫폼별 모니터링 기준을 수립하여 불법 유해정보 의심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결과물을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며,

○ 모니터링 결과 불법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일 경우 해당 플랫폼 사업자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개선 및 협조요청을 진행하는 식으로 계획하고 있음.

<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 절차 >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모니터링 기준 수립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실시	자체 플랫폼 및 방심위 신고 접수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 조사 및 선정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수립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자체 플랫폼 및 방심위 신고 접수
SNS플랫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IDC센터	점검요원	신고 진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대상 플랫폼은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구체화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명 SNS플랫폼 약 20개 사이트를 기초 모니터링으로 선정하고, SNS플랫폼별 서비스 운영환경 및 불법 유통경로 사전 조사, 관련 전문기관 자문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함. 또한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공모절차를 거쳐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함.

○ 동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관련 결과물을 저장·관리하고 있다는 점, 통신심의를 통한 구체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내 72명이 음란 및 성매매정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유해정보 전담인력으로 사무처 일반직 46명이 불법·유해성 검토 및 회의자료 작성,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방미심위 통신심의 모니터링 인력 현황 (2025.10)>

위반유형	모니터링 대상	인원
법질서 위반정보	도박, 개인정보 침해, 불법금융, 사기 정보 등 관련 사안	7인
사회법익 침해정보	의약품 판매, 마약류 매매, 총기 및 화약류 제조, 문서위조/대리시험, 자살유발, 장기매매 정보 등 관련 사안	7인
유해정보	차별·비하, 폭력·잔혹·혐오, 인터넷 개인방송 정보 등 관련 사안	29인
저작권 침해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 관련 사안	4인
음란·성매매정보	음란, 성매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고 정보 등 관련 사안	19인
디지털성범죄정보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성 관련 초상권 관련 사안	6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방미심위 2021~2025년 불법유해정보 범주별 전담인력 현황 >

구분	법질서 위반 정보	사회법익 침해 정보	유해정보	권리 침해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성매매 정보	디지털 성범죄정보	계
2021	7	7	6	5	3	7	7	42
2022	7	8	6	5	3	6	7	42
2023	6	7	5	5	3	7	7	40
2024	7	8	5	5	3	8	7	43
2025.9	7	7	6	6	4	8	8	46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또한, 방미심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뿐 아니라 경찰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식약처,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의 불법정보 대응을 위한 협력회의를 수시 개최하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플랫폼과는 자율심의협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2024년 ‘인터넷 마약정보 신속 차단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마약정보, 도박,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지식재산권 등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받는 신고 전용 페이지(report.kocsc.or.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방미심위가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해, 방미통위는 방미심위가 수행 중인 모니터링 및 심의·조치 업무는 주로 피해자 신고건을 대상으로 심의 신청된 내용 파악 및 심의자료 수집 등 사후적 확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 내역사업은 목적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고, 시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 기관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보다 서술하면, 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 정보의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심의기관인 반면,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조치 주체로서 자체적인 불법정보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즉시성 있는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하며, 그동안 캄보디아 불법유인 광고·제주항공 참사 2차 가해 정보·의료파업 복귀 전공의 인신공격 정보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법정보들에 대해 보조사업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한 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와 같은 기관 간 역할의 차이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그러나 방미심위가 수행 중인 업무와 상당 부분 기능적으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의 우려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범위나 양자 간 모니터링 결과공유 등 방미심위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긴밀하게 구축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8)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133-303): 미디어교육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노력, 협약사업 적극 발굴 등 수입 다변화 필요

○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언론진흥재단이 각각 미디어교육 관련 양성프로그램과 자격증을 운영하는 상황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의존이 커, 정부정책이나 기금운용 상황 등에 따라 재단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한 협약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사업 개요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133-303)”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7,000만원(△15.9%) 감액된 18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세부사업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전 국민 대상으로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지원하는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시청자의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송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 등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결산액	계획액 (A)	집행액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21,665	21,655	22,433	14,047	18,863	△3,570	△15.9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15,716	15,716	16,046	10,832	16,963	917	5.7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5,085	5,085	4,947	2,474	1,183	△3,764	△76.1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347	337	343	184	171	△172	△50.1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517	517	1,097	557	546	△551	△50.2
□ 세출예산비목	21,665	21,655	22,433	14,047	18,863	△3,570	△15.9
○민간경상보조(320-01)	21,405	21,395	21,386	13,525	18,367	△3,019	△14.1
○민간자본보조(320-07)	260	260	1,047	522	496	△551	△52.6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9.

나) 검토의견

□ 미디어 관련 자격증의 활성화 방안 등 모색 필요

○ 현재 미디어교육의 경우 미디어 역량 개념이나 그 경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부처별로 개별법 등에 근거하여 미디어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부처별 미디어교육 추진 근거>

▪ **(방통위) 방송법** 제90조의2, 제94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7조, 21조
▪ **(문체부) 신문법** 제35조, **지역신문법** 제15조, **문화예술교육법** 제15조,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12조, **영화비디오법** 제25조, **저작권법** 제2조의2, **게임산업법** 제12조의4
▪ **(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
▪ **(과기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 제54조, 제62조 등

자료: 관계부처 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2024.3.

○ 방미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를 비롯한 미디어교육 전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의 보급·확산을 위해 미디어교육 교수자를 양성하고 관련 자격증 제도인 '미디어교육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음.

<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 >

구 분	내 용
자격종목	· 미디어교육지도사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6-005370)
등록자격관리자	· 시청자미디어재단
검정기준	·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의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교육지도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정
검정방법	· 필기시험(선다형 50문제), 실기시험(서술형 1문제), 총 100분 * 미디어교육의 기초, 이해, 실제로 구성
응시자격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에 지원 및 교육생으로 선정되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자격활용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 취득자에 서류전형 가점 적용 · 지자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자격증 활용 가능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 또한 2022년부터 ‘미디어 교육사’ 1급, 2급 민간자격증을 신설하여 매년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지도사’와 명칭과 세부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미디어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목표와 역할에서 공통점을 가짐.[180]

< 미디어교육 관련 자격증 비교 >

구분	미디어교육지도사	미디어교육사
주관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응시자격	재단이 개설한 30차시 온라인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급: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 또는 관련 분야 경력 보유자 1급: 2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 또는 100시간 이상 강의경력
교육과정	30차시 온라인 강좌 (진도율 80%이상 이수 필수)	별도의 의무교육과정은 없으나, 시험 합격 후 직무교육 이수 필요
시험구성	필기: 객관식 50문항(미디어교육의 기초/이해) 실기: 서술형 1문항(수업계획안 작성)	필기: 객관식 120문항(미디어의 이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실기: 서술형(수업계획안 작성) / 1급은 강의 실연 포함
합격기준	필기 과목별 5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필기 과목별 40점 이상, 필기 및 실기 각각 70점 이상
응시비용	무료(교육과정 포함)	유료(2급 약 5만원, 1급 약 10만원)

○ 그러나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 인원은 미디어교육사에 비해 많지 않은 편으로,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보임.

180) 다만, 방미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 디지털 미디어, AI리터러시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교육인 반면, 문체부는 신문 등 읽기 관련 교육으로 차이가 있다는 의견임.

-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교육지도사’ 과정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이후 자격검정 시험에 접수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과 자격시험 응시료는 무료로 제공됨.

-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사’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 등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응시자는 유료(2급 5만원, 1급 10만원)로 시험에 접수하는 식임.

- 현재 연도별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은 상황이나, 미디어교육사 2급 자격시험의 경우 2022년 206명, 2023년 126명, 2025년 172명이 합격함.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인원>

연도	지원서 제출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9	40명	36명	30명	83%
2023	43명	43명	40명	93%
2024	169명	144명	85명	59%
2025	12월 예정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 나아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교육 경력강사 선발시 ‘미디어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교육강사로 지원할 수 없음. 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민간자격증은 서류전형 가점[181]으로 부여해 자격증이 없더라도 선발되는 등 차이가 있음.

○ 미디어 교육 소관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 자격제도는 표준화나 일원화 등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임.

○ 현재 두 자격증은 모두 민간자격증이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언론진흥재단은 각기 국가공인자격 등록을 추진 중으로, 자격증의 사회적 통용성이나 경쟁력 등은 향후 미디어 교육 거버넌스 측면과 관련해서도 연계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되며, 자격제도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임.

- 이에 미디어교육 자격증 소지자는 미디어교육 강사 우선 선발 등 정책적 우대방안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지속적 역량 개발과 현장 실무체계 연계 마련 등이 필요할 것임.

181)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경우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미디어교육지도사(시청자미디어재단) 2점, 미디어교육사(언론진흥재단) 자격증 1점을 적용하고 있음.

□ 미디어교육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미디어교육 저변 확대방안 강구 필요

○ 현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 대부분의 기관운영비를 방발기금 등을 통한 민간보조사업비, 협약사업, 기부금 사업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수입/지출 >

수 입			지 출		
항 목	계획	실적	항 목	계획	실적
o 정부협약사업(정부순지원)	44,444	44,323	o 인건비	15,562	15,182
- 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21,665	21,655			
- 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17,830	17,830			
-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지원	1,468	1,444			
- 방송광고협찬고지모니터링기반구축	1,770	1,770	o 사업비	30,658	29,156
- 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	442	442	- 정부협약사업	26,366	25,174
- 공익채널운영실적점검평가	234	234	- 기타협약사업	4,016	3,857
- 재난방송 운영지원	52	52	- 기부금 사업	267	117
-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983	896	- 기타	9	8
o 기타수입	9,386	9,386	o 경상비	7,684	7,376
- 지자체분담금	5,050	5,050	o 기타	-	2,069
- 기타협약사업 등	4,336	4,336			
o 전기이월액(기타협약 및 기부금)	74	74			
합 계	53,904	53,783	합 계	53,904	53,783

자료: 시청자미디어재단

○ 이러한 상황에서 방발기금 재정악화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2025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감축' 평가 등의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억 7,000만원(15.9%)가 감액된 18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단의 주요사업인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부문이 2025년 49억 4,700만원에서 2026년 11억 8,300만원으로 약 76%가 삭감됨에 따라 미디어 교육사업의 위축 등 재단의 핵심적인 공적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음.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사업 세부산출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21,386백만원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 16,046백만원 가. 인건비 (10,951백만원) 나. 재단본부 경상비 (1,736백만원) 다. 12개 지역센터 경상비 (3,291백만원) 라. 정보전산 고도화 (68백만원) **②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4,947백만원** **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4,863백만원)** **• 지역센터 상시교육 : 200백만원×12센터 = 2,400백만원** **•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 교육운영(3.15백만원×118개 기관) + 나눔버스(80백만×8대) = 1,012백만원** **•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지원 : 교육 3.3백만×36단체 =119백만원** **• 유아 미디어교육 : 3.66백만×64개 기관 =235백만원** **• 청소년 미디어교육 : 4.34백만원×253개교 = 1,097백만원** **나.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84백만원)** **•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 5.22백만원×9센터=47백만원** **• 미디어교육 연구 : 27백만원×1주제=27백만원** **• 미디어교육 정기간행물 : 5백만원×2회=10백만원** ③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 343백만원 가. 시청자 권익정보센터 운영 (343백만원) ④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50백만원 가. 센터건립 구축부대비 (5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1,047백만원 ①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1,047백만원 가. 신규센터 구축 설계비 (87백만원) 나. 센터 노후인프라 개선 (260백만원) 다. 미디어버스 구축 (7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8,367백만원 ①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지원 : 16,963백만원 가. 인건비 (11,868백만원) 나. 재단본부 경상비 (1,820백만원) 다. 12개 지역센터 경상비 (3,207백만원) 라. 정보전산 유지보수 (68백만원) **②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 : 1,183백만원** **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운영 (1,109백만원)** **• 지역센터 상시교육 : 38백만원×12센터 = 456백만원** **• 소외계층 지역 미디어교육: 교육운영(3.15백만원×12개 기관) + 나눔버스(41.5백만×10대) = 453백만원** **•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 지원 : 0백만원 (순감)** **• 유아 미디어교육 : 3.66백만×12개 기관 =44백만원** **• 청소년 미디어교육 : 4.34백만원×36개교 = 156백만원** **나.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 (74백만원)** **• 미디어강사 양성 및 연수 : 5.22백만원×6센터=32백만원** **• 미디어교육 연구 : 27백만원×1주제=27백만원** **• 미디어교육 정기간행물 : 5백만원×3회=15백만원** ③ 시청자 권익보호 지원 : 171백만원 가. 시청자 권익정보센터 운영 (171백만원) ④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50백만원 가. 센터건립 구축부대비 (5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496백만원 ①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 : 496백만원 가. 신규센터 구축 설계비 (133백만원) 나. 센터 노후인프라 개선 (363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5월 「방송법」 제90조의2에 근거하여 출범하였으며, 2016년 2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2023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었음.

○ 공공기관 정책은 경영 효율화, 재정건전성, 자율·책임경영 강화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추세로, 기타공공기관이라고 하여 자체수입 확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경영, 재정안정성, 경영효율화 등의 측면에서 정부예산 뿐만 아니라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2025년 10월 기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자체·교육청 등과 25건의 협약사업을 통해 12억 4,900만원, GS리테일 등 3건의 기부금사업을 통해 9,5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음.

< 재단의 협약사업 및 기부금사업 현황('25.10)>

구분	건수	금액
협약사업	지자체·교육청 등 25건	1,249백만원
기부금사업	GS리테일 등 3건	95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종합하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부정책이나 기금운용 상황 등에 따라 재단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기관의 공적 역할에 부합하되,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한 협약사업 등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 개 요

○ 2026 회계연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182]의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기금 수입은 2025년 예산 대비 481억 2,700만원(12.6%) 증액된 4,304억 4,300만원,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지출은 2025년 예산 대비 35억 9,500만원(0.7%) 증액된 5,325억 900만원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183]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입	세 입	2,167	2,360	193	8.9
	기금수입	380,149	428,083	47,934	12.6
	총 계	**382,316**	**430,443**	**48,127**	**12.6**
지출	세 출	148,765	104,426	△44,339	△29.8
	기금지출	380,149	428,083	47,934	12.6
	총 계	**528,914**	**532,509**	**3,595**	**0.7**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18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신설 경위를 살펴보면, 원자력안전규제 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년 6월 「원자력진흥법」 제17조를 개정하여(시행 2016년 1월 1일) 종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 원자력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하고, 원자력기금 내에 새롭게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하였음.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183)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따른 금액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184] 규모는 2025년 예산 대비 157억 2,000만원(5.7%) 증액된 2,926억원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185]	증감액 (B-A)	증감률 (B-A)/A
회 계	1,488	1,044	△443	△29.8
기 금	1,281	1,882	601	46.9
총 지 출	**2,769**	**2,926**	**157**	**5.7**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184) 총지출 규모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규모임.

185)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따른 금액임

2. 세입예산(수입계획)안

가. 세입예산안 개요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기타재산이자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300만원(8.9%) 증액된 2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음.

<2026년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A)	2026예산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	36	36	순증
과태료	17	7	△10	△58.8
기타경상이전수입	2,073	2,243	170	8.2
면허료 및 수수료	77	73	△4	△5.2
기타잡수입	-	1	1	순증
계	**2,167**	**2,360**	**193**	**8.9**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나. 수입계획안 개요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 규모는 4,280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9억 3,400만원(12.6%) 증액되었음.

<2026년도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수입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계획액(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입 합계	**380,149**	**428,083**	**47,934**	**12.6**
기타재산이자수입	7,583	5,311	△2,272	△30.0
과징금 및 과태료	5,795	4,847	△948	△16.4
가산금	3	6	3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148,562	165,919	17,357	11.7
- 법정부담금	123,165	128,159	4,994	4.1
- 민간출연금	15,000	27,000	12,000	80.0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보상료 및 사업정산잔액 등	10,397	10,760	363	3.5
여유자금 회수	218,206	252,000	33,794	15.5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으로서 운용수익 예상치를 반영하여 5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는 현실적인 수입액 추정을 위하여 과거 수납 실적을 활용하여 4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산금은 과태료 등의 미납에 따른 가산금으로서 600만원을 편성함.

기타경상이전수입은 1,659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억 5,700만원(11.7%)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으로는 법정부담금이 1,281억 5,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액되었고, 민간출연금은 출연 계획에 따라 2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 증액 편성되었으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보상료 및 사업정산잔액이 107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액 편성되었음.

또한, 2025년 말 예산 계획 기준으로 여유자금운용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여유자금회수 금액을 증액하여 2,520억원을 편성하였음.

3. 세출예산(지출계획)안

가. 세출예산안 개요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44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3억 3,900만원(△29.8%) 감액[186]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187]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인 건 비	15,682	16,311	629	4.0
□ 기본경비	4,038	4,104	66	1.6
□ 주요사업비	129,045	84,011	△45,034	△34.9
계	148,765	104,426	△44,339	△29.8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 비목별로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16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56억 8,200만원에 비해 6억 2,900만원(4.0%) 증액되었고,

186) 2026년도 예산안 감소는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기인함

187)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따른 금액임

기본경비는 41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3,800만원에서 6,600만원(1.6%)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 840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의 1,290억 4,500만원에 비해 △450억 3,400만원(△34.9%) 감액[188]되었음.

○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운영 등으로 1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축’ 사업은 한울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축 완료 및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차별 사업비를 반영하여 △5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음.

‘핵비확산 이행체제구축’ 사업은 핵물질전용방지 통제관리 이행체제 구축비 감액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음.

이 외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과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은 각각 8,300만원, 1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기술 개

188) 2026년도 예산안 감소는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기인함

발(R&D)’ 사업은 △12억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주변국 원자력 활동 대응기술 개발(R&D)’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한편,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사업은 원자력통제 4대 이행분야(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전주기 기술역량 제고 및 규제현안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신규로 56억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출연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이 89억 7,300만원 증액되었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이 5억 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R&D)’ 사업이 1억 5,700만원 증액되었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 지원(R&D)’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사업은 6억원 증액되었음.

‘행정사무정보화’ 사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사운영’ 사업은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전산망 구축 및 관사 임차비용 등이 반영되어 각각 1억 4,600만원,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예산 본예산(A)	2026예산 정부안(B)189)	증 감		비고
			(B-A)	%	
일반회계 총계	**148,765**	**104,426**	**△44,339**	**△29.8**	
방사선방재환경안전관리	**14,052**	**5,555**	**△8,497**	**△60.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382	5,555	173	3.2	
방재환경기반구축	8,670	-	△8,670	순감	이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7,274**	**1,904**	**△5,370**	**△73.8**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신축	7,274	1,904	△5,370	△73.8	
핵비확산이행체제구축	**2,123**	**2,111**	**△12**	**△0.6**	
핵비확산이행체제 구축	2,123	2,111	△12	△0.6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56,738**	**15,058**	**△41,680**	**△73.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860	943	83	9.7	
안전규제 요소융합기술개발(R&D)	1,230	-	△1,230	순감	종료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25,436	-	△25,436	순감	이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4,357	-	△4,357	순감	이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11,950	-	△11,950	순감	이관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	1,500	-	△1,500	순감	이관
해양환경 방사성핵종 분석 기술 개발(R&D)	2,960	1,730	△1,230	△41.6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2,925	4,785	1,860	63.6	
주변국 원자력활동 대응기술 개발(R&D)	2,000	2,000	-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3,520	-	△3,520	순감	이관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	5,600	5,600	순증	신규
직할출연연구기관지원(R&D)	**44,932**	**55,182**	**10,250**	**22.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7,480	36,453	8,973	32.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3,255	13,775	520	3.9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비 지원(R&D)	3,797	3,954	157	4.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 지원(R&D)	190	190	-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210	810	600	285.7	
인건비	**15,682**	**16,311**	**629**	**4.0**	
기본경비	**4,038**	**4,104**	**66**	**1.6**	
행정운영지원	**3,926**	**4,201**	**275**	**7.0**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	1,333	1,479	146	11.0	
원자력안전위원회 청사 운영	**2,593**	2,722	129	5.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189)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따른 금액임

나. 지출계획안 개요

○ 2026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출계획안은 4,280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9억 3,400만원(12.6%) 증액[190] 편성되었음.

<2026년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출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계획액(A)	2026 계획안(B)[191]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인건비	596	617	21	3.5
□ 기타운영비	687	1,404	717	104.4
□ 주요사업비	126,866	186,187	59,321	46.8
□ 여유자금운용	252,000	239,875	△12,125	△4.8
계	**380,149**	**428,083**	**47,934**	**12.6**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 비목별로 내역을 보면,

기금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6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3.5%) 증액되었으며, 기타운영비는 14억 400만원으로 전년

190) 2026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지출계획안 증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기인함

191) 2026년도 계획안 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따른 금액임

대비 7억 1,700만원(104.4%) 증액되었음.

주요사업비는 1,861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3억 2,100만원(46.8%) 증액[192] 편성되었으며,

여유자금운용은 2,398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2,500만원(△4.8%) 감액 편성되었음.

○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20억원이 증액 반영되는 등 전년 대비 4.1% 증액된 272억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국가방사선안전교육 훈련강화를 위해 2억 6,4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2.0% 증액된 70억 8,000만원이 편성됨.

‘원자력 안전규제’ 사업의 경우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를 위한 예산 25억 2천만원이 증액 반영되는 등 전년 대비 1.3% 증액된 629억 8,900만원이 편성됨.

‘방사선 안전규제’ 사업의 경우 i-SMR 원자력통제분야 규제이행을 위해 6억원이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0.7% 증액된 299

192) 2026년도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주요사업비 증액은 감소는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기인함

억 4,100만원이 편성됨.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사업은 종사자 건강영향조사 예산 감액으로 전년 대비 △5.0% 감액된 18억 1,100만원이 편성됨.

‘방재환경기반 구축’ 사업은 방사선비상진료 지정기관 운영 지원 예산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8% 감액된 83억 3,700만원이 편성됨.

이 외에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사업은 △57억 4,400만원 감액되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사업은 9억 6,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사업은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개발(R&D)’ 사업은 36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 사업은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음.

한편,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검증기술 개발을 통한 비경수형 원자로 예상 규제현안 해결을 위해 신규로 2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세부사업별 지출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 계획액(A)	2026 계획안(B)[193]	증 감		
			(B-A)	%	비고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총계	**380,149**	**428,083**	**47,934**	**12.6**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기반 구축	**33,065**	**34,282**	**1,217**	**3.7**	
원자력안전기반 조성	**26,125**	27,202	1,077	4.1	
방사선안전기반 조성	6,940	7,080	140	2.0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91,895**	**92,930**	**1,035**	**1.1**	
원자력 안전규제	**62,159**	62,989	830	1.3	
방사선 안전규제	29,736	29,941	205	0.7	
원자력안전활동지원	**1,906**	**1,811**	**△95**	**△5.0**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1,906	1,811	△95	△5.0	
방사선방재환경안전관리	**-**	**8,337**	**8,337**	**순증**	
방재환경기반 구축	-	8,337	8,337	순증	이관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	**48,827**	**48,827**	**순증**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	19,692	19,692	순증	이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	5,325	5,325	순증	이관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	12,950	12,950	순증	이관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	-	1,350	1,350	순증	이관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	7,200	7,200	순증	이관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	2,310	2,310	순증	신규
인건비	**596**	**617**	**21**	**3.5**	
기타운영비	**687**	**1,404**	**717**	**104.4**	
여유자금운용	**252,000**	**239,875**	**△12,125**	**△4.8**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193) 2026년도 계획안 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따른 금액임

4. 2026년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194]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의 운영 중 원자력손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 경우, 보상계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기 위해 사전에 원자력사업자와 정부 간에 체결하는 일종의 보험 계약임.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절차>

사업자		원안위
보상계약 체결 신청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고)	⇨	신청서 검토 및 보상계약 체결 (사업자 통보)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194) 「원자력손해배상법」 제5조(손해배상조치의무)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손해배상조치"라 한다)를 하기 전에는 원자로의 운전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조치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의 체결 또는 공탁으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계약금액)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 1] 배상조치액
가. 발전용원자로의 경우: 3억 계산단위
나. 연구용원자로의 경우: 60억원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상요율) ①법 제7조에 따른 요율(이하 "보상요율"이라 한다)은 보상계약금액의 1만분의 20(교육기관 또는 원자력에 관한 연구기관에서 교육용 또는 연구용으로 행하는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보상계약에 있어서는 1만분의 10)으로 한다.
②보상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장래의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보상계약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보상요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규정하는 요율에 그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당해 보상계약금액으로 나누어 얻은 수를 곱하여 얻은 요율로 한다.

○ 원자력사업자는 민간보험사와는 원자력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와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민간 책임보험에서 담보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를 정부가 대신 담보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특수한 계약임.

○ 원자로 사고 발생 시 정부의 보상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195]에서는 정부가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20조(舊 예산회계법 제26조)[196]에 근거하여 제도가 도입된 1975년 이후 매년 보상계약금액을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왔음.

---

195)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정부가 1회계연도 내에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 이내로 한다.

196)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舊「예산회계법」 제26조(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부가 2025년 9월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총칙 제16조에서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26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3조 3,817억 8,000만원 이내로 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규정함.

<연도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보상료 현황>

(단위: 원)

연도별	기관별	금 액	총 액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	5,392,404,440	5,403,604,440
	한국원자력연구원	7,02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40,000	
	한전원자력연료㈜	120,000	
	경희대학교	20,000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	6,213,492,000	6,224,692,000
	한국원자력연구원	7,02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40,000	
	한전원자력연료㈜	120,000	
	경희대학교	20,000	
2024년	한국수력원자력㈜	6,188,256,000	6,199,456,000
	한국원자력연구원	7,02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40,000	
	한전원자력연료㈜	120,000	
	경희대학교	20,000	
2025년	한국수력원자력㈜	6,621,588,000	6,632,788,000
	한국원자력연구원	7,02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40,000	
	한전원자력연료㈜	120,000	
	경희대학교	20,000	
2026년 (예정)	한국수력원자력㈜	6,745,320,000	6,756,520,000
	한국원자력연구원	7,02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40,000	
	한전원자력연료㈜	120,000	
	경희대학교	20,000	

※ 연도별 보상계약기간 기준으로 작성(보상료는 전년도 12월 말 징수)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5.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신규 사업

○ 2026년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 R&D 사업 1개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R&D 사업 1개로 총 2개임.

○ 일반회계 신규사업인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사업은 원자력통제 4대 이행분야(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전주기 기술역량 제고 및 규제현안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56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규사업인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검증기술 개발을 통한 비경수형 원자로 예상 규제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2026 예산안
일반회계	ㅇ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1501-417)	5,600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ㅇ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2001-415)	2,31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6. 2026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종료 사업

○ 2026년도 종료 사업은 일반회계 사업 1개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R&D 사업 2개로 총 3개임.

○ 일반회계 2026년도 종료 사업인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사업은 대규모 원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 현장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2026년도 종료 사업인 ‘원자력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사업은 국제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독립검증을 위한 6대 중점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96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 사업은 전 원전부지 대상 다수기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한울부지 PSA 모델 개발 및 부지리스크 정량화를 위한 사업으로 1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종료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2026 예산안
일반회계	○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1403-301)	1,904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2001-407)	19,692
	○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 (2001-410)	1,35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10.

Ⅱ. 검토의견

1. 일반회계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1402-401):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의 품질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 현장운영자가 보안·물류업무를 병행하는 등 운영 집중도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물동량 상위 지역부터 정기 현장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운영기준 및 위탁계약에 연계하는 등 동 사업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유통 차단 및 생활방사선 위험 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5억 5,500만원임.

<2026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A)	집행액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5,980	5,904	5,382	4,162	5,555	173	3.2
○감시기 설치·운영	3,408	3,332	3,276	2,453	3,449	173	5.3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1,937	1,937	1,550	1,377	1,570	20	1.3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635	635	556	332	536	△20	△3.6
□ 세출예산비목	5,980	5,904	5,382	4,162	5,555	173	3.2

(단위: 백만원,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157	1,081	1,162	550	1,202	40	3.4
○ 사업출연금(350-02)	4,823	4,823	4,220	3,612	4,353	133	3.2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은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유통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방사선 감시기 운영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4억 4,900만원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동 내역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감시기 설치와 유지보수를, 공항·항만 감시기 운영자에게는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 현장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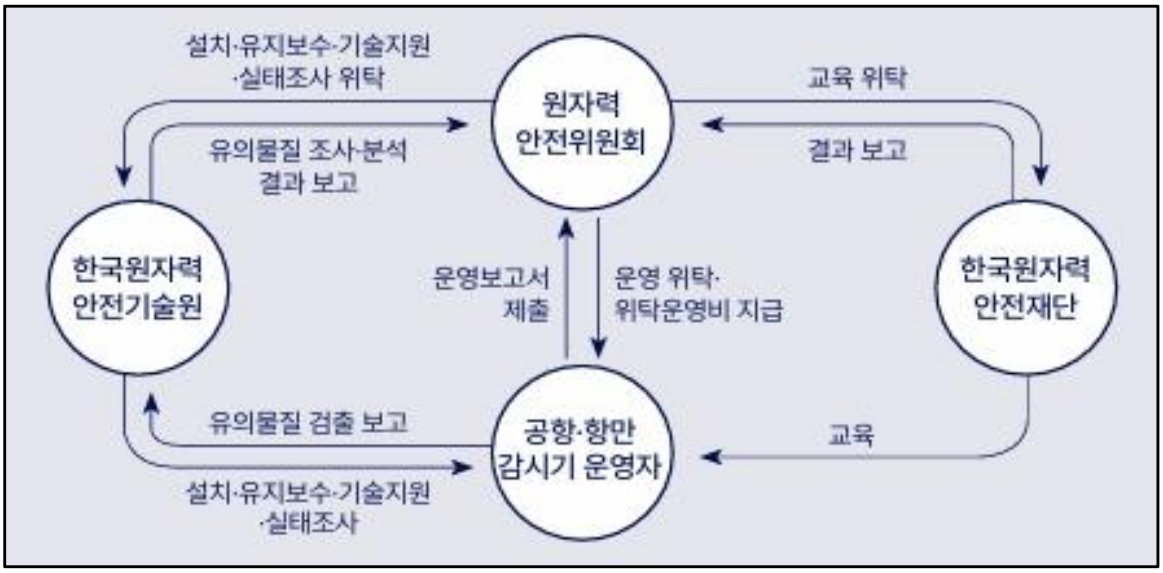
<2026년 감시기 설치·운영 내역사업 세부 산출내역>

○ 사업출연금(350-02) : 2,247백만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설치 : 7대x35백만원 = 245백만원
- 운영 : 138대x1.16백만원x12개월 + 7대x1.16백만원x9개월=2,002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02백만원(공·항만 감시기 운영기관)
- 운영 : 120대x0.8백만원x12개월+7대x0.8백만원x9개월 =1,202백만원

○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용’ 내역사업을 통해 한국원자력재단이 공항·항만 감시기 운영자 대상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 체계>



자료: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 매뉴얼(원자력안전기술원)

나) 검토의견

□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의 품질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원안위는 공항·항만의 방사선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197]하고 있으며, 2025년

197)「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2.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준 총 18개 공항·항만의 152개의 감시기 중 운영자가 위탁사업비 지급이 어려운 국가·공공기관인[198] 경우를 제외, 120대에 대해 감시기 1대당 월 8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공항·항만 감시기 설치 현황('24.12월 기준)>

항만 (15개)															공항 (3개)		
경인	광양	군산	대산	동해묵호	마산	목포	부산	삼척	울산	인천	장항	진해	평택당진	포항	인천	김포	김해
2	9	11	2	4	1	3	42	1	7	31	1	1	9	3	22	2	1

- 공항·항만의 수탁기관은 해당 운영비를 현장 운영자의 수당 등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며, 연 1회 집행내역(감시기 운영 내역)을 첨부해 정산하고 잔액과 이자를 국고에 반납하고 있음.

- 한편,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 인력은 관리책임자(수탁기관 담당자)-운영책임자(재위수탁기관 담당자)-현장운영자로 구분되어 역할을 분담하며, 현장운영자가 감시기 운영·일일점검 및 감시기 경보발생시 2차 검색 등의 실무를 수행하는 구조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태조사[199]에 따르면 현장운영자는 대체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198) 원안위는 총 30개 감시기 운영기관 중 12개 국가·공공기관(항만공사, 지방해양수산청 등)에서 131개의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위탁사업비 지급이 불가능한 32개 감시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제외하였다는 설명임.

199) 2024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25.1.

로 청원경찰·특수경비원 또는 게이트 관리 전문업체 소속직원 등으로 차량 출입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며, 일부는 화물조업 및 검수 등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 다만, 실제 근무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동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웠음.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감시기 운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규 설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면조사로, 각 감시기별 1인당 업무량, 업무 집중도·숙련도 등 실질적 운영 실태는 추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 이처럼 보안·출입 관리 인력이 감시기 운영을 겸임하는 현 구조는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부산항 등 물동량 상위 항만은 운영 집중도와 유의물질 검색·조사의 실효성이 우려됨.

<공항·항만별 감시기 경보신호 발생 건수(2024년)>

(단위: 건)

경인	광양	군산	김포공항	김해공항	대산	동해	마산	목포
5	780	196	0	1	3	30	0	0
부산	**삼천포**	**울산**	**인천**	**인천공항**	**장항**	**진해**	**평택·당진**	**포항**
7,181	0	554	582	412	438	0	175	130

○ 따라서 원안위는 동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물동량 상위 지역부터 정기 현장평가 등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운영기준·위탁계약 등에 연계하는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1) 원자력안전기반조성(1701-401):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재검토 필요

○ 원안위는 2026년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4개소 구축·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나, 설치 지역 미확정 등으로 2026년 7월 개소 달성이 곤란한바, 일정·예산을 필요시 재조정하고, 정보공개 서비스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관리 총괄기관을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원자력안전기반조성’ 사업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지원,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및 소통 강화 등 체계적인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임.

○ 2026년도 계획안은 2025년 대비 1억 7,700만원(4.1%) 증액된 272억 200만원임.

<2026년도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원자력안전기반조성	25,089	25,090	26,125	16,376	27,202	1,077	4.1
○ 원자력안전 규제 교육	3,934	3,934	4,164	2,429	4,621	457	11.0
○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 조성	14,352	14,352	15,131	10,111	16,029	898	5.9
○ 원자력안전 국제 협력기반 조성	2,482	2,482	2,482	1,336	2,482	-	-
○ 원자력안전규제 소통	784	774	784	436	954	170	21.7
○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26	0	26	0	26	-	-
○ 원자력안전 특별사법 경찰 운영	69	106	120	69	120	-	-
○ 지진관측망 운영	2,112	2,112	2,112	1,232	1,925	△187	△8.9
○ 국내고유 원자력 규제 기반 조성	1,330	1,330	1,306	763	1,045	△261	△20.0
□ 세출예산비목	25,089	25,090	26,125	16,376	27,202	1,077	4.1
○일반수용비(210-01)	10	10	21	19	21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	0.9	1.5	1.2	1.5	-	-
○피복비(210-03)	5	5	5	0	5	-	-
○유류비(210-08)	1.5	1.2	1.5	1.2	1.5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5	1.5	1.5	0.4	1.5	-	-
○일반용역비(210-14)	313	303	313	160	313	-	-
○관리용역비(210-15)	35	73	75	37	75	-	-
○국내여비(220-01)	12	12	12	8	12	-	-
○포상금(310-03)	26	0	26	0	26	-	-
○기타보전금(310-04)	0.5	0.3	0.5	0.3	0.5	-	-
○국제부담금(340-02)	800	800	800	300	800	-	-
○사업출연금(350-02)	23,881	23,881	24,866	15,847	25,943	1077	4.3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2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나) 검토의견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재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사업 중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내역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5조[200]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원자력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대면 소통 기구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조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A)	2026년도(B)	증감 (B-A)	증감률 (B-A)/A
원자력안전규제 정책기반조성	15,131	16,029	898	5.9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운영	2,189	3,890	1,701	77.7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676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1,214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	2,000	2,000	순증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 2025년도 집행액은 7월 말 기준임.

200)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보유·관리
2. 원자력안전정보의 연계·가공·분석
3.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제공
4.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된 정책의 지원 및 국내외 협력
5.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지원
6.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동 사업의 근거법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산과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정·시행(2022.6.9. 시행)되었는데,

기존 원안위가 제공하던 온라인 정보공개 방식[201]만으로는 고령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에 한계가 있어 동 법 제정 당시 특별히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운영 근거를 포함한 것임.

○ 이에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7개 지역(기장, 울주, 경주, 영광, 고창, 울진, 대전)의 방사능방재지휘센터 내 정보공유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2026년 편성된 예산에 따라 4개소를 우선 설치·운영하고, 향후 나머지 3개소도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 후 설치할 예정임.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 연도별 추진계획(안)>

구 분	'25년 요구(안)	예산 ('26년도)	'26년 요구(안)	예산 ('27년도)	'27년 요구(안)	예산 ('28년도)
구축(안)	4개소	2,000	3개소	3,396	-	3,318
운영(안)	-		7개소		7개소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01) 홈페이지_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 http://nsic.nssc.go.kr

- 원안위는 현재 정보공유센터 지정대상 선정기준·자격, 운영·평가 체계, 지원방식 등을 포함한 센터 지정 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계획 수립 후 2026년 1~3월 지역별 운영기관 공모, 4~6월 운영기관 지정 및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개소할 계획으로,

- 향후 정보공유센터에서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연계한 지역주민 대상 정보 제공, 원자력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한 지역 설명회 개최 등을 수행하여 현장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10월 말 현재까지도 정보공유센터 4개소 설치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였는바, 지역별 센터의 7월 개소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사업 계획상 일정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 추진 일정 및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지역별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접근성·기능성·공간 활용도가 상이한바,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센터별·지역별 특성을 조사하여 운영모델을 정교화하는 등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하므로 무리한 일정

준수에 치중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정보공유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월 개소 계획이 가능한지 일정을 재검토·조정하고 이에 따른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보공유센터 예산 상세내역(1개소, 상주인력 3인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 근거	비고
▪ 정보공유센터 구축			
시설 공사비	128	▪ 칸막이 설치 : 25㎡ x 6개실 x 10만원 = 15백만원 ▪ 수장공사(벽체·천장·바닥) : 360㎡ x 10만원 = 36백만원 ▪ 통신공사 : 2개실 x 30백만원 = 60백만원 ▪ 냉난방기 설치 : 6개실 x 280만원 = 17백만원	- 최소한의 내부 공사만 반영, 공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6개실(사무실2, 교육장1, 열람실1, 회의실2), 2개실(교육장1, 회의실1)
집기 구입	120	▪ 가구류 : 70백만원, PC 및 복합기 : 50백만원	
소계	**248**		
▪ 정보공유센터 운영			
관리비	14	▪ 관리비 : 2백만원/월 x 12개월 = 24백만원 -24백만원 x **7개월/12개월** = 14백만원	
인건비	88	▪ 지역별 운영요원 3인 : 150백만원/1개소 -150백만원 x **7개월/12개월** = 87.5백만원	- 5급 연구원 기준(수당 포함)
운영비	100	▪ 정보공개 및 소통 운영비 : 200백만원/1개소 -200백만원 x **6개월/12개월** = 100백만원	- 협의회 회의 지원 등
교육운영	50	▪ 대상별 교육훈련 : 100백만원/1개소 -100백만원 x **6개월/12개월** = 50백만원	- 지역주민, 협의회 위원 등
소계	**252**		
합계	**50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둘째, 원안위는 정보공유센터의 정보공개 서비스가 일관되게 제공되도록 운영·관리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센터운영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원안위는 정보공유센터 운영을 위해 관할 지자체 내 원자력 관련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관·단체를 공모로 선정할 예정으로, 안전협의회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시 소통을 위해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는 운영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 방식 채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공모로 선정된 각 지역운영기관의 역량 차이 등에 따른 서비스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총괄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별 공통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제공의 내용과 수준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가 적합하게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원안위는 운영기관 선정 방식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재편성하여 소요 재원을 합리적으로 산정·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1701-402): 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ㅇ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은 신고기관의 방사선기기 이동 등에 대한 미신고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세부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신고기관의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방사선 안정기반조성'사업은 법정의무교육인 기본교육, 면허자 보수교육 등 제공,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종사자방호기록관리, 방사선동위원소 등 종합 안전성 확인체계 확립 등 방사선 안전규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방사선안전 교육훈련강화, 방사선안전이해확산, 종사자방호기록 및 규제정보 관리·분석 등 6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억 4,000만원(2.0%) 증가한 70억 8,000만원임.

<2024년도 원자력 안전기반조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6,912	6,912	6,940	4,334	7,080	140	2.0
○국가방사선안전 교육훈련강화	738	738	738	493	1,002	264	35.8
○방사선안전이해확산	700	700	728	483	594	△134	△18.4
○종사자방호기록 및 규제정보 관리·분석	1,573	1,573	1,573	1,048	1,500	△73	△4.6
○수출입요건확인	400	400	400	266	359	△41	△10.3
○방사선안전규제정보 분석 및 관리	3,501	3,501	3,501	2,044	3,091	△410	△11.7
○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	-	534	534	순증
□ 세출예산비목	6,912	6,912	6,940	4,334	7,080	140	2.0
○사업출연금(350-02)	6,912	6,912	6,940	4,334	7,080	140	2.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나) 검토의견

□ 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현행 방사선기기 관리체계가 사후확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특히 신고대상 방사선기기의 경우 사용신고 이후 정기

보고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로 무단 양도·양수, 장기 방치, 분실 등 위험이 지속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주기적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신규 사업임.

- 원안위는 동 사업에 3년('26~'28)간 총사업비 18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 실시 후 시스템을 고도화 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방사선기기 식별체계 및 이력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 5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수행할 계획임.

【연도별 사업 추진 내용】

(단위 : 백만원)

구분	'26	'27	'28
예산	534백만원	664백만원	664백만원
목표	방사선기기 식별체계 기초 설계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	운영 안정화 및 제도화 기반 마련
세부 추진 내용	- IT 기반 식별항목 및 데이터 구조 설계 - 방사선기기 유형별 구조 및 적용 가능성 분석 - 식별항목 라벨 규격 및 시제품 설계(기초단계)	- 규제정보 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 시스템 개발 - 이력관리 기능 및 모바일 플랫폼 구축 - 방사선기기 유형별 식별항목 테스트 및 기능 검증 - 이용기관 대상 시범 운영 및 피드백 수렴	- 모든 방사선기기 단위 확산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보수 -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한 기능 개선 및 사용자 지원 강화 - 제도 연계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

○ 원안위는 신고대상 장비 이용기관(이하 "신고기관")에서 장비 임의변경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202]를 고려하여 신고기관

202) 원안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공개(원안위 보도자료, 2024.9.26.) 참조

에 대한 규제강화 대신 IT 기반 식별체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전주기 관리를 구현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성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임.

- 「원자력안전법」 제53조[203]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하려는 기관은 원안위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임. 다만, 허가기관(약 1,900개)은 장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나, 신고기관(약 9,300개)은 정기검사 및 관리현황 보고 의무가 면제되어 체계적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현행 방사선기기 관리체계>

<table>
<tr><td>구분</td><td colspan="2">공급자</td><td colspan="3">사용자</td></tr>
<tr><td>기기유통절차</td><td>수입/제작</td><td>판매</td><td>취득</td><td>사용</td><td>폐기/양도</td></tr>
<tr><td>인허가사항</td><td>생산/판매허가</td><td>설계승인/기기검사</td><td>허가
신고
면제</td><td>시설/정기검사
-
-</td><td>폐지/양도신고
폐지/양도신고</td></tr>
<tr><td>관리체계</td><td colspan="2">수출입신고/생산·판매보고</td><td colspan="3">관리현황보고(신고/면제대상 제외)</td></tr>
</table>

203)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생산·판매·사용(소지·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 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

- 이에 원안위는 기존 방사선기기 식별체계(명판)에 통합정보가 담긴 IT 식별코드(QR·바코드)를 추가 부착하고 이를 방사선안정관리통합정보망(RASIS)에 연계하여 이용기관이 해당 코드를 통해 전산신고를 간편히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원안위가 별도 검사 없이도 실사용 여부를 전산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참고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 다만 동 내역사업이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한바, 다음과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동 사업은 신고기관의 방사선기기 이동·변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하나, 전산신고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신고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는 원천적 문제는 개선하기 어려움.

- 방사선기기에 IT 식별코드를 부착 후에도 신고기관이 방사선기기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양도·양수 시 전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안위가 장비의 실제 사용·변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바, 정기검사·보고 의무가 없는 신고기관에 대한 실질적 안전관리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

○ 둘째, 동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 설계 단계로 도입 방법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과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사업추진에 앞서 세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신규 도입 장비뿐 아니라 이미 각 의료기관·연구기관 등에 설치·가동 중인 방사선기기에 IT 식별코드를 부착해야 하는데 누가, 어떤 시점에, 어떤 절차로 코드를 부착할지에 대한 세부 매뉴얼과 계획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혼선과 추가 업무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원안위는 동 사업의 추진에 앞서 신고기관 미신고에 대한 대책과 IT 식별체계 부착·운영 절차를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신고기관의 방사능기기 안전관리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 전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항목	현 행	개선	
생산 판매 기관	• 판매자가 사용자에 자료*제공 *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교육자료 등 • 방사선기기 식별체계(명판)* 부착 * 방사능표지, 방사선원의 종류, 방사능량, 모델번호, 제작번호, 기기공급사 및 설계 승인번호 등	IT 식별코드 추가	• 기존 식별체계에 QR코드 또는 바코드 등의 IT 식별코드 부여 - IT 식별코드에 기존 식별체계 정보 외에 판매자가 사용자에 제공한 자료, 행정 요구사항 정보 등을 함께 제공
사용 기관	• 방사선기기 명판에 부착된 정보 외 판매자가 사용자에 제공한 자료와 행정 요구사항 정보 등은 별도로 확인하여 안전관리	방사선기기 통합정보 취득	• IT 식별코드를 통해 방사선기기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안전관리 * 기존 식별체계 정보, 판매자 제공정보 및 행정 요구사항 정보
행정 절차	• 양도·양수 등 각종 신고 시 신고서에 방사선기기 정보를 직접 입력 • 선원 생산, 판매, 취득, 폐기, 보유 등의 내역 정기보고 시 보고서에 방사선기기 정보를 직접 입력	절차 간편화	• 스마트폰을 통한 입력 서비스 추가 제공 - 스마트폰으로 IT 식별코드를 인식하면 복잡한 기기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간편하게 신고서 및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
규제 기관	• 안전관리자 교육, 방사선안전관리 통합정보망(RASIS), 우편 등을 통해 행정 요구사항 안내 • 신고기관은 보유계획만으로 신고를 수리하여 실제 사용여부 확인 불가	규제 효율화	• IT 식별체계에 행정 요구사항 안내를 추가하여 신고기관의 행정 요구사항 누락 감소 • 신고기관에 대해 검사 외적인 방법으로 실제 방사선기기 사용여부 확인 ※ IT 식별체계 접속(인식) ID, IP 정보로 신고기관 내 방사선기기 반입확인 • 신고기관의 신고 활성화와 정확도 제고를 통해 관련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기관 선별 가능 * 식별체계 활용도, 방사선기기 현황, 생애이력, 노후화 정도, 분야별 분포 등

3) 방재환경기반구축 (1902-402) :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필수 방재장비 구축비 확보 필요

○ 원안위는 '26.3. 개소 예정인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방사능재난 시 현장 지휘·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재·개인방호 장비를 기존 7개 센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비하기 위한 구축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동 사업은 방사능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3억 3300만원 감액(△3.8%)된 83억 3,700만원이 편성됨.

<2026년도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방재환경기반구축	9,005	9,005	8,670	6,069	8,337	△333	△3.8
○국가방사능방재 체제구축	4,938	4,938	4,633	3,234	4,569	△64	△1.4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	4,067	4,067	4,037	2,835	3,768	269	6.7
□ 세출예산비목	9,005	9,005	8,670	6,069	8,337	△333	△3.8
○사업출연금(350-02)	9,005	9,005	8,670	6,069	8,337	△333	△3.8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나) 검토의견

□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필수 방재장비 구축비 확보 필요**

○ 현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204]에 따라 방사능재난시 신속한 현장지휘 및 상황관리, 재난정보 수집·전파 등을 위하여 국내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7개소가 운영 중이며, '26.3.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신규 개소·운영될 예정임.

20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재난등의 신속한 지휘 및 상황 관리, 재난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발전용 원자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이 있는 인접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이하 "현장지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황>



구분	월성	영광	울진	고리	대전	울주	한울	한빛
부지면적	9,850㎡	13,500㎡	9,913㎡	7,830㎡	KINS 부지내	10,000㎡	10,000㎡	10,000㎡
건물면적	1,065㎡	1,235㎡	1,235㎡	1,033㎡	1,378㎡	1,728㎡	2,000㎡	2,000㎡
내진설계	진도 Ⅶ (0.1g)	진도 Ⅶ (0.1g)	진도 Ⅶ (0.1g)	진도 Ⅶ (0.1g)	진도 Ⅶ (0.1g)	진도 Ⅸ (0.3g,면진)	진도 Ⅸ (0.3g,면진)	진도 Ⅸ (0.3g,면진)
원전으로부터거리	10km	14km	14km	14km	5km (하나로)	30km (고리,새울) 38km(월성)	43km	31km
준공	'05.2월	'07.12월	'08.5월	'09.12월	'09.12월	'22.5월	'25.3월	'26.3월 (예정)
위치	경북 경주시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부산 기장군	대전 유성구	울산 울주군	경북 울진군	전북 부안군

○ 원안위는 동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현장중심방재대응능력 강화'에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유지·관리 용역, 기본 운영비, 장비 유지·관리 등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한빛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총 8개 센터 운영비로 전년대비 9,400만원 증액된 34억 800만원을 책정하였음.

<2026년도 현장중심방재대응능력 강화 사업 세부 산출내역>

□ 현장중심 방재대응능력 강화: : 3,408백만원('25년대비 +94백만원)

8개 센터 12개월 운영비

※ 신규 운영되는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용역비 반영

- 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 1,769백만원('25년대비 +221백만원)
  * 시설유지·경비·청소 등 상시근무인력에 대한 용역비:147.4백만원×12개월=1,769백만원
  *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 용역비는 10개월분만 반영함.
- 기본 운영경비 : 456백만원(전년대비 +57백만원)
  * 전화요금,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방재차량 운용비 등 : 38백만원 ×12개월 = 399백만원
- 방사능방재 장비 유지·관리: 1,018백만원(전년동)
  * 상황실 영상장비, 화상회의장비 유지보수 및 개인선량계, 방사능측정장비 등 비상대응장비 유지보수 및 검교정 등 : 84.8백만원×12개월=1,018백만원
- 건물 건전성 유지 및 설비 관리비 : 165백만원('25년 대비 △184백만원)
  * 거주성 설비유지관리, 현장지휘센터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경비 : 13.75백만원 X 12월 = 165백만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다만,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26.3. 개소할 예정인바, 정부안에는 방사능 감시·대응을 위한 필수 장비 구축비가 반영되지 않아 센터 개소 이후 방사능재난 발생 시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동 센터의 설립목적은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 방재업무 수행으로, 이를 위해 방사능 측정·분석장비, 개인방호장구, 원자력시설 주변의 실시간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나, 관련 예산이 미반영되어 한빛권 센터는 개소 후에도 필수 장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처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와 동시에 운영할 필수 방호체계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사능 관련 위협 발생 시 초기 대응 공백과 현장 대응 지연이 초래될 수 있음.

- 세부적으로, 다른 7개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비 보유 수준을 기준으로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동등 수준의 장비를 구축할 경우 총 3억 5,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필요 장비 세부 산출내역>

구분	상세		금액(백만원)
	수량	단가(백만원)	
전자개인선량계	30	2	60
방사선량률측정기	5	2	10
방사능오염측정기	5	10	50
문형감시기	2	30	60
휴대용전알파베타계수기	1	15	10
Emergency kit	1	15	15
원거리방사선량률측정기	3	5	15
환경방사선감시기(ERMS)	1	100	100
방호물품	방호복, 일회용 방호복, 방진마스크 등		30
합 계			35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따라서 원안위는 기존 7개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비상시 대응을 위해 각종 방재장비와 개인방호장비를 상시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한빛권 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도 동일 수준의 방재·개인방호장비 구비 예산을 반영해 방사능재난 발생 시 현장 지휘·대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2001-415): 일반회계에서 수행 중인 유사 목적 과제와 연계 필요

○기존 일반회계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사업 중에도 차세대 비경수형 SMR 관련 과제가 다수 진행 중이므로 신규사업은 기존 과제와의 연계·조정을 전제로 면밀히 기획하여 연구 중복과 집행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개요

○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 등('30년대 초)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검증기술개발을 통한 비경수형 원자로 예상 규제 현안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임.

○ 동 사업은 7년('26~'32)간 총사업비 49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6년 편성된 예산은 23억 1,000만원임.

<2026년도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계획안 (B)	증감 (C= B-A)	증감률 (C/A)
	계획액	집행액	계획액 (A)	집행액			
□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 기술 개발(R&D)	-	-	-	-	2,310	2,310	순증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 기술 개발(R&D)	-	-	-	-	2,310	2,310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2,310	2,310	순증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2,310	2,310	순증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주 1) 2025년 집행액은 7월말 기준임.
2) 2025년 예산액(계획액)은 2025년 제1회, 제2회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나) 검토의견

□ 일반회계에서 수행 중인 유사 목적 과제와 연계 필요

○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는 노심·증기발생기 등 구성품을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하여 모듈로 제작·조립 가능하도록 한 300메가와트(MWe) 이하의 출력을 가진 원자로를 말하며[205], 냉각재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경수형과 헬륨·소듐 등 비수냉각재를 사용하는 비경수형으로 구분함.

205)국제원자력기구(IAEA): SMR은 출력이 300MW 이하이며 공장에서 모듈형으로 제작하여 부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선진원자로(Advanced Nuclear reactor)
SMRs are advanced nuclear reactors with a power capacity of up to 300 MW(e), and whose components and systems can be factory built and then transported as modules to sites for installation as demand arises.

○ 원안위는 동 사업을 통해 정부의 차세대 비경수형 SMR 노형 개발 추진[206]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수요에 대비하여 경수형 중심의 현행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검증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임.

- 원안위는 현재 경수형 SMR 안전규제체계 및 규제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비경수형 SMR은 경수형 SMR과는 근본적 설계 차이가 있어 별도의 안전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동 사업을 신규로 착수하겠다는 설명임.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수형 SMR 관련 사업 목록>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목적	'26년 예산(안)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2022~2028	i-SMR 표준설계인가('26 신청 예정) 심사를 위한 안전규제 마련	130억원 (총사업비 490억원)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	2025~2032	경수형 SMR 전주기(건설·운영·해체 등)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	72억원 (총사업비 470억원)

- 또한, 사업방식은 경수형 SMR 관련 사업과 동일하게 전문기관(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 동 기관이 과제별 연구수행기관을 선정·관리하여 비경수형 SMR 규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206)과기정통부 비경수형 SMR 개발 사업: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개발사업('23~'26, 401억원) ▲민관합작 차세대원자로 개발 프로젝트('24~'27, 456억원)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 사업('25~'29, 580억원)

<사업추진 체계>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원자력안전위원회 (2,310백만원)	=> (2,310백만원)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추진단 (2,310백만원)	=> (2,100백만원)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등 연구수행기관 (2,100백만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 다만, 비경수형 SMR이 규제현안이 되면서 원안위의 일반회계 사업인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사업의 과제 다수(26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이미 비경수형 SMR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존 사업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신규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이 각각 기획·관리하는 이원화된 집행 체계로 인한 비효율이 우려됨.

- 원안위는 이에 대해 기존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 사업의 과제는 비경수형 SMR 규제의 기초기술, 신규사업은 실제 수요 대응 규제연구로 구분된다고 하나, 비경수형 SMR의 기술 성숙도가 여전히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기초·응용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할 타당성이 불명확해 보임.

<기존 사업 과제와 신규 사업 과제의 비교>

구분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기존사업)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신규사업)
사업목적	미래 신기술 및 안전현안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 규제 현안분야 중장기 로드맵 및 핵심 기반기술 확보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 등('30년대 초)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검증기술개발을 통한 비경수형 원자로 예상 규제 현안 해결
회계	일반회계	원자력기금
전문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총사업비	475억원	490억원
사업기간	2025~2032	2026~2032
비경수형 SMR 관련 과제	대한민국 SFR 핵연료 자격화 방안 및 실증로 핵연료 인허가 방법론 개발 등 18개 과제(참고1)	비경수형 SMR 규제체계 구축(안) 개발 등 5개 과제(참고2)

○ 더욱이 기존 비경수형 원자력 분야 수행과제들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2029년까지 약 116억원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는바, 신규사업은 기존 과제와의 연계·조정을 전제로 면밀히 기획하여 연구 중복과 집행 비효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1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비경수형 원자로 분야 과제 현황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내역사업/세부과제	사업기간 (총사업비(억원))	주관기관 (과제 수행기간)	'25년 예산	'26년 요구	'27년 이후
1.이동가능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및 원자력통제 기초 방법론 개발	'25~'28 (4,500) (단계평가를 통해 6개 우수과제 '26년 계속지원 및 3개 과제 지원 중단)	(재)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250421~미정)	100	1,200 (계속지원 6개, 과제당 200백만원 내외)	2,400 (계속지원 6개, 과제당 연간 200백만원 내외)
2.고온가스로 노심 안전규제 방법론 및 코드개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3.대한민국 SFR 핵연료 자격화 방안 및 실증로 핵연료 인허가 방법론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4.방출단층촬영 기반 소듐냉각고속로(SFR) 핵연료 생산 안전조치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5.실증시험 기반 고온원자로(HTGR, MSR) 구조 건전성 검증 요소기술 개발		재단법인 한국원자력환경 복원연구원 (250401~미정)	100		
6.비경수로 사이버보안 위험성 분석 규제기법 요소기술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250401~미정)	100		
7.리스크 정보활용 성능기반 비경수로(SFR, MSR, HTGR, HPR) 구조물·계통·기기 규제 기초 방법론 개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8.히트파이프 원자로 안전성 규제검증용 다물리 해석기법 및 체계구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9.우주용 원자로 안전 및 원자력통제 규제현안 분석 및 방법론 개발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21~미정)	100		
10.용융염원자로 핵분열생성물 방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25-'29 (5,400) (단계평가를 통해 4개 우수과제 '26년 계속지원 및 2개 과제 지원중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1,200 (계속지원 4개, 과제당 300백만원 내외)	3,600 (계속지원 4개, 과제당 연간 300백만원 내외)
11.고온가스로 규제역량 향상을 위한 주요 방사성폐기물 안전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울산과학기술원 (250401~미정)	100		
12.고온원자로(HTGR, MSR) 핵물질 계량관리 검증 장비 개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13.용융염원자로 구조재료 부식에 관한 규제기준 개발 및 검증을 위한 불순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과학기술원 (250401~미정)	100		
14.규제 기준개발과 검증을 위한 액체금속 히트파이프 원자로 설계 및 열수력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적용성 평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미정)	100		
15.비경수로 노형별 가동중검사 기술 규제검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개발		주식회사 스탠다드시험연구소 (250401~미정)	100		
16.안전해석 규제검증코드의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적용성 검토 연구	'25-'27 (550)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271231)	150	200	200
17.안전조치 측면의 비경수형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단계 규제 방법론 개발	'25-'27 (550)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271231)	150	200	200
18.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방사선원항 규제기술 기반 구축 연구	'25-'27 (550)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50401~271231)	150	200	200

참고2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과제(안)

연구 주제 (수행주체)	주요 연구 내용
비경수형 SMR 규제체계 구축(안) 개발 (규제전문기관)	▸ 비경수형 SMR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도출 ▸ 비경수형 SMR 규제를 위한 현행 규제체계 정비(안) 마련 및 기술포용적 규제체계 도입 관련 현안 분석·해결 ▸ 비경수형 SMR 규제를 위한 기술포용적 규제체계 도입 방안 및 관계 법령 정비 방안 마련
비경수형 SMR 안전기술기준 구축(안) 개발 (규제전문기관)	▸ 비경수형 SMR 안전기술기준 구축을 위한 로드맵 도출 ▸ 비경수형 SMR 규제를 위한 현행 안전기술기준 정비(안) 마련 및 기술포용적 규제체계 도입 관련 현안 분석·해결 ▸ 기술포용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안전기술기준(안) 마련
비경수형 SMR 다목적 활용성 관련 타 산업 분야 기술기준 연구(산학연)	▸ 비경수형 SMR 활용 목적별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
비경수형 SMR 설계특성 관련 규제기술개발 (규제전문기관)	▸ 비경수형 SMR 노형별 설계특성 및 기술격차 분석 ▸ 비경수형 SMR 노형별 안전현안 도출 ▸ 비경수형 SMR 안전현안에 대한 규제입장 수립
비경수형 SMR 원자력통제 규제체계 및 규제기반기술 개발(규제전문기관)	▸ 비경수형 SMR 사례·현안 분석을 통한 규제 로드맵 도출 ▸ 비경수형 SMR 규제를 위한 현행 규제체계 정비(안) 마련 및 기술포용적 규제체계 도입 관련 현안 분석·해결 ▸ 기술포용적 원자력통제 규제체계 도입 방안 마련

4. 우주항공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 개 요

가. 우주항공청 소관 재정규모

○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일반회계 세출은 2025년 예산 대비 1,516억 7,500만원(15.8%) 증액된 1조 1,130억 8,900만원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수입	세 입	-	1,679	1,679	순증
	기금수입	-	-	-	-
	총 계	-	-	-	-
지출	세 출	961,414	1,113,089	151,675	15.8
	기금지출	3,500	-	△3,500	순감
	총 계	**964,914**	**1,113,089**	**148,175**	**15.4**

자료: 우주항공청, 2025.10.

○ 우주항공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지출[207] 규모는 2025년 예산 대비 1,481억 7,500만원(15.4%) 증액된 1조 1,130억 8,900만원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총지출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회 계	9,614	11,131	1,517	15.8
기 금	35	-	△35	순감
총 지 출	**9,649**	**11,131**	**1,482**	**15.4**

자료: 우주항공청, 2025.10.

207) 총지출 규모는 총계에서 내부거래(회계간, 계정간, 기금간 거래) 및 보전지출(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규모임.

나. 2026년도 재원배분 방향

○ 2026년도에 우주항공청은 ① 인재양성 및 문화확산 기여 ② 민간중심 우주항공경제 창출 및 산업화 지원, ③ 우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주수송 인프라 완성, ④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임무 위성 개발 및 민간산업 육성, ⑤ 우주자원 활용, 달 경제 구축 및 심우주 탐사 역량확보 등 민간 주도 우주탐사 활성화, ⑥ 미래 항공기술 선점 및 공급망 안전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① 우리 기술로 K-Space에 도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무형 혁신인재를 배출할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사업을 신규로 기획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Space-K BIG’ 등 인재양성사업과 잠재인력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사업에 재원을 분배하였음.

○ ② 민간중심 우주항공경제 창출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뉴스페이스 투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주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투자 받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③ 우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주수송 인프라 완성을 위해서 '저비용, 고빈도' 국내 우주발사체 재사용 대전환 추진 및 우주

수송 능력 확대를 위한 '궤도수송선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신규 투자에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④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임무 위성 개발 및 민간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 등 신규사업 편성 및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증액으로 6G 기반 위성통신 핵심기술 확보에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⑤ 우주자원 활용, 달 경제 구축 및 심우주 탐사 역량확보 등 민간 주도 우주탐사 활성화를 위해 우주 경제 시대 선도를 위해 '달탐사2단계' 증액 등 민간 주도 우주탐사 확대 및 도전적 기술 개발 확보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 ⑥ 미래 항공기술 선점 및 공급망 안전성 확보,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성층권 드론' 등의 신규사업 편성을 통한 산업 역량 강화하는데 재원을 배분하였음

<202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 I : 우주위험에 대비하고 우주항공 인력양성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243,134	27.9
• 전략목표 II : 기술 혁신을 통해 우주수송 역량을 강화하고 뉴스페이스 시대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한다.	251,529	28.8
• 전략목표 III : 위성 개발 및 활용 생태계를 조성한다.	217,448	24.9
• 전략목표 IV : 달을 넘어 화성·심우주로 탐사를 확대한다.	96,760	11.1
• 전략목표 V : 항공 친환경·고효율·스마트 핵심기술 확보와 첨단 제조 혁신을 통한항공산업 도약 기반 구축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57,400	6.6
• 전략목표 VI : 우주항공분야에 혁신기술 기반 역동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6,603	0.8
계	872,874	100.0

자료: 2026년도 우주항공청 성과계획서

2. 세출예산안

가. 세출예산안 개요

1) 총 괄

○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1,130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16억 7,500만원(15.8%)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본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인 건 비	26,294	26,952	658	2.5
□ 기본경비	12,451	13,061	610	4.9
□ 주요사업비	922,669	1,073,076	150,407	16.3
계	**961,414**	**1,113,089**	**151,675**	**15.8**

자료: 우주항공청, 2025.10.

2) 인건비

○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은 269억 5,2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262억 9,400만원 대비 6억 5,800만원(2.5%)이 증액됨.

<2024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인건비 합계	7,805	26,294	26,952	10,621	40.4
□ 세 목 별					
○ 보 수(110-01)	7,749	25,970	26,593	623	2.4
○ 기타직보수(110-02)	56	107	127	20	18.7
○ 연가보상비(110-05)	-	217	231	14	6.5

자료: 우주항공청

○ 정원 1명 증가 및 보수 상승률 반영 등으로 전체 인건비는 6억 2,300만원 증액됨.

3) 기본경비

○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은 130억 6,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124억 5,100만원으로 작년 대비 6억 1,000만원(4.9%) 증액되었음.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총액 대상	기관운영	2,121	2,174	53	2.5
	기획조정관	99	89	△10	△10.1
	우주항공정책국	60	53	△7	△11.7
	우주항공산업국	57	50	△7	△12.3
	우주수송부문장	70	59	△11	△15.7
	인공위성부문장	59	53	△6	△10.2
	과학탐사부문장	55	49	△6	△10.9
	항공혁신부문장	55	43	△12	△21.8
	소 계(A)	2,576	2,570	△6	△0.2
총액 비대상	기관운영	4,678	5,678	1,000	21.4
	기획조정관	626	621	△5	△0.8
	우주항공정책국	317	231	△86	△27.1
	우주항공산업국	167	141	△26	△15.6
	우주수송부문장	229	192	△37	△16.2
	인공위성부문장	162	137	△25	△15.4
	과학탐사부문장	162	136	△26	△16.0
	항공혁신부문장	162	137	△25	△15.4
	우주환경센터	718	553	△165	△23.0
	국가위성운영센터	2,654	2,665	11	0.4
	소 계(B)	9,875	10,491	616	6.2
합 계(A+B)		12,451	13,061	610	4.9

자료: 우주항공청

○ 2026년도 총액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25억 7,0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600만원(△0.2%)이 감액되었고,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안은 104억 9,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1,600만원(6.2%)이 증액됨.

4) 주요사업비

○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조 730억 7,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9,226억 6,900만원 대비 1,504억 700만원(16.3%)이 증액됨.

<2026년도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예산 본예산(A)	2026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일반회계 총계	**922,669**	**1,073,076**	**150,407**	**16.3**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2,900	6,292	3,392	117.0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 화물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	2,739	7,458	4,719	172.3
터보팬 항공엔진 인코넬 718초내열합금 주·단조품 개발	10,679	9,882	△797	△7.5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기술개발	2,475	6,228	3,753	151.6
우주전파재난 위험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R&D)	2,331	2,583	252	10.8
우주환경 감시체계 운영(정보화)	1,946	2,403	457	23.5
태양관측위성 수신국 구축	-	8,820	8,820	순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08,886	114,726	5,840	5.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시설 지원(R&D)	14,600	11,175	△3,425	△23.5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62,535	64,010	1,475	2.4
한국천문연구원 시설 지원(R&D)	1,355	1,355	-	-
우주항공 정보화(정보화)	7,308	5,603	△1,705	△23.3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	1,000	1,000	순증

구분	2025예산 본예산(A)	2026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기관 운영사업				
우주항공전문인력양성(R&D)	6,950	6,000	△950	△13.7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500	486	△14	△2.8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	3,000	3,000	순증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343	343	-	-
스페이스챌린지(R&D)	4,900	3,167	△1,733	△35.4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23,000	18,468	△4,532	△19.7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3,000	12,703	9,703	323.4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8,000	10,500	2,500	31.3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기술개발(R&D)	12,400	18,800	6,400	51.6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26,386	17,192	△9,194	△34.8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5,600	2,500	△3,100	△55.4
우주국제협력기반조성(R&D)	1,720	2,050	330	19.2
위성정보빅데이터활용지원체계개발(R&D)	3,800	4,680	880	23.2
민간우주항공산업생태계조성	800	900	100	12.5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2,000	5,100	3,100	155.0
Space-K BIG 프로젝트(R&D)	1,800	3,300	1,500	83.3
위성활용혁신기반조성사업(R&D)	1,900	2,200	300	15.8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R&D)	-	4,000	4,000	순증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	1,450	1,450	순증
AI기반위성정보활용서비스확산사업	-	1,000	1,000	순증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Space-MaCS) 사업	-	500	500	순증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100,000	100,000	순증
국가위성 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R&D)	7,217	10,989	3,772	52.3
신규 프로젝트 탐색연구(R&D)	9,650	6,000	△3,650	△37.8

구분	2025예산 본예산(A)	2026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1,821	2,685	864	47.4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147,800	123,300	△24,500	△16.6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사업(R&D)	4,000	4,800	800	20.0
차세대발사체개발(R&D)	150,816	120,429	△30,387	△20.1
궤도수송선비행모델개발및실증(R&D)	-	3,000	3,000	순증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24,927	3,278	△21,649	△86.8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35,043	17,580	△17,463	△49.8
차세대중형위성개발(R&D)	18,974	10,313	△8,661	△45.6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42,000	59,000	17,000	40.5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R&D)	53,623	38,334	△15,289	△28.5
차세대영상레이더핵심기술선행개발(R&D)	2,000	6,000	4,000	200.0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11,296	15,336	4,040	35.8
정지궤도 기상·우주 기상위성개발(R&D)	5,000	42,657	37,657	753.1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	18,760	18,760	순증
초고해상도광학위성핵심기술개발(R&D)	-	6,190	6,190	순증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R&D)	7,300	2,770	△4,530	△62.1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45,000	80,907	35,907	79.8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R&D)	2,000	6,883	4,883	244.2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R&D)	-	3,000	3,000	순증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	3,200	3,200	순증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용화 플랫폼개발(R&D)	-	8,000	8,000	순증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R&D)	-	3,640	3,640	순증
항공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임무 신뢰성 보증기술 개발(R&D)	-	3,000	3,000	순증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R&D)	-	2,000	2,000	순증

구분	2025예산 본예산(A)	2026예산 정부안(B)	증 감	
			(B-A)	%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핵심기술 선행개발(R&D)	-	6,000	6,000	순증
항공 가스터빈 엔진용 구조물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R&D)	-	4,900	4,900	순증

자료: 우주항공청, 2025.10.

나. 주요 감액 및 증액 사업

○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증액사업으로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사업은 우주항공 분야 핵심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중점기술의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개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97억 300만원(323.4%) 증액한 127억 300만원으로 편성됨

- 이 외에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개발(R&D)’ 사업은 위험기상과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고성능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 관측 연속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6년 사업 수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25년 대비 376억 5,700만원(753.1%) 증액한 426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은 착륙선 본체 핵심기술 개발 및 지상검증모델 개발 등의 개발 일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25년 대비 359억 700만원(79.8%) 증액한 80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감액사업으로 ‘초소형위성군집시스템개발(R&D)’ 사업은 누리호 발사체 활용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외 발사체 용역비 제외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대비 216억 4,900만(△86.8%) 감액한 32억 7,800만원이 편성됨.

- 이 외에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사업은 우주경제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45억 3,200만원(△19.7%) 감액한 184억 6,800만원 편성되었고,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은 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 개발 수요 대응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대비 303억 8,700만원(△20.1%) 감액한 1,204억 2,900만원 편성됨.

- 한편, 출연연구기관 지원을 위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이 58억 4,000만원 증액되었고,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이 14억 7,500만원 증액되었음.

3. 기금운용계획안

가. 지출계획안 개요

○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계획안은 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 원(△100.0%) 감액으로 미편성되었음.

<2026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계획액(A)	2026 계획안(B)	증감액 (B-A)	증감률 (B-A)/A
□ 주요사업비	3,500	-	△3,500	순감
계	**3,500**	**-**	**△3,500**	**순감**

자료: 우주항공청, 2025.10.

나. 주요 감액 및 증액 사업

○ 세부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의 경우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계정으로 신규 편성함에 따라 종료되었음.

○ 2026년도 지출계획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세부사업)은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신규 사업

○ 2026년도 신규사업은 일반회계의 R&D 사업 14개이고 비R&D 5개임.

○ 신규사업 중 ‘태양관측위성 수신국 구축’ 태양활동 변화로 인한 우주전파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미국의 차기 태양관측위성(IMAP, SWFO-L1)의 위성 수신국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8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궤도수송선비행모델개발및실증(R&D)’ 사업은 지구저궤도 내 위성 다중궤도 사출 임무 실증을 목표로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 등을 통해 민간 주도 우주경제 성장 기반 확보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은 1,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신규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2026 예산안
일반회계	○ 태양관측위성 수신국 구축	8,820
	○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	1,000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3,000
	○ 국가 우주상황 인식시스템(K-SSA) 개발(R&D)	4,000
	○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주1	1,450
	○ AI기반위성정보활용서비스확산사업	1,000
	○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Space-MaCS) 사업	500
	○ 뉴스페이스투자지원주2	100,000
	○ 궤도수송선비행모델개발및실증(R&D)	3,000
	○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18,760
	○ 초고해상도광학위성핵심기술개발(R&D)	6,190
	○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R&D)	3,000
	○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3,200
	○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용화 플랫폼개발(R&D)	8,000
	○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R&D)	3,640
	○ 항공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임무 신뢰성 보증기술 개발(R&D)	3,000
	○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R&D)	2,000
	○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핵심기술 선행개발(R&D)	6,000
	○ 항공 가스터빈 엔진용 구조물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R&D)	4,900

자료: 우주항공청, 2025.10.
주1: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내역분리.
주2: 계정 변경하여(과학기술진흥기금 종료 ⇨ 일반회계) 신규사업 추진

5.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의 종료 사업

○ 2025년도 예산(계획) 종료사업은 일반회계 9개 사업임.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사업은 사업기간 도래로 2025년에 종료되는 사업이며,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은 신규 사업 기획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단년도 사업에 따라 2025년에 종료됨.

<2025년도 종료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 업	2025 예산
일반회계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2,794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 모듈 개발(R&D)	428
	헬리콥터전기식다중테일로터기술개발(R&D)	2,402
	민간항공기 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R&D)	3,869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6,800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 (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 기반)(R&D)	2,880
	433MHz기반드론 응용통신기술개발(R&D)	2,300
	뉴스페이스투자지원	3,500

자료: 우주항공청, 2025.10.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1.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1335-306): 고급 연구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 등

○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고급 연구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수혜를 받는 인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 “우주항공 고급인재 양성(R&D)”은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outcome)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은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에 특화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활용함으로써 국내 우주산업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	-	-	-	3,000	3,000	신규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	-	-	-	3,000	3,000	신규
□ 세출예산비목	-	-	-	-	3,000	3,000	신규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3,000	3,000	신규

자료: 우주항공청, 2025. 9.

나) 검토의견

□ 고급 연구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

○ 세부사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는 2026년부터 신규로 우주항공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유치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①산학협력 연구현장 연계 고급인력 양성(양성), ②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유치), ③AI기반 우주항공 연구개발 프로젝트 고도화(양성)로 세부 내역을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 ①산학협력 연구현장 연계 고급인력 양성은 현장에서 박사급 인력을 포함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직접 지원은 수행 기관(기업)이 될 예정이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대학원생 및 예비대학원생이 “양성 대상 인재”가 될 예정임.

- ②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 및 활용은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려는 사업으로, NASA와 같은 글로벌 우주기업·기관 경력 보유자를 우선으로 하여, 해당 인재가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자는 “해외 우수 과학자”가 될 예정임.

- ③AI기반 우주항공 연구개발 프로젝트 고도화는 내역①과 유사하게 과제나 프로젝트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당 과제 등에 대학원생 및 예비대학원생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참고로, 우주항공청은 내역①의 경우 우주항공분야의 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 우주항공분야 전공자 및 타 전공 인력이 지원대상이 되고, 내역③의 경우 우주항공분야와 전공이 무관하더라도 AI 관련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내역별 사업 내용>

내역사업명	예산 세부 내역	사업 개요	지원대상자
○ **산학협력 연구현장 연계 고급 인력 양성**	▷2개 기관 × 6억 6,700만원 × 9/12개월 = 10억원	현장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기반 현장연계 프로젝트 신규사업 수행	▷우주항공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예비 대학원생 포함) ▷ 전공 무관 ▷ **기업 연계형** 연구 프로젝트 수행 가능한 자 우선 선정 ▷ **박사급 20명**
○ **우주항공 글로벌**	▷1인 × 5억원 × 9/12개월 = 3억 7,500만원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산학연이 활용하고	▷**해외 박사급 연구자 및 글로벌 우주기업·기관 경력**

인력양성 및 활용	▷2인 × 3억원 × 9/12개월 = 4억 5,000만원 ▷2인 × 1억 1,600만원 × 9/12개월 = 1억 7,500만원	정착 및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인재유치형** R&D 신규사업 수행	**보유 과학자** **▷박사 이상급 5명**
○ **AI기반 우주항공 연구개발 프로젝트 고도화**	▷(AI활용 R&D 프로젝트형) 1개 프로젝트 × 6억 6,700만원 × 9/12개월 = 5억원 ▷(AI활용 요소기술 확보형) 4개 과제 × 1억 6,700만원 × 9/12개월 = 5억원	우주항공 분야 유관 기관의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기반 우주항공 빅데이터 분석·연구**	▷우주항공 분야 종사를 희망하는 **예비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 **▷전공 무관** **▷박사급 9명**

자료: 우주항공청.

○ 동 사업은 “핵심기술 분야에 특화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소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사업은 크게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내역②와 국내 박사급(대학원생 및 예비 대학원생) 인재를 양성하는 내역①·③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 그런데, 내역 ①·③의 경우 우주항공이 연구개발과제에 예산을 지원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박사급 인재를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우주항공청의 예산으로 수행 중인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동 사업이 특별히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고급 연구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의 수혜를 받는 인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설정 필요

○ 세부사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은 성과지표 “우주항공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2026년부터 성과를 측정할 계획이고, 2026년 성과목표는 29명임.

○ 성과지표 “우주항공 고급인재 양성(R&D)”의 성과목표 “29명”은 내역①을 통한 수혜인원 박사급 20명과 내역③을 통해 지원 받을 박사급 9명을 단순하게 합한 수치임.

<“우주항공 고급인재 양성(R&D)”의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우주항공 고급인재 양성 (단위: 명)	목표	-	-	-	-	29	**내역1) 박사급 20명** 내역2) 박사이상급 5명 **내역3) 박사급 9명** ☞**’26년 수혜인원 박사급 29명 양성** + 박사이상급 5명 유치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실적	-	-	-	-				
	달성도	-	-	-	-				

자료: 우주항공청.

○ 그런데, 성과관리제도는 단순히 예산 투입을 통한 산출(output)를 측정하려는 것이 아닌 성과(outcome)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 성과목표는 단순한 예산 투입의 산출

(output)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세부사업 “우주항공 고급인재 양성(R&D)”은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 사업의 성과(outcome)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1333-303): 산학연 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

○ 세부사업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의 과제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은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산·학·연 협의체의 역할이 자문 및 의견 제시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은 우주항공분야 중점임무 수행(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등)에 필수적인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억 300만원(323.4%) 증액된 127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	-	3,000	2,000	12,703	9,703	323.4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	-	-	3,000	2,000	12,703	9,703	323.4
□ 세출예산비목	-	-	3,000	2,000	12,703	9,703	323.4
○ 일반연구비(260-01)	-	-	3,000	-	-	△3,000	순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2,000	12,703	12,703	신규

자료: 우주항공청, 2025. 9.

나) 검토의견

□ 산학연 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

○ 세부사업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중점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과제는 총사업비가 45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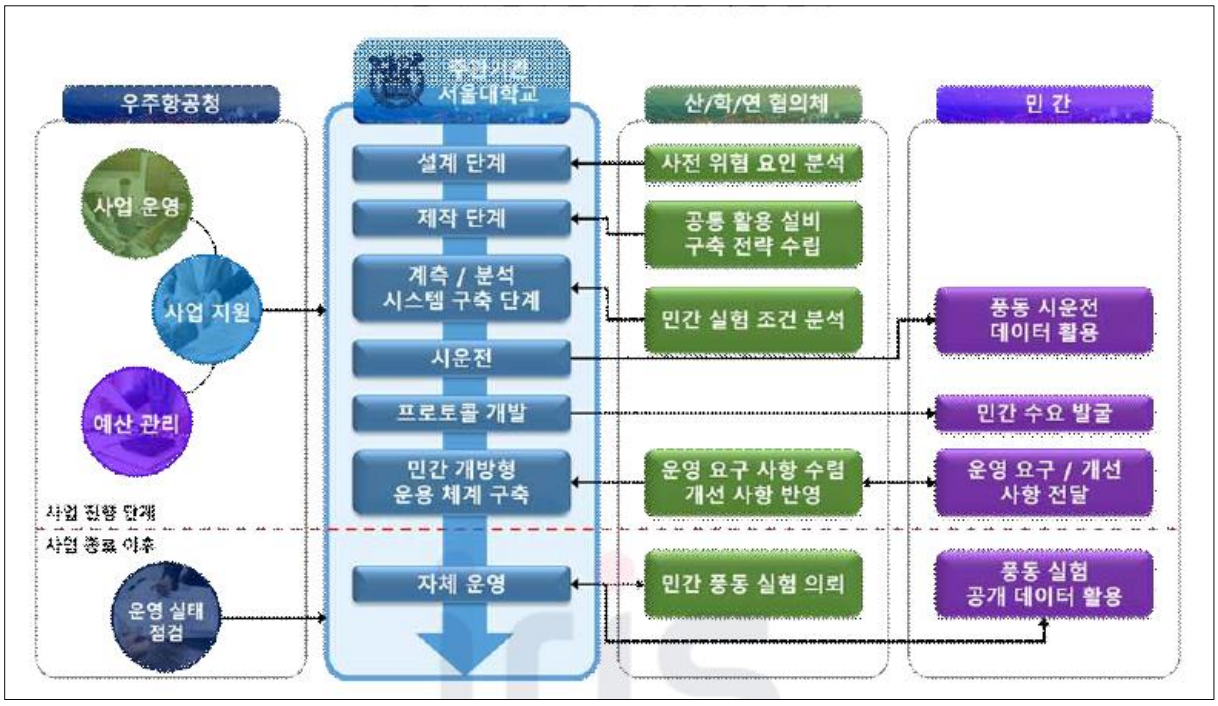
○ 우주항공청은 2025년 7월에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 과제를 동 사업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서울대학교”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음.

○ 동 사업의 사업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서울대학교” 뿐만 아니라 “산·학·연 협의체”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협의체의 역할, 법적 책임 및 권한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구축”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동 과제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산·학·연 협의체”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

○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 협의체는 설계단계에서 사전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제작단계에서는 공동활용설비 구축 전략을 수립하는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하고 있음.

<통합 풍동센터 운영 단계별 추진 전략>



자료; 우주항공청.

○ 또한, 동 협의체에 참여하는 당사자[208]들은 서울대학교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는 우주항공청의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참여확인서에는 공통적으로 “목적: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산·학·연 협의체 참여 확인”, “사업명: 우주항공 통합 풍동센터

208)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대한항공,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대학교(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임.

구축", "기간/예산: 계약일로부터 54개월/ 450억원"이 명시되어 있음.

○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①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수행 연구기관의 선정 시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209], ②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포함하여 체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210], ③연구개발비 지원 시에도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을 구분하여 기관부담분을 산정하고[211] 있어, 이러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협의체"의 성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우주항공청은 이에 대해, “협의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았고,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는 “협의체”를 예상 수요기관으로 보고 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의 역할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은 향후 협의체 구성단계에서 사업수행체계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협약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세부사업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의 과제 “우주항공통합 풍동센터 구축”은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된 산·학·연 협의체의 역할이 자문 및 의견 제시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협약 등을 통하여 해당 협의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1337-320): 국가우주위원회의 개최 등을 직접 수행할 필요 등

○ 우주항공청은 내역사업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국가우주위원회의 근거 법령의 취지에 따라 직접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주항공청은 내역사업 “우주항공 기반조성”을 통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거나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과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수하여 수행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1337-320)”은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회 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주항공 정책수립에 특화된 사업을 신설하여 직접적·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 14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은 국가우주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청 소관 거버넌스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액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우주항공 기반조성”은 우주항공 분야 기반조성을 위

한 정책체계 재검토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에 8억원이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	-	-	-	1,450	순증	순증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	-	-	-	-	650	순증	순증
○우주항공 기반조성	-	-	-	-	800	순증	순증
□ 세출예산비목	-	-	-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1,450	순증	순증

자료: 우주항공청, 2025. 9.

나) 검토의견

□ 국가우주위원회의 개최 등을 직접 수행할 필요

○ 내역사업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은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212]에 규정된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등

212)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관리·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213]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심의회 등 우주항공 관련 거버넌스를 운영하려는 사업임.

○ 2026년도 세부 예산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주위원회 1회 개최시 1억 5,000만원을 산정하여, 총 3회에 대해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무위 등 1억 2,000만원, 안건작성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 예산안 세부 내역>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650백만원** - (우주위 개최) 3회 x 150백만원 = 4억 5,000만원 - (실무위/항공심의회 개최) 6회 x 20백만원 = 1억 2,000만원 - (위원 안건자체작성) 4회 x 1건 x 20백만원 = 8,000만원	6억 5,000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우주항공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① 우주항공청장은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심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 예산안을 전액 “연구개발활동비(360-05목)”으로 편성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에 출연할 계획인데, 동 사업을 연구개발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우주위원회 등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214]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등의 연구개발(R&D), 과학기술 교육훈련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와 같은 과학기술 서비스에 관한 것임.

<연구개발의 개념 및 범위>

대분류	소분류	내용	예시 사업
과학기술 활동	연구개발 (R&D)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	·연구개발 과제 지원 ·연구기관 지원 ·고급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
	과학기술	과학기술 관련한 단순 교육훈련·연수	·이공계 장학사업

214)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8.

	교육훈련	활동 (고급인력 양성사업 제외)	·교육과정개발 ·강의·연수 지원 ·초중등교육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 서비스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38.

○ 그런데, 동 사업은 사업 예산안 6억 5,000만원 전액이 우주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및 안건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둘째,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거버넌스 사업은 우주항공청의 직접 소관 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업 수행방식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소관사무)는 제9호에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우주항공청의 소관사무로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행사 업무 등을 일부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은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업 예산 전부를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사업 수행 방식은 법률에서 동 사무를 우주항공청의 소관사무로 직접 규율한 취지와 맞지 않

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국가우주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각 부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며, 우주항공청장이 간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내역사업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 운영”은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국가우주위원회의 근거 법령의 취지에 따라 직접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된 정책 연구 용역의 수행방식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수하여 결정할 필요

○ 내역사업 “우주항공 기반조성”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환류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액 연구개발활동비(360-05목)으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 과제 4건에 대해 각 2억원씩 편성하였음.

<2026년도 우주항공 기반조성 예산안 세부 내역>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 연구개발활동비(360-05) : 800백만원 - 4건 x 200백만원	8억원

자료: 우주항공청.

○ 동 사업은 전액 “연구개발활동비(360-05목)”으로 편성되었는데, 해당 예산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 환류체계 마련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우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215]은 정책연구 중에서도 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연구 목적의 정책연구는 포함하되,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 위원회 등의 활동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215)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0.

○ 이에 따라 정책의 분석, 평가, 정책 위원회 등의 활동에 해당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이나 환류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은 동 사업 예산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또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4호[216]는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동 법 제9조부터 제18조[217]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연구개발협약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하여 동 사업 예산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연구개발협약이 아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내역사업 “우주항공 기반조성”을 통하여 정책 과제를 발굴하거나 환류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과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수하여 수행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2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217)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임.

4. 뉴스페이스투자지원(1337-327): 펀드 규모를 감안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필요

○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2,000억원대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펀드 조성 사례를 감안하여 운용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뉴스페이스투자지원”은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자금 회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	-	-	100,000	순증	순증
□ 세출예산비목							
○일반출자금(460-01)	-	-	-	-	100,000	순증	순증

자료: 우주항공청, 2025. 9.

나) 검토의견

□ 펀드 규모를 감안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필요

○ 동 사업은 정부가 1,000억원을 출자하여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우주항공청은 우주기술사업화 펀드 및 스케일업 펀드로 나누어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2026년도 뉴스페이스 펀드 운용 계획(안)>

- 펀드 조성규모 : 2,0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1,00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① (우주기술사업화 펀드)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
  ② (스케일업 펀드) 우주산업 및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
- 존속/투자기간 : 10년/5년
- 주요 내용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정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1,000억원	2,000억원	50%	2	700억원
			1	600억원

※ 운용사 설문조사('25.9.) 및 간담회('26.2.) 등을 통해 펀드운영 계획(운용사수 및 자조합별 최대 출자액 등) 결정 예정

자료: 우주항공청.

○ 이와 유사하게 다른 부처에서 펀드를 조성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가 1,000억원 출자할 계획인 뉴스페이스 펀드는 다른 펀드 사례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큰 편임.

○ 제시된 9개의 펀드의 최대 출자 금액은 600억원인데, 이 중 정

부 출자 금액과 비교할 때 최종 결성 규모가 2배 이상인 펀드가 제시된 9개 펀드 중 5개에 불과함.

- 최종 펀드 결정규모는 당초 펀드 조성시 정부가 먼저 예산을 출자한 이후 민간의 투자를 기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 규모에 따라 결정됨.

<타 부처 펀드 조성 사례>

분야	펀드명	결성규모	정부출자 (정책금융 포함)	주관부처
메타버스	메타버스 스케일업 투자조합	1,100억원('22)	600억원	과기부
	미시간글로벌메타버스투자조합	500억원('24)	300억원	
바이오	K-바이오 백신 펀드	**1,500억원('23)**	**600억원**	보건복지부
		1,566억원('24)	**600억원**	
		720억원('25)	400억원	
		800억원('25)	**400억원**	
문화	펜처 글로벌 콘텐츠 IP 투자조합	500억원('24)	300억원	문체부
	IBK-SBI 문화콘텐츠 펀드	**600억원('24)**	**300억원**	
	미시간콘텐츠디스커버리 투자조합	**450억원('25)**	**225억원**	

주: 정부출자금액 대비 결성규모가 2배 이상인 경우 굵게 표시하였음.
자료: 우주항공청.

○ 따라서,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2,000억원대의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펀드 조성 사례를 감안하여 운용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5. 차세대발사체개발(R&D)(1433-303): 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세부사업 “차세대발사체개발(R&D)”은 연례적인 집행 부진 사업에 해당하여 현재 사업추진주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현액이 과도하다는 점 및 사업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은 2026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차세대발사체개발(R&D)”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 개발의 수요에 대응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3억 8,700만원(△20.1%) 감액된 1,20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차세대발사체개발(R&D)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차세대발사체개발(R&D)	110,106	110,106	150,816	63,270	120,429	△30,387	△20.1
□ 세출예산비목	110,106	110,106	150,816	63,270	120,429	△30,387	△20.1
○시험연구비(210-13)	-	-	220	110	-	△220	순감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10,106	110,106	150,596	63,160	120,429	△30,167	△20.0

자료: 우주항공청, 2025. 9.

나) 검토의견

□ 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 부진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 철저 필요

○ 세부사업 “차세대발사체개발(R&D)”은 사업 변경으로 인한 의견 수렴 등의 절차에 상당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동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23년부터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는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2025년 현재 기준 1,997억 900만원이 집행잔액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남아있는 상황임.

- 2023년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체계종합기업 선정이 늦어지면서 290억원 중 178억 8,5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1,101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설계 대안 등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지 않아 748억 6,900만원이 이월되었음.

- 2025년 현재 기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실제 가지고 있는 예산 현액은 2,256억 8,500만원(예산 편성액은 1,508억 1,600만원)임.

○ 그런데, 동 사업은 현재 개발 대상 발사체를 당초 소모성발사체에서 재사용발사체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협의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우주항공청은 올해 12월에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임.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 변경 개요>

목 적	○ (사업목표 유지) 위성발사, 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개발 수요대응 및 자주적 우주탐사 역량 확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 - 위성발사, 우주탐사(달 탐사 포함)에 활용 - 민간의 발사체 개발역량 확보를 통한 상업적 우주활동 기반 마련		
내 용	○ (사업구성 변경(안)) 재사용形 차세대발사체 개발 - ’30년대 국가 우주계획(위성발사, 우주탐사) 상의 증대된 우주 수송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한국형발사체 대비 경쟁력 있는 차세대발사체(KSLV-III) 개발 - 조기 재사용 기술 실증을 통한 1단 재사용 기술 확보 - 2단형 발사체의 1단부 재사용이 가능한 저비용·다빈도 발사체 체계 확보 추진		
총사업비	’23~’32년간 (기존)총 2조 132.4억 원 → (변경(안))총 2조 3112.4억 원 (+2,980억 증액)		
사업기간	’23.7~’32.12(9년 6개월)	추진주체 (시행기관)	(주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우주항공청.

○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 사업변경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2025년에 1,334억 4,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기준 예산 현액 2,256억 8,500만원(예산 편성액은 1,508억 1,600만원) 중 2025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은 910억원 2,000만원(40.33%)이며, 1,334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예정임.

○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2025년 집행잔액 1,334억 4,400만원은 2026년 상반기 내 전액 집행할 계획이고, 2026년 예산안 1,204억 2,900만원도 본격적인 시제 제작 착수 및 2032년 달착륙선 발사 일정 준수를 위하여 2026년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임.

- 우주항공청은 당초 중기재정계획상 2026년에 2,0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변경 행정 절차 이후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2026년 집행 계획(안) >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이월금 (134,444)	'26년 정부안 예산 (120,429)
'26년 1분기	○ 27,050 차세대발사체 개발 : 9,000 설비 및 장비 구축 : 18,000 경상경비/사업추진비 : 50	○ 8,300 차세대발사체 개발 : 2,000 설비 및 장비 구축 : 1,800 경상경비/사업추진비 : 4,500
'26년 2분기	○ 107,394 차세대발사체 개발 : 78,444 설비 및 장비 구축 : 27,000 경상경비/사업추진비 : 1,950	○ 18,700 차세대발사체 개발 : 12,200 설비 및 장비 구축 : 2,000 경상경비/사업추진비 : 4,500
'26년 3분기	-	○ 38,300 차세대발사체 개발 : 12,800 설비 및 장비 구축 : 21,000 경상경비/사업추진비 : 4,500

구분	내역	
	이월금 (134,444)	'26년 정부안 예산 (120,429)
'26년 4분기	-	○ 55,129 차세대발사체 개발 : 13,194 설비 및 장비 구축 : 35,135 경상경비/사업추진비 : 6,800
합 계	총 집행 예상액 : 254,873	

자료: 우주항공청.

○ 따라서, 세부사업 "차세대발사체개발(R&D)"은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업에 해당하여 현재 사업추진주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 현액이 과도하다는 점 및 사업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은 2026년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6.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1533-304):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연구개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세부사업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후속 연구개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은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신속한 위기상황 감시 및 국가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군겸용 초소형위성체계를 개발 및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0억원(40.5%) 증액된 59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24,000	24,000	42,000	34,497	59,000	17,000	40.5
□ 세출예산비목	24,000	24,000	42,000	34,497	59,000	17,000	40.5
○ 시험연구비(210-13)	-	-	25	12	-	△25	순감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4,000	24,000	41,975	34,485	59,000	17,025	40.6

자료: 우주항공청, 2025. 9.

나) 검토의견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연구개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세부사업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은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신속한 위기상황 감시와 국가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군 겸용 초소형위성체계를 개발·확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4,223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년임.

- 동 사업은 우주항공청(3,973억원), 국방부·방위사업청(8,470억원), 해양경찰청(1,750억원) 등이 수행하는 다부처 사업이며,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수행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초소형위성체계의 운용센터를 민지상체, 군지상체를 구분하여 구축하려던 사업계획을 2025년 8월에 민·군 통합운용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5년도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당초 사업계획은 민지상체, 군지상체를 각자 구축하도록 수립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효율적 위성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군 공동 지상체로 위성을 관제하는 방안을 검

토하여 2025년 8월 사업계획을 변경[218]함.

○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동 사업의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 420억원의 70.1%에 해당하는 294억 5,800만원만 연내 실실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의 2025년도 예산 집행계획 >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예산	기집행(9/30)		집행계획(~12/31)	
		실실집행	집행률	실실집행	집행률
우주항공청	42,000	6,715	16.0	29,458	70.1
참여부처 총계	114,075	27,593	24.2	83,031	72.8

자료: 우주항공청.

○ 이렇게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향후 추진되어야하는 검증위성 제작, 해외안테나 구축, 지상체 개발 등 후속 개발계획도 늦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세부사업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후속 연구개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18) 제 12회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추진위원회(‘25.8)

7.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1634-306): 연구용역 검수 절차를 감안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필요

○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검수 및 결과 보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연구개발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은 인류 최대 규모의 SKA 데이터 우선 활용과 AI 기반 천문우주 난제 도전 및 국가 간 분산형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8억 8,300만원(244.2%) 증액된 6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는 차세대 전파관측 기술개발 참여 및 5개 이상 대학 기관의 참여를 통한 AI 기반 천문우주 난제에 도전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26년 예산안은 6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		2026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A)	집행액			
□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	-	-	2,000	2,000	6,883	4,883	244.2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	-	-	600	600	650	50	△8.3

자료: 우주항공청, 2025. 9.

나) 검토의견

□ 연구용역 검수 절차를 감안한 연구개발 계획 수립 필요

○ 내역사업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는 2025년부터 수행한 사업으로, 2025년에는 동 사업 예산을 “2025년 우주항공청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 과제 연구용역” 계약에 전액 집행하였음.

- 해당 연구용역은 7억 3,725만원에 낙찰되었고, 연구용역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이며, 연구기간은 2025년 6월 24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임.

- 우주항공청은 동 연구용역을 내역사업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의 일반연구비(260-01목) 5억 5,000만원과 내역사업 “SKA 데이터센터”의 일반연구비(260-01목)의 2억원을 합한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사용하였음.

- 또한, 해당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상반기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통해 선금 100% 지급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나 연구용역비는 전액 집행된 상황임.

○ 우주항공청은 동 내역사업을 통해 향후 천문우주난제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으로, 2025년도에는 향후 추진과제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2026년에는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목) 예산안 9개월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내역사업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 예산안 편성 세부 내역>

구 분	2026년도 예산안
○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 1개 × 9/12개월 x 867백만원 = 650백만원** - 고감도 광대역 전파 수신 시스템 개발 - 초고속 데이터 전송·처리·저장 시스템 개발 - 천문우주 난제 도전을 위한 5개 이상 대학 기관 협력, SKA 프리커서 관측 데이터 확보	6억 5,000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 이에 따라 2026년에는 4월에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할 계획인 것

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2025년도에 수행한 연구용역은 중간점검을 거치기 전에 100% 선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26년에 정산 및 결과 보고를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둘째, 2026년도 “기술개발 및 천문연구” 연구개발은 2025년도에 수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후속사업의 성격이므로,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이후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청의 계획에 따르면 3월 31일에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 4월에 바로 후속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2025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검수 및 결과 보고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연구개발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Ⅴ. 대체토론의 요지

생 략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6,163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는 7억 4,500만원 순증,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223억 7,600만원 순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2,840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30억 9,400만원 순증,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는 13억 9,000만원 순증,
우편사업특별회계는 4억 3,100만원 순증,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8억 700만원 순증,
과학기술진흥기금은 106억 5,000만원 순증,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5억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356억 5,500만원 순증,
정보통신진흥기금은 575억 3,200만원 순증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은 양자 기술 성능 시험 환경 구축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47억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AI기반 공간 컴퓨팅 산업 육성'**은 산업현장, 병원 등 특수 목적지와 다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공간컴퓨팅 서비스 선도개발에 필요한 핵심사업이므로 130억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에서는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강화 등 해킹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예산 402억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대학원 우수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146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은 기획부실 사업 감액 등을 통해 97억 6,50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인재 확보 및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의 신속한 구축 등을 위하여 182억 7,0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은 피지컬 AI 핵심기술 동시개발이 필수적이므로, 기술 실증을 위한 최소한의 테스트 베드(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1,000억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은 초기 단계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피지컬AI 시장 선점을 위하여 고신뢰성 데이터·물리지능 행동모델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 41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은 출산·육아와 연구 성장 시기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여 인력·연구 공백 없는 R&D 현장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76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은** AI・차세대통신・ICT융합 등 ICT 유망 기술 분야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원활하게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94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은** 최고급 인력인 BoB 수준의 인력 양성 확대와 신종 사이버 위협 발생에 대응하는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15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1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다음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438억 1,400만원을 증액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60억원 순증,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75억 3,300만원을 감액하고,
608억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직개편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방송진흥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본부(총액대상)’ 인건비 24억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 18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기반 조성’**은
방송제작 全단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방송콘텐츠
제작효율성을 제고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로 16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역방송을 통한 홈쇼핑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6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은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157억 5,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둘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은
미디어교육 및 인프라 구축·운영의 유지를 위해
123억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1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 다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억 7,400만원을 증액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16억 1,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사업은 인천공항 등에 방사능감시기 8대 추가 설치·운영을 위해 9억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다음으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재환경기반구축’사업은 2026년 신규 개소 예정인 한빛권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방재장비 구비를 위해 3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 그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총 2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주항공청 소관

▣ 다음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8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주항공지역혁신기반구축(R&D)’**사업은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산업 육성 추진 및 차세대 항공 기체 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 190억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사업은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으로, 누리호 1회 추가 발사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AI드론용 디지털트윈 인프라개발(R&D)’** 사업은 AI 드론의 안정성·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국내 AI-드론 데이터 주권·표준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예산 40억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 그 밖에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예산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Ⅶ. 심사결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수정의결

나.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 수정의결

다. 방송통신발전기금 : 수정의결

라. 정보통신진흥기금 : 수정의결

마. 기후대응기금 : 원안의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가. 방송통신발전기금 : 수정의결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수정의결

4. 우주항공청 소관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수정의결

Ⅷ. 소수의견

없음.

Ⅸ. 부대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의 회계연도 일치 원칙 예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 생애 첫 기본연구 과제인 기본연구 A, B를 내역사업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에 부합하도록 연구자의 연구생애주기 파이프라인을 명확하게 하여, 연구자가 경력 단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일관된 경로를 마련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권한을 명확화하고, 문제과제에 대해 점검하며, 타당성 검증을 명확하게 진행하고, 단계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해 기관간접

비 활용 및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무기계약직·학연지원직의 차별해소 등 처우개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Bio CoreLink) 예산 감액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출연(연) 연구자 처우개선율 확대에 활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을 위한 인건비 조정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출연(연) 연구자 처우개선율 확대에 활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스턴코리아 사업의 성과 부진과 현지 법인 회계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해 혁신본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의 내역사업 ‘GPU서버확충’과 ‘소형데이터센터 기반 AI 산업 성장 지원’의 사업 예산을 비수도권 주요 도시에 적절히 분배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전 중구 대흥동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I통합바우처’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SaaS 개발·사업화지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핵심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성평등가족부, 수사기관, 심의기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2021년도 이후 명확한 집행근거와 예산 집행지침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 없이 민간업체의 고객만족도 조사 1위를 기념하여 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였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기념품 지급 필요성에 관하여 재정당국과 의견을 조율하고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 우체국의 재건축 시 소외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디지털배움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부처별 수요, 역량을 반영한 추가적인 심사과정이 필요하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리랑국제방송 지원사업의 예산을 국회 지적 및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 지원 사업의 예산을 국회 지적 및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회계로 이관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된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의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지원 사업과 관련해,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비정규직 처우개선 조건부과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분야 재난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 수신설비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관리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2027년 5월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의 분리보관 의무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고시개정을 검토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olrd Best LLM 차세대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질의 영상 아카이브를 보유한 공영방

송 등 기존 사업자들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현재 예산 배정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하고 성과평가를 거쳐 반영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기반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가 종료되면, 평가체계 개편계획을 세우는 등 대안을 마련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OTT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법적 근거와 설립목적 부합성이 부족한 방송광고진흥공사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진행하고 있으므로, 수행기관 공모시 보다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모 절차를 내실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 제도 정비 시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를 논의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혼란 야기 심의안건 선정 시 정부비판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적 재난이나 사회적 충격 콘텐츠 심의에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온라인 쇼핑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및 통신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한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통제 규제 기술 선진화(R&D) 사업’ 목표의 효율적 달성 및 연구개발 적시 지원을 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연구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획득과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비위행위 근절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되, 그 시기를 조정하는 등 동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은 사전 수요조사와 면밀한 기획으로 타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실무형 고급인재와 해외 우수인재를 시급히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 우주항공청은 소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의 임금과 처우를 유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두 기관의 총인건비 수준을 조정하고 자체수입 인건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상황인식정보관 건립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한도액 437억 8,800만원을 확보한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내역사업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실시설계 후 장비도입하는 경우 2027년 이후 장비도입이 가능해지므로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기반영된 장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비심사결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감 액	증 액	증 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16,582	646,326	629,744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	745	74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22,376	22,37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30	284,086	283,05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3,094	3,094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	1,390	1,390
		우편사업특별회계	-	431	431
		우체국예금특별회계	-	807	80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202	43,814	43,6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6,000	6,000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반회계	-	974	974
	우주항공청	일반회계	-	61,892	61,892
	합 계		△17,814	1,071,935	1,054,121

3.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1) 수입: 해당 없음

(2) 지출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기 금	수정의결		
			감 액	증 액	증 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	10,650	10,650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	500	500
		방송통신발전기금	-	35,655	35,655
		정보통신진흥기금	-	57,532	57,53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17,533	60,807	43,27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	1,611	1,611
	합 계		△17,533	166,755	149,222

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총액대상 인건비 (7001-100)	73,742	73,742	76,626	76,337	△289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할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3명), 지식재산처(1명)로 인원이 전출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한 인건비 25억 8,700만원 감액 필요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공지능정책실 및 과학기술인공지능협력관실 신설(31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 인건비 22억 9,800만원 증액이 필요하므로 전체 인건비 증감액 반영 시 2억 8,900만원 감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7011-215)	87	87	87	-	△87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진흥정책관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체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 필요	
3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7011-265)	200	200	191	-	△191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진흥정책관 업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체 이관됨에 따라 전액 감액 필요	
4	총액대상 인공지능정책 기획관 기본경비 (7011-223)	-	-	-	108	108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신규 1억 800만원 편성 필요	
5	총액비대상 인공지능정책 기획관 기본경비 (7011-273)	-	-	-	311	311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신규 3억 1,100만원 편성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	총액대상 과학기술인공 지능정책협력관 기본경비 (7011-224)	-	-	-	38	38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신규 3,800만원 편성 필요	
7	총액비대상 과학기술 인공지능 정책협력관 기본경비 (7011-274)	-	-	-	102	102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신규 1억 200만원 편성 필요	
8	총액비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7011-254)	2,973	2,973	2,906	2,990	84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기정통부 직급상향(부총리, 대변인)이 있었으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추진비 8,4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	국가간협력기반 조성 (4731-402)	38,070	38,070	49,934	52,134	2,200	○ 연구안보 역량향상 및 신뢰 기반 국제협력을 위한 22억원 증액 필요 - 증액내역: 연구안보 정책지원센터(2억원), 대학 연구안보 거점센터(10억원), 대학 연구안보 역량강화 지원(10억원)	
10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2137-310)	17,263	22,663	42,300	46,900	2,200 2,400	○ 내역사업인 'DNA 대·중소 파트너십 동반진출 사업(40억 1,500만원)'은 컨소시엄을 통해 ICT 융합기술 기반의 SW·솔루션·플랫폼 등의 실증·적용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등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ICT 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 정보 등의 실시간·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예산 22억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인 'AI·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사업(16억원)'은 AI·디지털 전환 해외실증 프로젝트 발굴 및 현지 실증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은 기업들의 높은 수요, 자유공모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여 24억원 증액 필요 - 증액 내역: 기업수요 물량 확대(8개 과제에서 20개 과제로)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1	디지털딥페이크 범죄대응 핵심기술개발 (2132-412)	-	-	3,000	6,000	3,000	○ 딥페이크 콘텐츠 악용으로 인한 정보왜곡, 성범죄 등 해결을 위하여 딥페이크 변환억제 기술부터 정밀탐지, 유통·차단 지원, 신고데이터 확보까지 전주기적 대응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비 30억원 증액 필요 - 증액 내역: 딥페이크 콘텐츠 유포 탐지 및 삭제요청 자동화 지원, 개인 단말 기반 탐지 및 원클릭 신고 및 상담 연계 기술개발 등	
12	디지털 인프라 자원순환 생태계 조성 (신규)	-	-	-	6,690	6,690	○ AX전환 및 통신장비 사용기한 만료로 급증하는 디지털 인프라 폐장비에는 핵심광물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자원순환을 위하여 생태계 구조 전환에 필요한 예산 66억 9,000만원 증액 필요 ※ 증액 내역 - (디지털인프라자원순환활성화) 기술개발·실증 지원 등 - (디지털인프라자원순환기반조성) 핵심광물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3	**피지컬 AI 신진연구 캠퍼스 구축 (신규)**	-	-	-	2,000	2,000	○ 피지컬 AI 석·박사급 고급 R&D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 인력까지 확산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전기획비 20억원 편성 필요 - 2026년도에는 연구·교육과정 설계·운영, 캠퍼스 조성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 중심으로 사업 착수 필요 - 증액 내역: 캠퍼스 설계·기반 구축비용(2개*10억원) - 총사업비: 각 캠퍼스별 3,000억원(국비 2,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4	AI 융합 OTT 글로벌 진출 확산 지원 (2602-358)	-	8,000	-	14,300	14,300	○ 동 사업은 우리 플랫폼(K-FAST·OTT)의 AI 기술 강화로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주도권 확보하여 차세대 OTT로 부상한 FAST의 글로벌 시장 선점과 민관 협업 성과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예산 143억원 편성 필요 - 증액 내역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98억원 글로벌향 OTT AI 활용 신서비스 지원: 45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5	피지컬 AI기반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모델 구축 (신규)	-	-	-	2,300	2,300	○ 피지컬 AI 기반 자동화를 도입하는 경우 시험·인증의 정확도·재현성·안전성이 향상되어 AI 기업들의 제품·서비스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피지컬 AI 기반 시험인증 체계, 시스템 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 23억원 편성 필요	
16	조선AX특화 AI모델하우스 구축 · 실증 (신규)	-	-	-	12,000	12,000	○ 조선 분야 지속발전을 위한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계와 상용화 페스트트랙 구축 등에 필요한 12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7	온디바이스AI 에이전트용AI 반도체선도기술 개발 (신규)	-	-	-	6,000	6,000	○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행동·공간 등 물리적 주변 환경 변화를 인식·학습시켜 이를 AI모델에 실시간 반영 및 최적화를 지원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60억원 증액 필요	
18	휴머노이드 중심 피지컬AI 생태계 혁신사업 (신규)	-	-	-	500	500	○ 피지컬 AI 현장실증 확산을 통해 AI와 물리세계가 융합된 차세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기획비 5억원 증액 필요 - 경기도 전체를 피지컬AI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여 산업·재난·돌봄 등 여러 분야에 피지컬AI 확산 가능 - 사업규모: 피지컬AI 혁신센터 2개소, 피지컬AI 확산센터 16개소, 이동형 엣지 AI컴퓨팅 센터 8개 - 사업기간: 2026. 1. ∽ 2030. 12.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9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2033-371)	5,757	5,757	26,993	30,125	1,907	○ 내역사업 'AI신뢰성 및 생태계 기반 조성'은 AI기본법 대국민 안내 서비스 및 전문기관 연계 체계 구축, AI기본법 준수 지원을 위한 안전·신뢰 운영 체계 마련, AI안전·신뢰 인식 제고 등을 위해 19억 700만원 증액	
						1,225	○ 내역사업 '인공지능 선도국 도약 정책지원'은 AI 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및 기업 대상 영향평가 이행 지원 컨설팅, 홍보·확산 등을 위해 12억 2,500만원 증액	
20	AI정밀의료SW 선도기반조성 (2333-336)	-	-	11,950	13,450	1,500	○ 내역사업 '의료AI 교육 확산'은 예비의료인 단계부터 AI·데이터 이해력, 윤리적 판단능력, 임상 적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춘 의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5억원 증액	
21	AI기반 맞춤형 케어서비스 융합선도 (2601-385)	3,000	3,000	3,000	8,600	5,600	○ 계속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난임, 출산 전후 질환 등 여성질환과 함께 영유아, 소아, 청소년층 등 연령대를 확대하여 전주기 질환위험 예측·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56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2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강화 (2602-357)	-	1,619,438	2,108,725	2,118,725	10,000	○ 내역사업인 '공공AI클라우드서비스개발지원'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전환 및 AI 도입을 위한 공공용 AI-SaaS 개발, 개발기반 지원 등을 위해 100억원 증액	
23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 (2604-301)	-	-	5,000	7,000	2,000	○ 내역사업 '데이터안심구역 전환 및 고도화 지원'은 기존 안심구역 전환 수요와 신규 지정 수요를 고려하여 전환 지원 물량 확대를 위해 20억원 증액	
24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2604-311)	-	-	12,000	7,000	△5,000	○ 동 사업은 신뢰 기반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시범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의료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선도) 및 일반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에 각각 60억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으로 구축하려는 2개소 중 1개소(일반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비 10억원만 반영하기 위해 50억원 감액	
25	시니어 · 청년 협력형 데이터 캠퍼스 (신규)	-	-	-	10,000	10,000	○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중·장년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 수요 기반 AX 인재양성을 위해 신규로 10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6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정보화) (1935-500)	19,490	26,230	19,720	59,920	19,151	○ 내역사업 'ICT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은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중심 패키지 지원을 위해 191억 5,100만원 증액	
						9,879	○ 내역사업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보호 체계강화'는 기반시설 지정범위 확대 및 보호대책 이행점검 강화 등을 위해 98억 7,900만원 증액	
						5,770	○ 내역사업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은 신규 초광역권 확대 부분 반영에 필요한 신규 클러스터(2개소) 확대 및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57억 7,000만원 증액	
						5,000	○ 내역사업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 운영'은 주요 기업의 실효적인 보안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심사 도입 및 심사체계 고도화를 위해 50억원 증액	
						400	○ 내역사업 '정보보호체계 정비 및 수준제고'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강화에 필요한 방안 연구, 실태조사 및 교육 추진을 위해 4억원 증액	
27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 기반 강화 (1935-504)	1,538	1,538	1,434	6,434	5,000	○ 신규 내역사업 '소비자 IoT 제품 안전성 강화'는 IoT 취약점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IoT 인증기준 조화, IoT 시큐리티 라벨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8	암호이용활성화 (2332-301)	3,904	3,904	8,274	24,274	16,000	○ 내역사업 '양자 내성 암호 전환 기반 구축'은 주요 산업 인프라의 양자내성암호 전환사례 확보, 국가 암호체계 전환 가속 및 이행을 주도할 PQC 전환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160억원 증액	
29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정보화) (2332-302)	57,885	73,585	48,792	87,092	14,500	○ 내역사업 '사이버 공격 예방체계 운영'은 실전형 모의해킹 점검 확대, AI 기반 위기대응 모의 훈련, 취약점 신고포상제 활성화, AI 보안 레드팀 운영 등을 위해 145억원 증액	
						9,800	○ 대용량 디지털 증거 데이터 저장·처리·분석이 가능한 지능형 포렌식실 구축을 위해 98억원 증액	
						7,000	○ 내역사업 '사이버공격탐지대응체계운영'은 스미싱에 대한 정보 신속 공유·대응에 필요한 체계 마련(50억원) 및 웹공격 방어서비스 제공을(20억원) 위해 70억원 증액	
						7,000	○ 내역사업 '사이버위협공유협력체계운영'은 사이버위협에 즉각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7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0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화) (2333-307)	9,000	9,000	9,188	24,294	15,106	○ 내역사업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은 공시 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검증 강화를 위해 151억 600만원 증액 - 공시검증 강화 142억 9,000만원 - 공시 사전컨설팅 확대 2억 1,600만원 - 전자공시시스템 고도화 5억원 - 보안평가 등급 체계 관련 정책연구 1억원	
31	방송통신 재난관리 (정보화) (7035-301)	3,613	3,613	3,813	5,706	1,452	○ 내역사업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운영'은 디지털 재난·장애 안전관리 지원과 디지털 안전관리 현장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14억 5,200만원 증액	
						441	○ 내역사업 '디지털재난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는 디지털장애탐지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4억 4,1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2	K-AI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사업 (신규)	-	-	-	12,000	5,000	○ 내역사업 '첨단 AI-RAN 공공선도'는 AI 고속도로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인 AI-RAN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지역·공공 인프라 혁신 및 신시장 선점을 위해 신규로 50억원 증액 필요	
						4,000	○ 내역사업 'AI 데이터센터 내 네트워크 국산화'는 AI 데이터센터 내부 네트워크를 국산 표준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하여 신규 시장 창출, 수입 대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40억원 증액 필요	
						3,000	○ 내역사업 'AI 데이터센터 간 유망네트워크 기술사업화'는 AI 데이터센터 간 네트워크의 기술사업화 및 시장 창출을 위해 30억원 증액 필요	
33	ICT 인프라 생애전주기 지원 (신규)	-	-	-	950	950	○ 정보통신설비의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신규로 9억 5,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4	저궤도 군집 위성통신용 지능형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R&D) (2531-340)	4,000	4,000	3,860	10,970	7,110	○ 동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사업(3,224억원 /'25~'30년)에 연계되는 선행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주요 성능지표와 완성도가 저하되어 6G 기반 위성 개발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됨 ○ 6G 기반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성과물의 글로벌 경쟁력 적기 확보를 위하여 당초 계획 대비 예산 부족분 71억 1,000만원 증액	
35	3GPP기반 위성통신 단말 핵심기술 개발(R&D) (2531-341)	4,281	4,281	4,000	10,525	6,525	○ 동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예타사업(3,224억원 /'25~'30년)에 연계되는 선행사업으로, 당초 계획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주요 성능지표와 완성도가 저하되어 6G 기반 위성 개발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됨 ○ 6G 기반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성과물의 글로벌 경쟁력 적기 확보를 위하여 당초 계획 대비 예산 부족분 65억 2,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6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 기술개발(R&D) (2531-353)	-	-	3,000	4,200	1,200	○ 동 사업은 전파 차단 환경 및 동일 주파수에서의 무선통신과 무선센싱 기술 등을 개발하여 전파기반 디지털 인프라 확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차세대 통신 산업 주도에 필수인 위성통신 분야 국제 표준 개발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과제가 '25년 종료되어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신규과제 지원비 12억원 증액	
37	위성통신 기업 성장기반 조성 (신규)	-	-	-	1,000	1,000	○ 국내 위성통신 산업의 적기 육성을 위하여 국내 기업들에 제품화 및 시장진입까지 단계별 전주기 지원 및 위성통신 시험검증 인프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 10억원 증액	
38	AI 융합 전파에너지 기반 가축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조성 (신규)	-	-	-	1,500	1,500	○ 가축 전염병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무선전파에너지 기술을 가축 질병 모니터링 분야에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실증 등을 위한 플랫폼 조성 사업 예산 1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9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R&D) (2535-335)	1,000	1,000	3,070	3,670	600	○ 동 사업은 차세대 융합 신산업 활성화 등에 필요한 고품질 주파수 확보를 위해 실제 전파환경에 대해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경로 손실 예측 기술 등을 개발하려는 것임 ○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비지상파까지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특성 예측 연구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비지상파 전파매질 한계극복을 위한 신규과제 예산 6억원 증액	
40	AI 활용 미인증 기자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533-321)	-	-	76	1,960	1,884	○ 해킹·통신장애 등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고 온라인 유통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여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의 적기 확인 및 조기 차단을 위해 인력 중심의 단속에서 AI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필요 ○ 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ISP 수립을 생략하고 본사업을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예산 18억 8,400만원 증액	
41	AI기반 전파측정 종합관리 플랫폼 구축 (신규)	-	-	-	1,994	1,994	○ 전파감시 시스템의 노후화된 SW를 AI로 고도화하여 신유형 전파서비스 확산 및 안보 위협 전파혼신 증가에 대응하고 고도화한 전파감시시스템의 최적 활용을 위하여, 전파 AI플랫폼 인프라 구축 및 AI분석프로그램 개발·구축 예산 19억 9,4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42	AI · 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R&D) (2033-400)	-	-	2,000	4,985	2,985	○ 동 사업은 AI-블록체인 융합기반 고신뢰 디지털 인프라를 구현하여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검증 기능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자율적인 분산형 AI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임 ○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전성과 보안 강화를 위해 29억 8,500만원 증액 필요	
43	정보화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사업 (신규)	-	-	-	495	495	○ 동 사업은 정보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홈페이지 첨부문서에 대한 정보를 PC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 중앙부처 및 공공웹사이트 음성지원 및 다국어 지원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 4억 9,500만원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44	디지털자산 혁신을 위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기반 강화 (신규)	-	-	-	9,700	9,700	○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근간기술인 국내 블록체인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97억원 증액 필요	
45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R&D) (2232-302)	13,500	13,500	21,000	23,000	2,000	○ 신규 내역사업인 '의료기기 제조기업 AX 융합인재 교육센터'는 의료기기 중소·중견 기업에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부 전문가를 의료데이터 및 AX기술과 관련한 융합인재로 양성하려는 것으로 20억원 증액 필요	
46	최고급AI 해외인재 유치지원 (2232-327)	5,000	5,000	10,000	13,000	3,000	○ 동 사업은 도전적 AI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기업이 원하는 톱티어 AI 연구자를 기업 주도적으로 발굴·유치하여 혁신·도전적인 AI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3개 과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47	AI기반 안전 관리분야 디지털트윈 선도 (2033-404)	-	-	6,000	12,000	6,000	○ 동 사업은 국민 인상에 밀접한 질병·생활·산업 분야에서 AI,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서비스를 발굴·실증하는 사업임 ○ 디지털트윈 등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기에 위험률을 예측하는 안전관리시스템 발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60억원 증액 필요	
48	POST APEC 국제 공동 실감형 가상융합 창작 허브 구축 (신규)	-	-	-	1,000	1,000	○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한 실감형 가상융합 기술 기반 국제공동 창작·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APEC 후속성과 지속을 위한 협력거점 조성을 위해 10억원 신규 증액 필요	
49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센터 (신규)	-	-	-	5,000	5,000	○ 가상융합 콘텐츠산업의 글로벌시장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50억원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50	가상융합산업인프라조성 (신규)	-	-	-	10,620	10,620	○ 동 사업은 가상융합산업 분야의 Edge 기반 AI 실증인프라와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연계하여 AI 데이터의 생성·학습·실증·확산이 가능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임 ○ AI 실증데이터 인프라 조성 및 실증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06억 2,000만원 신규 증액 필요	
51	AI기반 공간컴퓨팅 산업육성 (신규)	-	-	-	13,000	13,000	○ 동 사업은 산업현장, 병원 등 특수 목적지와 다중이용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AI기반 공간컴퓨팅 서비스 선도개발 및 공공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이므로 130억원 신규 증액 필요	
52	AI · 모빌리티 SW생태계 조성 (신규)	-	-	-	10,000	10,000	○ 동 사업은 모빌리티 부품·제조사 및 AI·SW 기업 대상 SW활용, 기업성장, SW 안전성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모빌리티 산업은 AI융합 및 SW플랫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경쟁력을 위해 중소부품사의 SW도입과 AI·SW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므로 100억원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53	AI · SW기반 RaaS 생태계확산 (신규)	-	-	-	10,000	10,000	○ 동 사업은 SW서비스 역량 기반으로 로봇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동력을 확보하여 로봇산업 서비스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100억원 신규 증액 필요	
54	AI선박 특화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 실증 (신규)	-	-	-	5,000	5,000	○ 동 사업은 AI선박 플랫폼 표준화 및 선박 특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로 선·육간 선박제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SW 중심 AI선박 구현기술 개발 및 검증을 위해 50억원 신규 증액 필요	
55	AI 글래스 중소기업 시장개척 지원사업 (신규)	-	-	-	11,000	11,000	○ 동 사업은 AI 글래스 국산화 및 시장개척 지원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10억원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56	**전북 AI한글화 교육센터 구축 (신규)**	-	-	-	4,000	4,000	○ 동 사업은 범도민 대상으로 전 세대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체험형 AI 교육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으로, AI 한글화 전략을 선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및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40억원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57	바이오 · 의료 기술개발(R&D) (1138-401)	361,072	361,072	434,276	451,636	17,360	○ 내역사업 '차세대 바이오'에 차세대 고리형 펩타이드 디자인 플랫폼 조성 및 상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36억원 증액 필요 ○ AX 기술 선점 및 국민 최저생존율 질환 극복 원천 기술 선점을 위해 '고난도 위험질환 극복 AI·로봇 융합기술개발' 45억원 증액 필요 ○ 급성장하는 AI 신약개발 시장에서 국내 항체의약품 개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기획 연구비 5억원 증액 필요 ○ 천연물(식물) 기반 엑소좀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40억원 증액 필요 ○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할 신약개발과 정밀 의료 기반 임상의 핵심 요소인 뇌 오가노이드 분야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 6억원 증액 필요 ○ 중증난치질환인 당뇨병콩팥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방향 제시가 가능하도록 41억 6,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58	개인기초연구 (R&D) (1234-301)	1,905,258	1,905,258	2,265,651	2,280,651	15,000	○ 기초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기본연구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해 '기본연구 B'150억원 증액 필요	
59	집단연구지원 (R&D) (1234-302)	430,445	430,445	470,581	484,581	14,000	○ 지역 대학 기초연구 생태계 지속 확충과 사이버 보안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선도연구센터의 신규과제 확보를 위해 내역사업 '글로벌 선도연구센터'예산 140억원 증액 필요 - 지역혁신분야(RLRC) 신규 지정: 15억원 x 4개 센터 혁신분야(IRC) 신규 지정: 50억원 x 1개 센터 융합분야(CRC) 신규 지정: 15억원 x 2개 센터	
60	국방양자암호 통신 · 복합센서 기술개발(R&D) (2132-415)	-	-	2,280	3,780	1,500	○ 전시 및 GPS 교란 상황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항공기에 대한 無GPS 항법 완성을 위해 지문항법용 양자 자기장 센서 기술개발 예산 15억원 증액 필요 - 지문항법용 양자자기장 센서 개발 15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1	양자ICT기술개발(R&D) (2132-422)	38,388	38,388	34,086	35,086	1,000	○ 내역사업 '퀀텀ICT엔지니어링기술개발'은 양자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핵심 소재·소자 자립화 및 양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ICT 엔지니어링 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임 ○ 양자컴퓨터 내 양자정보 저장 및 양자인터넷 실현을 위해 실리콘 기반 양자메모리 개발 예산 10억원 증액 필요	
62	한국연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7601-301)	54,265	54,265	56,838	60,577	3,739	○ R&D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37억 3,900만원 증액 필요	
63	양자기술 성능시험 환경 구축사업(신규)	-	-	-	14,700	14,700	○ 양자기술 성능 시험 환경 구축 사업(정부안 미반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47억원 신규 반영 필요	
64	양자기술 전환·확산 거점(퀀텀밸리) 조성(신규)	-	-	-	2,500	2,500	○ 지역 중심 양자기술 산업화 지원 및 첨단 산업의 양자 전환 촉진 등을 위한 퀀텀 밸리 조성 관련 기획 예산 25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5	유전자 · 세포 선도화전략설계 및 정책 연구사업(신규)	-	-	-	500	500	○ 유전자세포 선도화 사업을 통해 첨단유전자세포치료에 있어 부처, 대학, 환자, 기업, 산업계 등의 자산을 통합하고, AI기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연구성과가 임상·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유전자·세포 선도화 전략 플랫폼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유전자·세포 선도화 전략사업 기본계획을 위한 설계 용역비 5억원 증액 필요 - 연구조사비 및 기본계획 수립 1억원, AI · 디지털 등 설계비 3억 8,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66	피지컬 AI기반 메카노바이오소재 자율협업제조 플랫폼 구축(신규)	-	-	-	2,000	2,000	○ AI 기반 자동화 공정과 산업화 지원 체계를 통합한 새로운 거점 구축을 위해 서버 및 AI모델 구축비 2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7	SDV대응가혹환경 극복자동차반도체핵심 IP 원천기술개발 (R&D)(신규)	-	-	-	5,000	5,000	○ 해외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반도체와 설계 IP의 기술력 자립을 위해 국내 기술력 확보 및 관련 연구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자동차반도체 핵심 IP 개발 예산 50억원 증액 필요	
68	양자연구 표준생태계 기반구축(신규)	-	-	-	3,000	3,000	○ 양자기술 분야의 표적형 표준개발, 양자 표준화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주요국 수준으로의 표준 경쟁력 도약을 위해 30억원 증액 필요 - 표적형 표준개발 15억원, 양자표준센터 구축 9억원, 글로벌 표준대응 체계 구축 6억원	
69	AI기반 경계성 대상자 조기 예측 · 중재 원천기술 개발 (신규)	-	-	-	2,800	2,800	○ 의료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한 경계성 대상자에 대한 전국 최초 멀티모달 코호트(특정집단) 구축 및 AI 기반 조기 예측·증상 개선 원천 기술 확보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와 글로벌 바이오 혁신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28억원 증액 필요 ※데이터 구축 14억원, 원천기술 개발 7억원, 기전규명 및 성능검증 7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70	X선 간섭 노광장비 핵심기술 개발(신규)	-	-	-	5,000	5,000	○ 극자외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X선 간섭 노광장비개발에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원천기술개발을 위한 50억원 증액 필요	
71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1738-402)	805	805	805	1,806	1,001	○ 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청소년 등 국민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업적전시공간(명예의 전당) 조성을 위해 10억 100만원 증액 필요	
72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1744-404)	3,799	3,799	3,813	8,603	4,790	○ 지방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30억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에 특화된 인재양성 체계 마련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대를 위해 17억 9,000만원 증액 필요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7억 6,000만원, 기획평가관리비(360-06) 3,0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73	인재활용확산지원 (R&D) (1744-412)	54,449	54,449	84,519	93,519	9,000	○ 내역사업 '해외우수과학자유치'는 국내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를 지원하는 것임 ○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에 대응,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기관형 과제 확대, 유치 홍보, 글로벌 원스톱 플랫폼 기획비 등 90억원 증액 필요 - 기관유치형 신규과제 75억원, 유치 홍보 10억원, 글로벌 원스톱 플랫폼 기획비 5억원	
74	국가과학자 지원사업(신규)	-	-	-	34,200	34,200	○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술혁신 업적을 보유한 과학자·공학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342억원 증액 필요	
75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31-401)	218,356	233,356	287,242	296,819	9,577	○ 충북에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충북 AI BIO 과학영재학교 설립'(신규) 공사비 및 추진단 운영비 95억 7,700만원 증액 필요	
76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설립 기획 연구(신규)	-	-	-	500	500	○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의 설립에 대하여 우주항공 분야, 반도체·모빌리티 분야의 영재학교 설립 필요성,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77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31-402)	97,697	101,447	115,367	117,367	2,000	○ 내역사업 '미래선도형특성화연구' 사업 내 '국제공동연구사업'은 AI 분야 등 3대 게임체인저 포함 글로벌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글로벌 공동연구 및 연구 인력 교류를 위한 연구운영비 20억원 증액 필요	
78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31-403)	90,160	97,660	126,289	144,289	18,000	○ 우수교원 유치 및 연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인건비' 40억원, '글로벌선도대학육성지원' 40억원, '장비시스템구축비' 100억원 등 총 18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79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31-405)	97,634	101,384	117,461	163,236	45,775	○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해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신규) 공사추진을 위한 11억원 증액 필요 ○ 광주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개교를 위해 'GIST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추진단 운영비'(신규)로 개교 전 운영체계 기획을 위한 37억 1,500만원 증액 필요 ○ AI 분야 및 신설학과 교육, 장비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 9억 6,000만원 증액 필요 ○ 지역의 산·학·연 과학 AI 연구 교류·협력 허브 조성 및 시급한 국가적 당면과제인 기후·에너지 분야 R&D의 AI 기반 연구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과학 AI 융합 연구 생태계 구축 지원' 예산 40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8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시설지원(R&D) (2231-425)	14,150	14,150	10,742	13,707	2,965	○ 내역사업 '노후기반시설 교체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제고하여 안전한 교육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 교체계획에 따른 1차년도 시설보수비 20억원 증액 필요 ○ 지역 및 국가 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 활성화를 선도하고 관련 기업들의 난제 해결을 지원하는 AX산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 AX혁신허브 구축'(신규 내역) 설계비 9억 6,500만원 증액 필요	
81	광주과학기술원 시설지원(R&D) (2231-427)	17,146	17,146	24,356	25,356	1,000	○ 연구인력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이언스플라워(몰입형 복합공간) 건설 설계비 예산 10억원 증액 필요	
82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2240-300)	57,301	57,301	69,786	84,411	14,625	○ 동 사업은 기초연구 및 미래 국가전략 분야에 부응하는 창의적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우수한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것임. ○ 정부안에 반영된 대학원생 우수장학금 단가는 평균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를 위한 146억 2,500만원 증액 필요 - (석사우수장학금) 81억 2,500만원 (박사우수장학금) 65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83	핵융합플러그인 프로그램(R&D) (1160-454)	-	-	2,100	7,152	5,052	○ 동 사업은 산업·대학의 혁신역량 발굴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가속화('30년대 전력생산) 실현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원하는 사업임. ○ 핵융합에너지 가속화 실현을 위하여 R&D 사업비 50억 5,200만원 증액	
84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 (R&D) (1432-435)	8,500	8,500	9,600	14,100	4,500	○ 신규 내역사업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사업(R&D)'은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부장 산업의 기술선점(이종소재 접합기술) 및 자립화(저에너지 전자가속기 국산화)를 위한 것으로, 핵심기술 개발비 4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85	한국원자력 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31-406)	47,582	47,582	51,170	59,989	8,819	○ 의학원 환자 개인정보 및 연구정보 보안을 위한 내·외부망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노후('09 구축)된 원자력의학종합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비 확보를 위해 기관고유사업비 9억 7,200만원 증액 ○ 방사선상해자 전문치료병원 운영을 통한 비파괴 검사 등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기관고유사업비 18억 4,700만원 증액 ○ 방사선치료기기 분야 첨단기술인 중성자포획치료 기술의 임상실증연구를 위한 일반사업비 20억원 증액 ○ 국내유일 생산/공급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악티늄-225 및 I-123) 생산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전략연구단 사업비 40억원 증액	
86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31-412)	14,828	14,828	19,921	20,221	300	○ 부산 기장의 방사선의과학 인프라와 연계한 양성자치료기 구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 허브를 조성하고자 하는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지원(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고유사업비 3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87	한국원자력 의학원 시설지원(R&D) (2231-428)	9,156	9,156	9,156	11,716	2,560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법정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에 따라 장애친화시설 확충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25억 6,000만원 증액	
88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시설지원(R&D) (2231-431)	9,104	9,104	9,104	9,870	766	○ 신규 내역사업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 세포치료제 위탁개발·생산기관(CDMO) 구축을 통해 남부권 유일의 임상·제조 거점 마련을 위한 것으로 7억 6,600만원 증액	
89	한국핵융합 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 (R&D) (2241-402)	95,657	95,657	96,122	97,215	1,093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346억 2,300만원)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0억 9,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0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1158-417)	19,604	19,604	14,080	14,880	800	○ 동 사업은 무인이동체 공통원천기술 및 기술실증기 개발을 통해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AI드론, 유무인복합체계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술기반 확보에 더불어 민간산업에 조속히 기술확산하기 위한 실증에 필요한 8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1	공공행정서비스 혁신기술개발 (R&D) (1531-430)	11,324	11,324	11,054	9,804	△1,250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경비안전 수요부처(경호처)와 협업하여 국가요인에 대한 위협 예방과 대응을 위해 5G, AI 등 국가전략기술을 도입하여 기술개발 및 실증하려는 것임 ○ 동 내역사업의 과제 중 경호처와 협업하여 추진중인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과제는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며, 졸속 추진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제에 배정된 예산 12억 5,000만원을 삭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1)	247,439	247,439	370,614	379,119	△9,765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 내역사업 중 '국가맞춤인재 양성사업'(신규)은 미래 Bio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출연(연) 핵심인재로 정착하도록 인재를 육성하는 신규사업으로 4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인원 모집 등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지고, 유사 중복 사업이 존재하며, 의무복무 담보 수단이 부재하므로 사업 예산 전액 감액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 내역사업은 연구회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을 위한 재원(108억 1,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의 현실성 및 현장의견을 고려하여 309명분(108억 1,500만원) 중 150명분(52억 5,000만원)만 반영하고, 차액 55억 6,500만원 감액	
						18,270	○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인 '대덕특구 융복합 혁신큐브 개발 기획사업'은 대덕특구 내 유휴시설인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및 연구성과가 완결되는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획사업비 1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2							○ 연구회 감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외부통제기능 보완을 위해 감사위원 2인 보강(현행 3인) 및 감사단장 1인 채용(현재 공석)을 위한 4억 3,000만원 증액 필요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 내역사업 중 '총괄TLO 운영'은 국회 지적에 따라 개별 출연(연)의 대형·융합형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사업화 공동추진을 위한 임시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회 지적에 따라 출연(연) 연구성과 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을 위해 3년간 시범 운영 중인 총괄 TLO의 당초 기획에 따른 정상적 운영에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삭감된 16억원 증액 필요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 내역사업 중 '연구성과확산·관리지원'내내역사업의 '기술사업화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운영'(신규)은 출연(연)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출연(연) 사업화성과 정체 극복을 위해 AI 기반으로 출연(연) 공급기술과 민간기업 수요를 효율적으로 매칭하여 기술이전 성과를 제고하는 출연(연) 기술사업화 통합지원플랫폼(NSMAP) 신규 구축에 필요한 1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2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 내역사업 중 '연구성과확산·관리지원'내내역사업의 '출연(연) 딥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신규)은 출연(연) 보유 딥테크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출연(연) 전용 창업·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딥테크 기반 출연(연) 연구성과의 창업 및 사업화지원을 통해 대형 사업화 성과 창출이 필요하므로 딥테크 창업·사업화 스케일업 지원에 필요한 10억원 증액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 내역사업 중 '출연(연) 인재생태계조성'내내역사업은 우수인재가 출연(연)에 유입되어 지속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적 전주기 통합 인재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재외 우수 인재의 표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인재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히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82억 4,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2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 내역사업 중 내내역사업인'버티컬AI연구지원센터 설립사업'(신규)은 특정 산업·분야별 AI 고도화를 위한 신규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는 도메인별 과학자 및 AI전문가 간 일상적·전방위적 연구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AI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AI 확산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50억원 증액 필요	
93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4)	203,744	203,744	241,008	246,605	5,597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의 내역사업인 '맞춤형 AI분자설계 기반 만성염증 증후군 조기진단 및 예방 기술 개발'(신규)은 민관 협업을 통한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고령화 난제 해결 및 R&D 성과 기반 기술사업화를 위해 30억원 증액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894억 900만원)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25억 9,7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4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5)	75,726	75,726	79,917	80,826	909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299억 2,900만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9억 900만원 증액	
9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8)	94,484	94,484	105,590	107,312	1,722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 설치'(신규)는 충남 서산 바이오 웰빙·연구특구에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생명공학 분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설계비 4억 1,000만원 증액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 내역사업(474억 2,400만원)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3억 1,2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6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9)	53,669	53,669	61,175	61,997	822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 내역사업(282억 8,600만원)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8억 2,200만원 증액	
9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11)	102,966	102,966	112,476	113,828	1,352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 내역사업(424억 6,900만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3억 5,200만원 증액	
9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12)	97,218	97,218	109,909	113,259	3,350	○ 동 사업의 '주요사업비'내역사업 중 양자컴퓨터 개발에 대응하여 차세대 사이버보안의 근간인 공개키 암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예산인 20억원 증액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462억 4,700만원)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3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99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16)	9,942	9,942	10,412	10,572	160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61억 5,700만원)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억 6,000만원 증액	
1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2)	116,405	116,405	149,825	151,809	1,984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709억 6,200만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9억 8,400만원 증액	
1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3)	112,587	112,587	159,323	161,341	2,018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635억 2,900만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20억 1,800만원 증액	
10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4)	90,024	90,024	97,535	98,857	1,322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436억 1,600만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3억 2,2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03	한국식품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5)	44,029	44,029	49,548	50,240	692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239억 7,100만원)은 한국식품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6억 9,200만원 증액	
104	한국기계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6)	70,042	70,042	85,485	86,526	1,041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349억 8,500만원)은 한국기계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0억 4,100만원 증액	
105	한국화학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7)	83,863	83,863	99,509	100,917	1,408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464억 5,800만원)은 한국화학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4억 800만원 증액	
106	국가독성 과학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8)	32,704	32,704	35,111	35,629	518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177억 4,300만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5억 1,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07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29)	66,604	66,604	86,433	87,546	1,113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354억 4,800만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1억 1,300만원 증액	
108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30)	57,455	57,455	64,378	65,312	934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298억 8,000만원)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9억 3,400만원 증액	
109	세계김치 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32)	16,214	16,214	19,985	21,020	1,035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요사업비' 중 '김차산업의 초지능 첨단화 기술 개발'은 글로벌 김치산업 선도 경쟁력 확보 목적으로 국내 김치산업 품질·위생관리 혁신기술 개발하는 것으로 8억원 증액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84억 7,000만원)은 세계김치연구소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2억 3,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10	세계김치 연구소 시설 지원(R&D) (2241-454)	350	350	350	550	200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후시설보수사업'은 연구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연구자산(데이터 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것임 ○ 동물실험동 냉동기 증설 등에 필요한 2억원 증액	
111	협력·융합 과학기술 사업화 촉진지원 (R&D) (4602-429)	5,785	5,785	7,916	11,556	3,640	○ 동 사업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공통 필요기술개발을 위한 전후반 밸류체인을 통한 신제품·서비스 발굴 및 후속R&D를 지원하는 것임 ○ 민간(연구조합)의 자생적·지속적 기술협력 생태계 조성 및 민간 R&D 기획역량 활용과 성과창출을 위한 가치사슬 연계·협력에 필요한 36억 4,000만원 증액	
112	기업연구개발지 원센터 R&D 브릿지 (신규)	-	-	-	5,440	5,440	○ 동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2.1.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R&D역량강화 등 지원체계 고도화 및 기술개발인 사기진작을 위해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하는 '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법에 규정된 센터의 설립 및 기본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 예산인 54억 4,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13	과학기술 혁신정책지원 (R&D) (1031-401)	8,751	8,751	8,751	9,601	850	○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은 AI 3강 도약, 과학기술 5강 도약 실현을 위한 범정부 과학기술·인공지능 정책 총괄·조정 및 신속한 이행 지원을 위한 것임 ○ 관계장관회의 운영 지원,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범부처 협력 의제 발굴, 심층 분석·고도화에 필요한 8억 5,000만원 증액	
114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R&D) (신규)	-	-	-	5,000	5,000	○ 동 사업은 신기술 등장, 사회적 변화, 글로벌 위기 등 예측 불가능한 기술환경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0억원 증액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한국재료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302)	47,636	47,636	56,196	56,941	745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235억 4,500만원)은 한국재료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7억 4,500만원 증액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4231-302)	-	-	40,000	140,000	100,000	○ 피지컬 AI 핵심기술 동시개발이 필수적으므로, 기술실증을 위한 최소한의 테스트 베드(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1,000억원 증액 필요 - 사업기간: 2026~2030년 - 사업위치: 전북자치도 일원 - 사업내용: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 연구인프라 구축, 글로벌 AI 연구 생태계 조성 등 - 총사업비: 1조원(국비 6,000억원, 지방비 1,500억원, 민자 2,50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 · 글로벌 실증(R&D) (4231-301)	-	-	40,000	81,280	41,280	○ 동 사업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등 제조데이터 기반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피지컬 AI 특화 LAM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실증 사업임 ○ 초기 단계로 잠재력이 높은 글로벌 피지컬AI 시장 선점을 위하여 고신뢰성 데이터·물리지능 행동모델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 412억 8,0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2137-302)	2,922	2,922	2,922	4,078	1,156	○ 2026년도는 인프라·장비 구축 마무리 연도이며 교육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11억 5,600만원 증액 필요 - 증액 내역: 산학연 프로젝트 3건, 연구 SW 구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사업기간: 2024년~2028년 - 사업위치: 강원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내 - 총사업비: 219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민자 19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4	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2601-403)	9,900	9,900	3,600	12,200	5,000	○ 신규 내역사업 '의료 인공지능전환(AX) 기술지원센터 구축'은 지역 정밀의료기기 기술 지원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50억원 증액	
						3,600	○ 신규 내역사업 'AI기반 비대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로봇 실증 기반구축 및 확산'은 국내기업의 AI 및 비대면 의료로봇 신환경 실증기반 구축을 위해 36억원 증액	
5	데이터 활용 의료 건강 생태계 조성 (2601-407)	6,000	6,000	3,650	11,000	6,000	○ 신규 내역사업 'AI 기반 스마트 이동형 진료체계 구축 및 의료취약지 건강관리 실증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조기 진단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60억원 증액	
						1,350	○ 2026년은 기본에 개발 중인 의료서비스 실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이므로 당초 중기계획에 따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3억 5,000만원 증액 - AI 혁신 의료서비스(기기) 실증 및 사업화 지원 3억 5,000만원 - AI 암치유센터 조성 1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2601-409)	10,000	14,000	9,875	10,000	125	○ 제조데이터 기반 맞춤형 AI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및 확산을 추진하는 동 사업의 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규로 1억 2,500만원 증액	
7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 (2601-410)	4,000	4,000	3,600	4,000	400	○ AI 인프라 강화, 기업·전문인력 등 AI 중심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4억원 증액	
8	AX실증밸리조성(R&D) (2601-413)	-	-	16,967	34,240	17,273	○ 원활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1차년도 사업기간을 4.5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업기간 확보 및 과제 설계·평가·관리 등을 위해 172억 7,300만원 증액	
9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 (4231-426)	-	-	7,920	17,970	10,050	○ 원활한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1차년도 사업기간(9개월) 확보 및 연구개발과제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100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0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신규)	-	-	-	21,900	21,900	○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가AI데이터센터 GPU 자원 임차비 및 AI데이터센터 GPU 확장 설계용역비 편성을 위해 신규로 219억원 증액	
11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조성 (신규)	-	-	-	8,000	8,000	○ 의료 AX 산업 육성을 위한 4대 서비스 개발·실증·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80억원 증액 필요 - 핵심 서비스 개발 48억원 - 의료 AX 서비스 실증 24억원 - 생태계 조성 8억원	
12	AI의료산업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생태계 구축 (신규)	-	-	-	3,000	3,000	○ 실증 인프라 중심의 AI의료·헬스케어 One-Stop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30억원 증액	
13	동대구벤처벨리 AI테크포트 구축 (신규)	-	-	-	3,000	3,000	○ 스타트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AI 서비스 일상 확산 지원을 통한 비수도권 핵심 거점 조성을 위해 신규로 3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4	광주 AI 실증도시 실현 (신규)	-	-	-	2,000	2,000	○ 선행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인프라와 지역 특화 산업역량을 기반으로 광주를 AX 집적단지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편성을 위해 신규로 20억원 증액 필요	
15	국가 NPU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신규)	-	-	-	2,000	2,000	○ 국산 NPU의 성능 검증부터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설계비 편성을 위해 신규로 20억원 증액 필요	
16	국가 AI혁신 연구원 설립 (신규)	-	-	-	1,000	1,000	○ 국가 주도 AI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편성을 위해 신규로 1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7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자율) (2033-300)	112,980	112,980	81,516	83,546	1,030	○ 충남 공주시 경로당 내 스마트주치의 서비스 장비 및 AI 기반 안심승하차 서비스,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 개소 확대와 서산시 AI·IoT 센서 기반 주차정보 공유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10억 3,000만원 증액 필요	
						1,000	○ 내역사업인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153억 6,600만원)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핵심 거점인 경로당 내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ICT 기반 노인복지 선도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관악구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1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8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2033-302)**	4,140	4,140	3,620	9,560	1,770	○ 내역사업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22억 9,000만원)은 부산 지역의 강점사업과 블록체인을 융합한 서비스 발굴 및 지속가능한 지역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정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17억 7,000만원 증액 필요	
						1,170	○ 내역사업인 '융복합타운 조성'(13억 3,000만원)은 블록체인과 AI·메타버스 등 지역 신기술을 융합한 시민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발굴 및 지역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실증·확대하기 위해 11억 7,0000만원 증액 필요	
						3,000	○ 신규 내역사업인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관문도시인 인천에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을 위해 3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9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4231-302)	-	-	3,000	8,000	5,000	○ 신규 내역사업인 'AI 에이지테크 실증랩 구축'은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 밀착형 커넥티드 케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50억원 증액 필요	
20	지역주도디지털 혁신지원(자율계정) (4231-303)	-	-	2,830	1,800	△1,030	○ 동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충청남도 '지역 디지털 기업 경쟁력 강화'(5억 8,000만원) 및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4억 5,000만원)가 타 세부사업인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지원(지역지원)'에 중복 편성되어 10억 3,000만원 감액 필요	
21	지역디지털기초 체력지원(지역지원) (4231-306)	20,418	20,418	20,518	21,018	500	○ 신규 내역사업인 '전북·전주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 혁신센터 조성'은 특화산업인 피지컬 AI 등 최신 AI기술과 가상융합 산업의 연계로 산업 및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및 플랫폼 개발비 등 5억원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2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4234-323)	10,300	10,300	5,900	7,400	1,500	○ 내역사업인 '혁신거점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과제 지원'은 지역주도 AI 융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억원 증액 필요	
23	AX 혁신거점 조성지원 (신규)	-	-	-	10,000	10,000	○ 5극 3특 중심으로 민관의 투자가 집약되는 AX특화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균형잡힌 AX 경쟁력 확보 및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해 100억원 신규 증액 필요 - 4개지역 × 25억원	
24	지역특화 강소 AX 생태계 조성(신규)	-	-	-	2,000	2,000	○ 동 사업은 지역특화 AX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을 통해 제조 AX 협력모델을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산업(경북) 특화 AX 생태계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억원 신규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5	국립법인과학관 운영 (1834-401)	41,786	41,786	49,579	56,504	6,925	○ 내역사업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에 관람객 안전확보 및 과학문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주차타워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억 5,000만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국립광주과학관 운영'에 미래 모빌리티, 의료 디지털 등 첨단혁신산업 실증센터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500만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국립부산과학관 운영'에 개관 10년이 경과한 대형 전시품의 장비 노후화 및 콘텐츠 노후화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시를 개선하기 위한 20억원 증액 필요 - 시설비 5억원, 영상 HW 10억원, 콘텐츠 5억원 ○ 내역사업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에 AI·로봇·미래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 스마트시티·AI 데이터 인프라 플랫폼 등 데이터 기술이 융합된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한 40억원 증액 필요 - 전시물 12개 28억원, 인테리어 12억원 ○ 국민의식에 맞춘 안전한 첨단 과학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내역사업 '국립대구과학관 운영'에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 4억원 반영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6	지역과학관 건립 (1831-401)	12,342	12,342	10,500	13,000	2,500	○ 과기부 소관 국립과학관이 부재한 전북 지역에 주력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특화 과학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신규 내역사업) 사업으로 20억원 증액 필요 ○ 지역과학관 설립·육성에 대하여 기본원칙, 운영방향,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 증액 필요	
27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1158-425)	12,000	12,000	9,000	13,000	4,000	○ 동 사업은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성능 시험설비의 개발·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30억원 미확보시 연구 장비 등 제작 지연이 불가피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0억원 증액	
28	지역연구개발혁 신지원 (R&D) (4601-302)	17,400	17,400	89,016	94,973	5,957	○ 4극 3특 권역별 R&D 지원 등을 위해 전년 대비 예산액이 크게 증가되었으나 중부권의 경우 다른 권역과 비교하여 가장 많은 4개 시·도(대전, 충남, 충북, 세종)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4극 간 경쟁 과제로 지원하기 위해 59억 5,7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9	연구개발 특구육성 (R&D) (4632-401)	106,104	116,104	160,843	170,443	9,600	○ 동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재투자가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사업임 ○ 강원연구개발특구(춘천, 원주, 강릉) 신규 지정에 따른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96억원 증액 필요	
30	연구개발 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4632-402)	20,812	20,812	21,256	22,256	1,000	○ 동 사업은 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구진흥재단 기관운영비 지원 및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사업임 ○ 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기획 용역에 필요한 10억원 증액 필요	

(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한국원자력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1)	154,061	154,061	165,256	183,760	18,504	○ 주변지역 수용성 및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원자력안전 시민참여형 소통체계 구축·운영사업' 확대를 위해 주요사업비 7억원 증액 ○ 암 진단·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자립을 목적으로 필수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난치성 질환 진단·치료 위한 방사성 원료의약품 생산 및 개발' 사업 수행을 위해 주요사업비 92억 2,300만원 증액 ○ 기후위기·사회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품종을 개발하는 '기후위기·사회환경 변화 대응작물 개발 및 산업화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사업비 20억원 증액 ○ 신규 내역사업'국가 RI-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신약평가 국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2실시설계비, 분석장비 도입비 등 3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 ‘기초연구 인프라(70MeV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용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구축’은 우주 방사선 영향평가 핵심시설인 사이클로트론 시설과 신소재·부품의 방사선 영향평가를 위한 시험분석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10억원 증액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807억 900만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25억 8,100만원 증액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2)	96,119	96,119	103,475	104,916	1,441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462억 9,800만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4억 4,100만원 증액	
3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3)	62,548	62,548	73,065	74,168	1,103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357억 6,100만원)은 한국전기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1억 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241-404)	83,524	83,524	93,927	95,255	1,328	○ 동 사업의 '기관운영비'내역사업(434억 7,000만원)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3억 2,800만원 증액	

(5)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디지털선도기술 핵심인재양성 (2133-301)	49,206	49,206	58,206	61,300	3,094	○ 산학연 및 지역 간 연계 등을 통해 AI·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한 융합형 인재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30억 9,400만원 증액 필요 - 기 협약된 금액 대비 부족 반영된 계속사업 소요 예산액 추가 반영 필요	

(6) 책임운영기관(국립중앙과학관)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전시관운영 (손익계정) (2231-402)	5,575	5,575	5,425	6,815	1,390	○ 테크콘E는 첨단기술을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축제형 플랫폼으로,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축제형 과학문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13억 9,000만원 증액 필요	

(7) 우편사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우편업무정보화 (정보화) (5135-500)**	35,381	35,381	35,381	35,812	431	○ 내역사업 '우편정보시스템 운영·관리'는 우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 국정자원의 DR을 대전 주 시스템과 동일한 규모로 확충하기 위한 ISP 추진 예산 4억 3,100만원 증액	

(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우체국금융 정보화(정보화) (5234-510)	67,688	67,688	70,904	71,711	807	○ 내역사업 '우체국 종합금융시스템 구축'은 광주 국정자원의 DR을 대전 주 시스템과 동일한 규모로 확충하여 재해발생 시에도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ISP 추진 예산 8억 700만원 증액	

3.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R&D) (1235-404)	4,202	4,202	4,202	5,600	1,398	○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기초과학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아시아·태평양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13억 9,800만원 증액 필요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R&D) (1744-402)	19,684	19,684	20,737	28,359	7,622	○ 내역사업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은 출산·육아와 연구 성장 시기가 겹쳐 어려움을 겪는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여 인력·연구 공백 없는 R&D 현장 실현 및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육아기 연구자의 연구활동 복귀, 유지를 위해 76억 2,200만원 증액 필요	
3	과학문화확산사업 (1831-402)	14,540	14,540	16,695	16,895	200	○ 내역사업 '과학문화정책및플랫폼조성'은 다양한 과학기술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 ○ 과학기술·사회 소통 진흥을 위한 학계 참여 활성화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연구산업 기반조성 (1736-403)	1,630	1,630	1,650	3,080	1,430	○ 동 사업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연구산업분야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제도 운영과 통계조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연구주체 간 협력지원을 통해 연구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신고제도 운영 및 통계기반 내실화로 제도의 신뢰도 확보 및 연구몰입도를 제고하고, 민간 기술혁신 수요 발굴, 적정 공급자 매칭, 사업화 지원을 위한 14억 3,000만원 증액	

4.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사용후핵연료 통합관리 혁신기술개발 사업(R&D) (1434-440)**	-	-	1,000	1,500	500	○ 동 사업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의 다양한 非경수형 선진원자로(차세대 SMR)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및 폐기물의 안전 처분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국가 사용후핵연료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으로, 핵심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5억원 증액	

5.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 (2431-407)	1,390	1,390	1,574	3,942	300	○ 내역사업인 '번호변작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4억 3,600만원)'에서 변호변작 의심 전화·문자 사업자 현장검사 확대와 해킹 및 보이스피싱 증가 등으로 번호도용차단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므로 3억원 증액 필요	
						2,068	○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번호도용차단서비스,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20억 6,800만원 증액 필요 - 증액 내역: 장비증설(1억 9,200만원), 이중화·DR(12억 7,600만원), 용역비(6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2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육성 (정보화) (2602-311)	44,181	44,181	15,000	21,000	6,000	○ 내역사업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내내역사업‘ SaaS 개발·사업화 지원’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유망한 SaaS 기업과 우수한 SW의 SaaS 전환 희망 기업에 AI-SaaS 개발·전환·사업화 지원 확대를 위해 60억원 증액	
3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육성 (2433-031)	9,613	9,613	8,650	20,894	5,472	○ 내역사업인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은 보편적 통신접근성 강화 및 지자체의 예산 부담 경감을 위한 옥외형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 54억 7,200만원 증액	
						4,200	○ 내역사업인 ‘공공와이파이 확신기반조성’은 전국 공공장소에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42억원 증액	
						2,572	○ 내역사업인 ‘버스Wi-Fi 확대구축’은 전국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29,100대에 대하여 전수 서비스 정상 운영을 위해 25억 7,2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4	전파기반 중소기업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1632-314)	729	729	583	3,083	2,500	○ 급증하는 첨단 ICT 융합제품 개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확대와, AI기반 기술지원 도입을 통해 지역·시간 제약없이 24시간 지원되는 온라인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25억원 증액 - 전자파대책 기술지원 확대 7억원 - AI기반 기술지원 통한 온라인 지원 체계 구축 18억원	
5	차세대 방송 미디어산업 선도 기반 조성 (2531-310)	1,540	1,540	1,382	3,690	1,308	○ 내역사업 '미디어 선도기업 육성'은 대기업 및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AI 미디어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3억 800만원 증액	
						1,000	○ 신규 내역사업 '공공 조달장비 AX 전환'은 공공기관의 AI 방송장비 도입 기반 확대를 통한 공공 조달장비 AX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1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	VR · AR콘텐츠 산업육성 (1141-305)	29,378	29,378	9,178	9,630	452	○ 내역사업인 'VR·AR콘텐츠산업인프라조성'은 지역 가상융합산업 생태계의 전국적 확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가상융합혁신센터 수의 상향을 위해 4억 5,200만원 증액 필요	
7	디지털콘텐츠산업생태계활성화 (1141-500)	2,499	2,499	2,100	2,400	300	○ 내역사업인 '가상융합산업성장기반조성'은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자율규제활동의 운영을 위해 3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8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 (2133-304)**	130,400	140,400	144,092	153,575	9,483	○ 동 사업은 7개의 내역사업별 계속과제 연구개발비 부족분 9,483백만원 증액 필요 - 가상융합대학원(2,149백만원), 디지털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2,124백만원),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749백만원), 오픈랜인력양성프로그램(2,062백만원), 차체대통신클라우드리더십구축(937백만원), 대학ICT연구센터(1,350백만원), ICT인재양성관리기반조성(112백만원)	

6.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지원 (2601-303)	2,615	2,615	1,277	1,717	440	○ 내역사업 '데이터 산업제도 기반 활성화'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비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비 편성을 위해 4억 4,000만원 증액	
2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2602-333)	9,500	9,500	4,750	5,250	500	○ 내역사업 '친환경 그린 등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의 내내역사업 '지역 DC 집적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원래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년간 매년 국비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 예산은 3억원만 편성되었으므로 지원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	AI통합바우처 (2602-336)	-	-	89,775	109,775	20,000	○ 내역사업 '데이터바우처'는 바우처 물량을 확대하고 데이터 공유뱅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200억원 증액	
4	데이터경제 인프라 구축 (2604-301)	46,714	46,714	33,511	33,786	275	○ 내역사업 '데이터분쟁상담 및 권익보호 활동 지원'은 분쟁조정 전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업 밀집 지역 내 법률상담센터 설치 등 데이터 기업 권익보호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2억 7,500만원 증액	
5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 (2333-308)	22,155	22,155	23,655	39,155	14,500	○ 내역사업 '차세대보안리더양성'은 최고급 인력인 BoB 수준의 인력 양성 확대와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교육장 확충을 위해 145억원 증액	
						1,000	○ 신규 내역사업 '전문인재관리체계개발'은 신종 사이버위협 발생에 대응하는 인재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1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	페이퍼리스촉진 지원 (2033-501)	2,332	2,332	1,865	2,182	317	○ 내역사업인 '전자거래분쟁 예방 및 조정'(3억 9,700만원)은 전자거래 관련 피해 예방활동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중고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급증하는 국민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확충, 조정 접수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예산 3억 1,700만원 증액 필요	
7	SW컴퓨팅산업 원천기술개발 (R&D) (2231-323)	94,695	94,695	77,201	86,201	9,000	○ 동 사업은 단순 워드 프로세서 기능을 넘어 국가행정 및 재정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상호 협업 가능한 지능형 인포케이션 프로세서 기반의 재정·혁신 플랫폼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9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8	디지털트윈 경쟁력 강화 (2033-304)	6,188	6,188	-	2,100	1,000	○ 동 사업은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현안 해결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통합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10억원 신규 증액 필요	
						1,100	○ 동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술과 서비스를 집약한 시범구역을 조성하여 대표 플랫폼 구축과 국민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국내에 확산하고 도심형 AI 디지털 트윈 기술의 시민서비스 전환을 위해 11억원 신규 증액 필요	
9	미래 디지털인재양성 및 저변확대 (2232-326)	7,411	7,411	21,524	23,924	2,400	○ 내역사업인 'EBS-SW플랫폼 구축 운영'은 공교육 보완 및 SW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EBS-SW 온라인교육 플랫폼(이솝) 운영 및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에 따른 AI기본사회 실현 및 수준별 AI교육을 위해 24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0	양자클러스터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 (2132-313)	7,877	7,877	6,923	13,923	7,000	○ 양자 테스트베드를 전국망 규모로 확대하고, 양자 테스트베드와 연계하여 QKD 인프라 구축·실증 확산을 위한 70억원 증액 필요 - 시험·검증 컨설팅 10억원, 양자암호통신 전국망 선도 구축 60억원	

7.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또는 기금명	목명 또는 세부사업명 (00-000/0000-000)	2025		2026(안)	수정내용	수정이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 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한국나노기술원지원 (R&D) (1139-306)	2,110	2,110	3,110	단위사업 변경	○ 과기부에서 구축·운영중인 유사기관(나노종합기술원)과 동일한 기관운영출연금 지원 형태로 사업 수행 방식을 일원화할 필요 ※ 정책지정출연금(1139-306)→기관운영출연금(2231-303)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	본부 (총액대상) (7101-101)	22,545	22,545	23,651	26,082	2,431	○ 동 사업은 방미통위 공무원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정원이 증가(33명)하였으므로, 관련 인건비 24억 3,100만원 증액 ※ 과기정통부 '총액대상 인건비(7001-100)'와 증감액 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2	방송미디어진흥국 (총액대상) (신규)	-	-	-	87	87	○ 동 사업은 방송미디어진흥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과기정통부 인원(33명)이 방미통위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본경비 8,700만원 증액 ※ 과기정통부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7011-215)'와 증감액 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3	방송미디어진흥국 (신규)	-	-	-	191	191	○ 동 사업은 방송미디어진흥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존 과기정통부 인원(33명)이 방미통위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본경비 1억 9,100만원 증액 ※ 과기정통부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7011-265)'와 증감액 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4	운영지원과 (총액대상) (7111-201)	1,087	1,087	1,119	1,369	250	○ 동 사업은 방미통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방미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 국장급 이상 비서실 운영비 등 기타운영비(102백만원), 직책수행경비(135백만원), 감사업무수당 등 특정업무경비(13백만원)	
5	운영지원과 (7111-211)	598	598	655	957	302	○ 동 사업은 방미통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방미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 일반수용비(12백만원), 임차료(56백만원), 유류비(7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2백만원), 국내여비(99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117백만원), 포상금(9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6	기획조정관 (7111-212)	714	714	714	1,542	828	○ 동 사업은 기획조정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방미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 소송비·비상임위원 수당(170백만원) 등 일반수용비(662백만원), 국내여비(20.6백만원), 국외여비(130.6백만원), 포상금(15.2백만원)	
7	방송정책국 (7111-214)	107	107	137	323	186	○ 동 사업은 방송정책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방미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 국내여비(21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5백만원), 과기부 재난방송 사업 이관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160백만원)	
8	이용자정책국 (7111-215)	153	153	140	153	13	○ 동 사업은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방미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 일반수용비(5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0.8백만원), 국내여비(7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1백만원)	
9	방송기반국 (7111-216)	100	100	95	125	30	○ 동 사업은 방송기반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방미통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 - 일반수용비(3백만원), 국내여비(22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5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0	국내외협력 업무수행 (7131-301)	442	442	442	968	526	○ 방송통신 분야 뉴스콘텐츠 이용 및 홍보활동과 함께 정부간 협력, 국제기구·국제회의 활동, 양자·다자간 통산 협상 참가 등을 위해 '국내협력업무수행'(3억 4,200만원)은 4억원, '국제협력업무수행'(1억원)은 1억 2,600만원 등 총 5억 2,600만원 증액	
11	법정위원회 운영 (7131-304)	202	202	347	393	46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수당 등 운영경비 정상화를 위해 4,600만원 증액	
12	행정사무정보화 (7131-308)	1,171	1,171	996	1,171	175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된 기능 수행을 위해 방송진흥정책국이 신설됨에 따라 정보 전산장비 및 기반시설 장비 구매를 위해 1억 7,500만원 증액	
13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2141-302)	2,705	2,705	2,401	3,094	693	○ 동 사업은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6억 9,300만원 증액 -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시책 시행 및 협의체 운영 지원(1.8억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폰 개통통로로 활용되는 알뜰폰 시장의 불공정행위 상시모니터링 환경 구축(5.13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4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2141-301)	1,940	1,940	2,338	2,343	207	○ 내역사업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15억 7,800만원, 전년 대비 2억 200만원 증액)는 전 국민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2억 700만원 증액	
						△202	○ 내내역사업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실태점검'(2억 200만원, 신규)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는 협조 없이는 매출액 자료 등 확인이 불가능하고, 위법 발생여부 등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대상을 확대 연계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액 감액	
15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2141-307)	215	215	183	215	32	○ 동 사업은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보호교육 및 법제도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출구조조정 감액 복원을 위해 3,2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6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2141-309)	3,201	3,201	3,304	4,249	945	○ 내역사업 '문자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 운영·관리'(3억 4,100만원, 신규)는 대량문자사업자 등록 요건인 전송자격인증수행을 위한 인증업무 처리·운영 및 인증시스템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전송자격 인증 심사를 위해 4억 4,5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스팸대응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13억 5,200만원, 전년 대비 2억 3,800만원 감액)은 불법스팸 수법 지능화에 대응해 AI 기반 차세대 불법스팸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예산 5억원 증액	
17	1인미디어 콤플렉스 조성사업 (1131-320)	4,157	4,157	4,157	9,157	5,000	○ 동 사업은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스타트업 대상 특화 인프라,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리에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50억원 증액	
18	World Best LLM 차세대 데이터 구축 (2602-365)	-	20,000	-	15,000	15,000	○ 동 사업은 방송영상 AI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방송사업의 AI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15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수정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당초)	추경 (수정)					
19	공공VP 배경 데이터(에셋) 활성화 사업 (신규)	-	-	-	100	100	○ 공공 VP배경데이터 플랫폼 거점을 구축하여 첨단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1억원 증액	
20	방송콘텐츠 AI제작 혁신 기반 조성 (신규)	-	-	-	16,000	16,000	○ 제작 全단계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효율성(비용·시간↓, 품질↑)을 높이고,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60억원 증액	
21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인건비 (신규)	-	-	-	172	172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위원장 인건비 1억 7,200만원 증액 ※ 방발기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32-310)'과 증감액 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22	버티컬 AI 활용 지역 디지털미디어 혁신기반 조성 (신규)	-	-	-	600	600	○ 지역산업 맞춤형 버티컬 AI 기술 개발, 콘텐츠 리메이크 스튜디오 조성 등 지역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 및 개발비 6억원 증액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지역방송 및 홈쇼핑 협력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 (신규)**	-	-	-	6,000	6,000	○ 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을 활용한 상품소개 프로그램 제작, 지역경제 활성화 콘텐츠 제작·송출 지원, 개별 소상공인 홈쇼핑 진출 지원 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60억원 증액	

2.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없음

(2) 지출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3131-301)	30,064	30,064	31,083	36,083	5,000	○ 동 사업은 EBS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50억원 증액	
2	아리랑 국제방송지원 (3131-302)	12,070	12,070	11,022	0	△11,022	○ 동 사업은 아리랑국제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전액 감액	
3	국악방송지원 (3131-304)	5,258	5,258	4,732	0	△4,732	○ 동 사업은 국악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예산으로 이관이 필요하므로, 전액 감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4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3131-308)	4,464	4,464	4,964	20,718	15,754	○ 소관불일치 예산인 '아리랑 국제방송지원(110억 2,200만원)', '국악방송 지원(47억 3,200만원)' 예산을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157억 5,400만원 증액	
5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 (3133-303)	22,433	22,433	18,863	31,199	12,336	○ 내역사업 **'미디어 역량교육 강화'**(11억 8,300만원, 전년 대비 37억 6,400만원 감액)는 전년 대비 76% 감액된 상황으로, 전년동 수준인 37억 6,400만원 증액, AI·딥페이크 피해 예방 교육 예산 13억원 등 총 50억 6,4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시청자권익보호 지원'**(1억 7,100만원,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 감액)은 전년 대비 50% 감액된 상황으로, 전년동 수준인 1억 7,2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시청자권익증진 인프라 운영'**(5억 4,600만원, 전년 대비 5억 5,100만원 감액)은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및 인천 제2시청자디미어센터 설립을 위해 71억원 증액	
6	공동체라디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3133-304)	-	-	200	500	300	○ 동 사업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제작지원과 병행하여 콘텐츠 기획, 장비운영 교육 등 추가 지원을 위해'제작활성화 기반조성' 3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7	TBS 운영 지원 (신규)	-	-	-	7,480	7,480	○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재난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상호 문화 이해 및 다문화 사회정착을 위한 '외국어 라디오방송 지원'(TBS eFM) 52억 8,000만원, 수도권시민을 대상으로 교통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라디오 콘텐츠 제작지원을 위한 '교통방송 제작지원'(교통FM) 22억원 등 74억 8,000만원 신규 편성	
8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 (3132-317)	475	475	404	1,304	900	○ 내역사업 **'팩트체크 활성화'**(미반영)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고도화를 위해 9억원 증액	
9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3251-306)	1,466	1,466	2,291	1,246	△1,045	○ 내역사업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10억 4,500만원, 신규)은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방미심위 업무와 중첩되므로, 전액 감액	
10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3251-308)	792	792	781	1,141	360	○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이 시행(24.8.28.)됨에 따라 가상융합산업(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실태조사를 위해 신규 내역사업 '신기술환경 메타버스 이용자보호 환경조성'(3억 6,000만원) 편성	
11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3251-311)	1,920	1,920	1,920	1,970	50	○ 동 사업은 위치정보를 사업 자원으로 활용하는 중소·영세·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수준으로의 예산 복원을 위해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2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3251-314)	4,195	4,195	4,991	4,429	△562	○ 내역사업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5억 6,200만원, 신규)은 방미심위와 업무 중복, 효율성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	
13	안전한 AI 활용 기반조성 (3251-321)	278	278	278	493	215	○ 「정보통신망법」 제4조의2가 개정(24.12.)됨에 따라 AI 피해실태조사 실시를 위해 신규 내역사업 'AI 피해실태조사'(2억 1,500만원) 편성	
14	방송콘텐츠 진흥 (1131-301)	19,397	19,397	16,792	18,792	2,000	○ 내역사업 **'AI·디지털 기반 미디어 융합인재'**(17억 9,200만원)은 방송인력 대상 AI·신기술 기반 수요맞춤형 교육을 통해 핵심 AI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학생, 청년, 재직자 대상 AI 기반 방송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억원 증액	
15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 (1131-308)	5,000	5,000	500	5,000	4,500	○ 동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해 문체부와 공동으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정부 출자계획(24~28)에 따라 2026년 50억원 출자가 필요하므로 45억원 증액	
16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3132-308)	21,870	21,870	19,677	24,705	5,028	○ 내역사업 **'장애인방송 제작지원'**(31억 8,100만원, 전년 대비 45억 7,800만원 감액)은 시각·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0% 감액됨에 따라,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50억 2,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7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3132-309)	14,545	14,545	14,719	14,931	212	○ 내역사업 **'인건비'**(87억 7,300만원, 전년 대비 2억 9,700만원 증액)는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대상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산인력 2인 신규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1억 1,2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경상비'**(26억 300만원, 전년 대비 1억 3,700만원 감액)는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차료 등 추가 소요를 반영하고 감액분 일부 복원이 필요함에 따라 1억원 증액	
1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3132-310)	33,040	33,630	34,893	37,979	3,258	○ 내역사업 **'인건비'**(222억 1,900만원, 전년 대비 7억 5,100만원 증액)는 불법정보 긴급대응을 위한 통신심의 인력증원(21명)을 위해 12억 1,9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경상비'**(47억 3,000만원, 전년 대비 3억 9,500만원 증액)는 위원회 출범으로 인한 경상비 소요, 통신심의 인력증원(21명)에 다른 제반경비 등 10억 3,2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방송심의 활동'**(46억 6,800만원, 전년 대비 9,100만원 증액)은 방송모니터 인력증원(75명), 2026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과 선방심위 운영 등 10억 700만원 증액	
						△172	○ 내역사업 **'인건비'**(222억 1,900만원, 전년 대비 7억 5,100만원 증액)는 방미심위 위원장이 정무직공무원으로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인건비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필요해 감액 ※ 일반회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인건비(신규)'와 증감액 연계	※증감액연계 (세부사업간)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9	방송평가 기반조성 (3134-302)	850	850	508	850	342	○ 내역사업 **'KI시청자평가지수조사'**(미반영, 전년 대비 1억 9,200만원 감액)는 시청자를 대상 조사를 수행하고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수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1억 9,2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미반영,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는 PP의 제작역량 등을 평가하고 관련 정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2025년 수준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1억 5,000만원 증액	
20	방송광고 공공인프라 구축지원 (3134-303)	1,932	1,932	1,352	2,549	1,197	○ 내역사업 **'공익광고 제작 및 확산'**(7억 5,300만원, 전년 대비 3억 2,200만원 감액)은 2024년 수준으로의 예산회복을 위해 8억 3,900만원 증액 ○ 내역사업 **'광고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5억 9,900만원, 전년 대비 2억 5,800만원 감액)는 노후 서버 교체 등을 위해 3억 5,800만원 증액	
21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3134-315)	1,883	1,883	944	1,883	939	○ 동 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매출·고용 증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하므로 9억 3,9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년도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22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3134-340)	2,278	2,278	1,442	2,278	836	○ 동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비와 지역밀착형 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송출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매출·고용 증대, 지역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하므로 8억 3,600만원 증액	
23	방송 · 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용역 (신규)	-	-	-	100	100	○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현행 심의규정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 피해, 규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플랫폼 간 형평성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비 1억원 증액	

다.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1402-401)	5,382	5,382	5,555	6,529	974	○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 등에 방사능감시기 8대 추가 구입·설치 및 유지보수·위탁운영 비용 반영을 위한 9억 7,400만원 증액 필요	

3. 원자력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1) 수입: 해당 없음

(2) 지출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1	원자력안전 기반조성 (1701-401)	26,125	26,125	27,202	28,002	800	○ 동 사업의 내역사업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은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정보공유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임. ○ 지역주민 대상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 7개소(기장, 울주, 경주, 영광, 고창, 울진, 대전) 동시 구축을 위해 8억원 증액 필요 - (정부안) 20억(5억×4개소) → (수정) 28억(4억×7개소) *7개 지역 동시 개소에 따른 구축일정 변경으로 운영비용 조정	
2	방사선 안전기반조성 (1701-402)	6,940	6,940	7,080	7,381	301	○ 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 'IT기반 방사선기기 전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은 방사선기기 이용기관에게 편리하게 법령준수사항 정보 제공과 신고 이행 편의성 확보 등 효율적인 방사선기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3억 1백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당초	수정					
3	방재환경 기반구축 (1902-402)	- (8,670)*	- (8,670)*	8,337	8,687	350	○ 2026년 신규 개소하는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 기존 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 동일 수준의 방재장비(감시기, 측정기, 방호물품 등) 구비를 위한 3억 5,000만원 증액 필요	*2026년 일반회계→기금 이관
4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2001-415)	-	-	2,310	2,470	160	○ 동 사업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 체계 정비 및 규제검증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임. ○ 국내 비경수형 SMR에 관한 해외동향, 기술표준, 인허가 정책 등의 체계화된 DB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제기관·산학연·개발자 및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형별 규제연구반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예산 1억 6,000만원 증액 필요	

라. 우주항공청

1.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334-302)	108,886	108,886	114,726	121,838	7,112	○ 동 사업은 항공우주 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우주연구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및 우주과학관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71억 1,200만원 증액 필요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21억 1,200만원 -우주과학관 등 노후시설 개선 5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시설 지원(R&D) (1334-303)	14,600	14,600	11,175	12,975	1,800	○ 동 사업은 항공우주 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한국한공 우주연구원의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첨단 항공엔진 및 극초음속 미래비행체용 추진기관 연구를 위한 노후화 시험설비 안전환경 및 전력안정화 개선을 위해 신규 내역사업 '극초음속 미래비행체 추진기관 시설 노후개선 및 안전 보완'을 신설하여 18억원 증액 필요	
3	한국천문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334-304)	62,535	62,535	64,010	70,490	6,480	○ 동 사업은 천문우주과학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연구와 기술개발의 종합적 수행 및 성과보급을 위해 한국천문연구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및 노후 연구장비 성능 개선 등을 위해 64억 8,000만원 증액 필요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7억 8,000만원 -천문 관측 인프라 개발 및 운영 47억원 ※소백산천문대 2억원, 보현산천문대 15억원, 한국전파망원경(KVN) 30억원 -외계행성탐색연구 1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우주항공문화 저변 확대 (1335-302)	500	500	486	1,436	950	○ 내역사업 '청소년 미래 우주인재 교육'은 초중고 우주항공 창의인재 교육을 위해 청소년 대상 STEM 교육 등 창의인재 교육 개발을 하려는 것임 ○ 초소형(큐브)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위성 개발의 전 과정을 경험한 잠재인력 양성 추진을 위하여 9억 5,000만원 증액 필요	
5	우주기술 혁신인재양성(R&D) (1335-306)	-	-	3,000	4,850	1,850	○ 동 사업은 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분야에 특화된 고급 연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등 국내 우주산업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2026~2027년 구축되는 실습교육용 연구장비(22종)가 유휴화되지 않고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역사업 '우주임무 실습교육'을 신설하여 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환경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사업비 18억 5,000만원 증액 필요	
6	AI기반위성정보 활용서비스확산 사업 (1337-323)	-	-	1,000	4,800	3,800	○ 동 사업은 민간 기업의 AI기반 위성정보 활용서비스를 국내에서 실증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지자체 등의 공공수요 기반 위성활용 실증을 통해 13개의 검증된 모델 헤리티지를 확보하고자, 연 4개 이상의 모델 상업화를 위해 38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7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 (Space-MaCS) 사업 (1337-324)	-	-	500	2,500	2,000	○ 동 사업은 우주기업의 우주 부품·탑재체를 플렛폼에 장착 후 발사체로 우주 궤도에 올려 우주부품·탐재체의 우주검증 이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위성 탑재체 선정·계약과 검증위성 구매 및 민간 발사체 업체 선정·계약 등을 위하여 20억원 증액 필요	
8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R&D) (1433-301)	147,800	147,800	123,300	128,300	5,000	○ 동 사업은 한국형발사체(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 일감절벽 해소로 우주발사체 산업 위기 극복 및 산업 생태계 유지, 우주 자주권(안보, 경제, 기술 등) 강화, 지속 가능한 우주개발 등을 위해 누리호 1회 추가 발사 예산 50억원 증액 필요 ※2028년에 추가 1회 발사를 위한 소요 예산 1,000억원 중 2026년 50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9	드론로봇연계도심지고중량화물멀티모달배송기술개발(R&D) (1733-307)	2,739	2,739	7,458	12,458	5,000	○ 동 사업은 국내외에서 무인이동체 배송서비스를 수행한 드론 및 로봇을 대상으로 시급한 요소 기술개발 및 현장실증을 지원하려는 것임 ○ 드론 체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입체적으로 재난 상황을 탐지·식별·대응 및 후속조치까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신규 내역사업 '공공수요기반 재난안전 대응 드론체계 개발 및 실증'을 신설하여 50억원 증액 필요 ※ 산불 재난 대응용 고중량 드론 개발 및 관제·통신 플랫폼 개발 목적임.	
10	산업연계형 인재양성 시스템 타당성 검토(신규)	-	-	-	200	200	○ 우주산업 클러스터 발사체 준공 이후 원활한 인력공급이 필요하므로, 민간발사장구축('31) 국가산단 조성('30)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조사비 2억원 증액 필요	
11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 연소시험시설 구축(고흥) (R&D)(신규)	-	-	-	2,000	2,000	○ 민간기업이 상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사체 연소시험시설 기반확보를 위해 설계용역비 등 20억원 증액 필요 -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고흥) 총사업비 485억원(국비 450억원, 지방비 35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2	우주항공산업 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분석(신규)	-	-	-	200	200	○ 우주항공경제 성장에 적기 대응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분야의 사업 기획·관리에 특화된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원 증액 필요	
13	우주급 중이온 시험시설 구축 사업(R&D) (신규)	-	-	-	1,000	1,000	○ 수요가 증가하는 우주급 중이온 시험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한 국내 시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비 및 장납기 품목 발주를 위한 10억원 증액 필요 ※ 동 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에 우주전용 빔라인을 추가설치하여 저비용·고효율로 국내 우주급 중이온 시험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임.	
14	우주항공지역 혁신기반구축 (R&D)(신규)	-	-	-	19,000	19,000	○ 우주항공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지방 공동성장을 위해 우주항공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 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므로 190억원 증액 필요 -민간 주도의 우주항공 분야 산업 육성 추진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4개 지정과제 공모 120억원 -UAM 핵심 부품 인증 지원 체계 10억원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30억원 -차세대 항공 기체부품 첨단제조 실증지원 기반구축 30억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5	AI드론용 디지털트윈 인프라개발 (R&D)(신규)	-	-	-	4,000	4,000	○ AI-드론용 디지털트윈 인프라(실물·가상 연동)를 구축하여 학습·검증용 합성비행데이터를 대량 확보하고, AI 드론의 안정성·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국내 AI-드론 데이터 주권·표준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규 40억원 증액 필요	
16	수직 이·착륙기 비행안전성 실증시험 지원센터 구축 (광주광역시) (신규)	-	-	-	1,500	1,500	○ 국내 유·무인항공기 등의 항공전자장비와 자율비행 S/W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개발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15억원 증액 필요	